

# 통일과 평화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15, No.2 2023

15집 2호 · 202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차례

### 특집 : 김정은 시대 10년, 북한의 문화예술 분석

- 김성수 ■ ‘선군 투사’에서 ‘과학기술 룡마 기수’로  
: 김정은 시대 문학의 대표 전형 ..... 11
- 모리 도모오미 ■ 김정은 정권 음악 정책의 논리  
: ‘음악정치’의 합의 확대와 ‘사회주의 문명국’ 개념을 중심으로 .... 45
- 전영선 ■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 89
- 박계리 ■ 김정은 시대 문화정치와 ‘통속성’ ..... 121

### 일반논문

- 신재준 ■ 1970년대 초 『漢陽』·『코리아評論』의  
한반도 정세 인식과 통일론 ..... 153
- 이유정·이민규 ■ 성격이 통일과 분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고착화된 갈등 국가 사례 연구 ..... 195
- 정호근·김수연 ■ 베트남 공산 통일 이후 경제적 갈등 해소 전략 .. 235
- 김필구 ■ 디지털 혁명과 ‘폭력의 삼각형’ ..... 279

## 현장 보고

- 김종수 ■ 한국에서의 간토(關東) 학살 100주기  
    시민활동 현장보고 ..... 319
- 곽승지 ■ 조선족사회와 조선족 '마음의 고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변화 실상 ..... 335



특집

김정은은 시대 10년,

북한의 문화예술 분석

2022년 ‘김정은 시대 10년, 북한문화예술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비공개 세미나를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은 북한 내부 인민들의 감정과 관련되는 분야임으로, ‘김정은 시대 10년, 북한문화예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 내부 인민들의 미묘한 움직임까지 포착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북한에서 문화예술은 선전선동의 최전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의 변화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김정은 시대 10년’이라는 주제로 여러 학술포럼이 진행되어왔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본격적인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분야별로 5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였고 지정토론자가 7명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발표자를 포함하여 매번 12명 거의 전원 참석하여 토론을 함께 했다. 문학에 김성수, 음악에 모리 도모오미, 공연예술분야는 전영선, 건축에 안창모, 젠더문화에 조정아, 미술 및 총괄 부분은 본인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에 오태호, 배인교, 하승희, 쿤드 퀘스테르, 키다 에미꼬, 박동민, 김수지 등이 함께 하였다.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학자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현장에서, 해외에서는 줌으로 접속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비공개로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우리 12명 간의 집단 토론이 매우 소중하다고 판단했고, 좀 더 자유롭고 형식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각국 간의 시차 문제도 있어서 토론 시간은 매번 부족하였지만 서로의 시선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은 역시 소중했다.

북한의 문화예술 분야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공통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논의를 통해 어떠한 흐름들이 공통점인지 맞춰보는 것은 유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토론을 통해 모든 논의가 하나로 수렴되지는 않았지만, 결론의 통일성보다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각 논의들의 지층을 쌓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10년간의 흐름에 대한 합의들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2022년도의 논의 중 문학, 음악, 공연, 영화, 미술 장르에 대한 성과들을 이번 호의 특집 기획으로 실었다. 북한의 문화예술 장르는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변화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각 장르의 형식이 다르듯 각기 다른 변화들도 드러났다. 특히 중심 장르의 변동도 일어났다. 김정일 시대는 영화가 중심의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면, 김정은 시대 가장 위축되어 있는 장르가 또한 영화분야였다고 평가된다. 이는 김정은 시대가 문화예술계에 이전 시대와는 다른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김정은 시대를 선도하는 장르는 영화가 아닌 음악분야로 판단된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의 이동이 일어나곤 한다. 동시에 같은 장르 안에서도 대표하는 형식적 변화가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각 장르별 각기 다른 변화와 이를 둘러싼 공통점을 문학, 음악, 공연, 영화, 미술 장르로 살펴보았다.

김성수는 김정은 시대 문학의 대표 전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김정은

시대 12년을 제7, 8차 당대회(2016, 2021)를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삼아 1, 2, 3기로 나눈 후, 각 시기 문학의 대표 전형을 ‘선군 투사, 만리마기수, 과학기술 룡마 기수’순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시기 문학의 특징은 혁명과 선군에 복무하는 문학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선대와 달리 ‘인민생활 향상’으로 불리는 애민, 민생 담론이 부각된 점으로 분석했다. 그에 따라 혁명 투사, 선군 투사보다 ‘과학기술 룡마 탄 기사’로 가시화된 청년 과학기술자의 캐릭터를 중시하고 그들의 일상성이 강화되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야기시킨 정치적 상황을 ‘핵 무력’과 ‘사회주의 문명국’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모리 도모오미는 음악정책에 대해 ‘음악 정치’,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두 개념을 분석틀로 내재적 접근을 시도했다. ‘모란봉악단의 창조 기풍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문화예술 측면에서 주도하는 것이었으며 예술가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모범으로 강조되었다. 이후 청봉악단, 삼지연 관현악단의 등장에 따라 북한 ‘음악 정치’는 ‘음악 외교’라는 측면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성이 다시 수렴되어 국내로 회귀되었고 이러한 음악정책의 변화는 2018년을 지나면서 국무위원회연주단으로 일원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성립과 천리마 운동의 집단기억 상기와 이러한 음악정책 변화와의 관령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공연예술과 영화장르를 분석한 전영선은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화예술계의 부진 요인은 역할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는데, 문화예술이 담당하였던 선전선동의 주체와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선전선동의 주체는 예술인에서 노동당의 말단조직인 ‘세포’로 바뀌었고, 형식에서도 실리적인 사업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공연예술은 공연의 스펙터클 한 형식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공연에 반영하는 것에 집중하였다고 평가했다.

박계리는 김정은 시대 10년, 북한 미술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연동되어 부각되고 있는 ‘인민성’과 관련하여 ‘통속성’의 부각을 특징으로 분석했다. 문화예술의 3대 원칙으로 강조되어왔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 대신 ‘인민성, 통속성, 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의 교시는 현재 북한문화예술계에서 “모든 창조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지침”으로 작동하고 있다. ‘통속성’이라는 개념이 이전 시기에 없었던 개념은 아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은 김정은이 초급당선전일꾼들에게 주문했듯이, 변화하는 인민들의 감수성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참신한’ 선전선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토대로 김정은 시대 문화예술은 ‘사회주의문명국’,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시기적으로는 하노이회담 이전과 이후로 변화의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는 연구자들이 많았다. 관련한 최근의 변화들은 다음의 연구주제로 남겨놓았다.

북한의 문화예술장르의 핵심 목적은 정권의 정책을 인민들에게 교양시키는 것이다. 굳이 문화예술을 통해 교양시켜내고자 하는 이유는 정권의 정책을 인민들의 마음에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예술장르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적 변화를 읽어내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의 변화 또한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한 시도로서 이번 특집 논문들이 기획되었다. 함께 논의를 해준 필자분들과 의미 깊은 지면을 허락해준 [통일과 평화] 편집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글들을 통해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뜨거운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박계리(국립통일교육원)



특집

## ‘선군 투사’에서 ‘과학기술 롱마 기수’로

: 김정은 시대 문학의 대표 전형

김성수 (성균관대)

### 국문요약

이 글은 북한 주체문학의 전형사적 전통 속에서 김정은 시대 문학의 대표 형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학신문』, 『조선문학』, 『청년문학』(2012~23)에 게재된 시, 소설, 비평에 등장하는 시대정신의 구현자, 전형적 캐릭터의 역사적 변모를 분석하였다. 김정은 시대 1기(2012~2015) 문학의 대표 캐릭터는 김정일 시대 문학의 잔영인 ‘선군(先軍) 투사’였다. ‘핵무력과 경제 병진책’을 실현한 ‘마식령속도’의 창조자인 군인 건설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7차 당대회 이후의 김정은 시대 2기(2016~19) 문학의 대표 캐릭터는 ‘만리마 속도’ 창조 운동의 주역인 ‘만리마기수’였다. 선군을 떨쳐낸 7차 당대회 이후 노동계급 중심의 경제 성장 주역인 청년 과학기술자였다. 김정은 시대 3기(2020~) 문학의 대표 캐릭터는 제철소 용광로를 제어하는 컴퓨터 기사와 같은 ‘과학기술 롱마 기수’이다. 캐릭터 분석을 통해 볼 때, 김정은 시대 문학은 혁명과 선군을 강조했던 부조(父祖) 시대와 달리 ‘인민생활 향상’으로 일컫는 애민(愛民), 민생 안정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북한문학, 김정은 시대, 전형, ‘시대어’, ‘선군 투사’, ‘만리마기수’, ‘과학기술 롱마 기수’, 『조선문학』, 『문학신문』

## I. 문제제기: 북한문학의 전형사적 전통

이 글은 북한문학에 나타난 전형적 형상의 역사에서 김정은 시대 문학의 대표 형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북한 역사에 매번 등장하는 예의 속도전 ‘명명’과 그와 연계된 대표 형상, 전형의 역사적 전통하에서 김정은 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전형적 캐릭터를 간략히 정리한다. 가령 『문학신문』, 『조선문학』, 『청년문학』에 게재된 시, 소설, 비평에 등장하는 ‘만리마속도, 만리마기수’를 속도전과 전형 형상의 산물로 보고, 전형사적 계보 속에서 그 면모를 분석 평가한다.

왜 전형인가? 서사문학 창작의 기본 중 하나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생동감 있게 그리는 것이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주인공의 성격 창조란 단순히 새로운 인물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려면 형상의 핵심을 이루는 사상적 심리적인 메시지를 구체적인 인물형으로 성격화시키는 것이다. 작가가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독창적인 인물 성격을 설정하면서 그의 사상적 정서적 심리적인 면모를 가시적인 행동과 사건, 심경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이 개성적으로 구현되었을 때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 형상이 뚜렷이 살아난다.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양, 감동을 주는 기능은 이처럼 실제 텍스트에서 형상의 중심을 이루는 주인공의 면모, 즉 ‘전형’적 형상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론을 참조했던 사회주의 북한(1945-67)과 영불독문학 등 서유럽 문예이론을 참조한 남한의 ‘전형’ 개념은 차이가 있다. 게다가 1967년 이후의 북한 문예학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과 결별하고 주체문예론을 유일화했기에 남북의 전형 개념은 다르다.<sup>1)</sup> 북한의 주체문학사를 보면, 각 시기의 정세를 전제한 후 관련된 속도전



과 전형적 캐릭터를 명명하고 대표작과 대표 캐릭터를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6.25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후반의 ‘전후 복구 건설’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평양속도’를 창조한 ‘천리마기수’ 형상이 그 시대를 상징하는데, 최학수 장편소설 『평양시간』(1974)의 주인공 상철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식이다.

주체문예론에 따르면, “문학예술의 인간학적 본성의 하나는 산 인간의 성격형상을 창조하여 사람들의 사상교양에 전적으로 복무”시키는데 있다.<sup>2)</sup> 주체문학사 70년을 돌아보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형상을 기본적으로 그리되, 그들 중 대표성을 지닌 예외적 개인을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라 불리는 전형으로 재현하였다. 가령, 해방 직후 아직 사회주의체제가 정착되지 못한 인민민주주의체제기(1946~50)의 ‘공정적 주인공’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1953~66)의 ‘천리마속도’를 창조한 ‘천리마기수’가 혁명투사적 감성을 지닌 공장 노동자, 협동농장 분조원이었다

- 
- 1) 남북한 문예학의 ‘전형’ 개념 비교는 김성수, 「전형」, 구갑우 외 공저, 『한(조선) 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8』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참조.
  - 2) 리동원, 『주체적문예리론연구(3) 작품의 주인공』 (문예출판사, 1990), 18쪽. 익명의 심사자께서 필자가 주체문예이론을 너무 개략적, ‘인준적’으로 받아들여 논지를 편다고 지적하였다. 북한 이론을 세심하게 비판적으로 대해야 북한작품에 대한 객관적, 비판적 분석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 또 줄고가 문예이론 개념에 대한 날카로운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논쟁적이 되기보다 설명적이라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관련하여, 안함광의 『문예론』(1947)부터 출발하여 김정일의 『영화예술론』(1973)을 거쳐, 『김정일 동지의 주체문예리론 총서』(40권), 『문예리론 총서 주체적 문예사상』(13권), 『주체적 문예리론연구』(25권), 기타 등 총서 6종, 100여 권의 책을 정리한 ‘주체문예리론체계를 기획 연구한 책을 쓰고 있다. 이는 『북한문학비평사』(역락, 2022)의 후속편이자 자매편이다. 「북한 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 고찰」 『19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통일원, 1994); 「주체문예론 연구(1): ‘주체문예리론체계’의 통시적 분석」 『국제한인문학연구』 31 (2021); 「주체문예론 연구(2) : ‘주체문예리론체계’의 공시적 분석」 『상허학보』 64 (2022); 「김정일 문예론 연구 서설」 『현대문학의연구』 76 (2022) 등 참조.

면, 주체문예론 형성기(1966~75)의 ‘주체형 인간’은 빨치산 투쟁의 간고분투 정신을 모범 삼은 항일혁명투사형 노동계급이라는 식이다.<sup>3)</sup>

이들이 항일혁명투사, 전쟁 영웅과 함께 성장하거나 최소한 실체를 목격할 선배 세대라면, 주체문학 전성기(1973~94)의 후배 세대들은 선배들의 영웅적 면모를 말로만 전해 들었기에 그리 큰 감흥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에 수령에 대한 충성을 새로운 덕목으로 무장한 신세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체험과 의욕으로만 혁명을 수행했던 선배와 달리 정규교육을 받아 어느 정도의 논리와 이론으로 무장한 청년세대가 등장하였다. 지식층 과학기술자거나 전문 기술교육을 제대로 받은 청년 노동자·농민이 바로 ‘3대혁명소조원’(1976~91)이었다. 이를 대표하는 전형이 성혜랑 단편 「혁명전위」(1974)의 주인공 영희 캐릭터이다.<sup>4)</sup>

그런데 3대혁명소조원의 문학적 형상은 청년 엘리트 출신의 만능 천재형이지만 부족한 연륜과 경험 때문에 생산 현장과 일상적 실감이 떨어졌다. 주체문학 전성기의 후반부인 1980년대 내내 ‘숨은 영웅’ 형상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일상을 영위하는 평범한 인민대중 중에서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수령-당-국가 정책을 묵묵히 실천하는 인간형을 숨은 영웅으로 호명하고 그를 새로운 전형으로 삼았던 것이다. 가령 혁명, 투쟁, 전쟁, 속도전, 선군의 선구자, 투사, 영웅이 아닌 일상 속의 ‘평범한 인민’이 서사의 중심에 등장하였다. 남대현의 『청춘송가』(1987), 백남룡의 『벗』(1988), 최상순의 『나의 교단』(1982), 김교섭의 『생활의 언덕』(1984)의 주인공 같은 일상형 영웅이 바로 이러한 캐릭터라 할 수 있다.<sup>5)</sup>

3) 리동원, 『주체적문예리론연구(3) 작품의 주인공』(문예출판사, 1990), 10쪽.

4) 김성수, 「주체문학 전성기 『조선문학』(1968~94)의 매체전략과 ‘3대혁명소조원’ 전형론」 『한국근대문학연구』 37호 (2018) 참조. 『북한문학비평사』(역락, 2022), 438~439쪽.

5) 김성수, 『북한문학비평사』(역락, 2022), 432~436쪽.

북한문학의 전형사적 전통을 돌아보면, 해방 직후 ‘민주개혁기’ 문학의 ‘긍정적 주인공’부터, ‘공산주의적 인간형, 천리마기수, 투사-인간, 항일혁명투사, 주체형 인물, 3대혁명소조원, 숨은영웅, 선군 투사’ 등 수많은 인간형들이 명멸하였다. 이들은 ‘천리마 속도, 평양 속도’ 외에도 김일성 시대의 ‘비날론 속도, 강선속도, 안주 속도,’ 김정일 시대의 ‘80년대 속도, 희천 속도, 90년대 속도’ 등 사회주의적 근대-공산주의적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수많은 속도전을 창조한 주역이었다.

이제 김정은 시대(2012~23) 문학의 대표 형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시기 간행된 『문학신문』, 『조선문학』, 『청년문학』 12년치에 실린 시, 소설, 비평 등을 분석한다. 이 시기는 공식 문학사, 작품선집, 교과서 등 정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북한문학장을 대표하는 주요 문예지의 미디어콘텐츠를 전수 조사하는 문헌 고찰법과, ‘선군 투사, 만리마기수, 과학기술 룡마 탄 기수’ 등의 문학적 캐릭터, 서사적 주인공 형상을 조사, 분석, 평가하는 질적 연구 접근법으로 논의를 편다.<sup>6)</sup>

---

6)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의 대표적인 선행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문학예술연구회, 『감각의 갱신, 화장하는 인민 - 김정은 시대와 북한문학예술의 지평』 (살림터, 2019); 오창은,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생활』 (서해문집, 2020); 오태호, 『한반도의 평화문학을 상상하다 : 21세기 북한문학의 현장』 (살림터, 2022). 전형론만 다룬 것은 김성수, 「천리마에서 만리마로 : 김정은 시대 11년간의 문학」 『반교어문연구』 62 (2022) 참조.

## II. ‘선군 투사’를 넘어선 ‘사회주의 문명국’의 ‘만리마기수’

### 1. 3대 세습 지도자의 민생 중시와 선군 투사 이미지 벗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3남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였다. 3대 세습한 정권이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체제를 다진 후 자기 시대를 구가하게 되기까지 북한문학 12년의 전반적인 동향은 정중동이라 거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2,3년 정권 교체 초기의 북한문학, 특히 ‘수령 형상 문학’부문은 ‘김정은이 바로 김일성이자 김정일’이라는 후광효과에 편승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가령 김영희 단편 「붉은 감」<sup>7)</sup>이 그런 작품이다. 김정은의 일선 군부대 시찰과 현지지도를 통해 부조(父祖)의 권위와 선군통치를 재현하는 내용이다. 그가 어느 부대를 찾아가 그곳 ‘감나무중대’에서 최명옥이란 나이 어린 여전사를 만난다. 알고 보니 최명옥이란 이름을 가진 여성 병사가 수십 년 사이에 시기를 뛰어넘어 같은 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도 감나무중대에서 최명옥이란 동명이인을 만난 기연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부조의 선군통치방식을 계승한 후계 구도의 정통성을 우연이 아닌 필연적 운명으로 미화한 것이다. 김정은의 수령 형상 면모를 그리기 시작한 2013년 하반기부터 그런 단편소설이 창작되어 이듬해 『불의 약속』(2014)<sup>8)</sup>으로 묶였는데, 그 중의 한편이다.

7) 김영희, 「붉은 감」 『문학신문』 (2013.11.16.), 2~3쪽.

8) 정기종 외 공저, 『불의 약속』 (문학예술출판사, 2014).

새로운 청년 지도자는 ‘백두혈통’이라는 중세적 명분과 부조(父祖)의 후광에 힘입어 권력을 성공적으로 계승하였다. 다음 단계로 자기만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조의 혁명과 선군 구호와 달리 ‘인민 생활 향상’ 담론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일상의 전시화(戰時化)’가 내재된 동원 체제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문명국’의 환상을 심어주었다. 추상적 정치구호로 점철된 혁명과 선군 대신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이미지로 새롭게 달라진 일상의 모습을 팝진하게 묘사한 ‘철령 아래 사과바다,’ ‘세포등판 축산기지,’ ‘마식령속도’ 등을 제시하였다.

가령 우리의 대관령 목장, 임실치즈 공장에 비견될 ‘세포등판 축산기지’ 건설을 노래한 장시 「한껏 푸르러지라 세포등판이여」(2013)를 보면, ‘세포등판속도, 철령 아래 사과바다, 마식령속도’ 등의 이미지가 나열된다.

남들이 수십 년이 걸려도 못한다는 이 전변 / 우린 단 1년에 안아왔으니  
/ 2년 또 3년 후면 / 이 세포등판은 그 얼마나 몰라보게 전변될 것인가/ 내  
조국의 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철령 아래 / 인민의 기쁨을 한껏 떠시고 솟은 마식령 / 만복이 주렁지는  
사과바다 / 양이며 젖소가 구름처럼 흐르는 푸른 등판의 바다<sup>9)</sup>

세포등판은 대규모 국립 축산기지를 축성할 지명이다. 한국식의 대관령 목장을 만들려면 10년 넘게 걸릴 것을 북한에서는 1년 내에 토지 기반을 닦고 2~3년 내에 초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속도전으로 축산, 낙농업을 발전시켜 이른 시일 안에 젖소와 양에서 나온 질 좋은 자국산 우유와 치즈, 유제품을 인민들에게 빨리 공급하겠다는 말이다. ‘철령 아래 사과바다’란 김정일의 선군통치를 상징하는 유서 깊은 장소인 철령

9) 김윤걸·리태식, 「한껏 푸르러지라 세포등판이여」(장시) 『문학신문』 (2013.10.19.), 1쪽.

기술에 있는 고산사과농장을 대규모 과수원 단지로 확장 개발하여 사과 등 과일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마식령에는 세계적 규모의 스키장을 만들어 인민들의 레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의 민생 안정책은 식의주 등 생필품의 무한한 보급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차원을 넘어선 과일, 담배, 우유, 치즈, 녹차 등 기호식품까지 시야를 확대한 점이 위 시에서 드러난다. 시에서 “남들이 수십 년이 걸려도 못한다는 이 전변 / 우린 단 1년에 안아왔으니”라고 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2013년 당시 축산기지의 초지 기반 조성 공사를 단 1년 만에 성공하여 한때 ‘세포등판속도’<sup>10)</sup>란 신조어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목초지가 조성된 2, 3년 후면, “양이며 젖소가 구름처럼 흐르는 푸른 등판의 바다”로 초지가 조성되어 몰라볼 정도로 천지개벽이 될 것이라던 대규모 축산기지는 끝내 뉴스로 보도되지 않았다. 당연히 낙농 천국의 현실을 반영한 시, 소설도 등장하지 않았다. 목초지가 있어야 젖소를 키우고 거기서 우유가 나오고 치즈를 만들어 햄버거, 피자까지 나올 텐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북한 시, 소설에 치즈 향과 피자 맛이 표현되지 않는다. 축산산업과 낙농가공업의 혜택을 듬뿍 누렸던 스위스 유학 출신 청년 지도자의 어릴 적 치즈 피자 먹던 추억과 상상이 세포등판에선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듯하다.

‘세포등판속도’는 그렇다 치고, ‘철령 아래 사과바다’는 어떠한가? 김정은은 2013년 6월 3일 고산과수농장을 현지 지도하였다. 부친의 선군장정 정서가 깃든 철령 전선시대 고산땅에 대규모 과수원 풍광을 흡족해하며 ‘사회주의선경’을 떠올리면서 ‘철령 아래 사과바다’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선친 시대의 키워드인 선군과 자기 시대의 새로운 ‘시대어’인 인민생활

<sup>10)</sup> 현지보도반, 「마식령속도에 세포등판속도 창조로 화답하며 -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세포등판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로동신문』 2013년 6월 18일.

향상, 행복을 둘 다 아우르는 적절한 이름으로 보인다. 당대 ‘시대어’를 정리한 김영범의 뜻풀이처럼, “철령이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이라면 사과바다는 사회주의만복의 상징이다.”<sup>11)</sup> 철령 아래에 굽이치는 사과바다 선경은 부친의 위업인 선군을 위에 두고 그 후광 아래에서 사과바다로 상징되는 인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김정은의 애민정서를 보여준다. 김영범은 “당의 선군정치가 낳은 또 하나의 선경”이라고 부연함으로써 ‘철령 아래’라는 수식어에 방점을 찍었지만, 필자가 보기에 뜻풀이의 무게 중심은 ‘사과바다’에 있다고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철령 아래 사과바다’는 2013년까지 아직 영향력이 남아있는 선군정치의 잔영과 그로부터 벗어나 노동계급 중심의 당-국가체제로 되돌리고 싶은 청년 지도자의 애민 욕망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가시적 이미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선군정치의 장소적 상징성을 띤 철령에서 자신의 애민, 민생을 상징하는 사과바다 과수원의 스펙터클을 구가하는 것은 선군 이념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자기만의 통치 스타일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게 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다.

위 시에서 앞의 두 이미지보다 더욱 뚜렷하게 가시화된 것은 세 번째 시구인 “인민의 기쁨을 한껏 떠시고 솟은 마식령”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김정은 시대 1기<sup>12)</sup>를 가장 생동하게 보여주는 건설 속도와 민생,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성과로 보인 것이 ‘마식령속도’와 ‘스키바람’이기 때문이다. ‘마식령속도’란 국제규격의 대규모 스키장 건설 공기(工期)를 “10년 세월 한해로 앞당긴”<sup>13)</sup> 속도 담론이다. 세계적 규모란 국제정기를

11) 김영범, 『인민사랑의 시대어』 (평양출판사, 2016), 33쪽.

12) 김정은 시대의 정세 변화와 문학 동향을 아울러 감안한 결과 문학사적 시기를 셋으로 나눴다. 정세 변화는 제7, 8차 당대회(2016, 2021)를 기점으로 1, 2, 3기로 나눴다.

13) 리경제, 「마식령 병사는 추억하리」(시) 『조선문학』 (2013.7.), 22쪽.

치를 수 있는 10개의 스키주로와 최신 호텔 등 숙박시설, 여러 노선의 산도(리프트)와 설상차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방대한 규모의 스키장을 말한다.

2013년 김정은이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에게 강조한 비약과 혁신의 속도이다. 인민군 군인들은 ‘단숨에’의 정신으로 스키장 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새롭게 창조한 속도를 일컫는 시대어이다. 당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군인 건설자들이 10년이 걸릴 방대한 스키장 건설을 1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함으로써<sup>14)</sup> 12월 31일 ‘마식령속도’ 창조에 성공하였다.

마식령스키장의 건설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군인 건설자들에게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이라서 그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건설노동에 동참했을 것이다. 그들은 스키장 건설을 고무선동하는 시 「마식령 스키주로여」<sup>15)</sup>의 한 구절처럼, “단숨에’ 정신으로/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일당백 공격속도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였다. 시인이 찾아낸 건설 노동의 동력은, “내 여기서 보노라/ 일당백정신이 창조한 ‘마식령속도’/ 김정일애국주의의 숭고한 정신력/ 당이 번개를 치면 우레를 치는/ 완강한 그 정신 그 기백”이라고 한다. 다만 타자의 시선에서 볼 때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애정만으로 극한 노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당시 보도 기사와 대남방송을 종합해 볼 때, 군인이 건설투쟁을 참여할 때 민간 노동자와 다른 군인만의 동인(動因)이라 할 ‘적에 대한 적개심’이 더한 것이 아닌가 싶다.<sup>16)</sup>

이처럼 ‘철령 아래 사과바다’, ‘세포등판 축산기지’, ‘마식령속도’ 같은

14) 채희원·원충국,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62쪽.

15) 주경, 「마식령 스키주로여」(시) 『조선문학』 (2013.8.), 25쪽.

16) 자세한 것은 김성수, 『북한문학비평사』 (역락출판사, 2022), 506~511쪽 참조.



김정은 시대 1기를 대변하는 시대어<sup>17)</sup>가 바로 문학 창작의 모티브가 되었다. 기실 김정은 시대 1기 문학의 대표 캐릭터는 김정일 시대 문학의 잔영인 ‘선군 투사’였다. ‘핵무력과 경제 병진책’을 실현한 ‘마식령속도’의 창조자인 군인 건설자가 그 예이다. 그들 군인 건설자의 성격적 특징은 선군 투사형이라 할 수 있다. 선군시대의 돌격정신은 ‘당의 호소를 심장에 쏘아박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곧바로’의 정신이었다. ‘작렬하는 폭약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공격정신이며 어떤 악조건에서도 동지적 우애와 집단의 위력으로 난관을 뚫고나가는’ 자력자강 정신이었다.<sup>18)</sup>

기실 군인, 병사가 전지도 아닌 평시에, 천재지변이 나서 대민 지원에 나서거나 민간 부문 건설장에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군사 작전을 위한 도로나 토목공사 같은 SOC도 아닌 유원지 위락시설 건설에 동원될 노동력 자원은 더욱 아니다. 비록 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랐지만 물자도 태부족한데 일선 병사들이 그토록 고생해서 예의 ‘마식령속도’로 스키장을 건설했다면, 그 스키장은 당연히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운영 관리되어야 할 터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장시의 한 구절, 스키장 개장을 축하하는 대목을 보자.

그 자옥자옥 우에/ ‘마식령속도’의 불바람이 일어/ 억만년 잠자던 대화봉의  
산발을 흔들어 깨우며/ 황홀경을 이룬 스키주르가/ 눈뿌리 아득히 뻗어가고//

17) “당의 부름 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군인 건설자들은 고결한 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으로 국제규격의 대규모 스키장과 호텔 등 부대시설을 빠른 기간에 끝내는 혁혁한 위훈을 세웠다.” 채희원·원충국,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133쪽.

18)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은 당의 호소를 심장에 쏘아박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 나가는 ‘곧바로’의 정신이다.” 채희원·원충국,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62쪽.

전승 60돛과/ 공화국 창건 65돛의 열병 광장 <조국찬가> 노래 / 세포동판  
방목지/ 김정은조선은 백배천배로 강해졌거니//

마식령 스키바람/ 미림의 승마바람이/ 온 나라에 일어번지고/ 새집들이  
경사로 거리와 마을들이 들썩할/ 사회주의 문명국이 우리를 부른다//

가자/ 우리 가자/ '마식령속도'의 불바람을/ 대건설의 열풍/ 비약의 열풍으  
로 터쳐올리며/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질/ 2014년으로 가자//<sup>19)</sup>

시에서 보듯이 군인들이 건설한 스키장에서 인민대중들이 급강하가 가능한 국제규격의 급경사 주로를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황홀경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위 시에서 노래한 마식령 스키바람의 가시적 실감이다. 이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시각적이자 촉각적인 공감각이기도 하다. 바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 '스키바람'이다. '스키바람'이란 현대식으로 건설된 세계 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겨 타는 인민들의 모습을 그린 시대어이다. 당이 바라는 세계적 기준, 국제규격으로 만들어진 스키장에서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운동을 하게 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세계 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 개장식이 진행된 후 2014년 2월부터 청소년 학생들의 스키 캠프가 개설되어 스키장에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sup>20)</sup> 다만 속도전 자체가 군대식 노동 동원을 적극 펼쳐서 단기간에 생산성을 부쩍 높이려는 의도의 산물일 터라, 속도를 높이는 순간 군인, 노동자, 주민의 노력 동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21)</sup>

이처럼 새로운 청년 지도자는 자기만의 독자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구축한다. 그는 이른바 '항일혁명'으로 부르는 민족해방무장투쟁부터 시작

19) 주광일, 「못 잊을 2013년이여」(장시) 『문학신문』 (2013.12.30.), 3쪽.

20) 채희원·원충국,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1』, 181쪽.

21) 이러한 속도전의 양면성을 민생 중시와 선군 투사 이미지 벗기의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익명의 심사자 지적에 동의한다. 관련하여 '속도전의 양가성'에 대해서는, 『북한문학비평사』 (역락, 2022), 516-517쪽 참조.

하여,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체제 건설, ‘문학예술혁명’, ‘선군혁명’에 이르기까지 ‘조선혁명’의 지난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 조부의 항일빨치산투쟁 경험에 기초한 주체사상 창시자 이미지와 부친의 주체사상 유일체제화를 위한 문화혁명과 선군장정(先軍長征) 이미지를 후광 삼아 ‘백두혈통’이라는 명분으로 승계했을 뿐이다. 그러나 혈연적 직계라는 중세적 명분으로 부조의 정치적 성과를 모방, 재연하는 것만으로는 인민대중 및 외부세계에 면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민생을 강조하는 ‘인민에게 친근한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다.

## 2. ‘사회주의 문명국’ 실현의 주역 ‘만리마기수’ 형상

김정은 정권 1기(2011.12~2016.5) 문학을 보면, 인민들이 ‘사회주의 문명국’에서 ‘사회주의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상 찬가가 이전보다 대폭 늘었다.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여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 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sup>22)</sup>이다. 최상, 최고란 수식어를 빼면 그 실체는 공원, 유원지, 위락시설 같은 현대적인 문화시설, 후생 복지를 늘려 전쟁과 체제 대결에 지친 인민들이 문명한 여가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군비로 안보를 극도로 강화할 수 있는 핵폭탄과 우주 로켓 개발이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과 담론에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성공 서사가 유독 많다. 우주시대를 구가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공민의 ‘사회주의적 부귀영화’를 그린 작품은 ‘핵무력·경제 병진’책의 예술적 반영물로

<sup>22)</sup> 채희원, 원충국,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1』, 156쪽.

볼 수 있다.

36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 2기(2016.5~2020)의 시, 소설을 보면 선군 시대 문학과 가장 달라진 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생동감 넘치고 섬세한 묘사이다. 공장, 제철소, 탄광, 농어촌, 사무실 할 것 없이 북한 전 지역의 전 일상영역, 직장분야에 걸쳐서 자발적 노동 동원의 동력이 되도록 ‘사회주의 강국, 사회주의 문명국’을 만들겠다는 환상을 심는 데 문학이 기여하였다. 문학작품에 나타난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할 주역, 시대정신을 표상할 새로운 인간형은 누구인가? 바로 ‘만리마속도’ 창조운동을 이끄는 ‘만리마기수’ 형상이다.

‘만리마’는 김정은 시대 1기에 술하게 열거되었던 정책 슬로건이나 가시적 이미지를 당 제7차 당대회 이후 통합한 이미지(UI)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생산 현장의 슬로건인 “천리마, 만리마가 달리는 자세로” 노동에 매진하자는 정도였다가 어느 순간 ‘만리마시대’를 자기 시대를 규정하는 시대어, 키워드로 삼았다. ‘만리마’란 예전 구호 ‘천리마’를 변형한 것이다. 만리마시대의 선구자인 ‘만리마기수’는 저 1950~60년대 사회주의 건설기 천리마운동의 주역이었던 천리마기수의 후예라 하겠다. 이는 단순한 노동영웅의 모방, 재현이 아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앞선 사람, 앞선 단위가 뒤떨어진 사람, 뒤떨어진 단위를 술선 맡아 도와주며 이끌어주는 것이 전 사회적 기풍이던 천리마대고조시기처럼, 당-국가의 중간 관료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인민대중의 생산현장, 생활 속으로 들어가 균증을 발동시키고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는 것이다. 이는 노동력 제고만 독려한 것이 아니라 인간 개조와 정신력 발동의 모범이 온 나라에 가득차도록 하려는 당의 의도이다.”<sup>23)</sup>

<sup>23)</sup> 채희원, 원충국,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

‘만리마속도’ 창조운동을 당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은 제7차 당대회 이후이다.<sup>24)</sup> 당시 당대회를 즈음한 시기에 나온 시 「나래치자 만리마속도로」(2016.5)를 보자.

(전략) 십 년을 한 해에! / 우리 대에 민족의 대업을! / 강산을 떨치는 만리  
마의 호용소리 / 그것은 제힘을 믿는 강자들 / 레일을 안고 불타는 열의 인간  
들이 / 시대를 진감하는 산울림소리//

날으자 만리마여 / 우리 당이 가리키는 리정표 따라/ 기적과 대비약의 기  
념비들을 이 땅에 안아올리며 /과학전선의 첨단돌파로 / 지식경제의 모양을  
멋지게 그리며 / 이 땅 이 하늘 아래 / 만복의 향기를 가득 채우며//

주체철이 사품치는 용해장에서 / 발전소와 지하막장/ 우썩우썩 솟구치는  
려명거리 층막 우에서/ 이 땅의 주인들이 번개쳐 내닫는다 / 승리의 룡마 /  
총진군의 준마를 타고//

위대한 당 중앙의 부름에 화답하여 / 백만천만이 / 만리마 선구자가 되리  
라//<sup>25)</sup>

시에서 만리마속도란 ‘십 년을 한 해에!’는 시구처럼 목표 대비 10배의 생산 실적을 내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그 주인공은 “제 힘을 믿는 강자들 / 레일을 안고 불타는 열의 인간들”이란 시구처럼 외부의 도움이나 외제 수입품 없이 자력갱생으로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만리마기수이다. 이들이 천리마기수와 다른 점, 나아진 지점은 ‘과학전선의 첨단돌파로 / 지식경제의 모양을 멋지게 그리’는 첨단 과학 기술과 정보화 시대의 지식을 갖춘 인재라는 사실이다.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제철소, 발전소, 탄광, 고층건물 건설장 등에서 ‘당 중앙’으로 불리

---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1』, 119쪽.

24) 물론 당의 공식화 이전에도 ‘만리마 기수’ 형상이 작품화되었다. 리연희, 「만리마 기수」(시뭇음) 『문학신문』 (2016.3.12.), 1쪽.

25) 박정철, 「나래치자 만리마속도로」 『문학신문』 (2016.5.21.), 1쪽.

는 김정은의 명령에 화답하여 자발적 노동에 힘쓰는 것이다. ‘만리마속도 창조운동’의 주역인 ‘만리마 선구자’들은 ‘승리의 룡마 / 총진군의 준마를’ 탄 ‘만리마기수’로 형상된다.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문학장에서 만리마 형상이 촉출하였다. 박정철 시 「나래치자 만리마속도로」가 본격 창작의 신호탄이 된 듯, 비슷한 내용과 형식의 텍스트가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었다. 「만리마의 진군길」, 「만리마병사」 같은 시, 「우리는 만리마 세대」, 「만리마 달린다」, 「만리마 타고 자강력 떨쳐가자」 같은 가사, 「우리는 만리마 기수」 같은 노래, 「천리마에서 만리마어로」, 「폭풍쳐 달리자 만리마시대의 사상전선의 기수로」 같은 정론, 「만리마선구자」 같은 수필이 계속 나왔다.<sup>26)</sup> 만리마속도 창조의 기원이 되었던 2016년의 평양 려명거리 건설장을 자랑스레 그린 찬가 「아, 만리마속도 창조의 고향이여」에서도 건설 노동자를 형상하였다.<sup>27)</sup> 이전까지 선군 투사일 것 같은 인민군 병사도 ‘만리마 병사’란 이름을 새로 얻어 만리마 탄 기수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형상화되었다.<sup>28)</sup> 다만 박혁의 시, 「나래치라 만리마여, 강원도정신으로」 처

26) 손경주, 「만리마의 진군길」(시) 『문학신문』 (2016.5.28.), 3쪽; 홍철진 외, 「천리마에서 만리마어로」(정론) 『조선문학』 (2016.5), 18쪽; 하복철, 「우리는 만리마 세대」(가사) 『문학신문』 (2016.7.16.), 4쪽; 안혜영, 「폭풍쳐 달리자 만리마시대의 사상전선의 기수로」(정론) 『문학신문』 (2016.8.6.), 3쪽; 김영임, 「만리마의 속도는 창작전투에서도」 『문학신문』 (2016.8.13), 1쪽; 최성혁, 「만리마 타고 자강력 떨쳐가자」(가사) 『문학신문』 (2016.9.10.), 4쪽; 리효태, 「만리마 달린다」(가사) 『문학신문』 (2016.11.19.), 4쪽; 리지성 작사, 현경일 작곡, 「우리는 만리마 기수」(악보) 『조선문학』 (2016.9), 표지2쪽; 박복실, 「만리마 선구자」(수필) 『문학신문』 (2017.3.11.), 3쪽; 김태종, 「만리마속도로 내 조국 빛내자」(가사) 『문학신문』 (2017.11.25.), 4쪽; 리영민, 「가사 3편\_만리마선구자의 노래」(시) 『문학신문』 (2017.6.17.), 4쪽.

27) 우광영, 「려명거리에서 우리가 산다\_ 아, 만리마속도 창조의 고향이여」(시조) 『문학신문』 (2017.5.13.), 1쪽.

28) 방명혁, 「만리마병사」(시) 『문학신문』 (2017.2.25.), 1쪽.

럼 만리마가 ‘강원도정신’을 강조하는 문학적 수사로 전락하면 전형적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엔 만리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생산력 향상을 수식하는 관형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29)</sup>

문학작품에 나타난 만리마 형상 중 이채로운 것은 말이 하늘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는 통념적 이미지와 달리 지하막장 광부를 격려하면서 하늘과 땅, 천지가 전도(轉倒)된 독창적인 비유를 담은 경우이다. 당연히 하늘만 날 것 같은 만리마기수가 탄광의 지하막장에서조차 초인적 노동력을 발휘하는 막장 광부의 영웅적 면모를 그린 서정시이다.

만리대공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만리마라 하더라 / 허나 영웅소대 만리마는/ 네 굽을 안고 날아내렸구나/ 깊이 천길 땅속 더 깊이로 / 무한한 하늘로 내려쳐오르기도/ 정녕 헐치 않다만 / 얼마나 억센 불패의 나래 펼쳤으면/ 어두운 땅속 천연암반을 걷어차며/ 천리만리를 내달렸으랴 // (중략) 그대들의 만리마는 지치지도 주저앉지도 않았구나 / 한치한치 보화의 장벽을 열어제끼며 만리마의 기세찬 호용소리는/ 천길 지심을 뒤흔들었어라<sup>30)</sup>

흔히 만리마기수라 불리는 노동영웅들은 만리마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상상으로 들으면서 날개 돋친 용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기상을 떠올린다. 그런데 탄광의 영웅적 채탄소대원들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통념과 달리 땅속 깊이, “천길 땅속 더 깊이로” 파고든다. 일반 공장 노동자들이 만리마 탄 기세로 노동에 종사할 때도, “무한한 하늘로 내려쳐 오르기도/ 정녕 헐치 않다.” 그에 비해 노동강도가 훨씬 센 지하 막장의 영웅적 탄부들이 만리마식 노동을 두고, “얼마나 억센 불패의 나래 펼쳤으면/ 어두운 땅속 천연암반을 걷어차며/ 천리만리를 내달렸으랴” 하고 자랑한다. 서정적 자아는 그들 천길 땅속 지하막장을 파내려가는 영웅적인 탄부들

29) 박희, 「나래치라 만리마여, 강원도정신으로!」 『문학신문』 (2017.5.6.), 1쪽.

30) 전승일, 「땅속을 나는 만리마」(시) 『조선문학』 (2017.11), 47쪽.

의 각오에 찬 기합과 외침을 두고, “천길 지심을 뒤흔들”, “만리마의 기세 찬 호용소리”로 환기한다. 천 길 땅속 깊이 파고드는 탄부의 이미지를 통해, 만리마 이미지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졌는지 알 수 있다.

평소보다 배가된 생산속도를 강조하는 ‘만리마 탄 기세’ 이미지는 공장, 농장, 탄광, 제철소 같은 생산 현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시, 소설, 노래 같은 문학예술 창작에도 속도가 강조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매년 연초에 세운 창작계획을 연말에 총화할 때도 계획 대비 창작생산량의 배가와 원래 계획했던 창작 일정보다 앞당겨 작품을 제출하는 ‘창작 독려’에도 만리마속도가 적용되었다. 작가들은 시, 소설 창작을 전투적으로 수행할 때 만리마속도를 적용하고 명작을 창작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에서 먼을 세우며, 4.15문학창작단 소속 작가들도 수령 형상을 장편소설로 쓰는 총서 창작에도 적용하였다.<sup>31)</sup> 만리마기수라 할 공장 노동자들도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서 작가가 되는 군중문학작품을 잘 쓸 수 있다고 하였다. 문학신문 기자가 평양 시내의 김정숙제사공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이 바로 만리마기수 자신이라서 그들이 소속한 군중문학소조에서 써낸 군중문학 창작이 바로 만리마기수 형상 작품이 되는 것이다.<sup>32)</sup>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이상은 ‘사회주의 강국’, ‘사회주의 문명국’ 실현이며, 그를 가능케 하는 대중운동은 ‘만리마속도 창조운동’이다. 그것은 또한 자력갱생을 제일로 삼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 생산뿐만 아니

31) 김영임, 「만리마의 속도는 창작전투에서도」 『문학신문』(2016.8.13.), 1쪽; 본사 기자, 「눈부신 명작 창작 성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스럽게 맞이하자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39차전원회의 진행」 『문학신문』(2017.5.13.), 1쪽; 김향(본사기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한 창작 성과로\_천만군민의 심장을 울려주는 총서작품들을 더 많이 - 4.15문학창작단에서」 『문학신문』(2017.5.20.), 1쪽; 미상, 「격동하는 만리마시대를 선도하는 명작 창작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사설) 『문학신문』(2017.8.26.), 1쪽.

32) 김향(본사기자), 「더욱 활기를 띠는 만리마기수들의 군중문학창작활동 - 김정숙평양제사공장 군중문학소조에서」 『문학신문』(2017.11.25.), 4쪽.



라 사회 문화, 생활의 전 부문에서 질적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전 인민적인 자력갱생 대진군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이전 선군 시대와 다른 기준과 전형을 창조하고 그를 모범 삼아 따라 배워야 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기 위한 연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사회주의경쟁운동”이다.<sup>33)</sup>

천리마가 만리마로 배가된 데는 또한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잇단 핵실험 성공에 고무되어 이른바 ‘우주시대’를 맞은 자신감도 하나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리광운의 시 「나는 위대한 시대에 산다」(2017)에서 “십년을 하루에 당겨놓으며/ 만리마로 달리는 위대한 이 시대”라고 노래하는 자부심의 원천은 “지심을 뒤흔든 수소탄의 폭음이/ 이 조선의 공민된 긍지를 더해주며,” “하늘을 우리르면/ 우리 《화성》의 찬란한 모습이/ 눈부신 자태로/ 이 가슴에 안기여들”기 때문이다.<sup>34)</sup> 만리마는 천리마의 진화형인 셈이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만리는 4천 킬로미터인데 만리마는 ICBM처럼 대륙을 넘나드는 ‘최첨단 과학기술 룡마’인 셈이다.

33) 「만리마시대의 《산울림》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자」(사설) 『문학신문』 (2016.6.4.), 1쪽.

34) “잠시 귀기울이면/ 지심을 뒤흔든 수소탄의 폭음이/ 이 조선의 공민된 긍지를 더해주며/ 쿵쿵 심장을 울려주고// 저 하늘을 우리르면/ 우리 《화성》의 찬란한 모습이/ 눈부신 자태로/ 이 가슴에 안기여들듯// (중략) 아, 세인을 놀래우는 위대한 창조자로/ 인민이 거인처럼 우뚝 선 이 땅/ 십년을 하루에 당겨놓으며/ 만리마로 달리는 위대한 이 시대.” 리광운, 「나는 위대한 시대에 산다」(시) 『문학신문』 (2017.9.23.), 3쪽.

### Ⅲ. 자력갱생형 청년 과학기술자 ‘과학기술 롬마 기수’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전후로 한 김정은 시대 3기는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광풍이 ‘대동란’을 일으킨 팬데믹 시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문학은 급변한 정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제8기 당 정책인 ‘인민경제 5개년계획’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담론은 당연한 창작 소재이지만, 코로나19 방역을 통한 ‘인민의 안녕’ 담론을 선전하는 것 또한 문학예술 창작의 중차대한 임무가 되었다. 이는 김정은 시대 1기(2012~15)를 대표했던 ‘핵무력과 경제 병진정책,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마식령속도’<sup>35)</sup>이나 2기(제7차 당대회, 2016.5~2020)를 대표했던 ‘만리마속도, 만리마기수’ 형상론과 구별되는 3기 문학의 특징이다.

김정은 시대 2기의 문학적 주인공인 만리마기수는 3기에 들어서면서 시대의 선구자이자 ‘과학기술 롬마 탄 컴퓨터 기사’인 청년 과학기술자로 다채롭게 그려진다. 청년 과학기술자를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으로 내세운 데는 이유가 있다. 선군시대 문학에서는 한웅빈의 「스물한 발의 ‘포성’: 안변청년발전소 군인 건설자의 일기 중에서」<sup>36)</sup>, 박윤의 『총대』<sup>37)</sup> 등에서 보이듯이, 주관적·객관적 여건을 감안해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의 혁명적 군인정신만 강요했던 선군시대 투사를 전형으로 내세웠다. 당시엔 첨단장비와 생산설비는커녕 물자생산을 위한 원료와 연료 등 생산수단이 태부족한 열악한 현실에서 오로지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한

35) 채희원, 원충국,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1』, 110쪽, 133쪽.

36) 한웅빈, 「스물한 발의 포성」 『조선문학』 (2001.6).

37) 박윤, 『총대』 (문학예술출판사, 2003).

(반강제 동원) 노동력으로만 경제 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문제가 많았다. 그조차 “사탕 한 알보다 총알 한 방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생필품을 위한 경공업 생산을 희생하고 군수 산업, 중공업 우선주의였다. 이제 체제 붕괴라는 최악의 급변사태를 극복해서 정상적인 인민계획경제를 수행하는 2020년 전후의 달라진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최소한의 지식정보를 지닌 노동자와 관리자가 생산 현장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나온 구호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다. 이는 북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학 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만들겠다는 당 사업이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을 첨단 과학지식과 기술기능에 정통하고 과학기술 강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강국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학술형 인재, 실천형 인재로 키우자는 사업이다.<sup>38)</sup>

가령 제철소 용광로에서 일하는 노동계급도 예전처럼 혁명적 열정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백전노장 지배인 아바이나 근육질의 제대 군인 분조장만 중심이 아니다. 청년 기술자, 심지어 처녀 과학기술자가 종합 조종 제어실에서 폐쇄회로 화면을 보고 공정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컴퓨터로 계산된 중앙제어처리장치, CNC 시스템으로 생산공정을 관장한다. 남성 위주의 중노동, 고위험 생산 현장의 상징이던 제철소 용광로나 탄광의 지하 막장까지도 컴퓨터로 제어하는 첨단과학공정이 체계화된 것이다. 김남호의 「김철의 용해공들 속에서」(2023)란 시초를 보면, 김책제철소 용광로에서 중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과학기술 롭마 탄 기수’로 형상화하고 있다.

종구나/ 그제는 반장이/ 어제는 전공이/ 오늘은 수리공이/ 그렇게 온 작업

<sup>38)</sup> 채희원, 원충국,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1』, 161쪽; 김미란, 김기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전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110쪽.

반이 발명명수가 되어/ 과학기술 룡마에 뉥큼 뛰여오르니//  
 사람은 수십이여도/ 백만대군 못지 않다고/ 온 공장이 사랑 담아 지어준/  
 그 이름도 자랑 높은 명수작업반//  
 피어린 항일의 불길 속에 태어난 / 자력갱생의 전통을/ 피로 뉥으로 훌룡  
 히 이어가면/ 무엇이든 맡겨달라! / 배심 든든히 슬기로운 이마 빛내며 / 조  
 국 앞에 씩씩하게 나서는 명수작업반//<sup>39)</sup>

시에서는 김책제철소의 발전상을 첨단 과학기술로 뒷받침된 지식경제 사회의 추세에 맞게 창의적 발상의 발명품이 연일 나오는 풍광 묘사로 환기한다. 반장, 전기공, 수리공 등 작업반 성원 모두가 증산, 공정 압축, 비용 절감을 위한 ‘발명의 명수’가 되어 외부의 도움이나 외제 수입품이 없어도 자력갱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정적 자아는 ‘항일의 불길’로 형성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과 ‘백만대군’으로 부풀려진 6.25전쟁의 전통도 떠올리되, 현실에선 생산비 절감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갖춘 발명의 ‘명수 작업반’원을 두고, ‘과학기술 룡마에 뉥큼 뛰여오’른 만리마기수로 이미지 메이킹한다.

조금은 추상적인 만리마기수 전형의 좀더 가시적인 이미지가 바로 ‘과학기술 룡마 탄’ 노동자, 과학기술 룡마 기수이다. 이런 발상은 김남호의 장시, 「철의 대통로」(2019), 김정삼, 「과학기술 룡마 탄 우리 작업반」(2022), 박금실, 「김철의 용해공들 속에서」(2023) 등 여러 시편에 반복적으로 서정화된다.<sup>40)</sup> “자력갱생 앞장선 작업반” 노동자들이 ‘과학기술 룡마 타고 뽕뽕 달리거나 ‘과학기술 룡마 타고 더 높이 날자’고 하는 식이다.

<sup>39)</sup> 김남호, 「김철의 용해공들 속에서」 『문학신문』 (2023.1.7.), 1쪽.

<sup>40)</sup> 김남호, 「철의 대통로」(장시) 『문학신문』 (2019.4.6.), 2쪽; 김정삼, 「과학기술 룡마 탄 우리 작업반」(시) 『문학신문』 (2022.3.26.), 4쪽; 박금실, 「김철의 용해공들 속에서\_룡마의 기수들, 쇠물과 용광로, 종합조종실에서, 출선풍경 한 토막, 원료장에 핀 꽃」 『문학신문』 (2023.1.7.), 4쪽.

내 사랑 무쇠철마야/ 농업전선의 주력 ‘땅크’답게/ 또 한해 본때있게 달려  
 보자/ 보아라, 너의 발동소리에/ 눈이불 쓴 황해별방이 벋적 눈을 뜬다//  
 우리 당의 웅대한 새시대 농촌혁명/ 세기의 이상이 꽃피나는 그 기슭으로  
 /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너는 대지의 장한 선구자//  
 (중략) 제 땅이 있고/ 대지의 주인들이 있고/ 무쇠철마가 있는데야/ 땅이  
 꺼지게 쌀산을 쌓아올리지 못하랴/ 농민들의 가슴마다/ 신심과 열정의 피 펴  
 필 뒤희게 하는/ 너는 자력갱생의 룡마<sup>41)</sup>

「가자 무쇠철마야」(2023)란 농민시에선 첨단 개량형 트랙터를 보고 시인은 다양한 이미지를 동원한다. 처음에는 ‘무쇠철마’란 중세시대적 은유로 시작하여 ‘농업전선의 주력 땅크’란 근대적 표현을 더한 후, 결국에선 ‘자력갱생의 룡마’라는 최신 유행 이미지로 귀결짓는다. 시를 처음 대했을 때는 김정은 시대의 농업부문 정책을 대변하는 ‘새세대 농업혁명’의 문학적 상징이 기껏 ‘무쇠철마, 땅크’인가 싶어 실망스러웠다. CNC 시스템으로 ICBM 발사에 성공할 정도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2023년 현재까지도 시적 상상력은 중세적, 군대식의 낡은 수사법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상상력 빈곤과 시대착오 사례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를 다시 보니 아니었다. 외형상 무쇠로 만든 철마처럼 보이는 트랙터가 실은 농업혁명의 견인차, 탱크이면서 나아가 대륙을 오고가는 ICBM 미사일급의 ‘룡마’로 비견되는 순간, 시인의 상상력이 예사롭지 않다고 풀이할 수 있다.

가령 김정은 시대의 ‘새세대 농업혁명’을 가시화한 농촌소설 「향기」(2020)를 보자.<sup>42)</sup> 이 단편 주인공은 흥평협동농장 총각 분조장 박태수이다. 그는 농경사회의 전통 지도자인 분조장 아버지의 연륜과 경험 대신 농업기술 혁신을 주장한다. 촌로의 오랜 경험에 주로 의존한 종래의 전통 농법과 주체농법 대신 과학농법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청년세대 사이

41) 박정철, 「가자 무쇠철마야」(시) 『문학신문』 (2023.1.21.), 4쪽.

42) 박광, 「향기」(단편소설) 『조선문학』 (2020.11), 64쪽.

의 갈등이 생긴다.

백 가지 농사일에 요구되는 것이 많았지만 제일 걸린 것은 비료였다. 곡식들이 날을 따라 자라는데 맞게 조절비료를 준 뒤여서 이제는 이삭비료를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이삭비료가 절대적으로 모자랐다. 더우기 농장에서는 이삭비료를 농장 자체로 생산한 대용비료들로 충당하겠다고 경영위원회에 제기한터여서 화학비료 한줌 얻기가 조런치 않았다.

(중략) “학동리 1작업반 2분조장을 만나서 이 기억기를 좀 전해주게. 농업 대학에 다니는 우리 딸이 그한테 보내는 건데 그 안에 현대과학농법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야.”

(중략) 땅이란 화학비료만 주면 점점 진액이 빨리워 산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생산하는 대용비료들인 영양토, 분토, 소토들은 땅에도 유익하고 또 국가적 견지에서 봐도 유익한 것이다, 천연류황에 감탕을 혼합해도 좋은 비료가 된다는데 대하여, 자기 분조사람들이 참가하는 농업과학기술보급시간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하여 긍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처녀의 목소리를 듣는 나의 머리속에 우리 농장 뒤산에 깔린 린회토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sup>43)</sup>

소설의 서사적 갈등은 농사 반장의 화학비료 주장에 맞서지 못하고 린회토 대용비료를 포기했던 내게 최은순 분조장의 다음과 같은 충고였다. 분조원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것은 자기 땅을 사랑하고 자기 힘을 믿으면서 땅을 가꾸야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짝사랑 대상인 다수확 분조장에게 비료 탕을 안 하면 몹쓸 땅은 하나도 없으며, 게으른 농민이나 땅 타발, 날씨 타발, 비료 타발을 한다는 핀잔을 듣는다.

이러한 농촌 서사의 갈등은, 거름과 화학비료에만 의존했던 전통농법과 달리 친환경 대용비료(혼합비료)를 새로 개발하여 지식경제형 과학농법이 다수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작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새세대 농업혁명’의 과학농법 정당성을 선전

43) 위의 글, 66~69쪽.

하는 과정에서 학동리 농장의 다수확을 자랑하는 분조장 최은순이 주인공 박태수에게 USB나 디스켓에 해당하는 ‘기억기’에 농업대학 연구소의 최신식 대용비료 제조 및 사용법을 전달해 주는 장면이다. 그 과정에서 평소 짝사랑했던 처녀 분조장이 알고 보니 반장이 중신을 강요했던 바로 그 최은순이었다는 결말로 인해 독자들은 웃음을 지을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문학의 새로움은 사랑하는 청춘남녀의 애정선을 줄거리 요약 서술이 아니라 영상과 향기 등 오감을 실감나게 자극하는 감각적 묘사로 장황하게 표현하는 문체적 새로움이다.<sup>44)</sup>

김정은 시대 문학의 주인공은 이들처럼 생산과정 전반을 사전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후 생산 현장의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는 CNC 기술을 발휘하는 과학기술의 첩병, ‘룡마 기수’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의 견인차였던 토건 노동영웅, 천리마기수의 후예이다. 하지만 그들과 뚜렷하게 차별화된 점이 중요하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적 열정은 강한데 현장의 기술적 처리나 기계 조작 등 전문성이 모자랐던 노동영웅 천리마기수에서 진전된 캐릭터가 바로 1970~80년대 문학의 대표 캐릭터였던 ‘3대혁명소조원’ 형상이었다. 그들은 생산분야의 기술적 전문교육을 받은 청년 기술자들이었다.<sup>45)</sup>

44) 가령 “처녀의 분조장 수첩에서는 땅냄새, 낱알향기가 풍기고 있었다. 처녀처럼 사랑과 정을 깡그리 기울여 살찌우고 기름지운 이 땅 가득히 구수한 낱알향기, 애국의 향기로 넘치게 할 때 비로소 나는 사랑을 안다고,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땀땀이 말하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높뛰었다.” “처녀의 향기와 나의 향기가 하나로 될 때, 처녀의 땀과 나의 땀이 한줄기로 흐를 때 두 심장은 하나로 합쳐져 소중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 묘사로 표현된 문장은 누가 읽어도 남녀의 운운지정을 쉽사리 상상케 하는 관능적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의 글, 74쪽.

45) 김성수, 「주체문학 전성기 『조선문학』(1968-94)의 매체전략과 ‘3대혁명소조원’ 전형론」; 「천리마기수’ 전형론과 사회주의 건설의 문화정치 『상허학보』 62 (2021) 참조.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의 ‘과학기술 룡마 탄 기수’ 형상의 기원은 원래 김정은 시대 초에 나온 ‘새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sup>46)</sup>였다. 그 모델은 천리마기수보다 ‘3대혁명소조원’ 형상에 가깝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년 대학 졸업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과학기술과 실무에 밝으며 사업 전개력과 실천력이 강하고 도덕적으로 준비된 간부로 키우겠다는 1970~80년대의 운동이었다. 1973년 2월에 사상, 기술, 문화 세 부분의 동시 혁명을 꾀한 3대혁명소조운동이 시작된 데는 천리마운동과 주체사상의 유일체제화 이후에 생산 현장의 노동계급 전반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당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해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중간관료들과 과학기술로 무장한 청년 대학생들로 3대혁명소조 대열을 조직하였다.

2010년대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여전히 선군 투사 대신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는 목적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위해서이다. 구체적 실행방법은 대졸 청년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여 실천 속에서 단련시켜 간부 후보를 키워내자는데 있다.<sup>47)</sup> 2023년 현재 북한문학에서는, 공장, 농장, 어촌뿐만 아니라 제철, 금속 등 중공업 생산 현장까지 뛰어든 청년 노동자, 과학기술지식을 갖춘 엘리트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전형으로 부각되었다. 가령 처녀 노동자 형상을 근육질 남성 못지않은 육체적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컴퓨터 제어 기술을 갖춘 청년<sup>48)</sup> 과학기술자로 묘사

46) 채희원, 원충국,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1』, 107쪽.

47) “새 세대 청년 대학 졸업생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여 최첨단 돌파전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도록 하며 들끓는 현실 속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품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춘 간부후비로 키우자는 여기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는 당의 의도가 있다. 오늘 3대혁명소조의 기본임무는 파견단위에서 기술혁명을 틀어지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다그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위의 책, 109쪽.

48) 송현진, 「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5-1 (2021) 참조.



하였다. 그들은 ‘3대혁명소조원’처럼 컴퓨터로 CNC 기술을 발휘하는 과학기술교육을 받은데다가 ‘천리마기수’처럼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과 솔선수범, 주변의 부정적 인물까지 앞장서서 감화시키는 포용력까지 갖췄다. 그들 ‘과학기술 룡마 탄 기수’들은 천리마기수의 ‘정신’과 3대혁명소조원의 ‘기술’이 결합된 위에 컴퓨터 제어 같은 ‘최첨단과학’ 지식까지 갖춘 전형적 인간형이다. 2016~17년 북한문학에 묘사된 만리마기수가 과학기술을 갖춘 노동영웅이라면, 그 가시적 구체화이자 진화형 이미지가 2019년 이후 ‘과학기술 룡마 탄 기수’가 되었다. 이들은 CNC 시스템을 유능하게 활용하는 첨단 과학기술지식을 갖춘 전문직이라고 하겠다.

#### IV. 마무리: 김정은 시대 문학의 대표 전형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2011.12 ~ 2023. 현재) 문학작품에 나타난 대표적인 전형적 캐릭터의 역사적 변모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12년을 제7, 8차 당대회(2016, 2021)를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삼아 1, 2, 3기로 나눈 후, 각 시기 문학의 대표 전형을 ‘선군 투사, 만리마기수, 과학기술 룡마 기수’ 순으로 정리하였다.

김정일이 집권한 선군 시대(1994~2011)에는 ‘고난의 행군’이란 체제 붕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인민의 식의주 생활 기반과 일상적 행복을 희생시키고 거기서 나온 물질 기반 총량을 군의 절대적 우위 정책에 오히려 옹호하였다. 그에 반해 3대 세습에 성공한 청년 지도자 김정은이 표방한 키워드는 ‘사회주의 문명국’이었다. 그가 혁명과 선군을 강조했던 부조와 달리 ‘인민생활 향상(민생)과 과학기술을 중시한 점에서 세상이 달라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가령 려명거리 고층아파트를 비롯한 평양의 마천

루 등 주거지의 현대화,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장, 룡라인민유원지 등 각종 레저시설 덕에 평양 시민을 비롯한 북한 인민의 삶의 질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제7차 당대회(2016.5)를 통해 당 중심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가운데 ‘핵 보유 강(소)국’이란 자부심이란 현실적 기반 위에서 작동되어 설득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 분석한 대로 김정은 집권기의 시대정신을 구현한 대표 캐릭터, 문학 전형도 새롭게 창조되었다. 선군 시대 문학을 대표했던 ‘선군 투사’ 형상이 초기에는 잔영을 보이다가 2016년을 고비로 쇠퇴, 소멸하였다. 대신 1960년대 노동 영웅인 ‘천리마기수’ 캐릭터를 버전업한 2010년 대형 과학기술 영웅인 ‘만리마기수’ 형상이 김정은 시대 문학 전반을 대표하였다. 중장비 기사로 상징되는 ‘준마 기수’에서 컴퓨터제어에 능숙한 ‘과학기술 룡마 기수’로 형상이 진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문학신문』, 『조선문학』, 『청년문학』 등 12년치의 문예지 미디어콘텐츠를 미시 분석한 결과, 북한사회가 밖으로는 핵무력을 통한 ‘사회주의 강(소)국’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 실현을 어느 정도 자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혁명과 선군에 복무하는 문학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선대와 달리 ‘인민생활 향상’으로 불리는 애민, 민생 담론이 부각된 점이다. 그에 따라 혁명 투사, 선군 투사보다 ‘과학기술 룡마 탄 기사’로 가시화된 청년 과학기술자의 캐릭터를 중시하고 그들의 애정과 감정선을 비롯한 일상성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김정은 시대의 생활을 반영한 최신 전형도 이전 김일성, 김정일 시대 문학의 대표 캐릭터들처럼 여전히 깊은 내면적 성찰이나 섬세한 심리 묘사의 빈곤을 보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김정은 시대 문학의 미래는 체제 보위를 위한 ‘선

군’으로 퇴행하기보다는 북한 특유의 주체적 방식으로 민생을 위한 개혁 개방의 길로 어떻게든 나설 것이라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수령 형상 문학의 절대적 비중에 비해 ‘사회주의 현실 주제’ 문학의 상대적 비중이 조금은 확대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은 시대 시와 소설에 자랑스레 표현된 ‘사회주의적 락원(선경)’에 사는 인민대중의 ‘사회주의적 부귀영화’의 실체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통제한 폐쇄 체제 안에서 지구촌 시대의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바깥 세계와의 비교도 없이 자기만 최고라는 자위에 머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김정은 시대 문학은 새로운 출구를 향해 암중모색 중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접수: 2023년 11월 7일 / 심사: 2023년 12월 2일 / 게재 확정: 2023년 12월 6일

## 【참고문헌】

- 구갑우 김성수 외 공저,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1~8』, 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8~2021.
- 김미란, 김기철,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새 전설』,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서울: 역락출판사, 2020.
- 김성수, 『북한문학비평사』, 서울: 역락출판사, 2022.
- 김성수, 『김정일 시대 북한문학사』, 서울: 역락출판사, 2023(예정)
- 김영범, 『인민사랑의 시대어』, 평양: 평양출판사, 2016.
- 남북문학예술연구회, 『3대 세습과 청년 지도자의 발걸음 - 김정은 시대의 북한문학예술』, 서울: 역락출판사, 2014.
- 남북문학예술연구회, 『감각의 갱신, 화장하는 인민 - 김정은 시대와 북한문학예술의 지평』, 서울: 살림터, 2019.
- 리동원, 『주체적문제이론연구3: 작품의 주인공』, 평양: 문예출판사, 1990.
- 오창은, 『친애하는, 인민들의 문학 생활』, 서울: 서해문집, 2020.
- 오태호, 『한반도의 평화문학을 상상하다 : 21세기 북한문학의 현장』, 서울: 살림터, 2022.
- 채희원, 원충국, 『김정은 장군과 시대어 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 김경웅, 「통일의 사회문화적 접근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와 통합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제29권 4호, 1996, 421~443쪽.
- 김병로, 「통일 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2014, 1~34쪽.
- 김성수, 「천리마에서 만리마로 : 김정은 시대 11년간의 문학」 『반교어문연구』 62집, 2022, 233~264쪽.
- 김성수,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문학」 『통일정책연구』 제35권 1호, 통일연구원, 2023, 123~148쪽.
- 김성수, 「8차 당대회 전후(2019~2023) 북한문학 동향과 쟁점 : 『조선문학』 『문학신문』 매체 분석과 ‘과학기술 룡마’ 기수 형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8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3, 285~318쪽.

- 송현진, 「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21, 229~261쪽.
- 오태호,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에 나타난 과학기술자 형상화 고찰 - 최근 『조선문학』(2020~2022)에 게재된 시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23, 131~158쪽.
- 이예찬, 「소설로 보는 김정은 시대 ‘인민생활향상’의 의미- 리희찬의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6호, 한국현대문학회, 2022, 573~602쪽.
- 이지순, 「김정은 시대의 멘탈리티 위반의 서사 - 단편소설 「정든 곳」의 국가 윤리와 개인의 욕망 사이」 『상허학보』 64집, 상허학회, 2023, 445~476쪽.
- 이지순, 「감각에 사로잡힌 몸의 발견과 재현- 북한 단편소설 럽예성의 「사랑하노라」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40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3, 117~138쪽.

『로동신문』

『문학신문』

『조선문학』

『청년문학』

## From ‘Military-First Fighter’ to ‘Science and Technology Ryongma Rider’

: Representative Archetypes in Literature of the Kim Jong-un Era

Kim, Seong-su (Sungkyunkwan University)

###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epresentative features of the Kim Jong-un era literature within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tradition of North Korean ideology-driven literature. It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embodiments of the era's spirit and typical characters in poems, novels, and critiques published in literary journals such as "Literary Newspaper," "Joseon Literature," and "Youth Literature"(2012-23). In the first phase of the Kim Jong-un era (2012-2015), the representative character in literature was "Military-first Fighter," the remnants of literature during the Kim Jong-il era. These characters were exemplified by construction worker soldiers, the creators of the "Masikryong speed" who had realized the "parallel development policy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In the second phase (2016-19) of the Kim Jong-un era, the literary archetype shifted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Master," key players in the "Mallima speed" movement. These were primarily represented by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at the forefront of economic growth, shifting the focus from the Military-First Fighter. In the third phase (2020~) of the Kim Jong-un era, the dominant literary archetype became figures like

computer engineers who control blast furnaces in steel mills, known as “Science and Technology Ryongma Rider”. Character analysis reveals that unlike the earlier era which emphasized revolution and Military-First Thought, literature of the Kim Jong-un era is characterized by popular ideology and stability of people’s livelihoods, highlighting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Keywords: North Korean Literature, Kim Jong-un Era, Literary Archetype, Keywords, Military-First Fighter, “Mallima Speed,” “Mallima Rider,” “Science and Technology Ryongma Rider,” Scientists and Engineers, Literature newspapers, Joseon Literature

김성수 (Kim, Seong-su)

---

성균관대 학부대학 글쓰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2001),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2020), 『북한문학비평사』(2022),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사』(2023 예정) 등이 있다. 『북한 ‘주체문예론 체계’ 연구』를 집필 중이다.





특집

## 김정은 정권 음악 정책의 논리

: ‘음악정치’의 함의 확대와 ‘사회주의 문명국’ 개념을 중심으로

모리 도모오미 (세쓰난 대학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 의한 음악 분야의 선전선동 정책에 대해서 그 내실과 특징을 정리하여 주로 2012~2021년 약 10년간의 전개를 고찰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정치’와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두 개념을 분석틀로 하여, 내재적 접근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김정일 정권에서 만들어진 음악정치 개념은 선군정치와 관련이 깊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함의가 비교적 좁았지만, 새로운 악단의 등장으로 그 함의가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군정치를 계승한 김정은 정권에서도 음악정치는 기본적으로 선군정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음악정치의 대표격으로 신규성과 화려함이 주목을 받았지만, ‘8.25 경축 모란봉악단의 화선공연’이 중시되는 등 역시 본래 음악정치의 의미부여를 강하게 볼 수 있는 김정은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에는 사회주의 문명국이 있다. 김정은 정권의 독창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인민 생활에서 문화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기도한 개념이자 정책목표이다. 여기서는 문화예술, 특히 음악정책은 매우 중시되어 왔으며 모란봉악단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모범이자 맨 앞에 서는 ‘돌격대’였다.

북한 음악정치는 청봉악단 및 삼지연관현악단의 등장에 따라 음악에 의한 외교라는 시기에 진행된다. 러시아나 중국 등 대외 외교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대남(대 한국) 교류가 실천됐다.

이러한 음악정책은 2018년을 지나면서 수렴해 2020년에 등장한 국무위원회 연주단으로 일원화해 나갔다. 일종의 원점회귀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음악정치, 사회주의 문명국,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국무위원회 연주단

## I. 들어가며: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과제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하에서 진행해 온 음악정책에 대해서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 정책의 논리를 내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주로 2012~2021년 약 10년간의 김정은 정권의 음악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음악정치’와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두 개념을 축으로 사례 분석을 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의 음악정치를 고찰하는 데 김정일 정권 말기 악단 창출은 중요하므로 그 점은 언급했다.

북한 음악을 분석할 때 다양한 접근법이 사용 가능하다. 이 분야의 연구는 한국에서는 음악학(musicology)을 주요 영역으로 하는 연구자(특히 국악 연구자) 및 북한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음악학에는 음악사, 실천이론, 음악철학, 음악미학, 음향심리학 등을 비롯한 폭넓은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중심으로 북한 음악을 분석하는 것은 정당하고 매우 유용하다. 음악학적 접근을 통해 북한 음악의 특성과 성립 과정, 그리고 북한 음악계의 동태를 분석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배인교의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북한 음악사나 국악의 관점에서 북한 가극을 연구하고 최근에는 모란봉악단 연구로 알려진 천현식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 문화 연구로 많은 저서가 있는 전영선은 북한 음

악에 대해서도 중요한 논저를 몇 편 발행했다. 그리고 악단 연구뿐만 아니라 음악 수용을 매체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는 하승희도 정력적으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북한 음악사를 총괄적으로 논한 최신 논문으로서 피터 무디(Peter Moody)의 연구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중요한 논점에 기반을 두면서도 음악학적 접근을 취하는 것 보다, 음악정치 및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개념을 축으로 내재적으로 어떻게 김정은 정권의 음악 정책을 고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 II. 김정은 시대 음악을 보는 틀

### 1. ‘음악정치’: 김정일 정권과의 연속성

김정은 정권에 의한 음악정치가 명확하게 시작된 것은 2012년 7월에 열린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이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음악정치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모란봉악단은 북한 음악의 인상을 크게 바꾸었다. 따라서 북한 음악계가 질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돌연 일어난 것이 아니다. 김정일 정권 말기에 음악계 변화의 시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구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김정일은 1960년대부터 예술계를 정력적으로 지도해왔으며 실천을 통해서 북한식 선전선동을 체계화 및 이론화했다. 본 연구와의 관련으로 음악분야를 들면, 1991년에는 ‘음악예술론’을 저술했고 이 시점에서 북한식 음악의 개념 정리와 이론화를 일정 정도 끝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1996년부터 대규모 경제적 사회적 위기,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음악도 그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경쾌하고 밝은 경음악을 발표하고 있던 북한 음악계는 ‘고난의 행군’을 정신력으로 이겨내기 위해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후에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으로 개칭)이 그 중심이 되었다.<sup>1)</sup>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은 선군정치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군악이 가지는 선전선동 작용으로 위기를 심리적으로 완화시키려고 했다. 김정일에 의한 음악단체 지도나 음악감상도 당연히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이 중심이 되었다.

원래 ‘음악정치’라는 용어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 2월 7일에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인민무력부음악발표회를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2000년 2월 8일) 기사에서였다.<sup>2)</sup> 기사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한 음악정치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일에 의한 음악계 지도를 음악정치로 개념화했다.

한편 음악정치가 아니라 ‘노래정치’라는 용어도 거의 동시에 공식적으로 쓰여졌다. 예를 들면 조선중앙통신 2000년 5월 29일 기사는 “노래를 사상이나 총대처럼 중시하시는 독특한 노래정치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1) 예로 조선중앙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류레없이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사포의 뒤편과도 같이 올려주신 공훈국가합창단의 음악은 우리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준 필승의 보검이었다.” 「위대한 손길아래 눈부신 발전 이룩해온 주체음악예술」 『조선중앙통신』 2020년 11월 12일.

2) 다음과 같은 문헌의 지적에 의함.

송명남, 「《모란봉악단》을 통해 보는 조선의 문화정책과 인민생활」 『朝鮮大學校學報』 vol.25 (2015), 149~168쪽.

또한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다. 「최고사령관의 위대성발표회/인민무력성」 『조선중앙통신』 2000년 2월 8일.

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출중한 령도예술이다”라고 하면서 노래정치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sup>3)</sup> 개념상 음악정치와 노래정치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2000년에 음악정치와 노래정치가 혼재적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이 시점에서는 아직 음악정치라는 용어가 북한사회에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음악정치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에 입각하면, 음악정치의 본래 의미는 선군정치를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정치라는 개념은 선군정치를 음악으로 뒷받침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친화성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에 들어가서 새로운 악단 창단과 함께 음악정치가 가리키는 의미는 점차 넓어졌다. 이 변화의 중심은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이다. 삼지연악단은 만수대예술단 소속 악단으로 2009년 1월 창단되었다.<sup>4)</sup> 한편 은하수관현악단은 대규모 악단으로서 2009년 5월에 창단되었다. 한국의 연구자 및 언론의 관점도 이 두 악단이 당시 북한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였다.<sup>5)</sup>

이러한 악단의 창설에 앞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2008년 2월 평양시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뉴욕 필하모닉(New York Philharmonic)의 공연이다. 미국의 대표적 대규모 악단이 평양에서 공연한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이었다. 이 공연에서는 북미 양측의 국기가 무대에 내걸렸고 북한 국가인 ‘애국가’와 미국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가 연주됐다. 뉴

3) 「령도자의 노래정치」 『조선중앙통신』 2000년 5월 29일.

4) 박영정 외, 『북한 문화예술 현황분석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38쪽.

5) 위의 글, 118쪽.

그리고 전문 잡지인 『민족21』도 당시 이 두 개 악단에 주목하고 있었다.

『민족21』 2010년 3월호 (통권 제108호), 「북 음악계의 새얼굴 실력·미모 겸비한 북 음악계 셋별 은하수관현악단과 삼지연악단」.

육 필하모닉은 민간단체이지만, 국가 제창와 국기 게양이라는 형식을 보면 이 공연이 단순히 민간단체의 음악교류라고 보기는 힘들다. 김정일은 공연을 관람하지 않았지만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당시)이 참석하였다는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2008년 2월의 뉴욕 필하모닉에 의한 평양공연을 음악정치와 관련시켜서 논한 선행연구는 필자가 보는 바에 의하면 없지만 이 공연은 충분히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음악정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은 음악정치의 의미를 넓혔다.

음악정치가 함의하는 폭을 넓힌 또 하나의 현상으로서 앞서 언급한 은하수관현악단과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은 중요하다.

은하수관현악단은 오케스트라와 가수로 구성되어 클래식으로부터 가요까지 연주할 수 있는 종합 악단이었다. 2009년 9월 8일에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및 은하수관현악단,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sup>6)</sup>’에서 처음 등장하여 2013년 7월 27일 공연에 이르기까지 35회 공연을 개최하였다.

2010년 9월 11일 개최된 공연 ‘9월 음악제<sup>7)</sup>’에서는 ‘여성 독창과 반창’으로 리설주가 데뷔했다. 당시 19세였던 리설주는 가요 ‘타올라 우등불야’를 선보였다. 또 이듬해인 2011년 2월 2일 개최된 공연 ‘광명절 음악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리설주는 ‘아직은 말 못 해’, ‘멋있는 사람’ 두 곡을 재즈풍 편곡에 맞춰 색소폰 반주로 불렀다. 재즈풍 곡조는 이미 2010년부터 은하수관현악단에서 선보였지만 그동안

6) 「김정일총비서 로씨야, 조선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관람」 『조선중앙통신』 (온라인), 2009년 9월 8일,

〈<http://www.kcna.co.jp/calendar/2009/09/09-08/2009-0908-030.html>〉.

7) 「은하수 <<9월음악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온라인), 2010년 9월 11일,

〈<http://www.kcna.co.jp/calendar/2010/09/09-11/2010-0911-008.html>〉.

북한에서 기피했던 재즈 요소들을 일부 접목한 곡조는 음악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12년 3월 14일 파리 공연이다. 은하수 관현악단의 파리 공연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술을 체제의 우위성을 선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로 삼은 북한은 우방인 사회주의 국가들은 물론 적대국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 공연을 실시하는 것은 1960년대 후반~1970년대에도 다수 볼 수 있었지만,<sup>8)</sup> 외국 유명 예술 단체와 자국 내 혹은 해외에서 협연하는 것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sup>9)</sup> 『로동신문』은 2012년 3월 16일자 기사에서 파리 공연을 크게 다뤘다.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sup>10)</sup>이 1995년에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분리되어 창설되었지만, 그 이후는 당, 국가, 군이 주도한 고차원의 악단은 창설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9년 이후의 북한 음악계의 움직임은 주목을 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음악정치라는 개념은 김정일 정권 말기에 함의를 급속히 확대시키고 이런 경향은 김정은 정권에게 계승되었다. <그림 1>은 음악 정치의 개념과 악단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8) 森類臣, 「万寿台芸術団の対日文化外交—芸術と宣伝扇動の相克—」, 中戸祐夫・森類臣(編), 『北朝鮮の対外関係 多角的な視角とその接近方法』(京都: 晃洋書房, 2022) 등을 참조.

9) 물론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가수나 악단을 자국으로 초빙하기는 했다. 1982년 4월부터 시작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10)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은 2004년 4월에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으로 개칭되었다.

〈그림 1〉 음악정치의 개념과 악단의 관계

| 김정일 정권(~2011.12)                            | 김정은 정권(2011.12~)  |
|---|---|
| 선군정치의 시작(1997.12)                           | 선군정치 사실상 정치(2016.5*6)<br>(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br>(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헌법개정) |
| 음악정치(2000.2)                                | 개념의 사용 빈도 급감소   |
| 인민무력부 음악발표회                                 | 모란봉악단(2012.3창단)   |
| 문화수관현악단(2009창단)<br>삼지연악단(2009창단)            | 해체?(2013.7) → 후에 삼지연관현악단으로 개편(2018)                                   |
|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br>(1995.12) (2004) |   |

부연하면 2018년경부터 현재 2023년까지 북한 공식 매체에서 음악정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빈도는 급속히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노동당의 정사(正史)인 『조선로동당 력사(증보판)』(2018년 10월 발행)에는 일부 사용되고 있고 『로동신문』이나 『문학신문』 등에서도 드물게 사용된다.<sup>11)</sup> 따라서 적어도 2018년 시점까지는 음악정치라는 용어는 공식적 정책 개념으로서 인정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 ‘사회주의 문명국’ 개념 구성 요소로서의 음악

### 1) ‘사회주의강국’의 논리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중요 정책 목표인 ‘사회주의 문명국’의 논리가 실제 음악정책에 어떻게 부연되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제1절에서는 ‘사회주의강국’에 언급하고 제2절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개념 구축에 대해서 정리한다.

우선, 김정일 정권의 국가목표는 강성대국(강성국가) 건설로 잘 알려

11) 『조선로동당 력사(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421쪽.



져 있다. 강성대국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에 게재된 「정론」이며, 여기서는 강성대국에 대한 설명이 전개되었다. 강성대국 건설이 북한의 국가목표로 담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신년 공동사설인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에서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다져진 강력한 정치군사적위력에 의거하여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라는 목표를 선언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집권하게 된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김정일의 노선을 이어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강성대국 또는 강성국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목표로 했다.

사회주의강국의 정의는 김정은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sup>12)</sup> 다만 이 정의는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쳐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으로 됩니다”라고 정했고, 이 건설의 중요 요소를 정치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이라는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sup>13)</sup>

그러면 김정은이 직접 정의한 이 개념을 북한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허철수(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교수 박사)의 글을 검토하고자 한다.<sup>14)</sup> 우선,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기초로 되는 것은 정

12)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

13) 위의 글.

14) 허철수,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 김일성

치군사력과 정치사상적 역량이다.

정치군사력에 대해서는 “나라의 존엄과 힘의 상징이며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라고 하고, “정치군사적위력을 강화하여야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문화발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에는 정치사상적 역량을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가 공고하고 그 우월성이 높히 발달될수록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과학기술강국은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길에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짓부시고 우리의 자강력을 급속히 증대시키며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담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고 규정되어,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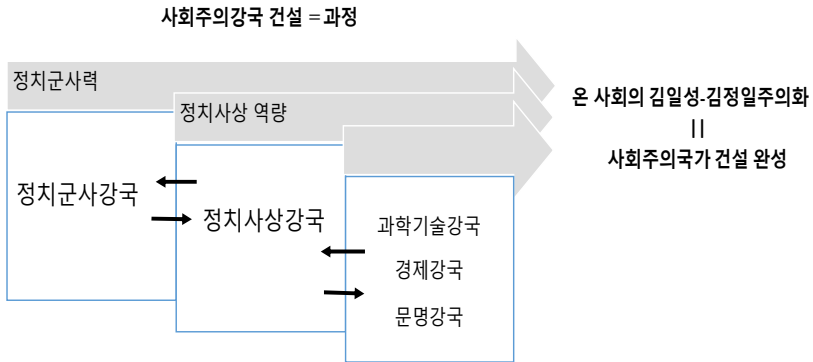
북한의 문헌을 바탕으로 내재적으로 사회주의강국의 개념 구성을 정리하면, 정치군사력과 정치사상적 역량이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 과학기술, 경제, 문명(문화)의 각 분야가 구성된다. 다만 과학기술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위상은 약간 특별하다. 이상관계를 정리하면 <그림2>와 같이 된다.

---

종합대학 홈페이지지 기사 (온라인), 2018,

(<http://www.ryongnamsan.edu.kp/univ/ko/research/articles/144a3f71a03ab7c4f46f9656608efdb2>).

〈그림2〉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개념



## 2) 사회주의 문명국의 논리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핵심이 되는 정치군사력과 정치사상역량은 김정일 정권에서 진행된 강성대국 논리에서도 강조한 항목이다. 따라서 사실은 김정일 노선의 관철이라고 할 수 있고, 과학기술강국 건설도 김정일 정권 말기에 급속히 진행시킨 공장의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sup>15)</sup>를 생각하면 김정은 정권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제분야의 발전(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립)은 김일성 정권 시절부터의 목표이고 수단과 방법은 시기마다 달라도 김정일 정권에서도 추구해 온 목표이다.

반면, 문명강국 바로 사회주의 문명(강)국이라는 개념은, 김정일 정권에서는 없는 김정은 정권의 독창적인 개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문명국이 처음 나온 것은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자에 실린 공동사설이었다.<sup>16)</sup> 여기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문명을

15) 「정론 <<첨단을 돌파하라>>」 『로동신문』 2009년 8월 11일.

따라앞서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고 우리 인민의 한결 같은 지향이다”고 하면서도 사회주의 문명국의 중요한 요소로 교육분야, 문학예술분야(군중예술활동도 포함), 체육분야를 들었고 그 중, 문학예술분야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만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창작도 편성도 형상도 우리 식으로 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과 같이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방침 제시에 그쳤다.

이 사회적 문명국 담론이 다음에 등장한 것은 김정은이 한 담화였다.<sup>17)</sup> 이 담화에서 김정은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도 끊임없는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특히 교육에 대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 시점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 개념은 교육사업 강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문명국이 보다 명확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2016년 5월 6~9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이다.<sup>18)</sup> 대회에서는 김정은이 보고를 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보고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국을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룡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정의하고 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

16)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

17)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1(2012)년 4월 6일」 (2012).

18)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김정은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이 아니라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용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설하는 것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 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국의 중요한 한 분야로 사회주의 문명국을 재차 강조했다.

이 보고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을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로 정의하고 교육사업, 보건사업, 체육사업, 문화예술사업, 도덕사업 순으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후 김정은의 보고를 보충하듯 사회주의 문명국에 대한 해설이 북한의 논문이나 언론 보도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문명국은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나라”,<sup>19)</sup> “인민 전체를 높은 창의력과 문화 수준을 가진 문명적 인간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sup>20)</sup> 등이다. 여기서 인용한 김혁모는 같은 글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끝없이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실현해 주고 인민 전체를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문명 강국은 문화의 모든 부문이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고 그것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나라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한두 발전 수준만으로는 문화 전반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알게 되는 바와

19) 김동일, 「사회주의문명국의 성과적건설을 담보하는 요인」 『조선의 오늘』 (온라인), 2015년 5월 3일, <<https://dprktoday.com/news/3143>>.

20) 김혁모,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리론에 의하여 새롭게 확립된 참다운 문명국에 대한 견해」 『사회과학원 학보』 2018년 제1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8), 22~23쪽.

같이, 사회주의 문명국은 문화의 전방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문명국은 교육, 보건, 의료, 문학, 예술, 체육, 도덕 등을 동시 발전시킨다는 정책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물질적인 측면, 예를 들어 도시 건설과 도시미관, 보건 후생 시설 정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sup>21)</sup> 원래는 비물질적인 요소가 중요시되고 있었다.<sup>22)</sup> 특히 문학예술은 사회주의 문명국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분야이며 그 중에 음악 정책은 최첨단의 정책으로서 다른 예술분야에 앞서고 이끄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심이 모란봉악단이다.

### Ⅲ. 김정은 시대 시작의 상징 ‘모란봉악단’의 분석

#### 1. 음악정치로서의 모란봉악단

모란봉악단은 2012년 3월 창단되었다.<sup>23)</sup> 창단 후 약 4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2012년 7월 8일에 공식 공연인 ‘시범공연’을 열었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해 동영상으로 공개돼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다. 북한은 “모란봉악단은 내용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형식

21)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가 있다.

최봉대,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 정책적 실천과 그 함의 -위락·후생시설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7권 제1호 (2021), 311~347쪽.

22) 사회주의 문명국의 정의는 비물질적 개념 위주였지만 현재는 물질적 충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鄭炳浩, 『人類学者がのぞいた北朝鮮 苦難と微笑の国』 (東京: 青土社, 2022), 49-50쪽 참조.

23) 趙雄鉄, 「牡丹峰樂團は朝鮮スタイルのユニークで新しい輕音楽団」 『코리아연구』 5号 (2014), 173쪽.

에서 새롭고 독특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인민적인것으로 일관된 개성있는 공연을 무대에 펼치었다”고 주장했다.<sup>24)</sup> 이는 김정은에 의한 본격적인 음악정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모란봉악단의 특징은 여러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sup>25)</sup> 특히 형식상의 큰 변화를 들 수 있다. 가수, 연주가, 곡조, 연주 스타일 등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이런 변화를 제일본조선인총동맹(이하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열린 음악정치”라고 부르며 “김정은 제1위원장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선 오늘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세계를 향하며 세계와 교감하는 《열린 음악정치》를 실천하시였다”고 설명했다.<sup>26)</sup> 하지만 북한은 2009년부터 음악정치 개념의 함의를 확대시켜 왔으며 음악정치 개념 자체가 ‘달한’ 적은 없다.

모란봉악단을 북한 내부 악단 계보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이 경음악 분야 지도를 주도한 1980년대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경음악단은 왕재산경음악단<sup>27)</sup>과 보천보전자악단이었다. 두 악단은 나란히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 창단은 왕재산예술단이 2년 정도 앞서있고 추구하는 음악성도 달랐다.

왕재산예술단은 1983년 7월 22일 만수대예술단의 한 부문에서 분기하는 형태로 창단되었다. 가수, 연주가, 무용가로 구성되어 민요를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연주하는 것을 전문 분야로 하는 한편 여성 무용가의 대담하고 서양적인 무용을 선보이는 스타일이었다. 이러한 스타일이 이전

2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7월 9일.

25) 주된 연구에 강동완(2014), 천현식(2015), 森類臣(2018) 등 있다.

26) 「모란봉악단이 펼쳐보인 《세계속의 조선》」 『조선신보』 (온라인), 2012년 7월 12일, <<https://chosonsinbo.com/2012/07/0712jy/>>.

27) 2010년경 ‘왕재산예술단’으로 개칭. 본 연구에서는 이하 ‘왕재산예술단’으로 한다.

에 볼 수 없었던 북한에서는 큰 변화이었다.

한편 보천보전자악단은 1985년 6월 4일 만수대예술단 전자음악 연주단을 분기하는 형태로 편성, 창단되었다, 악기 연주자는 기본적으로 백업밴드(Backup band)로 전자악기 편성(기타, 베이스, 키보드, 드럼)을 연주하고 여성가수가 가요를 부르는 형태이다. 왕재산예술단에 비하면 악단의 스타일은 일본이나 한국 밴드에 비교적 가깝다.

모란봉악단은 보천보전자악단의 계보와 연계된 악단이라는 것이 북한의 논리이다.<sup>28)</sup> 따라서 북한의 내재적 시각에서 모란봉악단을 포착한다면 김정일에 의해 창단된 경음악단이 김정은 정권 하에서 발전 진화한 것이 모란봉악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란봉악단의 요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단순하게 정리할 수 없다. 보천보전자악단에 나타난 음악적 특성이랑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특성 중 하나가 인스트로멘탈 뮤직(instrumental music)이다. 모란봉악단은 클래식 음악, 특히 인스트로멘탈 음악을 공연에 접목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은하수관현악단 및 만수대예술단 삼지연 음악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모란봉악단은 팝스밴드이면서 클래식 음악의 흐름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모란봉악단은 악기 연주자와 가수의 분업이 있지만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연주자와 가수 모두가 각각 퍼포먼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천보전자악단과는 확연히 다르다. 악기 연주자는 단순한 백업 밴드에 그치지 않고 바이올린을 중심으로 한 인스트로멘탈 뮤직(instrumental music)을 연주함으로써 주역으로 무대에 등장한다. 이러한 형식은 이전의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다. 한국, 일본, 구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8) 「조선로동당 중앙위, 중앙군사위, 국방위 모란봉악단에 감사문」 『조선통신』 (온라인), 2012년 12월 31일,

(<http://www.kcna.co.jp/calendar/2012/12/12-31/2012-1231-029.html>).



경음악(팝스, 록 등) 형식과도 다르지만 분명히 유럽에서 2000년대 유행했던 크로스오버 일렉트릭 오케스트라(crossover electronic orchestra)의 영향을 받고 있다.<sup>29)</sup>

구성원을 보면 가수 및 연주자를 여성으로 통일하는 형식(All-female band)이며, 이미 실력을 복한 사회에서 인정받았거나 잠재성이 높은 신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수, 연주자 모두 군 계급을 가지고 있다.<sup>30)</sup>

모란봉악단은 2012~2019년 합동공연을 포함해 현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한 한 51회 공연을 했으나, 모란봉악단 창단의 의미를 음악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2012년 8월 25일에 열린 '8.25경축 모란봉악단의 화선(火線) 공연'이 제일 중요하다.<sup>31)</sup>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정치는 선군정치와 밀착된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모란봉악단의 초기 활동은 선군정치로서의 음악정치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해석을 뒷받침한 것으로서 모란봉악단 구성원 모두가 군인이라는 사실과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학』(제65제2호)에 실린 김경철의 논문을 들을 수 있다.<sup>32)</sup> 이 논문에서는 창작활동과 공연활동을 군대식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장 중요한 공연으로서 '시범 공연'과 '8.25 경축 화선공연'이 꼽혔다. 선행연구는 모란봉악단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범공연에 주목했지만 북한 내부를 향한 의미로는 '8.25 경

29) 영국 크로스오버 일렉트릭 오케스트라 밴드의 대표적인 본드(Bond)와의 유사점도 많다. 오기현, 『남북 문화 교류의 창 평양걸그룹 모란봉악단』(고양: 지식공감, 2014), 65쪽 참조.

30) 森類臣, 「『金正恩時代』の『音楽政治』牡丹峰楽団を中心に」 『現代韓国朝鮮研究』 18号 (2018), 38쪽.

31) 화선(火線)음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 배인교, 「북한의 화선(火線)음악 - 6.25전쟁기를 중심으로 -」 『한국음악사학보』 제60집 (2016), 287~316쪽.

32) 김경철, 「모란봉전자악단을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학』 제65권제2호 (2019), 15~24쪽.

축 화선공연'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 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8.25 경축 화선공연'은 김정은 스스로 발안했으며 모란봉악단 구성원들은 공연 준비를 위해 48시간 이내에 23곡을 창작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화선용사'처럼 주어진 임무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이 모란봉악단의 '화선식 공연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는 선군정치의 기본 이념을 지니는 음악정치를 김정은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 2.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돌격대로서의 모란봉악단

예술계에서 모란봉악단의 위상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장면은 2014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평양시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이다. 대회에는 모란봉악단 멤버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대회 첫날 모란봉악단 단장인 현송월이 연설을 하였다.<sup>33)</sup>

현송월은 이 연설에서 모란봉악단이 북한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악단 중 하나가 됐다고 보고했다. 대회 폐막 후인 19일 모란봉악단 공연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열렸다. 이 공연의 의미는 단적으로 모란봉악단의 '창작기풍' 즉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창작스타일 공연양식을 통해 대회 참가자들이 앞으로의 김정은식 예술창작법을 배우고 앞으로의 예술활동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갖는 의미는 『로동신문』 2014년 6월 3일자 사설에서 보다 정리·평가되었다. 이 사설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위상을

<sup>33)</sup> 연설(토론) 내용은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4면에 게재되었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한 토론들: 당중앙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새 시대 음악예술혁명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겠다: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최단기간에 우리의 문학예술이 세계를 압도하며 주체의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기관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모란봉악단과 같은 국보적인 예술단체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sup>34)</sup>

이 사설에서는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문학예술창작창조활동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나갈것”이라는 김정은의 ‘뜻과 기대’를 소개했다.<sup>35)</sup>

김정은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서한을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냈다.<sup>36)</sup>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자 해당 기사에 의하면, 김정은은 이 서한에서 “지금 문학예술부문 사업이 당과 혁명의 요구,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며 문학예술부문에서 굳어진 틀과 낡은 도식에 매여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들,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을 창작해내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며 “문학예술부문이 침체상태에 빠져있는것은 창작 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수준과 실력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34)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으로 명작창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로동신문』 2014년 6월 3일.

35) 위의 글.

36)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요구”를 강조하고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를 문학예술계의 슬로건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김정은은 이 서한에서 “모란봉악단이 창조한 혁신적인 창조기풍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따라배워야 할 좋은 모범으로”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이 준 과업을 열백밤을 패서라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실천하고자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실력전을 벌려나가는 집단주의적경쟁열풍, 이것이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조기풍입니다.<sup>37)</sup>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은은 이러한 ‘창조기풍’을 기초로 ① 예술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예술교류를 활발히 할 것, ② 현실을 바탕으로 인민이 선호하는 예술작품을 창조할 것, ③ 예술부문의 대중화, 과학화, ④ 창작가, 예술인 육성사업 활성화, ⑤ 당 조직을 통한 예술계 지원을 내실화 등의 방침을 내렸다.<sup>38)</sup>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통해 모란봉악단은 북한 내 최고봉 악단으로 규정됐다. 북한 음악계에는 만수대 예술단과 국립 교향악단을 비롯한 전통 있는 대형 악단이 있어 우수한 인재도 풍부하다. 경력도 모란봉악단보다 훨씬 길고 기술·표현력에 있어서도 노련한 음악가 많다. 따라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모란봉악단을 최고봉으로서 의미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창작 및 공연에 있어서 예술가들의 기본 자세를 변혁할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악단과 같은 시대정신을

37) 위의 글.

38) 森類臣, 「金正恩時代」の「音楽政治」牡丹峰楽団を中心に, 38쪽 참조.

발로시키는 예술작품을 음악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만들어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김정은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실현 이미지이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시대 예술계의 모델이 됐고 음악계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노선이 됐다. 이러한 맥락으로 된 ‘신작 음악회’(2014년 9월 3일~4일 개최)도 정리할 수 있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이었고, 동시에 다른 예술인들을 위한 배움의 자리를 제공한 공연이기도 했다.

김정은에 의한 사회적 문명국의 예술 분야 노선은 이렇게 모란봉악단이 중심이 되었다. 모란봉악단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장에서의 ‘돌격대’이었다는 것이다.

## IV. 악단의 외교사절화

### 1. 대 러시아, 대 중국 ‘음악외교’

2015년 7월에는 북한 음악계에 새로운 악단인 청봉악단의 창단이 발표되었다.<sup>39)</sup> 『조선중앙연감』은 청봉악단을 “우리나라의 또 다른 국보적 예술단체”, “생생하고 새롭고 우아한 모습”이라고 표현하였다.<sup>40)</sup>

청봉악단은 모란봉악단에 비해 3년가량 늦게 창단됐다. 모란봉악단이

39) 「국보적인 예술단체 청봉악단 조직」 『조선중앙통신』 (온라인). 2015년 7월 28일, <<http://www.kcna.co.jp/index-k.htm>>.

4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연감 2016』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6), 471쪽.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하면서도 독립된 신설악단인 것과 달리 청봉악단은 왕재산예술단 내부의 신설악단이다.<sup>41)</sup>

청봉악단의 가수들은 보천보전자악단 내부 여성 중창조였던 ‘모란봉 중창조’에서 이적한 인물들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청봉악단은 왕재산예술단에 소속되지만 보천보전자악단의 스타일을 부분적으로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김정일 이 주도한 경음악 노선이 보천보전자악단과 왕재산예술단 두 악단이 중심이 되었지만 김정은 정권은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북한 공식 언론에 의하면 청봉악단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10차례 공연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청봉악단 공연 목록(2015년~2017년 1월)<sup>42)</sup>

| 회수    | 공연날짜      | 공연 회장                                  | 공연 주제                                   |
|-------|-----------|--|---|
| 2015년 |           |  |   |
| 1     | 8월 31일    | 차이콥스끼 명칭 음악당(Tchaikowsky Concert Hall) | 청봉악단 러시아 공연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의 합동공연(초대공연)] |
| 2     | 9월 1일     | 모스크비치 문화센터                             | 공훈국가합창단 공연<br>※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부분 출연    |
| 3     | 9월 3일     | 하바롭스크 변경 음악 극장                         | 공훈국가합창단 공연<br>(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부분 출연)   |
| 4     | 10월 11일   | 인민극장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청봉악단공연                    |
| 2016년 |           |  |   |
| 5     | 1월1일      | 인민문화궁전                                 |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 신년경축음악회                     |
| 6     | 2월 16~18일 | 봉화예술극장                                 | 광명성절경축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공연                    |

41) 2016년 1월 1일 진행된 공연명이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 신년경축음악회’로 발표된 시점에서 청봉악단은 왕재산예술단의 내부 조직임이 밝혀졌다.

42) 森類臣, 「金正恩時代」の「音楽政治」牡丹峰楽団を中心に 『現代韓国朝鮮研究』 18号 (2018), 46쪽을 일부 개정하여 작성했다.

|       |        |          |   |
|-------|--------|----------|---|
| 7     | 5월 11일 | 류경정주영체육관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영원히 우리 당 따라>>              |
| 8     | 8월 29일 | 4.25문화회관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 축하공연                    |
| 2017년 |        |          |   |
| 9     | 7월 9일  | 평양       |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br>※ 모란봉악단 · 청봉악단 · 공훈국가합창단 · 왕재산예술단 합동공연 |
| 10    | 7월 27일 | 평양       | 조국해방전쟁 승리 64주년 경축예술공연 (청봉악단 · 공훈국가합창단 · 왕재산예술단 합동공연)                |

첫 공연이 북한 국내가 아닌 해외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공연은 러시아가 북한 예술단을 초청한 형태로 진행됐다. 즉 북러 외교와 관계가 깊은 공연이었던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을 북러 친선의 해로 정하고 그해 4월 모스크바에서 북-러 친선의 해 개막식을 열었다. 청봉악단의 러시아 방문은 이 북러 친선의 해를 기념해 이뤄졌다. 이 공연에서 청봉악단이 부른 노래는 “여성 중창 ‘러시아 처녀의 노래 연곡’을 비롯하여 러시아 인민이 사랑하는 노래”였다.<sup>43)</sup> 청봉악단이 창설된 시점에서 청봉악단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담당하는 외교사절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러시아 공연은 그 시험 공연(test pilot)적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다.

모란봉악단도 2015년에는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악단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은 2015년 12월 계획되었던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이다.

43) 「친선의 해를 장식한 공훈국가합창단의 로씨야공연」 『조선중앙통신』 (온라인), 2015년 9월 8일, < <http://www.kcna.co.jp/calendar/2015/09/09-08/2015-0908-045.html> >.

북한의 외교 사절단으로서 북중관계를 보다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그리고 청봉악단의 러시아 공연의 경험과 더불어 음악정치의 합의 폭을 넓히는 실천이 될 계기였다.

모란봉악단은 베이징에 가서 공연준비까지 했지만, 공연의 내용을 둘러싼 북중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공연 직전에 결국 취소됐다. 모란봉악단의 공공외교 시도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음악정치의 합의의 폭은 확대될 수 없게 됐고 오히려 음악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가리킨 것이다. 이 경험으로 모란봉악단이 해외에 파견돼 공공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매우 저하됐다.

이후 음악정치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연동되면서 외교관계가 아니라 대남(대 한국)관계에 주력되었다. 그 주인공은 모란봉악단이 아니라 삼지연교향악단이었다.

## 2. 삼지연관현악단의 등장

삼지연관현악단은 2009년 1월 창단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을 개편한 악단이다.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은 팝스 오케스트라의 성격이 짙었는데, 이 점은 삼지연관현악단에도 이어지고 있다.

삼지연관현악단은 평창올림픽 파견을 목적으로 편성된 특수 악단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명확히 대남 공공외교를 의식한 악단이었으며 멤버로 청봉악단 및 모란봉악단의 주력 가수와 연주가가 투입된 만큼 외부에 북한 음악의 종합력을 보여주는 악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에 일본에 파견된 평양예술단을 떠올리게 하는 악단이기도 하다.

단장은 현송월이다.<sup>44)</sup> 현송월은 음악정치 및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sup>44)</sup> 현송월은 모란봉악단의 단장이기도 하고 모란봉악단 단장 직위를 떠났다는 보도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악단의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돌격대’로 자리 잡은 모란봉악단과, 북한의 대남 공공외교를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 두 큰 악단의 책임자가 됐다. 따라서 예술계 전체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도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됐다. 현송월은 2018년 6월의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북미 관계 개선이 된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송월이 공공외교의 중요한 담당자가 된 것이다. 2008년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 답례 공연을 삼지연관현악단이 맡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삼지연관현악단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표 2〉 삼지연관현악단의 주요 동향

|               |  |
|---------------|--|
| 2018년 2월 8일   | 강릉 공연(강릉시 강릉아트센터)  |
| 2018년 2월 11일  | 서울 공연(서울 국립중앙극장)   |
| 2018년 2월 13일  | 김정일이 삼지연관현악단 구성원 접견. 기념사진 촬영.                              |
| 2018년 2월 16일  | 평양 귀환 공연(평양 만수대예술극장)                                       |
| 2018년 4월 6일   | 김정은으로부터 악기 한 벌 증여. 증정악기 전달식 실시. 박광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가 연설. |
| 2018년 4월 14일  | 중국예술단 방문 환영공연  |
| 2018년 4월 27일  |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 공연                                    |
| 2018년 9월 14일  |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실시. 만찬회에서 공연.                                 |
| 2018년 10월 10일 | 김정일이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전용극장) 개관 직전 현지지도.                          |
| 2018년 10월 11일 | 삼지연관현악단극장(전용극장) 개관   |
| 2018년 11월 2일  | 중국예술단 방문 환영공연  |
| 2018년 11월 4일  | 쿠바 의장 방문 환영 공연   |
| 2019년 1월      | 신년축하공연   |
| 2020년 10월 7일  | 삼지연관현악단 지휘자 장룡식에게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                            |
| 2020년 10월 8일  |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삼지연관현악단공연 (삼지연극장)                            |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모란봉극예극장을 개수 공사하여 전용극장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sup>45)</sup>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리뉴얼 개수 공사에는 조선인민군 제 267군 부대가 동원됐다. 삼지연관현악단은 2018년 하반기부터는 대남 공공외교만 아니라, 대 중국 및 대 쿠바 공공외교도 맡았다. 모란봉악단의 지위를 이은 악단으로 북한 음악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미 교섭의 파탄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활동이 축소돼 현재 뚜렷한 동정은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sup>46)</sup>

## V. 음악분야의 원점 회귀 현상

### 1. 모란봉악단의 역할 축소(혹은 완료)

삼지연관현악단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모란봉악단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명칭 변경을 들 수 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모란봉악단’에서 ‘모란봉전자악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각료평의회 의장(당시)이 2018년 11월 평양을 방문한 보도로 모란봉악단의 명칭이 모란봉전자악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sup>47)</sup> 『로동신문』

45) 연면적 36610m, 객석수 1200여 석의 전용극장이다.

46) 2023년 12월 6일에 개최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 위한 축하 공연’에는 삼지연관현악단이 출연했다. 약 3년 만에 공식 보도에 나타난 것이다.

47)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는 예술공연 성대히 진행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리설주녀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로동신문』 2018년 11월 5일.

에서는 이때 쿠바 총리 영접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 모란봉전자악단, 왕재산예술단 소속 음악가들이 출연한 것으로 소개됐다. 모란봉악단의 명칭은 모란봉전자악단으로 변경됐다.<sup>48)</sup> 쿠바 총리 영접공연 장면은 동영상으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로동신문』을 확인하는 한 모란봉전자악단의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란봉악단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며 예술계 최고봉으로까지 규정됐던 모란봉악단은 창단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자리 매김되고 있을까. 여기서는 2012-2019년에 걸친 약 7년간의 모란봉악단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김정철의 논문 「모란봉전자악단을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불멸의 업적」(『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학』 제65호 제2호)을 검토하고자 한다.<sup>49)</sup>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도 밝히고 있다.

첫째, 이 논문이 나올 때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주관조직은 조선노동당으로 밝혀졌다. 모란봉악단은 멤버 전원이 군인이라는 점에서 조선인민군 소속 악단일 가능성도 있었으나 조선노동당 직속임이 확인된 것이다.

둘째, 모란봉악단을 청년들을 위한 공연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이 제국주의 사상 문화 및 부르주아 문화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사회주의 문화의 음악을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제국주의 및 부르주아 사상 문화의 영향을 씻어내는 것을 모란봉악단의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국주의 사상문화’, ‘부르주아 문화’란 K-POP이나 한국 드

<sup>48)</sup> 명칭 변경의 이유는 짐작할 수밖에 없다. 전자악단의 이름이 붙은 악단은 그동안 포천보전자악단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란봉악단은 굳이 전자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이미 전자악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를 붙이는 의미는 별로 없다.

<sup>49)</sup> 김정철, 「모란봉전자악단을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을 옹위하는 제일나팔수로 키워주신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학』 제65권제2호 (2019).

라마로 대표되는 한국 팝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인된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을 경유해 북한 내로 유입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이나 일본의 언론에서 보도돼 왔으나 이들 현상에 맞서기 위한 선전선동의 무기로 모란봉악단을 지목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 개념 강조와도 연결된다.

셋째, 음악적 측면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란봉악단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 유명곡을 과감히 리메이크한 것이었다. 논문에서도 편곡에 있어 리듬감을 중시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sup>50)</sup> 이 부분은 1991년 출간된 김정일의 저서 『음악예술론』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김정일은 멜로디를 중시해야 하며 리듬은 어디까지나 멜로디에 복종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sup>51)</sup>

이상과 같이 이 논문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을 상세히 해설했다. 모란봉악단의 사회적 위상과 의미는 조선노동당의 정사(正史)인 『조선로동당 력사(중보판) (2)』(조선로동당출판사, 2018)에도 쓰여지고 조선노동당의 업적으로 자리 매김됐다.<sup>52)</sup>

이후 모란봉악단(모란봉전자악단)은 2019년 1월 1일 열린 신년 경축 공연 등에 부분적으로 출연하는 뿐, 악단으로서는 활동을 거의 안 하게 되었다.

## 2. 악단의 일원화—국무위원회연주단의 창설

북한에서는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가 개최되면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존재했던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

50) 위의 글, 5~6쪽.

51) 김정일, 『음악예술론』(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53~54쪽.

52) 『조선로동당 력사(중보판) (2)』(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420~421쪽.

로 개편되면서 국무위원회 수장인 위원장에는 김정은이 취임했다. 이 국무위원회에 속한 악단이 국무위원회 연주단이다. 국무위원회 연주단은 2020년 1월 25일에 처음으로 공연에 출연했지만, 정확한 창단의 날짜는 불명하다.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sup>53)</sup>

〈표 3〉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주요 동향

|                          |  |
|--------------------------|--|
| 2020년 1월 25일             | 설명절 축하공연(국무위원회연주단, 삼지연관현악단, 공훈국가합창단)                               |
| 2021년 1월 5일              |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개막식(4.25문화회관)   |
| 2021년 1월 14일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기념 열병식(김일성광장)  |
| 2021년 2월 16일             | 광명성절 기념공연(국무위원회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                                       |
| 2021년 4월 15일             | 태양절 기념공연<br>(국무위원회 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                          |
| 2021년 6월 18일<br>(19일 추정) | 공연(조선로동당 전원회의 제8기 제3차 총회 후 김정은이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과 함께 관람) <sup>54)</sup> |
| 2021년 7월 2일~<br>7월 6일 추정 | 공연(삼지연극장)  |
| 2021년 7월 11일             | 김옥주(국무위원회연주단 성악배우) 이민배우의 수여<br>리명일(국무위원회연주단 단장 겸 지휘자) 국기훈장 1급 수여   |
| 2021년 7월 30일             |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을 위한<br>공연(삼지연극장) <sup>55)</sup>        |

53) 본 연구의 대상은 주로 2012~2021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2022년 이후는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공연으로는 다음이 있다.

2023년 10월 18일 국무위원회 연주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로시아 외무상을 환영하는 연회).

5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무위원회연주단공연을 관람하시었다」 『로동신문』 2021년 6월 20일.

55)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 국무위원회연주단공연 관람」 『조선중앙통신』 (온라인), 2021년 7월 30일,

〈<http://www.kcna.co.jp/calendar/2021/07/07-30/2021-0730-003.html>〉.

악단 형태로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및 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형태는 정통적인 것이며 중후한 반면 모란봉악단과 같은 ‘창조기풍’을 보이는 악단은 아니다.

한편 실력이 있는 가수를 거느린 악단이다. 특히 김옥주의 존재가 크다. 김옥주는 2018년 모란봉악단의 지방 순회 공연에 부분 참여하였으며 삼지연관현악단의 구성원으로 강릉과 서울에서의 공연에도 참여하였다. 김옥주는 그동안의 업적을 평가받아 2021년 7월 11일 인민배우 칭호를 수여받았다. 김정은은 이날 국가표창을 받은 예술인을 만나 이렇게 평가했다.

문학예술부문이 의연 동면기, 침체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때에 당중앙의 의도를 구현한 명작, 명공연들로 인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감흥을 불러일으킨 국무위원회연주단의 예술창조활동은 그 어떤 성과보다도 기다리던 반가운 일이라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sup>56)</sup>

김정은은, 모란봉악단에서 시작해 삼지연악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한의 음악 정책이 일시적으로 쇠퇴했음을 지적하고 이를 국무위원회 연주단이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무위원회 연주단은 국가 최고기관인 국무위원회 소속 악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당대회나 당 전원회의 연주를 담당하고 있음을 상기 김정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 초기 음악정치를 상징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은 그대로 남아있고 단속적으로 공연하는 한편, 김정은이 직접 창단과 육성에 개입한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 그리고 삼지연관현악단은 공연 개최나 출연의 빈도가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거의 국무위원회 연주단에 일원화되었다.

56) 「김정은총비서 중요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 축하」 『조선중앙통신』 (온라인), 2021년 7월 12일,  
(<http://www.kcna.co.jp/calendar/2021/07/07-12/2021-0712-001.html>).

### 3. 원점회귀를 위한 정책: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천리마운동 캠페인

남북미관계 악화와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 강조책으로 북한이 외부의 문화적 영향을 수용하는 폭은 좁아져 갔다. 가장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현상이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법률로 통과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이라고 설명되었다.<sup>57)</sup>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전문은 2023년 3월에 한국 언론의 일부가 입수해 공개했다.<sup>58)</sup> 이미 선행연구에서 분석되고 있지만,<sup>59)</sup> ‘반동사상’으로 상정되고 있는 ‘사상문화’가 자본주의 국가의 문화, 특히 한국의 문화라는 것은 명확하다. 물론 미국과 일본의 문화도 포함된다. 이들 문화를 접하고 유포할 경우 최고형이 사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내 문화통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2018년 남한 가수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공연 ‘봄이 온다’를 개최한 것을 감안하면 2018년 이전으로의 급격한 회귀라고도 할 수 있다.

5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온라인), 2020년 12월 5일, <<http://kcna.co.jp/calendar/2020/12/12-05/2020-1205-001.html>>.

58)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사이다.  
「전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뉴스핌』 (온라인), 2023년 3월 22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22000003>>.

59)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참조.  
한명섭,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고찰」 『북한법연구』 제27호 (2022), 115-156쪽; 한명섭,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분석과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vol.3 (2022).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사회주의 문명국에서의 ‘문명’, ‘문화’의 정의와 범위를 다시 명확히 했다. 북한에서는 어떤 문화가 허용되며, 어떤 문화가 허용 안 되는지를 원칙적으로 선을 긋고 사회주의 문명국이 목표로 하는 사회를 인민들에게 다시 확인시킨 것이다.

북한은 2021년 5월부터 조선중앙TV와 『로동신문』을 통해 김일성 통치 시대 천리마운동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김정은 시대 대중동원운동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2015년 4월부터 북한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만리마 속도 창조’, ‘만리마 기수’였으나 적어도 ‘속도’라는 측면에서는 1960년대 천리마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됐다. 김정은식 속도 중시의 발전형, 즉 모란봉악단으로 상징되는 창조기풍과 화선식 업무 수행로부터 김일성 시대 발전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문화와 사회적 가치관의 원점회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 Ⅵ. 나가며

본 논문은 김정은 정권이 본격 출범한 2012년 이후 약 10여 년의 음악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음악정책에 대해 음악정치,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두 개념을 분석틀로 해서 내재적 접근을 시도했다.

우선 음악정치는 김정일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군정치와 관련이 깊었다. 따라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후의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이 음악정치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은하수관현악단과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창단으로 음악 정치 개념의 함의가 확대되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에는 사회주의 문명국이 있다.



김정은 정권의 독창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인민생활에서 문화의 다방면적 발전을 기도한 것이다. 문화예술, 특히 음악정책은 이 사회주의 문명국 논리 안에서 매우 중시되어 왔다.

선군정치를 계승한 김정은 정권에서도 음악정치는 기본적으로 선군정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음악정치의 대표격으로 신규성과 세련된 퍼포먼스 등에 눈이 가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8.25 경축 모란봉악단의 화선(火線)공연'이 중시되는 등 역시 본래 음악정치의 의미부여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주의 문명국의 틀에서 볼 때 모란봉악단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돌격대'이었다. 모란봉악단의 창조 기풍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문화예술 측면에서 주도하는 것이었으며 예술가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모범이었다.

북한 음악정치는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의 등장에 따라 음악을 통한 외부와의 교류 차원으로 들어갔다. 음악정치의 함의에는 외국 혹은 대남(남한)에 대한 음악외교라는 측면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음악정책은 2018년을 지나면서 수렴해 국무위원회연주단으로 일원화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의 성립과 천리마운동의 집단기억 상기가 이러한 음악정책의 배경에 있다.

향후 과제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곡목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다 정밀하게 실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정권 10여 년의 음악정치를 개관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악단의 공연이나 곡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악단의 등장과 그 의미를 찾는 방법을 취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음악계가 형성하는 '장(field, champ)'(부르디외)에 주목하여 그 독자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음악계의 보다 광범위한 움직임·더 세밀한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음악계만의 역동성을 분

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 싶다.

■ 접수: 2023년 11월 8일 / 심사: 2023년 12월 1일 / 게재 확정: 2023년 12월 6일

**【참고문헌】**

-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 서울: 선인, 2014.
- 김채원 외 공저, 『예술과 정치—북한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서울: 선인, 2013.
- 박영정 외 공저, 『북한 문화예술 현황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방송언론과 예술 : 북한학 총서 북한의 새인식8』,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북한연구학회 기획, 전미영 편,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03 김정은 시대의 문화: 전환기 북한의 문화현실과 문화기획』,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5.
- 오기현, 『남북 문화 교류의 창 평양걸그룹 모란봉악단』, 고양: 지식공감, 2014.
- 전영선, 한승호, 『NK POP 북한의 전자음악과 대중음악』, 서울: 글누림, 2018.
- 천현식, 『북한의 가극 연구』, 서울: 선인, 2013.
- 鄭炳浩(著), 金敬默·徐淑美(翻訳), 『人類学者がのぞいた北朝鮮: 苦難と微笑の国』, 青土社, 2022.
- 李喆雨, 『朝鮮音楽 : 金正恩第1委員長時代へ』, レインボー出版, 2012.
- Howard, Keith, *Songs for "Great Leader": Ideology and Creativity in North Korean Music and Dance*, Oxford Univ Pr, 2020.
- 강동완, 「모란봉악단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를 위한 기념공연” 의미와 전망」 『국제정치연구』 18(2), 2015, 45~65쪽.
- 김성수, 「사회주의 문명국을 향한 청년 지도자의 이상과 현실 : 동시대 북한 문화 예술의 이해」 『미술세계』 2018년 8월호 제71권, 2018, 74~79쪽.
- 노동은, 「북한중양음악단체의 현황과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제28집, 2002, 65~122쪽.
- 모리 토모오미, 「예술 공연 ‘추억의 노래’가 가지는 의미」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2호, 2016, 125~152쪽.
- 모춘홍,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로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8권 제1호, 2021, 41~63쪽.
- 배인교, 「2012년 북한의 음악공연과 樂」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13호, 2012, 283~301쪽.
- 배인교, 「북한의 화선(火線)음악 - 6.25전쟁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no.57, 2016, 287~316쪽.

- 송명남, 「《모란봉악단》을 통해 보는 조선의 문화정책과 인민생활」 『朝鮮大学校學報』 vol.25, 2015, 149~168쪽.
- 천현식, 「모란봉악단의 음악정치」 『2015 신진연구 논문집』,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편, 2015, 505~614쪽.
- 최봉대, 「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 정책적 실천과 그 함의 -위락·후생시설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7권 제1호, 2021, 311~347쪽.
- 하승희, 「북한매체의 노래 전파과정 연구—김정일·김정은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9권 제2호, 2015, 113~157쪽.
- 하승희,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음악정치 양상—「로동신문」1면 악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9집 2호, 2015, 232~261쪽.
- 하승희, 『북한의 악단 변화연구 (1945~2018)』,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한재현,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담론과 근대성의 함의」 『시민과세계』 통권 제29호, 2016, 161~179쪽.
- 홍성규, 『북한 서정가요의 주제와 음악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Cathcart, Adam & Korhonen, Pekka, "Death and Transfiguration The Late Kim Jong il Aesthetic in North Korean Cultural Production", *Popular Music and Society*, Vol 40(4) (2017), pp. 390-405.
- Korhonen, Pekka & Cathcart, Adam, "Tradition and Legitimation in North Korea: The Role of the Moranbong Band",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20(2) (2017), pp. 7-32.
- Pekka Korhonen and Tomoomi Mori, "The Samjiyon Orchestra as a North Korean Means for Gender Based Cultural Diplomacy",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19, No.2 (2020), pp. 57-82.
- Peter Graham Moody, "Music, Politics, and Indigenization in the DPRK (1945-1991)",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23.
- 森類臣, 「「金正恩時代」の「音楽政治」牡丹峰楽団を中心に」 『現代韓国朝鮮研究』 18号, 2018, 34~52쪽.
- 森類臣, 「文在寅政権期における南北文化交流」 『現代韓国朝鮮学研究』 21号, 2022, 28~41쪽.

森類臣, 「万寿台芸術団の対日文化外交—芸術と宣伝扇動の相克—」, 中戸祐夫・森類臣編, 『北朝鮮の対外関係 : 多角的な視角とその接近方法』, 京都: 晃洋書房, 2022, 208~239쪽.

## 【부록】

## 모란봉악단 공연 목록(2012년 7월~2019년 1월)

(森類臣, 「金正恩時代」の「音楽政治」牡丹峰楽団を中心に 『現代韓国朝鮮研究』 18号(2018), 40-44쪽을 일부 개정하여 작성했음)

| 회수    | 공연 날짜      | 공연 제목  | 관객, 공연의 성격 등 | 김정은의 관람 |
|-------|------------|--|--------------|---------|
| 2012년 |            |  |              |         |
| 1     | 7월 6일      | 시범공연   | 데뷔 공연        | ○       |
| 2     | 7월 28일     |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  | 조선인민군        |         |
| 3     | 8월 25일     | 8.25경축 모란봉악단의 화선공연   | 조선인민군        | ○       |
| 4     | 10월 10-14일 | 선로동당창건 67돐경축 모란봉악단공연 《향도의 당을 울러 부르는 노래》                        | 조선로동당        | ○       |
| 5     | 10월 29일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돐기념 모란봉악단공연                                     | 조선인민군        | ○       |
| 6     | 12월 21일    | 《광명성-3》호 2호기 성과적인 발사를 축하하는 모란봉악단공연                             | 로켓           | ○       |
| 2013년 |            |  |              |         |
| 7     | 1월 1-3일    |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 조선로동당        | ○       |
| 8     | 2월 1일      |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 《어머니의 목소리》 | 조선로동당        |         |
| 9     | 4월 11일     |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화선공연(축하방문)                                     | 조선인민군        |         |
| 10    | 4월 25일     | 조선인민군창건 81돐경축 모란봉악단공연  | 조선인민군        | ○       |
| 11    | 6월 23일     | 자강도의 로동계급들을 위한 공연  | 地方住民         | ○       |
| 12    | 7월 27일     | 란봉악단 전승절 축하공연 《위대한 승리》   | 조선인민군        | ○       |
| 13    | 8월 2일      |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 조선인민군        | ○       |

|       |             |   |                       |   |
|-------|-------------|---|-----------------------|---|
| 14    | 10월 10-15일  | 조선로동당창건 68돐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br>《조선로동당 만세》       | 조선로동당                 | ○ |
| 15    | 10월 24일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 조선인민군                 | ○ |
| 2014년 |             |   |                       |   |
| 16    | 3월 17일      | 모란봉악단 공연  | 평양 시민                 | ○ |
| 17    | 3월 22일      | 모란봉악단 공연  | 평양 시민                 | ○ |
| 18    | 3월 23-4월 1일 | 모란봉악단 공연  | 평양 시민                 |   |
| 19    | 4월 2일       |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 공연                             | 지방 주민<br>백두 혈통 강조     |   |
| 20    | 4월 4-5일     | 삼지연군문화회관 공연 (량강도 순회공연)                                | 지방 주민<br>백두 혈통 강조     |   |
| 21    | 4월 6-8일     | 대흥단군문화회관공연 (량강도 순회공연)                                 | 지방 주민<br>백두 혈통 강조     |   |
| 22    | 4월 9-11일    | 혜산시 량강도예술극장 공연(량강도 순회공연)                              | 지방 주민<br>백두 혈통 강조     |   |
| 23    | 4월 16일      |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 조선인민군                 | ○ |
| 24    | 5월 2일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국제친선소년회관 공연 《세상에 부림없어라》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br>준공기념공연 |   |
| 25    | 5월 19-21일   |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 예술인                   | ○ |
| 26    | 9월 3일       | 신작음악회   | 예술인                   | ○ |
| 2015년 |             |   |                       |   |
| 27    | 4월 27-28일   | 조선안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공연                     | 조선인민군                 |   |
| 28    | 9월 7일       | 쿠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                | 쿠바와의 수교 55주년 기념공연(외교) | ○ |
| 29    | 10월 11일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                    | 조선로동당                 | ○ |

| 2016년 |           |  |        |   |
|-------|-----------|--|--------|---|
| 30    | 2월 13일    |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 과학자 로켓 | ○ |
| 31    | 2월 18일    |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기여한 우주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 축하공연 | 과학자 로켓 |   |
| 32    | 5월 11일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영원히 우리 당 따라'                        | 조선로동당  |   |
| 33    | 12월 28일   |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 조선로동당  | ○ |
| 2017년 |           |  |        |   |
| 34    | 5월 20일    |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을 축하 모란봉악단 공연                                    | 과학자 로켓 |   |
| 35    | 7월 9일     |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   | 로켓     | ○ |
| 36    | 7월 10일    |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   | 로켓     | ○ |
| 37    | 7월 10-12일 |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 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  | 로켓     |   |
| 38    | 7월 30일    |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 로켓     | ○ |
| 39    | 9월 13-21일 | 음악무용 종합공연(강원도 원산시) 순회공연  | 지방 주민  |   |
| 40    | 9월 25-30일 | 음악무용 종합공연(함경남도 함흥시) 순회공연   | 지방 주민  |   |
| 41    | 10월 4-14일 | 음악무용 종합공연(평안북도 신의주시) 순회공연  | 지방 주민  |   |



|       |               |   |                |   |
|-------|---------------|---|----------------|---|
| 42    | 10월 18-29일    | 음악무용 종합공연(자강도 강계시) 순회공연   | 지방 주민          |   |
| 43    | 11월 2-12일     | 음악무용 종합공연(평안남도 안주시) 순회공연  | 지방 주민          |   |
| 44    | 11월 16-26일    | 음악무용 종합공연(평안남도 남포 특별시) 순회공연                                       | 지방 주민          |   |
| 45    | 11월 30-12월 6일 | 음악무용 종합공연(황해북도 사리원시) 순회공연   | 지방 주민          |   |
| 46    | 12월 13일       | 제8회 군수공업대회 참가자 축하공연(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 군사 관련          |   |
| 47    | 12월 29일       |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 축하공연  | 조선로동당          | ○ |
| 2018년 |               |   |                |   |
| 48    | 1월 1일         | 2018년 신년경축공연 조선의 모습   | 명절             |   |
| 49    | 2월 8일         | 조선인민군 창립 70주년 경축공연  | 조선인민군          |   |
| 50    | 11월 4일        |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는 예술공연 | 쿠바 지도자 영접 (외교) | ○ |
| 2019년 |               |   |                |   |
| 51    | 1월 1일         | 설맞이축하공연   | 명절             |   |

The Logic of Kim Jong-un's Music Policy  
: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the meaning of 'Music Policy(umak jönchi)'  
and the concept of 'Civilized Socialist Country'

Mori, Tomoomi (Setsun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ummarizes the ess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paganda and instigation policy in the music field by the Kim Jong-un regime, primarily examining the developments over about ten years from 2012 to 2021. This study uses two concepts, 'music politics' and 'socialist civilized country' as analytical frameworks for an inherent approach.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oncept of music politics, created during the Kim Jong-il regime was deeply related to military-first politics and initially had a relatively narrow implication, but the appearance of new orchestras broadened its implicati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which inherited the military-first politics, music politics remained closely related to military-first politics. The Moranbong Band, representing Kim Jong-un's music politics, gained attention for its novelty and flamboyance, but the emphasis on the '8.25 Celebration Moranbong Band's Hwaseong Performance' indicates that the Kim Jong-un regime strongly adheres to the original meaning of music politics, with a policy goal of establishing a socialist civilized country. This unique policy of the Kim Jong-un regime aims at the multifaceted development of culture in people's

lives. Culture and arts, especially music policy, have been very important here, and the Moranbong Band has been a leading example and vanguard in building a social civilized country.

North Korea's music politics has evolved over the years, with significant phases marked by the emergence of musical ensembles such as the Cheongbong Band and the Samjiyon Orchestra. In addition to foreign diplomacy with Russia and China, exchanges with South Korea were carried out in 2018.

This music policy converged over 2018 and unified into a State Affairs Commission Orchestra, which was established in 2020. It can be said to be a kind of regression to the origin.

Keywords: Kim Jong Un regime, music policy, Moranbong Band, The 9th national meeting of artistes, Samjiyon Orchestra, Band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 모리 도모오미 (Mori, Tomoomi)

일본 세쓰난대학교(Setsunan University) 국제학부 특임준교수로 재직중이다. 박사(미디어학). 전공은 역사사회학, 지역연구(한반도), 국제관계론이다. 주요 저서나 논문으로 「일본 주류 언론의 북한 인식: 아사히신문을 중심으로」(일본비평 27권, 2022), 『北朝鮮の対外関係多角的な視角とその接近方法』(中戸祐夫・森類臣編著, 晃洋書房, 2022), "North Korea as a small Great power,"(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ume 17, 2019 공저), "The Samjiyon Orchestra as a North Korean Means for Gender Based Cultural Diplomacy,"(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19, 2020) 『韓国ジャーナリズムと言論民主化運動—『ハンギョレ新聞』をめぐる歴史社会学』(日本経済評論社, 2019) 등이 있다.



특집

##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전영선 (건국대학교)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창작 현황과 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문학예술이 선전선동의 핵심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서 문학예술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공연예술만의 상황은 아니다. 영화에서도 2016년 예술 영화 3편 창작 이후 6년 동안 신작이 단 한 편도 없었다. 문학예술 전 분야에서 신작 창작에서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한 상황이다. 공연예술에서 새로운 창작으로 소개한 작품은 단발성 공연을 제외하고는 경희극 〈자랑〉, 경희극 〈향기〉, 단막희곡 〈출발점〉, 경희극 〈북부전역〉, 가극 〈영원한 승리자〉, 연극 〈멸사복무〉 정도이다.

문화예술계의 부진 요인은 역할 변화 때문이다. 문화예술이 담당하였던 선전선동의 주체와 형식이 달라졌다. 선전선동의 주체는 예술인에서 노동당의 말단조직인 '세포'로 바뀌었다. 형식에서도 구체적인 숫자와 편집물을 이용한 실리적인 사업 방식으로 바뀌었다.

부족한 내용은 천리마시대의 작품과 화려한 볼거리로 채웠다. 주요 명절에 열리는 경축 공연은 초대형 전자스크린, 화려한 '불장식'과 레이저를 활용한 조명, 대형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드론을 활용한 첨단기술의 향연으로 진행하였다.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공연에 반영한 결과이다. 북한 공연예술은 내용의 예술보다는 공연의 스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2.202312.89>

\*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논문은 '2023년 남북문화교류 관련 연구' 제1차 포럼(2021년 6월 26일)에서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보완한 연구임을 밝힌다.

펙터클 한 형식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북한 공연, 북한 예술, 김정은, 모란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북한의 대공연, 북한의 경축 공연

## I. 서론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공연예술 창작 현황과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시기에 창작된 공연예술 작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점이 달라졌으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연예술은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식의 예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북한의 공연예술에는 혁명가극을 비롯하여 연극, 무용, 교예, 음악무용서사시, 음악무용서사시극,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경희극 등을 포함하여 무대나 무대화된 공간에서 열리는 행위예술을 의미한다.<sup>1)</sup> 북한에서 공연예술의 개념은 또한 특정 장르의 공연이 아니지만 주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열리는 축하공연, 경축야회 등도 넓은 의미로 공연예술에 포함할 수 있다.<sup>2)</sup>

북한 공연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이다. 북한 예술은 예술 자체의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다. 정치 상황에 맞추어 예술이 창작되고 연행된다. 따라서 정치 상황에 따라 창작 방향과 내용도 달라진다. 북한에

---

1)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22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316쪽.

2) 북한에서 공연의 사전적인 의미는 “음악, 무용, 연극, 교예 등 무대예술작품들을 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연예술은 “극장무대공연과 순회공연 및 외국방문공연”으로 구분한다.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연구원, 1972), 58쪽.

서 예술창작의 방향과 변화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의 하나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다. 정치적으로는 선대 수령의 유혼의 계승을 강조한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의 정치 방식에 따라 예술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보여주어야 할 예술의 내용도 새롭게 구성된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은 북한 문학예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공연예술을 포함한 예술은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공연예술은 김정은이 제시한 정책과 내용에 따라 전개되었다. 김정은 시대 초기의 국정 방향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2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발표된 새로운 국가 비전이었다.<sup>3)</sup>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과학, 교육, 보건의료, 문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문명 수준’을 달성하여, 인민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비전이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비전은 2013년이 되면서,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이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으로 평가받았다.<sup>4)</sup>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제시한 김정은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과감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였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다. 김정

3) 2011년 12월 17일 김일성이 사망 후 김정은으로의 후계 세습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사망 후 보름이 되지 않은 2012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최고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나선 2012년은 북한이 사용하는 주체 연호로 101년에 해당한다. 2012년은 김일성의 탄생을 기점으로 2011년이 100년이고, 2012년 101년이었다. 김정은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한 주체 시대가 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하는 세기적 전환을 후계 계승의 자산으로 활용하였다. 외모, 행동까지 김일성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주체 100년을 건설한 김일성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4) 「우리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상의 정당성」 『로동신문』 2013년 7월 14일.

은 체제에서 처음 진행된 모란봉악단 공연을 통해 ‘남의 것이라도 과감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sup>5)</sup> 세계적인 수준에 대한 지향은 경축 공연의 구성의 변화로 이어졌다. 2014년 5월 16일에 열린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에서는 서양음악과 민요, 클래식을 레퍼토리로 구성한 ‘세계 명곡’을 연주하였다. 2018년에는 ‘정일봉상국제성악콩쿨’로 불리는 성악대회의 명칭을 ‘제1회 평양국제성악콩쿨대회’로 바꾸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이름이 들어간 음악대회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평양과 국제를 내세우면서, 세계적 수준의 예술대회로의 도약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공연예술에서는 명맥이 끊기다시피 하였던 발레 공연도 있었다. 격년제로 운영하던 평양국제영화제의 연례 개최를 시도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조선을 계승하는 것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탈조선과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정책은 예술인들에게도 정책에 맞춘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였다.<sup>6)</sup>

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7월 9일 :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민족고유의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것도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의 음악예술을 세계적수준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6) 김정은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작품 창작을 요구하였다. 2014년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에서 ‘문학예술부문 사업이 당과 혁명의 요구·시대의 부름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학예술 부문이 ‘굳어진 틀과 낡은 도식에 매여’있어 ‘창작가·예술인들의 수준과 창작적기량도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요구에 비해볼 때 뒤떨어져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창조자·향유자도 인민대중’이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전문가들이나 이해하고 향유하는 문학예술이 아니라 인민들이 요구하고 좋아하는 문학예술로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하지만 2019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 북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외부 조건을 개선하고, 정상국가로서 발전을 기약하였던 김정은의 정책은 실패하였다. 2020년 이후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였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상황에 맞서 전면적인 국경 봉쇄로 대응하였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대외무역이 끊겼고, 경제 위기는 고조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도 불거졌다.

김정은 초기에 추진한 ‘세계적 수준의 문명국 건설’은 어렵게 흘러갔다. 김정은이 직접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위기 국면이었다. 김정은 체제의 위기는 문화예술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 초기에 요구하였던 과감한 세계화를 대신하여, ‘백두산 혁명 전통’이 호명되었다. ‘천리마시대’, ‘전쟁세대’의 영웅, ‘전승세대’의 영웅을 호명하였다. 위기 돌파의 유일한 출구인 ‘과학기술’의 성과가 부각되었다. 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연에서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화려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II. 김정은 체제 공연예술의 현황

### 1. 체제 과시의 대공연과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

북한 공연예술은 혁명가극 〈피바다〉 창작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혁명가극 〈피바다〉는 단순한 가극 작품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공연예술의 전형이자 기준이 된 작품이다. 북한 체제가 시작된 이후 문학예술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민족적 형식’의 주체 사회주의 예술의 기준을 세워나갔다. 공연예술에서는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을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혁명가극 <피바다>가 창작되었고, 이후로는 모든 공연 예술은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작 방식으로 창작된다.

혁명가극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적인 공연예술이라는 점이다. 가극은 음악과 무용을 기본으로 극적 서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종합공연이다. 종합적인 공연 형식은 북한 공연예술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공연예술이 종합예술을 지향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추어, 필요한 예술 형식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특히, 대공연은 예외 없이 종합공연 형식으로 진행한다. 북한에서 ‘대공연’은 형식으로서 대형일 뿐 아니라 내용으로서 위대한 공연을 의미한다. 대공연은 김일성의 혁명 서사를 주제로 한 공연이나 당이나 국가 서사와 관련한 공연 작품에서는 혁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서사를 중심으로 집단주의의 위력을 과시하는 대형 종합공연을 지향하였다. 전문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대형 공연인 음악무용이야기, 음악무용서사시를 비롯하여, ‘대공연’이나 ‘종합공연’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공연에는 수천 명에서 1만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종합예술 형식을 예술 발전의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하기에 ‘북한식의 공연예술’ 형식이 발전하였고,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sup>7)</sup> 북한 공

7)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22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평양: 문학예술 종합출판사, 1996), 316쪽 : “지난 시기 문학예술혁명과정에 가극혁명, 연극혁명이 일어나고 새형의 무대종합예술형식인 <<피바다>>식가극과 <<성황당>>식연극 그리고 음악무용이야기, 음악무용서사시와 같은 형태들이 창조됨으로써 무대종합예술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무대종합예술형식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대예술분야에서는 노래와 음악을 기본수단으로 하는 연극형식뿐 아니라 음악과 무용, 대사와 설화, 영화화면과

연예술의 종합적이고 대형화의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형식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다. 전문예술인과 일반인이 참가하는 종합공연 형식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장르 명칭에서 확인되듯이 대집단체조와 배경대미술, 예술공연이 어우러진 초대형 공연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처음 집단체조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참가 인원이 확대되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붙은 2000년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부터는 10만 명이 출연하는 초대형 공연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2년 〈아리랑〉공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장르 명칭으로 굳어졌다.

김정은 체제에서의 대형 공연으로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1만 명 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이 있다. 이 공연은 김일성 광장과 대동강 위에 설치한 대형 가설무대를 배경으로 전문 예술인 1만 명이 참가하였다. 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은 전문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공연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공연이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정주년(5년, 10년)의 국가 명절이었기에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위상을 과시하는 초대형 무대로 구성한 것이다. 공연 주제는 김정일 시대를 이어 김정은 시대에도 영광을 이어 가자는 것이었다.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도 있었다. 2002년부터 공연하였던 〈아리랑〉 공연을 대신하여 2018년 새로 창작한 〈빛나는 조국〉, 〈인민의 나라〉을 공연하였고, 2019년에는 〈불패의 사회주의〉를 공연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인민의 나라〉은 새로운

---

대형환등, 시와 노래 등 여러 가지 예술형식과 형상수단을 다양하게 결합리용한 무대종합예술형식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개척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와 인민의 요구, 예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며 문학예술의 사회교양자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내용을 추가한 창작 공연이었다. 반면 2019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는 새롭게 창작한 작품이 아니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맞춘 이벤트성 특별공연이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주요 레퍼토리를 활용하고, 2019년 6월 중국을 방문하여 공연하였던 예술대표단의 공연을 그대로 재현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순수 창작 공연으로 볼 수 없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2023년까지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이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과 같은 대형 창작 공연은 하지 않았다. 공연을 대신하여 국가의 주요 명절이나 기념행사를 이벤트로 진행하였다. 인민들이 공연 진행자가 되어 참가하였던 것과 달리 예술인들이 출연하고, 대형스크린과 레이저 조명, 조명장식, 드론을 활용한 화려한 무대를 연출하면서, 이벤트로 진행하였다. 북한 주민들이 공연의 당사자로 참여하였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명절 행사를 당이 인민을 위해 제공하는 볼거리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다.

## 2. 주요 창작 공연예술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언론이나 『조선예술』에 소개된 공연예술 작품은 〈혈분만국회〉, 경희극 〈자랑〉, 경희극 〈향기〉, 단막희곡 〈출발점〉, 경희극 〈북부전역〉,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 혁명가극 〈승리가 보인다〉 등이 있다.<sup>8)</sup>

경희극 〈자랑〉은 지방에서 생산한 문자를 가지고 지방의 특색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자는 주제의 경희극으로 『조선예술』 2014년 12호, 2015년

<sup>8)</sup> 소개하는 작품은 『로동신문』과 『조선예술』 2014년 12호부터 2018년 5호까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연 영상은 확인할 수 없고, 문헌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

1호에 분재하였다. 경희극 〈향기〉는 2015년에 창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희곡은 소개되지 않았고, 『조선예술』 2015년 5호 43쪽과 44쪽에 공연 사진 10장이 실려 있다. 사진 내용으로 보면 수산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단막희곡 〈출발점〉은 정순남의 희곡으로 『조선예술』 2016년 1호에 작품이 소개되었다. 세포동관에서 목장용 풀판을 조성하는 수영과 영걸이 수령을 따르는 충성의 한길에서 목숨도 서슴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충실한 인간이 되자는 것을 주제로 한다.

『조선예술』에 소개된 공연예술 작품으로 주목할 작품은 〈혈분만국회〉이다. 〈혈분만국회〉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의분을 참지 못해 자결한 이준열사의 사건을 줄거리로 서장과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연극으로 1984년 3월 12일 국립연극단에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다. 『조선예술』에서는 〈혈분만국회〉를 2021년 11호부터 2021년 12호, 2022년 1호, 2022년 2호, 2022년 3호까지 전문을 다섯 번으로 나누어 연재하였다. 체제 위기 상황에서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다시 연재한 것으로 보인다.

1)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반영 경희극 〈북부전역〉(2017)<sup>9)</sup>

김정은 시대의 성과를 표상한 공연으로는 경희극 〈북부전역〉이 있다. 경희극 〈북부전역〉은 2017년에 공연한 경희극이다. 경희극 〈북부전역〉의 배경은 2016년 8월 말에 있었던 함경북도 수해 피해 복구이다. 2016년의 태풍은 한반도 북부지역을 관통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특히 함경북도 지역은 ‘해방 후 대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도 컸다.

폭풍이 끝난 2016년 8월 27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당시 러명거리 건설장에 투입되었던 군인들까지 모두 수해복구 지역으로 투입되었다. 김

<sup>9)</sup> <https://www.youtube.com/watch?v=bja-D0219wU&t=18s>.

정은은 ‘전투’를 추위가 닥치기 전까지 복구를 끝낼 것을 명령하였고, 전국에서 돌격대가 참가하였다. 경희극 〈북부전역〉은 60일 동안 진행된 인민군의 복구 사업과 군인들을 지원하려는 로인배, 오봉녀, 방정식 세 사람의 원호 사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경희극적 양상으로 창작하였다.<sup>10)</sup>

경희극 〈북부전역〉의 첫 장면은 무대 스크린으로 헬기가 수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군인과 돌격대들이 모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군인들이 복구를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은 군인을 돕기 위한 원호 사업을 조직하였다.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겠다’, ‘똥장똥이를 삶아서 주겠다’, ‘돼지를 잡아 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군인들은 최고사령관이 이 지역의 물, 공기 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면서 모조리 거절하였다. 오히려 주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해결해 주었다.<sup>11)</sup>

북한에서는 경희극 〈북부전역〉의 내용이 된 수해복구 사업은 김정은의 주요 업적의 하나로 평가한다. 경희극이라는 형식에 맞추어, 인물들 간에 일어나는 웃음에 포인트를 두었다.<sup>12)</sup> 또한 복잡하지 않게 설정한

10) 「〈북부전역〉」 『조선예술』 2017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19), 62-80쪽.

11) 북한 언론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해서 전국에서 군인과 돌격대들이 참여하였고,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참여하여 200여 일 만에 1만 9천 세대의 살림집을 완공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로 지은 살림집에 ‘열쇠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정도로 살림살이도 마련해 주었다고 선전한다.

12) 「특색 있는 극작술로 펼친 웃음」 『문학신문』 2018년 3월 10일 : “경희극 〈북부전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모습을 특색 있는 극작술로 펼쳐 보임으로써 관중이 웃으며 극에 끌려 들어가도록 하는데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경희극 〈북부전역〉에서는 특색 있는 인관관계설정으로 작품에서 진실한 웃음을 창조하고 있다. 지난 시기 경희극 작품들에서 인간관계는 작품의 웃음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희극적인 두 인물집단 중 어느 한 인물집단의 인물이 다른 인물집단에 의도적으로 끼여 들어 〈내부탐색〉을 하다가 그것이 로출되어 더 큰 난관이나 오해, 착각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 인물이 다른 인물집단

무대 장치와 함께 스크린을 활용하여 부족한 무대 장치를 대체하였다.

2)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의 국기 콘텐츠 공연 〈우리의 국기〉(2019)

공연 〈우리의 국기〉는 2019년 4월 12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이다. 공연 〈우리의 국기〉는 2019년 이후 북한 문학예술 창작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즉, 김정은 체제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공연 〈우리의 국기〉는 2019년 이후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공연 〈우리의 국기〉 주제는 제목인 ‘우리의 국기’이다. 주제가는 가요 〈우리의 국기〉로 공연의 시작과 끝을 모두 가요 〈우리의 국기〉로 구성하였다. 서곡(序曲)에서 부른 〈우리의 국기〉는 8명의 어린이 합창과 김옥주를 비롯한 가수들의 여성중창으로 8분여 동안 4절까지 불렀다. 종곡에서는 여성중창으로 다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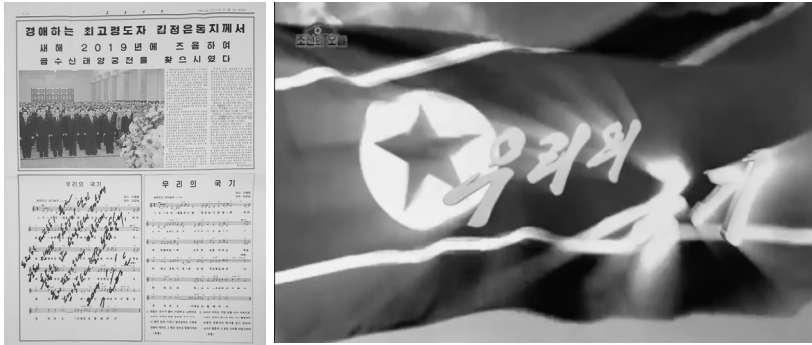
공연 〈우리의 국기〉 주제가인 가요 〈우리의 국기〉(리혜정 작사, 김강남 작곡)는 공연 직전인 2019년 1월 1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처음 소개된 노래이다.

『로동신문』 3면에는 가요 〈우리의 국기〉 홍보와 함께 “노래가 참으로 좋습니다. 전체 인민의 감정이 담긴 훌륭한 노래(를) 창작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김정은의 글씨와 함께 악보 홍보가 게재되었다.

---

에 동조 되어 자기를 들여보낸 사람들에게 역작용을 하도록 하는 인간관계가 많이 탐구 설정 되었다. 그러나 경희극 〈북부전역〉에서는 〈침투〉, 〈신임〉, 〈내부교란과 와해〉, 〈승급〉, 〈자체해산〉등으로 사건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1] 가요 〈우리의 국기〉 홍보와 영상물



※출처: 「우리의 국기」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자 기사와 가요 〈우리의 국기〉.  
<https://www.youtube.com/watch?v=UoHQMItwGQ>.

가요가 『로동신문』에 실린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신년사가 발표되는 날인 1월 1일에 실린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sup>13)</sup> 가요 〈우리의 국기〉는 나오자마자 “시대의 기념비적 명곡”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체 인민의 애국열, 투쟁열, 창조열을 배백해주며 그들을 영웅적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sup>14)</sup>하는 노래로 모든 주민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당 조직에서 진행되는 교양사업의 핵심 콘텐츠가 되었다.<sup>15)</sup> 가요 〈우리의 국기〉를 기념하는 기념우표도 발

13) 전영선,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제22권 제7호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32쪽 : “『로동신문』에 노래가 실리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가요가 『로동신문』에 소개된다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흔치 않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1월 1일에 게재된 경우도 2차례 있었다. 2011년 1월 1일에 가요 〈승리의 길〉이 있었고, 2012년 1월 1일에는 ‘새로운 100년이 노래로 시작하였다’는 의미를 담아 1면에 가요 〈조선의 힘〉을 게재하였다.”

14) 「훌륭한 명작들을 창작하는 것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 『로동신문』 2019년 1월 30일.

15) 「노래 〈우리의 국기〉를 통한 사상교양사업 활발 - 각지 당 조직에서」 『로동신



행하였다.<sup>16)</sup>

이후 가요 〈우리의 국기〉는 모든 공식 행사에서 국가(國歌)인 〈애국가〉와 함께 불리는 노래가 되었다. 주요 명절이나 행사에서 북한 국기가 등장할 때면, 국기의 등장을 알리는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

공연 〈우리의 국기〉는 가요 〈우리의 국기〉가 나온 직후, 인민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다. 이 공연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선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1월 미사일 발사를 보도한 『로동신문』에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상징에 대한 교양사업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공식으로 언급하였다. 신년사와 함께 실린 가요 〈우리의 국기〉는 바로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노래였다. 그리고 공연 〈우리의 국기〉를 통해 북한을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핵심은 ‘부강국가’로서 자긍심, ‘새로운 국가부흥시대’를 향한 의지를 갖자는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나오면서, 국가를 상징하는 교양물을 콘텐츠로 한 문화예술 활동이 전국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국기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문화정책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상징에 대한 교양, 국가상징에 대한 재조명, 국가상징의 일상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후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함께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핵심아젠다가 되었다.<sup>17)</sup> 민족을 후면으로 국가를 전면으로 한

문』 2019년 1월 14일.

16) 「노래 〈우리의 국기〉를 반영한 우표 발행」 『로동신문』 2019년 5월 30일.

17)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국가정체성을 재구성하였다.

- 3) 체제 수호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2021), 모범 관리의 표상 연극 <열사복무>(2021)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은 2021년 10월 27일 피바다가극단에서 창작한 가극이다. 주제는 ‘6·25전쟁’ 당시에 있었던 월미도해안포병의 ‘영웅적 위훈’이다.<sup>18)</sup>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을 창작 배경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다. 하노이 회담 이후의 북한 상황과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청년을 비롯한 전승세대의 교훈을 이어가기 위한 가극이다.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을 창작한 이유에 대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승리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승리의 전통과 영웅정신을 빛나의 전통과 영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sup>19)</sup>

2019년 이후 계속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식 문화’, ‘우리 식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주의 진지 수호’를 주창하였다. 지금이나 외부로부터

---

2020), 23쪽 : “각각의 분야에서 국가가 재등장하고, 궁극적인 목표로서 경제건설이 나서게 되면서 이를 위한 일련의 이데올로기적 기치가 요구되었다. 2013년 등장한 ‘김정일 애국주의’가 한편으로는 김정일이라는 ‘선임 수령’의 계승을 의미한다면, 2018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이전의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계승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을 의미하였다.”

18)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 『조선예술』 (2022년 2호), 44쪽 : “피바다가극단에서는 전승세대의 사상정신적재부가 전체 인민의 사상정신적재부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새세대들의들과 인민군장병들, 새세대들의 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영양소로 되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송고한 뜻을 받들고 월미도해안포병들의 영웅적위훈을 반영한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을 성과적으로 만들어 내놓았다.로 만들어 내놓았다.”

19) 위의 글, 45쪽.

의 문화적 침투는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문화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피로써 건설한 사회주의 전취물’도 잃게 된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강력한 법적 통제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위기가 높아진 2020년 이후 ‘휘황찬 미래’를 향해 질주하자던 ‘만리마’가 들어가고, ‘천리마’가 다시 등장하였다. 2021년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북한 사회 전반적으로 화려한 미래를 보여주는 주제에서, 사회주의 진지 수호를 주제로 목숨으로 사회주의를 지켰던 전쟁을 소환한 것이다.

2021년에 나온 연극 〈별사복무〉는 국립연극단의 연극으로 군당책임비서 리준걸을 주인공으로 모범적인 당일군의 본모기를 보여주는 연극이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당 중심의 국가 운영의 본모기 인물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수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군들을 지원하고, 군 안의 원아들을 거두어 키우고,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이후 강조하는 농촌개발 문제를 받아, 시·군들을 자립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를 고민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연극 〈별사복무〉에서 나오는 원아들을 키우는 문제는 김정은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정이 흐르는 사회, 당의 품에서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기 꿈을 키우면서 자라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0)</sup>

20) 영화 〈우리집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2017년 경희극 〈북부전역〉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경희극 〈북부전역〉에서는 홍수로 고아가 된 봉순이가 나온다. 홍수로 부모를 잃고, 진흙에서 구해진 소녀인데, 봉순이 소식을 듣고는 서로 데려가 키우겠다고 나서면서, 가짜 고모와 고모부가 등장하여서 서로 진짜라고 우기는 해프닝도 벌어진다. 두 가짜 고모와 고모부는 시험에서 탈락하고, 봉순이는 국가에서 키우기로 한다.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도 도착하고, 김정은이 ‘피해지역 아이들을 송도원국제야영장으로 불러 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봉순이는 기쁨에 노래를 부르고, ‘나 고아가 아니예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이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끝난다.

[그림 2]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과 연극 〈멸사복무〉



※출처: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 [https://www.google.co.kr/url?sa=i&url=https%3A%2F%2Fdprktoday.com%2Fnews%2F55472&psig=AOvVaw0037htpKB3RV7sRz5oMc1e&ust=1702869080752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BEQjRxqFwoTCLjk4ui\\_lYMDFQAAAAAdAAAAABAD](https://www.google.co.kr/url?sa=i&url=https%3A%2F%2Fdprktoday.com%2Fnews%2F55472&psig=AOvVaw0037htpKB3RV7sRz5oMc1e&ust=1702869080752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BEQjRxqFwoTCLjk4ui_lYMDFQAAAAAdAAAAABAD); 연극 〈멸사복무〉 [https://www.google.co.kr/url?sa=i&url=https%3A%2F%2Fdprktoday.com%2Fnews%2F55930&psig=AOvVaw01D7PfhM7-0cjVUV1Fdq9i&ust=170286912479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BEQjRxqFwoTCIDep\\_v2\\_lYMDFQAAAAAdAAAAABAD](https://www.google.co.kr/url?sa=i&url=https%3A%2F%2Fdprktoday.com%2Fnews%2F55930&psig=AOvVaw01D7PfhM7-0cjVUV1Fdq9i&ust=170286912479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BEQjRxqFwoTCIDep_v2_lYMDFQAAAAAdAAAAABAD).

#### 4) 과학기술의 상징 퍼포먼스, 미디어 파사드 조명축전 〈빛의 조화〉

조명축전 〈빛의 조화〉는 조명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of 일종인 미디어 파사드이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 외면의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faç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대형 건물의 외벽 면을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활용한 IT와 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이다. ‘미디어 캔버스(media canvas)’로도 불리는 미디어 파사드는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를 결합해 도시를 다채롭게 만드는 설치예술로도 주목 받고 있다.

조명을 이용하여 예술적인 형상을 창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건물 외벽에 발광다이오드를 설치하여 다양한 영상을 재현하는 방식이 있다.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빌딩은 빌딩 외부에 다이오드를 설치하여 조명으로 그림을 재현한다. 다른 하나는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건물에 조명을 비추는 방식이다.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에서 선보인

기술은 벽면에 입체조명을 투사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2020년에 개최된 제17차 2·16과학기술상 대회에서 대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상한 ‘레이자다통로다중투영기술확립’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명예술이다.

‘조명축전 빛의 조화 2020’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행사의 하나로 처음 선을 보였다. <2020년 조명축전 빛의 조화>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앞두고 진행되었는데,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평양제1백점 건물 벽면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sup>21)</sup>

[그림 3] ‘조명축전 빛의 조화 2020’을 보도한 『로동신문』



※출처: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이 시작되었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7일.

<빛의 조화 2020>의 콘텐츠는 김정은이 이끄는 노동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 성과로 구성하였다. 김정은 체제 이후 설립된 과학기술의 전당, 룡라곱등어관,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중앙동물원, 아동공원

21) 『로동신문』은 ‘빛의 조화 2020’은 “황홀한 빛의 예술”로서 “3차원다매체와 다통로다중투영기술로 평양제1백화점의 건물벽면에 대형화상들을 이채롭게 펼친 조명축전”으로 평가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이 시작되었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7일.

등의 놀이시설, 문화시설과 2017년 태풍 피해와 수해복구 과정 등이었다.<sup>22)</sup>

조명축전은 2021년 4월 태양절을 맞이하여 ‘빛의 조화 2021’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등장하였다. 2021년의 조명축전인 ‘빛의 조화 2021’은 태양절이 끝난 직후인 2021년 4월 18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하였다.<sup>23)</sup>

〈빛의 조화〉 공간으로 사용된 평양제1백화점은 평양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광장 옆에 조선로동당본부청사와 마주한 곳에 있다.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공간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퍼포먼스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전선동의 효과를 높였다. 북한에서 가장 큰 김일성·김정일 대형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 장대재 언덕에서 내려다보이고, 주요 행사가 열리는 김일성광장, 인민대학습당, 만수대분수공원과 인접한 중심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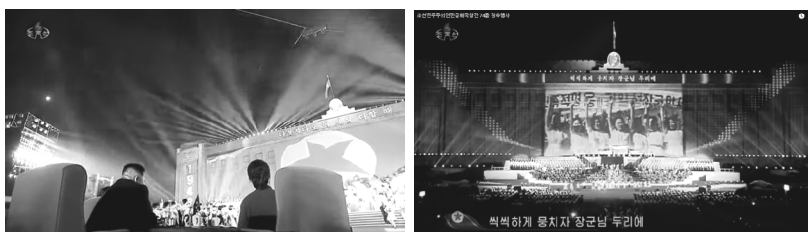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에서 선을 보인 디지털미디어 맵핑 기술은 이후 야간 명절에 열리는 기념 공연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2년 4월 17일에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 경축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 2022년 9월 11일 야간에 진행된 ‘조선민

22) 『로동신문』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당중앙의 위대한 인민사랑에 의해 자연의 광란이 휩쓴 땅우에 일떠선 행복의 보금자리,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마을들이 10월의 새 풍경으로 펼쳐지면서 조명축전은 절정을 이루었다”고 소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이 시작되었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7일.

23) 조명축전의 타이틀인 ‘빛의 조화 2021’이 등장하고, 이어서 살아 있는 듯이 움직이는 꽃밭 영상에 이어 태양절을 알리는 ‘태양절’, ‘4·15’라는 문자 이미지로 시작한다. 이어 김형직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지원(志遠)’이 등장하고, 김정일의 귀국을 의미하는 개선문, 새로운 조선의 시작을 상징하는 평양종, 조선로동당 창건, 조선인민군창건, 사회주의 조선의 건국을 상징하는 국장으로 이어진다. 이어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속도전 구호,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의 3대혁명, 2021년에 있었던 노동당 제8차대회의 로고, 당8차대회에서 3대 이념으로 제시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구호가 등장하고, 사회주의 이상향이라는 려명거리 풍경, 인민생활과 관련한 백화점 거리 풍경에 이어 ‘태양절을 경축하는 축포로 구성되었다.

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돐 경축 공연', 2023년 7월 27일에 진행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대공연' 등이 있다. 이들 경축 공연에서는 공연이 열리는 노동당 본부청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디지털 미디어 맵핑 기술을 이용하여 스펙타클한 무대로 연출하였다.

[그림 4] 디지털 맵핑 기술을 활용한 조명 장치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 돐 경축 대공연」 『유튜브』 (온라인), 2022년 9월 11일, <<https://www.youtube.com/watch?v=gvAJN7vVHYo&t=5873s>>

### Ⅲ. 김정은 체제의 공연예술의 특징

#### 1. 대형 전자스크린과 레이저를 활용한 화려한 무대 연출

북한의 공연예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첨단 시설과 뉴미디어를 결합한 형식으로 전개된다.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문화예술 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본다. 영화나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양식의 예술이 나왔다는 인식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는 과학기술은 노동당의 핵심 분야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면서, 예술에 접목하였다.

김정은 체제 문화예술에서 첨단기술을 선보인 것은 모란봉악단이었다. 2012년 모란봉악단의 시범 공연에서 선보인 전자악기를 중심으로 한 구성, 전자 패널을 이용한 무대 장치, 레이저 조명의 적극적인 활용은 모란봉악단의 무대 장치를 넘어서 김정은 시대 예술의 방향이었다.

2012년 시범 공연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장비 성능이 부족하여 몇 개로 나누어져 온전한 화면을 내보이지는 못하였던 전자 패널은 이후 공연에서는 점차 화면도 커졌고, 선명도도 높아졌다. 공연에서는 대형 LED 화면을 이용한 무대연출과 레이저 조명을 활용한 무대장식이 일상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 5] 모란봉악단의 무대장치와 조명과 2022년 전승절 공연의 무대 장치와 조명



※출처: 2012년 7월 12일에 방영한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https://www.youtube.com/watch?v=DaB8tZT591s>; : 2023년 7월 27일에 진행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대공연' <https://www.youtube.com/watch?v=zKZ6hKvxdw>.

## 2. 이벤트성 대형 공연

김정은 체제의 공연예술은 관객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모든 공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민대중이 행사의 주체로서 참여하던 방식에서 인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형식의 공연이 많아졌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같이 인민들이 참여하는 대형 종합공연은 전문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공연으로 재구성되었다. 주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열



리는 행사를 심야 시간에 진행하면서, 드론이나 불꽃, 레이저, 조명 등을 이용한 행사로 진행한다. 인민들을 동원하는 행사에서 인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설맞이 축하공연이다. 설맞이 축하공연은 실내에서 초청된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광장을 무대로 임시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관객들은 별도의 좌석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였다. 2019년 이후로는 0시를 기해 김일성광장에서 국기 게양식을 비롯한 설맞이 축하 공연을 이벤트성 종합공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요 명절 행사를 새벽 0시를 기해서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 진행한 조선로동당 창건 75돌 열병식은 10월 10일 0시를 기해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국무위원회연주단과 국방성군악단이 라이브로 반주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되는 형식은 국가 명절 행사의 고정된 형식이 되었다.

[그림 6] 야간에 진행되는 대형 명절 공연



※출처: 2022년 9월 12일에 있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https://www.youtube.com/watch?v=X\\_C6jqbnTXI](https://www.youtube.com/watch?v=X_C6jqbnTXI).

야간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조명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넓은 광장을 객석으로 이용하면서, 관중을 동원하였고, 대형스크린을 통해 행사 장면을

전달하였다. 또한 관객들은 휴대폰 불빛을 이용하여 공연에 호응하는 장면도 연출하였다.

야간에 진행되는 대형 공연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활용한 연출이 주목된다. 드론을 활용한 공연으로는 2018년 9월 9일에 개막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공연 제목인 ‘빛나는 조국’이라는 글자를 새기면서 시작하였고, 이후 야간에 진행되는 공연에서 드론은 필수적인 장치로 활용하였다. 2019년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설맞이 경축 공연에서도 드론을 활용하여, ‘새해를 축하합니다’를 비롯한 각종 글자를 공중에 새겼다.

[그림 기] 드론을 활용한 퍼포먼스



※출처: 2019년 1월 1일에 진행한 2019년 설맞이 축하무대 <https://www.youtube.com/watch?v=SJPINOILCZw>, '2022년 9월 12일에 있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4돐 경축행사. [https://www.youtube.com/watch?v=X\\_C6jqbnTXI](https://www.youtube.com/watch?v=X_C6jqbnTXI).

### 3. 노래와 춤을 결합한 가무

북한에서는 노래와 무용은 김정은 체제에서는 공연은 어느 때보다 화려해지고 빨라졌다. 경쾌하고 빠른 노래와 화려한 춤이 어우러지는 공연이 많아졌다. 율동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화려해졌다. 음악은 음악대로,

춤은 춤대로 움직이던 것에서 춤과 노래를 같이하는 가무의 비중이 높아졌다.

공연예술에서 주체를 강조하던 것과 달리 서양식 대중예술을 접목한 무용도 많아졌다. 공연에서 북한 가요와 현대적인 무용을 접목한 공연을 선보였다. 김정일 시기까지 중심이었던 혁명무용과는 전혀 색채가 다른 ‘륜춤’, ‘타프춤’, ‘그림자무용’ 등의 현대 무용이 공연의 주요 레퍼토리로 등장했다.

[그림 8] 조명을 활용한 가무와 조명을 활용한 무대의상



※ 출처: 2021년 1월 6일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경축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 중에서 선보인 타프춤 <사회주의 전진가>  
[https://www.youtube.com/watch?v=\\_O3T7uHCq\\_4](https://www.youtube.com/watch?v=_O3T7uHCq_4)

#### IV. 결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공연예술만의 상황은 아니다. 예술계 전반의 현상이다.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공연은 화려함을 넘어 현란해졌다. 하지만 신작 창작은 찾기 힘들 정도이다. 공연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영화, 음악, 연극 등 예술계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정일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공연에서 사용하는

레퍼토리는 ‘천리마 시대’의 소환이나 옛 작품의 버전을 바꾼 편곡 정도이다. 김정은 시대의 특성을 신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공연단을 제외하고는 창작이나 활동면에서 활동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예술창작의 부진은 김정은도 인정하였다. 김정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예술계를 비판하면서 각성을 촉구하였다. 2014년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문학예술 작품 창작’을 요구하면서, 예술계 전반에 대한 침체를 비판하였다.<sup>24)</sup>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모든 부문이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고있지만 문학예술부문은 아직 온 사회를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고 천만심장에 불을 다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있”다고 하였다. 특히 영화예술은 꼭 집어서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25)</sup> 2019년 4월 11일 개막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

<sup>24)</sup> 특히 영화계의 부진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영화부문에서 영화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교양하고 사회에 들끓는 분위기를 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데서 영화가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큼니다. 영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오늘의 침체상태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새로운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세계영화계를 뒤흔드는 뒤흔성을 올려야 합니다.”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문학예술의 근간이 되는 문학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걸린 것이 문학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작이라고 할만 한 영화문학, 극문학들이 나오지 못하여 좋은 영화와 연극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종자가 새롭고 독창적이며 주장이 뚜렷하고 서정이 풍부한 명시, 명가사가 나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고 비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sup>25)</sup>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창조하며 특히 영화부문에서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역할을 촉구하였다.<sup>26)</sup>

김정은의 질타와 비판 속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진은 2023년까지 이어졌다. 2022년 4월 9일 시사회를 갖고 개봉한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은 예술영화로는 2016년 〈우리 집 이야기〉 이후 6년 만에 나온 신작이었다.<sup>27)</sup> 공연예술에서 주목할 작품으로는 경희극 〈북부 전역〉, 가극 〈영원한 승리자〉, 연극 〈멸사복무〉 정도이다. 공연 〈우리의 국기〉도 있지만 최고인민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단발성 경축공연이었다. 2009년 〈산올림〉이나 2010년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이 열풍 속에 전국 순회공연을 가졌던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문화예술계의 성과가 부진한 주요 원인은 문화예술의 역할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일 체제에서 예술은 선전선동의 직접적인 수단이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예술을 활용한 선전선동 사업은 이전과 비교할 때 비중과 역할은 크게 줄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을 정비하면서, 선전선동 사업의 주체로 초급당원들을 내세웠다. 문화예술이 수행하였던 선전선동 사업의 대부분이 당의 말단조직에서 진행하면서, 문화예술의 중요도는 낮아졌다. 현장에서의 선전선동 방식도 예술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에 맞춘 참신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요구하였다. 경제 활동 현장에서 활용된 것은 다매체편집물이었다. 첨단 시대, 김정은이 요구하는

26)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27) 이지순, 「북한의 신작 〈하루낮 하루밤〉의 정치적 상징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KINU Online Series』 (서울: 통일연구원, 2022.4.29.), 5쪽.

과학기술 시대에 맞는 선전선동 방식을 요구한 것이다. 체적인 지표, 계량화된 숫자로 입체적인 편집물을 통한 선전을 강조하였다. 김정일 시기와 비교할 때, 예술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예술 기능은 김정일 시기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축소되었다. 대신 볼거리로서 기능은 확대되었다. 명절이나 대형 공연 등에서 형식은 더욱 화려해졌다. 김정은 체제에서 전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과학의 성과를 공연에 반영한 대형 퍼포먼스로 운영하였다. 주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열리는 축하공연을 심야에 진행하면서, 초대형 전자스크린, 화려한 ‘불장식’과 레이저를 활용한 조명, 대형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드론이 동원되었다. 여기에 휴대폰 조명을 이용한 관객의 호응 속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내용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신작 창작은 현저히 줄었다. 김정은 시대의 아젠다인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향한 희망보다는 체제 위기의식을 반영한 ‘천리마시대’의 감성으로 채우고 있다. 노동당 제8차 대회 직후인 2021년 1월 28일자 『로동신문』에는 문화성 부상 최홍남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은 “우리는 새로운 조선식문명으로 인민들을 인도하려는 당의 의도에 비해 너무나도 뒤떨어져있는 자신들의 사업실태를 심각히 돌이켜 보았다”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맹렬히 벌릴 것’이라고 다짐하였다.<sup>28)</sup>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김정은 시대 공연예술은 내용보다는

28) 로동신문, 「주체문화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갈 드높은 열의 국가영화 총국, 문화성 일군들과 나는 이야기」 『로동신문』 2021년 1월 28일: “우리 성에서는 지금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무대예술부문 전반에서 조명, 미술, 음향을 새 세기맛이 나게 일신하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창작창조활동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를 세계적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 과학연구부문과 긴밀히 협동하여 예술창조사업에 첨단기술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맹렬히 벌리려고 한다.”

현란한 퍼포먼스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의 의무가 되었다는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 접수: 2023년 10월 31일 / 심사: 2023년 12월 13일 /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4일

## 【참고문헌】

-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22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 『문학예술사전』, 평양: 사회과학연구원, 1972.
- 이지순, 「북한의 신작 5〈하루낮 하루밤〉의 정치적 상징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KINU Online Series』, 2022. 4. 29.
- 전영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국가안보와 전략』 21권 2호(통권 8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161~188쪽.
- 전영선,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22권 제7호,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30~38쪽.
-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0, 8~38쪽.
- 하승희,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음악정치 양상 - 「로동신문」1면 악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9집 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232~261쪽.
-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 『조선예술』 2022년 2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 「경희극 〈자랑〉」 『조선예술』 2014년 12호, 2015년 1호.
-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김정은장군과 시대에』,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7.
- 「〈북부전역〉」 『조선예술』 2017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19.
- 「혈분만국회」 『조선예술』 2021년 11호, 2021년 12호, 2022년 1호, 2022년 2호, 2022년 3호.
-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외정책에 대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었다」 『로동신문』, 2012년 7월 9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 서한 <<시



- 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  
가자》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 「노래 〈우리의 국기〉를 반영한 우표 발행」 『로동신문』 2019년 5월 30일.
- 「노래 〈우리의 국기〉를 통한 사상교양사업 활발 - 각지 당 조직에서」 『로동신문』  
2019년 1월 14일.
-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조선청년운동의 새로  
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21년 5월 3일.
-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이 시작되였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7일.
- 「주체건축예술의 새로운 경지·과학기술전당」 『로동신문』 2015년 3월 19일.
-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갈 드높은 열의 국가영화총국, 문화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로동신문』 2021년 1월 28일.
- 「훌륭한 명작들을 창작하는 것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 『로동신문』  
2019년 1월 30일.
- 「우리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상의 정당성」 『로동신문』 2013년 7월 14일.
- 「특색 있는 극작술로 펼친 웃음」 『문학신문』 2018년 3월 10일.

##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in the Kim Jong Un Era

Jeon, Young Sun (Konkuk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during the Kim Jong-un era. During the Kim Jong-il era, literature and art were prominently noted as the core of propaganda and agitation. However, in the Kim Jong-un era, the field of literary and artistic creation is experiencing a severe downturn. Such stagnation is not limited to performing arts; it extends across all facets of literary and artistic endeavors. In the realm of cinema, there has been a noticeable dearth of new productions, with not a single new film introduced in the six years following the production of three art films in 2016. This severe slump in the creation of new works extends beyond the cinematic sphere and is indicative of a broader trend across all domains of literature and art. With the exception of sporadic one-off performances, notable works that have been introduced as new creations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are limited to the light comedies “Showdown”, “Scent”, “Northern Region”, the one-act play “Starting Point”, the opera “Eternal Victor”, and the play “Eternal Service”.

The underlying factor contributing to the decline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landscape can be attributed to a shift in roles. The subjects and formats

previously associated with propaganda have undergone transformation. The primary agents of propaganda have transitioned from artists to ‘cells’, the grassroots organizations within the Labor Party. Additionally, the formats employed have shifted towards practical business methods using specific numbers and edited materials.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substantial content, works from the Chollima period and extravagant spectacles were introduced. The celebration performance held on major holidays have featured extensive use of high-tech technologies including large electronic screens, colorful ‘fire decorations’, laser lighting, media facades using large buildings, and drones. These developments in performance reflect the Kim Jong-un regime’s emphasis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hievements. It is anticipated that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will continue to prioritize the spectacular format of performances over the artistic substance of their content.

Keywords: North Korean Performance, North Korean Art, Kim Jong-un, Moranbong Band, Samjiyon Orchestra, North Korean Grand Performance, North Korean Celebration Performance

#### 전영선 (Jeon, Young Sun)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북한 사회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 문화 차이와 소통의 길을 모색하고, 통일을 디자인하는 연구자이다. 최근 연구로 「북한의 교육 법제와 예술 교과서 특성 연구」(2023), 「북한의 식생활 전통 인식과 보호정책」(2022), 『북한 아파트의 정치문화사 : 평양 건설과 김정은의 아파트 정치』(2022) 등이 있다.



특집

## 김정은 시대 문화정치와 ‘통속성’\*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국문요약

김정은 시대 10년이 넘는 동안 북한 미술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연동되어 부각되고 있는 ‘인민성’과 ‘통속성’임을 분석해내었다. 김정은은 인민성과 통속성이 반영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는 것이, ‘주체 미학관의 전일적이고 완벽한 과학적 정식화’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인민성과 통속성을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인민들의 미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미술가들의 미감도 이러한 변화되는 인민들의 미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정치에서 통속성의 강화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숭엄한 수령상에서 웃고 있는 색조각상으로의 변화처럼, 이전 시대와는 다른 감수성이다. 문인화를 복권시켜내고 본질만을 함축적으로 드러낼 것을 강조했던 김정일 시대 미술문화와도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김정은이 초급당선전일꾼들에게 주문했듯이, 변화하는 인민들의 감수성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참신한’ 선전선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김정은, 선전 선동,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속성, 키치

## I. 서론

세계에서 유례없는 3대 세습 사회주의 체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2011.12~)한 지 10년이 넘었다. 이 시기 동안 북한 미술문화에 어떠한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이를 김정은 시대 문화예술의 특징으로 논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특별히 김정은 시대 부각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연동되어 부각되고 있는 ‘인민성’과 관련하여 ‘통속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김정은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작품 창작을 요구하였다. 2014년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에서 “문학예술부문 사업이 당과 혁명의 요구·시대의 부름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학예술 부문이 “굳어진 틀과 낡은 도식에 매여”있어 “창작가·예술인들의 수준과 창작적 기량도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요구에 비해볼 때 뒤떨어져 있다”고 혹독한 비판을 하였다. 동시에 지침을 주는데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창조자·향유자도 인민대중”이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전문가들이나 이해하고 향유하는 문학예술이 아니라 인민들이 요구하고 좋아하는 문학예술로 되어야”한다는 주문이었다.<sup>1)</sup> ‘인민성’에 대한 강조이다.

북한에서는 이미 1950년대 후반에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문화예술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민성’과 ‘통속성’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은 1967년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된 이후인 것으로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추정되는데, 1970년 김일성은, “인민성의 요구를 해결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통속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통속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러한 ‘통속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사상예술성이 높을 뿐 아니라 통속성이 잘 보장되어야 진정한 인민의 예술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우리의 예술을 인민들 누구나 좋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민적이며 통속적인 예술로 만드는 것은 우리 당 문예정책의 중요한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예술이라야 진정으로 당적인 예술로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이번 연구는 김정은 시대 10년간 북한 문화예술의 방향성이 어느 지점으로 흐르고 있는가에 보다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포토리얼리즘의 부각과 통속성

북한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저널이 『조선예술』이다. 이 잡지 중 김정은 시대 제작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전 시대와 다른 대표적인 변화가 있다. 『조선예술』의 목차 뒤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가 실리는 코너가 있다. 김정일 생일이 있는 2월호, 김일성 생일이 있는 4월호, 북한 정권 수립일이 있는 9월호, 노동당 창건일이 있는 10월호에는 목차 뒤에 항상 김일성, 김정일 이미지가 실린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까지는 사진 이미지가 실린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회화 작품이 실렸다. 그런데 2012년의 과도기를 걸쳐서 2013년부터는 사진 이미지로 대체

2) 최룡남, 「인민성과 통속성은 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선예술』 (2017.3), 14쪽.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2년 9월부터는 김정은 이미지도 살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김정은 이미지는 모두 사진으로만 실리고 있다.

이는 회화 작품보다는 사진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김정은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2012년 4월에 실린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면(도1), 합성 사진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김정일의 키를 늘려 김일성의 신장 크기와 맞추고 있는 모습에서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변형은, 어차피 그러서 이미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 회화 작품에 맞을 수도 있는데, 굳이 사진 이미지를 선택하여 변형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 1〉 [조선예술] 2012.4



〈도 2-1〉 김상춘, 〈건국의 아버지〉 조선화,  
[조선예술] 2015.9월호





〈도 2-2〉 강영민, 변영호, 〈문화예술혁명의 포성을 울리시던 나날에〉유화, [조선예술] 2015.9월호



2014년 4월, 2015년 2월, 2015년 9월에는 다시 회화적인 작품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2-1, 2-2), 이 작품들과 김정일 시대인 2000년대 조선예술 잡지 같은 면에 실린 회화 작품들과 비교하면 회화 양식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시대 작품들은 회화적 필맛이 드러나는 작품들임에 비해서(도 3), 김정은 시대 작품들은 사진처럼 보이는 회화 즉 포토리얼리즘적 경향이 강하게 보이는 작품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덕분에 통속 미학이 더 강하게 전달되어 진다. 김정은은 수령 색조각상을 제작할 때도, 사진을 보고 사진처럼 그럴 때 생동감이 강화될 수 있음을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다. 사진 이미지를 선호하고, 회화에서도 사진적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식의 통속

성으로 대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수령 형상 이미지는 김정일 시대 강조했던 단붓질법의 등장 속에서 제작된 조선화 작품들과 비교하면 한 눈에 그 차이를 드러낸다.

〈도 3〉 [조선예술], 2010,2.



김정은이 김정일과 함께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김정은으로의 후계 확정이 김정일의 죽음 때문에 급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정보들을 인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가득하다. 29세의 김정은이라는 후계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갖고 올 혼란을 선전 선동 시스템을 통해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문화정치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이란 회화 작품과 달리 실제 상황을 기록한 자료로 인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매체이다. 물론 매체로서 사진 또한 여러 연출이 가능한 매체이고 김정은의 사진에서도 여러 연출의 흔적이 보이지만, 인민들에게 김정은이 이미 일찍이 김정일의 신임을 얻어 후계 지도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성을 전달하기에 보다 효과적인 매체로서 사진을 선택하였다고 판단된다. 김정은이 사진을 활용하면 진실성을 획

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정책적 맥락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김정은을 기록하여 선전 선동 매체에 등장시킨 초기 사진 이미지들을 분석해 보면, 그가 권력의 중심으로 확고해지는 과정에 따라 이미지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2013년 2월에 등장한 이미지처럼 처음에는 당시의 권력자 김정일과 꽤 떨어진 공간에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이미지가 등장하였으나(도 4), 2015년 9월 이미지를 보면, 이 사진의 주인공은 한눈에 김정일임을 알 수 있지만, 공간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다(도 5). 김정은은 허리를 숙여 김정일에게 예를 갖추고 있으며 정면의 이 사진 감상자가 아닌 김정일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앞에 가장 크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다. 9.9절이 있는 9월호에는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진은 김정은의 부각을 시각적으로 인민들에게 강조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4〉〈만수대창작사를 현지 지도하는 김정일, 김정은〉, [조선예술] 2013.2

〈도 5〉〈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는 김정일, 김정은〉, [조선예술] 2015.9.



김정은이 더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회화 작품이 아닌 사진 이미지로 굳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제2차 예술인대회에

서 그가 강조한 수령을 신비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일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그는 스냅사진처럼 보이는 사진 연출을 선호한다. 물론 김정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외의 인물들에게는 포커스 아웃을 하거나, 조명 빛을 통해 김정은이 부각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도로 계산되어 연출한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생동감’과 ‘친밀함’을 드러내면서도 권위적이지 않고, 동시에 리더로서 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구도와 연출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는 스냅사진 같은 이미지들이다(도 6). 지극히 현실의 이미지로 보이면서 동시에 그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연출된 김정은의 이미지와, 김정일 시대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군복을 입고 웃지 않는 권위적인 수령 이미지들과 비교해 보면, 통속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도 6〉 <고산과수종합농장, 김정은>, [조선예술] 2018.10



### Ⅲ. 통속성과 키치

“미술가의 미감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은 “당의 문예사상과 리론, 미학관이 구현되고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작들을 창작 창조하여야 합니다.”고 대답하고 있다. 미술의 사명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술작품에 인민대중의 미감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미의 절대적 기준으로서 모든 사물현상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따라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갈라진다. (중략) 이것은 인류미학사상을 가장 높은 단계에 올려 놓은 사람 중심의 미학관, 주체의 미학관이 밝힌 미의 기준에 대한 전일적이고 완벽한 과학적 정식화이다.”<sup>3)</sup>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론]에서 김정일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체미학에서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의 기준은 ‘사상성’이 핵심이었는데, 이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그 자리에 놓여 있다.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미적 감정은 그 사람의 세계관, 정치 사상적 지향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역사적, 계급적 성격과 함께 민족적 특성, 시대적 특성을 내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는데, 현재는 인민들의 미감에 대한 강조를 통해 통속성, 통속 미학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부각과 함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통속성이 강한

3) 「우리 인민의 미감과 미술」 『조선예술』 (2019.4), 62쪽.

미술작품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문혁이 제작한 <애국의 마음>이다. 이 작품에 대한 현재 북한 미술계의 평가는, “명작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김정은의 대답과 연관된다고 판단된다.

강원도미술창작사 미술가 최문혁이 유화로 제작한 <애국의 마음>(도 7)은 김정은이 2015년 12월 2일 미술부문 사업을 지도하며 높이 평가함으로써 일약 기념비적 명작으로 북한 미술계에 등장했다.<sup>4)</sup>

『조선예술』 기자인 사공일금도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명작이라고 평가하지 못했음을 고백한 적 있다. “<애국의 마음>은 크기도 작고 사상 주제적 내용도 소박하다. 인물의 영웅적 성격은 물론 사건 같은 것도 묘사되지 않았다. 이른 봄 식수철이 다가오면 이 나라의 산과 들에 의례히 펼쳐지곤 하는 사람들의 나무심는 생활을 읊겼을 뿐이다. 그지없이 소박하고 평범한 형상”이어서 명작이라고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sup>5)</sup>

김정은 시대 이전 북한 미술계에서 명작이라고 평가받아 온 작품들과 <애국의 마음>을 비교해보면(도8), 사공일금의 평가는 쉽게 납득이 된다. 역사적 사건도, 영웅도 등장하지 않는다. 웅장함도 없고 회화적 필맛도 없다. 대신 일상성과 통속성이 대신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선전하는 대표작의 변화는 V장에서 논의할 이 시대 미학의 기준이 인민성, 노동계급성, 당성에서 인민성, 통속성, 당성으로 변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던 <애국의 마음>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지점은 김정은의 평가와 연동되었음을 이 기자는 밝히고 있다. 김정은 이 “소박한 그림 속에 애국주의가 넘쳐난다.”고

4) 사공일금, 「명작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조선예술』 (2017.2), 65쪽.

5) 위의 글, 66쪽.

〈도 7〉 최문혁, 〈애국의 마음〉, 유화, 2015, [조선예술] 2016.3



평가했다는 것이다.<sup>6)</sup>

김정은은 이 작품의 의의에 대해,

“딸아이의 작은 가슴 속에 애국의 씨앗을 정히 묻어주며 그 애가 정을 기울여 심은 한 그루 나무와 더불어 조국과 첫 인연을 맺도록 해준 웅심깊은 녀인의 형상에서 작가가 작품에서 논하려는 조국과 인생이라는 거대한 사회 정치적 문제를 읽었으며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에 받들리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조국에 대한 깨끗한 사랑의 감정을 체험하는 귀여운 소녀의 형상에서 인간의 참된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인간문제에 예술적 해답을 준 창작가의 높은 지성세계를 느꼈다.”<sup>7)</sup>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 위의 글.

7) 사공일금, 「명작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조선예술』 (2017.2), 66쪽.

〈도 8〉 최계근, 〈강철의 전사들〉, 조선화, 143x233cm, 1966년



김정은의 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보면, 형식적으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토대로 부각된 통속미학에 대한 강조가 ‘우리국가제일주의’와 결합하여 애국주의 내용을 부각해 내는 방식으로 형상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청년중시사상’까지 내용에 포함시켜 형상화해내고 있음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평가 이후에 북한 미술계에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으며, “오늘도 중앙미술박물관 유화전람실 21호실에 전시된 이 작품 앞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며 이러한 평가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8)</sup> 중앙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많은 대중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북한 미술계의 현실은, 김정은 시대 미학적 정책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8) 위의 글.



이러한 변화는 대상의 본질만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김정일 [미술론에 토대를 둔 작품들(도 9, 10)과는 다르다.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애국의 마음>의 부각은 ‘이발소 그림’ 즉 키치적 감수성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도 7, 11).

〈도 9〉 김승희,  
〈구룡폭포〉 조선화,  
1992



〈도 10〉 김성민,  
〈쟁강춤〉 조선화,  
1992



〈도 11〉 〈포도〉 유화, 만수대창작사  
창립 60돐 미술전람회 출품작,  
[조선예술] 2020.1



키치 개념은 19세기 말에 저급한 예술작품을 의미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입장에서 키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무엇인 키치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무도 그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다.”는 프리츠 카르펜(Fritz Karpfen)의 언급은 키치가 확정된 의미를 가진 기호학적 개념이기보다는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해석학적 개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헤르만 브로호는 ‘키치 인간(Kitsch-Mensch)’이라는 개념에서, “키치는

예술작품이나 어떤 사물,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특성이다.”라고 주장하여, 키치를 만든 생산자가 아닌 키치를 향유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든 논의를 전개하였고, 아브라함 몰르는 이를 더 확장시켜 키치를 인간 존재방식과 연결시키기도 하였다.<sup>9)</sup> 아브라함 몰르가 키치의 특성으로 파악한 존재방식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과 관련된 존재방식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방식은, 인공적 사물들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세계의 의미 등 더 다양한 존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밀란 쿤데라도 그러하다.

김정은 시대의 ‘문화정치’로서 ‘키치’를 논할 때 그 시작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논의되었던 ‘키치’ 개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쿤데라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는 헤르만 브로흐는 「키치 문제에 관한 몇가지 논평」에서 “특정한 삶의 태도”로서 키치적 태도와 “키치 인간”에 대해 논하면서 키치의 궁극적 근원을 “거짓과 미화의 거울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서 찾고 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스탈린 아들 이아코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저급한 것과 숭고한 것이 ‘양립불가능’해서 죽음을 택한 스탈린의 아들의 모습을 통해 키치의 모순을 드러낸다. “키치는 세계를 아름답고 조화로운 지상낙원의 모습으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키치의 세계는 “똥이 부인되고 모든 사람이 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세

9) 그의 『키치의 현상학』을 통해서 아브라함 몰르는 “키치가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하나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인간 존재 방식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현진·정새해, 「키치가 주는 안락함과 소외감을 통한 미적 경험-아브라함 몰르의 “키치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9권 5호 (2019), 381~394쪽.

계다”는 것이다.<sup>10)</sup> 여기서 똥은 인간 실존의 추한 면에 대한 은유이다. 쿤데라가 ‘똥을 부정’하고 세상을 미화하는 키치의 속성과 함께 “키치의 왕국에서는 가슴의 독재가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5월 1일 축제를 예로 들며 전체주의 키치를 비난한다. 연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를 향한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로서의 축제”를 통해, 쿤데라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키치의 왕국에서는 가슴이 독재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사비나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마치 현실이 과학적 신비주의가 실현된 지상천국인 양 미화하는 것이었다. 사비나는 전체주의 왕국에서 기만적인 행복의 과시인 소비에트 키치를 경멸하며 벗어나려 한다. 그렇게 찾아간 그녀가 그토록 동경했던 미국에서도 키치의 왕국을 발견하곤 좌절한다. 그토록 동경했던 미국의 상원의원을 만났을 때, 그는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들을 보며 ‘저것이 행복’이라며 자랑하듯이 말한다. 이 순간에 대해 쿤데라는 키치를 통한 감동의 눈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첫 번째 눈물은 잔디밭 위를 달려오는 아이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한다. 두 번째 눈물은 잔디밭 위를 달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인류전체와 함께 감동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한다. 이 두 번째 눈물이 비로서 키치를 키치로 만든다.”<sup>11)</sup>

키치의 속성은, 혼자서 어떤 사물이나 사태·사상·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들, 온 인류를 끌어들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쿤데라에게 키치는 적어도 개인의 감정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 문제는 그것이 보편성의 가면을 쓰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강요

10) 김동훈, 「키치 개념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 키치와 송고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65집 (2011), 101쪽.

11) 위의 글, 106쪽.

하는 순간부터이다. 이렇게 되면 키치는 인류의 보편적 감성에 뿌리박은 것으로, 이성의 저항을 무화시키는 감정의 독재로 작동한다. 이는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이 지점에서 힘을 갖게 된다. 연단에 올라 모두가 지켜보는 행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아빠의 볼을 쓰다듬는 행위 같은 것이다(도 12).

〈도 12〉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2023.2.8



자식이 아빠의 볼을 두 손으로 쓰다듬는 행위는 실은 우리 문화 안에서 낯선 행동이다. 북한의 가족 문화 속에서 더욱 낯선 그림이지만, 디즈니 캐릭터 속에서는 흔한 이미지이다. 이는 서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키치적이다.

국가 무력이라는 힘의 메시지를 남성적 폭력의 이미지인 룯렛 맨의 이미지가 아닌 여성과 아동이라는 소프트 이미지로 전복시키려는 것이 이번 이미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핵무력은 미국과 비즈니스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그 단호한 거절을 귀여운 아이의 미소를 빌어 발신한 이미지 전략이다. 우리 언론이 김주애

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북한의 이미지 전략이 의미 있게 작동하게 된다는 역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7월 10일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은 미국의 독립기념절 행사 DVD를 소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도 13). 애국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는 헐리우드식 키치적 장치들로 채워진 행사이다(도 14). 김여정의 요청은, 대중의 가슴을 움직이기 위한 선전 선동의 효과에 통속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 이 무렵 북한이 북한 인공

〈도 13〉 〈미 독립기념일 DVD 찾던 김여정, 첫 야간 열병식 기획〉 『뉴시스』, 2020.10.10.



기를 그린 티셔츠를 주민들이 입고 다니는 사진을 홍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도 14〉 〈미국은 언제부터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했을까?〉 『경향신문』, 2021.7.5.



#### IV. 수령 색조각상으로의 교체

김정은 시대인 2013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세워진 김일성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다(도 15). 북한은 이를 수령 ‘색 조각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수령상을 웃고 있는 수령상으로 전면 교체해 나갈 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김정은 시

〈도 15〉 〈김일성 색조각상〉 조국해방전쟁기념관 중앙홀, 2013.7



대 김일성과 김정일 기념비 조각상을 이전 시기의 상과 비교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입체상에 색채의 사용과 웃고 있는 표정으로 대표된다.

북한에서 '수령형상'이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에서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와 숭고한 공산주의적 풍모를 형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북한에서는 '수령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다양한 '수령상'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들에게 사회적 생명을 준 존재로 교육시키고 있으며, 그가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생한다는 막강한 권력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존재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사용하는 이미지 전략은 이미지를 잘 바꾸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전략은 이 절대 권력자의 이미지를 통제하는 것이다. 아무나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지를 통제하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특정한 모습으로 권력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할 때, 다양한 이미지가 생산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김정일은 일찍이 ‘수령형상 창조이론’을 만들어 냈다. 이 수령형상 창조 이론의 핵심은 ‘숭엄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수령의 품모로 압축되어 설명된다. 이 시기 수령 형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숭엄함’이다. 이에 비해 김정은 시대 만들어진 색조각상은 김정일 시대의 ‘숭엄’의 의미는 탈각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친밀함’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김정일은 금수산 기념궁전에 놓을 김일성 대리석상 제작실에 나타나서, 이 숭엄한 장소에 세울 수령상을 웃는 형상으로 만들고 있는 조각가의 작품을 비판하며 웃지 않는 숭엄한 수령상으로 다시 제작할 것을 조각가 로익화에게 요구하였다.<sup>12)</sup> 이곳의 숭엄한 대리석상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상까지 웃고 있는 색조각상으로 교체된다.

북한 매체들은 이러한 수령상의 변화는 김정은이 만수대창작사를 직접 진두지휘하여 제작해 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3)</sup>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탑의 수령상을 제작할 때, 만수대창작사의 처음 설계는 전승의 축포가 터지는 장면을 배경으로 흰 대리석상이나 석고상으로 김일성 수

12) 로익화, 「(수기) 수령님의 대리석상을 아주 잘 형상하였다시며」 『조선예술』 (2006.7), 6쪽.

13) 유경훈,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잘 모시자 하시며」 『조선예술』 (2017.2), 16~17쪽.



형상을 형상화하는 계획이었다고 전한다. 이 계획을 김정은이 대리석상이나 석고상이 아닌 색조각상으로 제작할 것을 만수대창작사에게 요구하였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하고 있는데, 이때 김정은은 수령 사진들을 직접 골라서 보여주며, “형상의 진실성은 원화 사진에 있는 그대로 하여야 보장된다, 그래야 더 생동하고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다며 색채까지 사진과 함께 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한다.<sup>14)</sup> 이 때 ‘숭엄함’이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문헌에서도 이를 계기로 ‘수령형상미술창조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며 이 순간을 평가하고 있다.<sup>15)</sup>

김정은 이러한 색조각상이 진실성과 생동감을 강하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sup>16)</sup> 실은 키치적 통속성이 먼저 전달된다.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대상의 본질적인 내면까지 드러내 주기보다는 표피적인 인상을 전달하는 듯한 일상의 가벼움이 먼저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에서는 이를 ‘친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수령 색조각상은, 2016년 1월 완성된 청년운동사적관의 수령 색조각 군상으로 이어졌다(도 16). 2015년 9월 만수대창작사의 기획안을 보고 김정은이 수령 색조각 군상으로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sup>17)</sup>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들은 김정은의 청년 중시 사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청소년 학생들 속에 있는 수령들의 색조각상과 배경의 회화 작품이 결합 되도록 구성하였다. 수령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청년들 속에는 나이 어린 소년단원과 학원원아, 청년박사, 체육인, 인민군 군인의 모습

14) 오원국, 「색조각상에 깃든 불멸의 령도」 『조선예술』 (2015.5), 26쪽.

15) 위의 글, 27쪽.

16) 위의 글, 26쪽.

17) 오원국, 「불멸의 색조각상과 더불어 빛나는 령도업적」 『조선예술』 (2017.11), 13~14쪽.

형상. 청년, 당, 수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된 사회의 모습 나타내고자 한 구성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도 16〉 〈김일성 김정일 색조각상〉 청년운동사적관, 2016.1.



이러한 수령 색조각 군상의 모습은, 2019년 3월 6일 열린 제2차 전국당 초급선전일꾼대회 때 참가자들에게 보낸 김정은의 서한 “참신한 선전 선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가자”(2019.3.9. 조선중앙통신)에서 “위대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됩니다.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성심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북한에서 신적인 존재로서 ‘태양’화된 ‘수령’의 형상화에서도 기존의 강조된 ‘숭고’ 미학에서 ‘통속성’이 강화된 방식으로의 변화가 시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예술을 아방가르드적 전위요소를 중시하고 숭고함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는 그린버그와 같은 입장에서는 숭고와 키치를 대립적으로 파악

한다. ‘값싼 거짓 낭만과 삶의 역겨운 기만적 행복’으로 키치를 바라보는 시선을 숭고함을 추구하는 엘리트적 오만함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키치와 숭고는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키치 미술가인 제프 쿤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전시는 키치가 숭고함을 전복시켜 내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상이 숭고에서 키치로 변화된 것은 제프 쿤스의 맥락으로 치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의 경우, 숭고함에서 키치로의 변화가 키치의 공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책당국의 정책적 변화를 통해 교체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참신한’ 선전 선동이 필요한 시대임을 자각하고, 인민들의 절대적 충성을 획득하기 위해 수령을 신비화시키지 말라고 했던 김정은의 연설에 대한 답으로써 ‘숭엄함’ 대신 ‘키치’를 선택하였다고 판단된다.

## V. 시대적 미감의 변화와 통속성

북한에서 ‘통속성’ 개념은, 남한에서의 ‘저급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참다운 인민성’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특성이 되었다. 북한에서 ‘인민성’이라는 용어는 해방 직후부터 사용되었지만,<sup>18)</sup> 문화예술에서 주요한 단어로 ‘인민성’이 공식화된 것은 1950년대 후반 문화예술의 3대 원칙으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 제시되면서 부터이다.<sup>19)</sup> ‘인민’은 “국

18)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 (2009), 69-95쪽;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제』 (서울: 소화, 2009);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서울: 푸른역사, 2017).

가의 구성원이자 혁명성을 체현한 존재”이며<sup>20)</sup>, 따라서 ‘인민성’은 “인민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갖추어야 할 덕목인 ‘인민됨’과 ‘인민다움’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김정은의 ‘인민성’과 ‘통속성’ 강조는 물론 이러한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인민성과 통속성 논의의 연장선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변화 또한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예술창조사업에서의 인민성과 통속성은 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김정은의 교시는, “인민을 위해 수립되는 당정책이고 그러한 당정책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는 예술공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민성과 통속성은 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논리이다.<sup>22)</sup>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인민성, 통속성, 당성’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교시는 현재 북한문화예술계에서 “모든 창조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지침”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의 3대 원칙인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강조하는 것 대신 ‘인민성, 통속성, 당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속성’이라는 개념이 이전 시기에 없었던 개념은 아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미의 절대적 기준으로서 모든 사물 현상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데 따라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갈라진다. 이것은 인류미학사상을 가장 높은 단계에 올

19) 김정웅 외,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론-문예학3』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6).

20) 「세계청년학생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1951)」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521쪽.

21) 이하나, 「‘통속성’개념의 분화·분단과 문화평등주의」 『대동문화연구』 113 (2021), 671~707쪽.

22) 최룡남, 앞의 글, 14쪽.

려 놓은 사람 중심의 미학관, 주체의 미학관이 밝힌 미의 기준에 대한 전일적이고 완벽한 과학적 정식화이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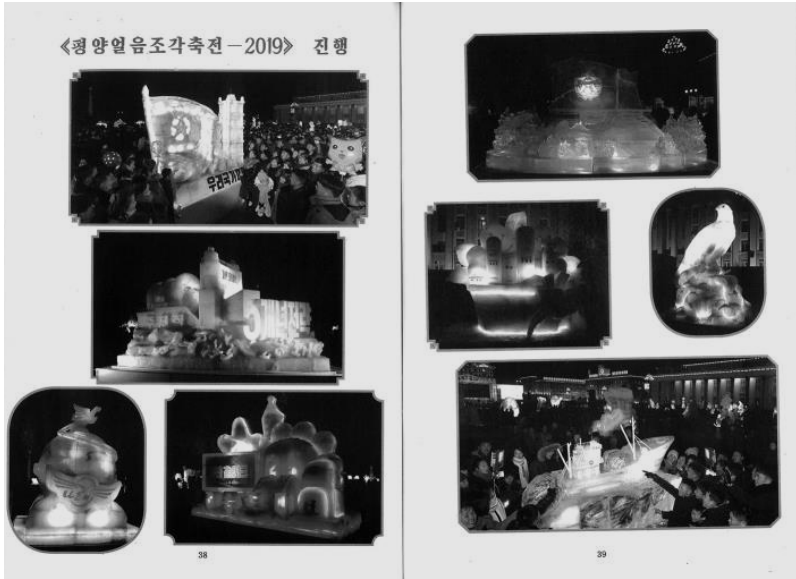
위 문장은 주체미학에서 ‘미의 절대적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김정은의 발언이다. 김정일 시대 주체미학에서 ‘미의 절대적 기준’은 당연히 사상성이었다. 주체 미학은, 어떠한 미학과 사상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대상물이라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또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학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따라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이 갈라진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민성과 통속성이 반영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는 것이 사람 중심의 미학관인 주체의 미학관의 전일적이고 완벽한 과학적 정식화”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성과 통속성은 당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김정은시기 ‘인민성’과 ‘통속성’은 그 이전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이와는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격상은 김정은 시대 강조하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슬로건과 연동되는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인민성’과 ‘통속성’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인민성’ 즉 인민이 좋아하는 미감이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술가의 미감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김정은의 대답은, “결국 미술가의 미감은 인민이 좋아하는 미감이여야 하며 인민의 미적 리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높이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시기 우리 인민의

23) 「우리 인민의 미감과 미술」 『조선예술』 (2019.4), 62쪽.

〈도 17〉 〈평양얼음조각축제-2019〉진행, 2019.3.



미적 감정을 옹계 파악하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그들의 시대적 미감에 자신들의 미감을 따라 세워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4)</sup>

이러한 발언은 인민들의 미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미술가들의 미감도 이러한 변화되는 인민들의 미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들의 통속 미학에 맞춰 감정은 시대에 들어와 정통적인 조각 축제와 다른 ‘얼음조각 축제’를 벌이는 행위, 특히 야간에 얼음조각 안에 조명을 장착하는 등의 변화에 민감해진 점도 이에 대한 반응으로 판단된다 (도 17).<sup>25)</sup> 2021년부터 행하여 지고 있는 ‘빛 축제’도 같은 맥락에서 벌여

24) 최룡남, 앞의 글, 14쪽.

25) “얼음조각은 재료적 특성으로 하여 색이 없고 맑고 투명하며 자연적인 재료와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빛축제는 판문점 선언 행사에서 사용된 미디어파사드 공연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학기술을 문화 예술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과, 변화하는 인민들의 미감에 적응한 형식이다.

## VI. 결론

김정은 시대 10년이 넘는 동안 북한 미술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연동되어 부각되고 있는 ‘인민성’과 ‘통속성’임을 분석해내었다. 김정은은 인민성과 통속성이 반영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는 것이, ‘주체 미학관의 전일적이고 완벽한 과학적 정식화’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인민성과 통속성을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인민들의 미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미술가들의 미감도 이러한 변화되는 인민들의 미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정치에서 통속성의 강화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숭엄한 수령상에서 웃고 있는 색조각

---

인공적인 불장식의 결합에 의해 작품의 주제사상적 내용과 조형예술적 품위를 높여줄뿐만 아니라 대중정서 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얼음 조각에서 기본조명은 조각의 윤곽형태를 뚜렷이 하면서 하나의 입체적 구성을 이루도록 하여 여기에 국부조명과 간접조명들이 다양한 효과로 작품의 매 구성요소들을 더욱 부각시켜 희한하고 황홀한 세계를 펼칠 수 있게 한다. ... 얼음을 파고 그 속에 조명을 심어주어 내부비침효과로 얼음조각의 형상적 매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다. ... 대중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예술형식의 하나로 되고 있다.” 문덕선, 「얼음조각에서 조명의 역할」 『조선예술』 (2018.6), 74쪽.

상으로의 변화처럼, 이전 시대와는 다른 감수성이다. 문인화를 복권해 내고 본질만을 함축적으로 드러낼 것을 강조했던 김정일 시대 미술문화와도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김정은이 초급당선전일꾼들에게 주문했듯이, 변화하는 인민들의 감수성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참신한’ 선전 선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북한미술계에서 이전 시대 높이 평가 받았던 작품형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미감의 작품들로 전면 교체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회화적인 필맛이 강한 일련의 작품들도 여전히 창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식을 이 시대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북한미술계가 정책적으로 부각해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던 것이고, 이 질문에 대답이 ‘통속성’의 강화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통속성’ 개념은 남한이 쓰는 어떠한 단어와 가장 가까울까, ‘통속성’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어떠한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개념의 분단사뿐만 아니라, 감성의 분단, 번역 개념의 여러 굴절 등 후속 연구를 통해 ‘통속성’에 대한 다면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접수: 2023년 10월 31일 / 심사: 2023년 12월 2일 / 게재 확정: 2023년 12월 6일



**【참고문헌】**

- 김정웅 외,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론-문예학3』,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6.
-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서울: 소화, 2009.
-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서울: 푸른역사, 2017.
- 김동훈, 「키치 개념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 키치와 송고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65집, 2011, 97~124쪽.
-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 2009, 69~95쪽.
- 김종영, 「포퓰리즘과 네거티브 전략의 수사적 고찰-나치당의 경우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5, 2008, 139~161쪽.
- 박상욱, 「나치 문화정책에서의 프로파간다-“기쁨을 통한 힘”(KdF)의 속성변화와 문화포스터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110호, 2011, 269~297쪽.
- 윤태원, 「독일 문화정책의 역사적 고찰」 『독일언어문학』 제78집, 2017.12, 157~186쪽.
- 이하나, 「통속성 개념의 분화-분단과 문화평등주의」 『대동문화연구』 11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21, 671~707쪽.
- 이현진·정새해, 「키치가 주는 안락함과 소외감을 통한 미적 경험-아브라함 몰르의 “키치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9권 5호, 2019, 381~394쪽.
- 정수경, 「아방가르드와 키치」 『철학과 현실』 88, 2011, 172~180쪽.
- 기자, 「우리 인민의 미감과 미술」 『조선예술』, 2019.4, 62쪽.
- 로익화, 「(수기) 수령님의 대리석상을 아주 잘 형상하였다시며」 『조선예술』, 2006.7, 6쪽.
- 사공일금, 「명작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조선예술』, 2017.2, 65~66쪽.
- 오원국, 「색조각상에 깃든 불멸의 령도」 『조선예술』, 2015.5, 26쪽.
- 오원국, 「불멸의 색조각상과 더불어 빛나는 령도업적」 『조선예술』, 2017.11, 13~14쪽.
- 유경훈,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잘 모시자 하시며」 『조선예술』, 2017.2, 16~17쪽.
- 최룡남, 「인민성과 통속성은 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선예술』 2017.3, 14쪽.

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김일성, 「세계청년학생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1951)」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521쪽.

## Cultural Politics and ‘Popularity’ in the Kim Jong-un Era

Park, Carey (National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 Abstract

In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art culture during the 10 years of the Kim Jong-un era, this study elucidates the prominence of ‘people’ and ‘popularity’ intertwined with the ‘people-first politics’. Kim Jong-un said that beauty is determined by the reflection of people and popularity in the work, asserting that this constitutes the scientifically formalized aesthetics of the Juche ideology. This highlights an elevation of people’s spirit and popularity to a dimension distinct from the era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At the same time, it emphasizes the sensitivity of artists to changes in the populace’s aesthetic preferences, as these preferences evolve over time. Such transformations are manifest in the reinforcement of popularity and kitsch sensitivity within cultural politics. This is exemplified by a shift in sensibilities, as seen in the transition from solemn portraits of leaders to smiling colored sculptures. This is markedly different from the art culture of the Kim Jong-il era, which emphasized the restoration of literary paintings and enigmatic portrayal of intrinsic essence. The key impetus for these changes appears to originate from Kim Jong-un’s mandate to propaganda artists, calling for “innovative” propaganda that can elicit unwavering loyalty amid evolving popular sentiments of the people.

Keywords: Kim Jong-un, Propaganda Agitation, People-First Politics, Popularity, Kitsch

**박계리 (Park, Carey)**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근현대미술사, 북한문화예술 및 남북사 회문화정책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미술의 역사와 전통』(2023), 『모더니티와 전통론』(대한민국학술원우수도서 선정, 2014), 『북한미술과 분단미술』(2019), “위기의 시대, 북한문예정책의 변화와 ‘웃음의 정치’”(2022), “나미비아 영웅릉과 북한 만수대창작사”(2021) 외 다수의 논저가 있다. ‘2024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자문위원, 한국미술이론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일반논문

## 1970년대 초 『漢陽』·『코리아評論』의 한반도 정세 인식과 통일론\*

신재준 (전주교대)

### 국문요약

이 글은 잡지 한양(漢陽)과 코리아평론(코리아評論)을 통해 1970년대 초, 데탕트 정세와 남북한 통일문제를 재일조선인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들의 통일 논의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한양은 단계론적 통일론을 경계하면서 사상과 주의를 초월한 민족의 지상과제이자 당위로서의 통일을 주장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닌 현실 인식이 투철한 통일론이었고, 재일조선인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담긴 통일론이기도 했다. 둘째, 코리아평론은 1950년대 이래 일관되게 중립화통일론을 견지했다. 그러나 데탕트 국면에 담긴 강대국들의 현상 유지 바람과 그로 인해 역설적으로 한반도 분할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민족의 주체적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코리아평론의 중립화통일론은 통일의 방식을 넘어 자세와 의지의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한양과 코리아평론은 공통적으로 통일 논의의 자유와 확대를 강조했다. 이 점은 한국 정치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2.202312.153>

\* 이 논문은 2023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공동연구: 한반도 정전체제의 형성·변동과 평화기획)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 또 게재에 앞서 2023년 11월 정전 70주년 기념 국사편찬위원회·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학술회의 토론 및 논문 심사를 통해 많은 비판과 조언을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동학 김명재(서울대 국사학과 박사 수료)에게도 감사드린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들의 통일론은 1970년대 일본에서 한국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한일 연대가 활성화되는 길목에 있었다.

주제어: 한양(漢陽), 코리아평론(코리아評論), 재일조선인, 데탕트, 한반도 통일론

## I. 서론

1970년대 초, 한반도에는 1953년 정전과 다음 해 제네바회담 이후 처음으로 미약하나마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이 움텄다. 남북한 정권 모두 평화통일을 이야기했고, 남북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접촉이 이뤄졌다. 이처럼 한반도 정전체제 형성 후 중요한 변동기였던 이 시기 남북관계 전환의 국면을 바다 건너 재일조선인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특히 남북한 ‘통일’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정전 이후 한국에서는 분단의 극복을 바라는 민중의 광범한 열망과 달리 조봉암·진보당이 평화통일을 주창한 1950년대 중후반, 그리고 1960년 4월혁명 이후 5·16 군사쿠데타 전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오랫동안 남북의 통일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기 어려웠다. 데탕트 국면을 거치면서 천관우, 장준하 등 소수의 지식인·언론인이 통일 담론을 꺼내 들었다.<sup>1)</sup> 그렇지만 정권의 억압과 견제로 인해 아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 천관우는 ‘복합국가론’, 장준하는 초기 원형적 형태의 ‘분단체제론’을 제기했다. 홍석률에 따르면 다수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통일 과업을 민족 통합만이 아닌, 민주화 또는 사회개혁과 결부시켜 사고했다. 홍석률, 『학계의 통일담론: 분단 문제 해결, 통일, 평화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서울: 통일교육원, 2021).

반면 한국과 비교해 재일조선인 사회는 상대적으로 한결 더 자유로운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적지 않다. 정전 후 처음 맞는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을 재일조선인들은 어떤 심정으로 응시했을까? 이들이 지면을 통해 활발히 개진한 남북관계와 통일론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은 한국의 통일론과 어떤 관계였을까? 이 글은 잡지 한양(漢陽)과 코리아평론(코리아評論)을 통해 재일조선인 사회가 남북관계 나아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일단을 엿보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재일조선인들이 간행한 잡지는 100여 종이 훌쩍 넘는다.<sup>2)</sup> 그 가운데서도 한양과 코리아평론은 각각 1962~84년, 1957~89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꾸준히 발행된 대표적인 잡지이다. 단순히 발행 기간뿐만 아니라 두 잡지 모두 한국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1970년대 초 데탕트 국면에서 남북한 통일문제에 관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했다. 7·4 공동성명의 영향으로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1973년 이후 『삼천리』, 『마당』과 같은 연대 중후반을 대표하는 주요 잡지들이 등장했다. 한양과 코리아평론은 이들보다 한 세대 앞선 잡지로서, 앞을 예측할 수 없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동시대 시각을 담고 있다.<sup>3)</sup> 더하여 민단과 총련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았던 것도 이들의 공통점이다.<sup>4)</sup>

2) 재일조선인 주요 잡지의 개요에 대해서는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편, 『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제 및 기사명 색인』 1~3 (서울: 박문사, 2018) 참고.

3) 참고로 1970년대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도 하나의 전환기였다. 즉 식민지기에 일본에 건너간 1세대가 한반도 소속감과 지향성이 강했다면, 해방 전후 일본에서 태어난 2세대가 1970년 전후 성인이 되면서는 소위 '재일(在日)'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정주지역으로서 일본과의 관계, 적응 문제가 재일조선인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삼천리·마당과 같은 잡지에서도 그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4) 두 잡지의 목차 및 전반적인 논조를 살펴봤을 때 이들은 특별히 어느 한 편에

본론에서는 먼저 시대적 배경으로서 데탕트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를 개괄할 것이다. 이어 한양과 코리아평론, 두 잡지가 각각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인식했고, 그것이 통일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들의 통일론을 관통하는 특징과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시기는 미 닉슨 정부 등장 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1969년부터 그러한 변화가 일단락을 맺는 1973년까지이다.<sup>5)</sup> 덧붙여 두 잡지의 통일 논의에는 단순한 통일론에 그치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 비판으로 나아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부분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통일론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고, 데탕트 시기 제일 조선인 사회의 동향을 조금이나마 엿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분단과 대립·갈등의 남북관계를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현상에 무감각한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사고와 감각이 당연한 게 맞는지 조금이나마 환기할 수 있길 희망한다.

## Ⅱ. 1970년대 초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1970년대 초, 세계적 차원의 데탕트(Detente) 국면은 냉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현실주의 외교(real politik)를 표방한 미 닉슨 정부는 베트남전쟁 평화협상을 통해 종전을 모색하는 한편, 소련과 군축협상을

---

기울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공통적으로 민족을 강조했다. 두 잡지의 중립성은 본론에서 서술하는 문인간첩단 사건(漢陽)과 민단·조총련 비판 기사(코리아評論)에서도 엿볼 수 있다.

5)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대화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1974년 이후 두 잡지가 관련 문제 논의를 어떻게 이어갔는지도 논의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벌여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체결했다(1972). 유럽에서도 서독의 이른바 동방정책에 따라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1972)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 냉전의 두 주역이었던 미소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 완화를 모색했고, 나름의 성과와 다른 국가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데탕트는 냉전체제의 이완, 나아가 균열 또는 종언으로까지 평가된다.<sup>6)</sup> 동아시아에서도 닉슨 독트린(1969)과 미중 관계 개선, 중국의 유엔 가입(1972), 일중 수교(1972) 등 각국의 외교 노선을 완전히 거스르는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불완전한 정전협정 체결 후 위태로운 대결 구도가 이어져 온 한반도도 이 같은 정세 변화와 무관할 수 없었다. 미 정부는 한국 측에 여러 경로로 남북대화 의사 타진 및 권유를 했고,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 김대중은 4대국에 의한 한반도 안전보장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를 제안했다. 이 같은 흐름은 남북적십자회담(1971.9)과 7·4 공동성명(1972),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대(對)공산권 외교관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박정희 대통령의 6·23선언(1973)으로 이어졌다.<sup>7)</sup>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20여 년 만의 일들이었다.

물론 이 같은 남북관계의 순풍은 오래 가지 않았고, 외려 역풍이 불기도 했다. 홍석률이 적절히 지적했듯, 남북의 일련의 대화는 실은 미중을 의식한 ‘결눈질’ 대화의 성격이 강했고, 그렇기에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다.<sup>8)</sup> 남과 북, 박정희와 김일성 정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유신체제와 유일체제라는 극히 경직된 체제로 옮겨감으로써 데탕트를 내부적으로 정

6) 지역 차원의 냉전의 양상은 균일하지 않을 것이다.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서울: 민음사, 2013;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서울: 사회평론, 2015) 등을 참고.

7) 김지형, 『데탕트와 남북관계』 (서울: 선인, 2008) 참고.

8)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파주: 창비, 2012).

권을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sup>9)</sup> 그럼에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1970년대 초는 중요한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최소한 남북 모두 서로를 대화 상대로 간주했고, 여러 층위의 접촉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논의들이 등장했다.

### Ⅲ. 1970~73년 잡지 『漢陽』

#### 1. 서지사항과 선행 연구

한양은 1962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창간된 종합 교양지 성격의 월간지이다. 1969년 8·9월호부터 격월간지로 전환되었고, 1984년 3·4월호로 중단될 때까지 통권 177호를 발행했다. 일본어를 사용한 코리아평론과 달리 한국어를 사용했다. 재일동포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삼았으나 한편으로는 딱히 그에 구애되지 않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독자들을 모두 포괄하려 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10)</sup> 총련 계열의 ‘조선어’ 매체를 제외하면 ‘한국어’를 표방한 잡지 중 가장 오래 지속되었고, 재일동포 및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잡지였다.<sup>11)</sup>

한양은 창간호부터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과 재일동포 사회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sup>12)</sup> 그를

9)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 1997).

10)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 1960년대 의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9집 (2006), 248쪽.

11)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위도』 (서울: 소명출판, 2021), 339쪽.

반영해 매호 십수 편의 기사와 논설, 수필·시·소설 등 창작문학이 게재되었는데, 논설/기사 주제는 대개 한국 소식과 한국의 전통(역사·문학·문화 등), 재일동포 사회 현황, 한일관계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걸쳤다. 또 시기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족’이란 키워드가 잡지 전반을 감돌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sup>13)</sup> 필진의 경우 한국 또는 해방 후 정치적 격변기에 도달한 재일 문인·작가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이 연구의 주된 분석 시기인 1970년대 초 논설의 경우 필명으로 보이는 이들이 많다.<sup>14)</sup>

한양사는 1964년 5월 서울에 한국지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한양을 정식으로 유통했다. 그러나 1974년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수입이 금지되었다.<sup>15)</sup>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국내에서는 1973~74년 이후

12) 「편집후기」(1962.3, 1);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254쪽에서 재인용.

13) 1960년대 한양은 서구식 근대화 담론을 경계하고 대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한 주체적 근대화를 강조했다. 고명철, 위의 논문, 255~258쪽.

14) 창간호에서 한양은 “대학원을 나와 각종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선비들”과 “숨은 식자 문화인”들에게 논단의 터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편집후기」(1962.3, 1); 고명철, 위의 논문, 254쪽. 재일동포로 漢陽의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았던 김인재를 인터뷰한 하상일에 따르면 시·소설·비평 등을 썼던 고정 필진 상당수는 필명이며 국내 문인일 가능성이 있다.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47집 (2007), 397쪽.

15)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1월 국군 보안사가 임현영, 이호철 등 문인 5명을 조총련 계열 위장 잡지인 한양에 글을 기고하고 총련계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사건이다. 관련자들이 재심 청구하여 2018년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에 대해서는 임현영, 「74년 문인간첩단 사건의 실상」 『역사비평』 13호 (1990); 한승헌변호사변론사건실록간행위원회, 『한승헌변호사 변론사건실록』 2 (파주: 범우사, 2006), ‘한양지 관련 문인 사건’ 부분 참고. 사실 漢陽은 1960년대에 이미 당국의 의심을 받고, 유통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7월 공보부가 중앙정보부에 ‘재일교포’ 발행 정기간행물(14종) 국내 지사들에 대한 불온성 조사를 의뢰했을 때 漢陽도 포함되었었다.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위도』, 361~362쪽.

발행물을 좀처럼 구하기 어렵다. 그간 한양 연구가 주로 문학 쪽에서 1960년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그런 사정의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sup>16)</sup> 그러나 한양의 이념과 방향성이 당대 한국의 구체적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진보적 지성의 실천을 꾸준히 고민했다는 점에서 1960년대 한국 지성사의 맥락에서 조명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sup>17)</sup> 이 글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에서 분석 범위를 1970년대 초로 확장해 한양의 민족/통일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해 최근 조은애는 한양의 좌담회·수필·문학 기사들을 통해 한양 텍스트의 시기별 관심사를 추적하고 그것을 민단 조직의 상황과 관련해 해석한 바 있다.<sup>18)</sup> 그에 따르면 한양의 관심사는 창간 직후 ‘한일 간의 이동과 문화교류’, 1966~70년 ‘재일조선인 사회 내부의 운동과 계몽’, 1971년 9월 이후 ‘통일론’으로 변화했다. 이는 1970년대 초 한양 지면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드문 연구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조은애가 ‘재일’(내부)에서 ‘남북’(외부)으로 한양의 관심사 이동을 강조했다면, 이 글은 한양이 민족 자주·주체성을 강조하던 데서 민족의 주체적인 통일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해한다. 또 조은애는 한양 텍스트 전환의 흐름을 살펴본 것뿐 통일론 그 자체에 주목해 그것이 어떤 특징과 시의성을 지니는

16) 한양 선행 연구로는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하상일, 「1960~80년대 재일 종합문예지 『한양』과 한국문학의 교섭」 『한민족문화연구』 77집 (2022); 손남훈, 「『한양』 게재 시편의 변화 과정 연구」 『한국문학논총』 70집 (2015) 외 다수. 조은애는 1960년대 한양 연구를 ①한양 게재 비평 담론에 관한 연구, ②한양 게재 소설 및 수필 작품에 관한 연구, ③한양 게재 시 작품에 관한 연구, ④한양 게재 문학작품에 관한 개괄적 연구, 크게 넷으로 구분했다. 조은애, 위의 책, 334~335쪽.

17) 고명철, 위의 논문, 250~251쪽.

18)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위도』, 356~363쪽.

지까지 분석하진 않았다. 그 공백 지점을 조금이나마 메워보고자 한다.

## 2. 1970~73년 『漢陽』의 한반도 정세 인식과 통일론

1968년부터 1973년 7월까지 한양은 남북관계 또는 통일문제 관련 특집을 여섯 번이나 게재하며 한반도 정세에 관심을 보였다.<sup>19)</sup> 여러 논자가 한양 지면을 통해 전개한 일련의 논의에는 눈여겨볼 만한 지점들이 여럿 있다.

먼저 한양의 당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인식부터 짚어둘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양은 오랜 적대국이었던 미중 대화와 같은 긴장 완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1971년 10월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유엔 가입안이 가결된 사건은 별도 기사로 다룰 만큼 큰 관심을 나타냈다.<sup>20)</sup> 알바니아 결의안이 76:35라는 큰 차이로 가결된 것, 그 과정에서 각국의 동향, 대만의 대표권을 존속시키고자 했던 미일의 결의안 자동 부결이 일본 국내 정치에 미친 후폭풍 등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기사에서 한양은 “세계는 어느결에 풍향이 바뀌고 분위기가 ‘괘뭇할 만큼’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국제 조류는 “‘민족이익’이 이데올로기에 선행”하는 정세, 따라서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제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양은 이와 같은

19) 특집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970.8·9호(통일への 路), 1971.10·11호(통일への 熱願), 1972.2·3호(민족의 絶규 / 우리의 路로 가자), 1972.8·9호(민족통일의 역사적 전기 / 남북공동성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통일을 거론한 첫 번째 특집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소위 8·15 평화통일 구상을 밝힌 때와 시기적으로 겹친다. 다만 이 특집에서 8·15 구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이후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개시, 1972년 7·4 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국면마다 특집 기사가 실렸다.

20) 「중공의 국련 가입과 그 파문」(1972.1, 104, 李永紋, 27~32쪽).

“현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거기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1)</sup>

그런데 후술하는 코리아평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한양의 지면에서는 데탕트 정세가 부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을 원초적인 것으로, 통일을 당위적인 명제로 여기는 경향과 관련 있다. 즉 통일을 시류와 무관하게 달성해야 할 절대적 가치이자 목표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점은 한양 통일론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한양은 한반도 통일을 “분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피맺힌 불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오늘의 절박한 문제”이자 “민족의 전 운명과 직결되는 민족의 사활적 문제”로 여겼다.<sup>22)</sup> 또 “이제부터는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살아갈 수 없다”고 할 때, 통일은 생사의 문제였다.<sup>23)</sup> 1972년 7·4 공동성명에 대해 “역사의 그 무쇠 같은 필연성 앞에 옷깃이 여며지는 그런 엄숙한 감회”를 느끼며, “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감격한 것도 동일한 인식의 발로였다.<sup>24)</sup>

이 같은 한양의 통일 이해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변화의 국면을 다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받아들였던, 또는 남북대화의 원론적 필요성과 통일을 구분했던 한국 정부나 언론의 일반적 반응과는 다르다. 한국 사회의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당위로서의 통일과 공산주의 적대국과 맞서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정치 체제 간 결합으로서의 통일, 크게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담아왔다면<sup>25)</sup> 한양

21) 「8·15의 원점에 서서」(1970.8·9, 96, 南尙哲), 28~29쪽; 「중공의 국련 가입과 그 파문(1972.1, 104, 李永紋), 32쪽; 「(특집 민족의 절규) 38장벽」(1972.2·3, 105, 68~77쪽, 李俊錫), 73쪽.

22) 「(특집 통일에의 길) 統論議의 廣場을 마련하자」(1970.8·9, 96, 金宗晩), 33쪽.

23) 「8·15의 원점에 서서」(1970.8·9, 96, 南尙哲), 27쪽. 직접 인용한 부분은 이 글의 필자가 『신동아』(1970.4) ‘4월혁명 10주년’ 기념좌담회에 실린 서울대학생 송두진의 발언을 轉載한 것이다.

24) 「(특집 민족통일의 역사적 전기) 민족적 대단결은 피의 요구」(1972.8·9, 108, 咸元泰), 29쪽.

의 통일론은 전자의 측면이 매우 짙다. 그 자체로 “민족 분열의 고통을 가장 혹심하게 받아”<sup>26)</sup> 왔던 재일조선인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적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한양의 기사들은 통일을 절대시하는 입장의 연장에서 특별한 방법론을 앞세우기보다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민족 단결을 호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한양도 “민족, 국토만 한 덩어리로 되면 통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남북이 서로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로 대극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를 무시하고 통일될 리”가 없다는 것, 또 “그 배후에 있는 국제 세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한양은 특별한 묘안을 내놓기보다 먼저 남북한 모두 불신을 해소하고 믿음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sup>27)</sup> 한양에게 제도와 이념의 차이는 “뛰어넘을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한양은 주의를 따지면서 대화의 문을 닫거나 이념을 내세우고 접촉을 피하는 정치풍토를 반민족적·반시대적인 것으로 규정했다.<sup>28)</sup>

“사상과 주의에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적 입장에서 단결을 이룩”하자거나 “우리 겨레 사이에 여러모로 서로 접촉하고 마주 앉게 된다면 우선 핏줄이 통하기 마련이고, 여기에서 통일에의 실마리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얼핏 감정적으로 들리기도 한다.<sup>29)</sup> 단 한

25) 강원택, 「통일담론의 전개 -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서울: 통일교육원, 2021), 13쪽.

26) 「(특집 남북공동성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조국통일의 새 기원」(1972.8·9, 108) 중 ‘통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高秉哲), 68쪽.

27) 「좌담회 8·15 25주년」(1970.8·9, 96, 金正柱·張曉·劉振植·金兩基·趙活俊), 96~99쪽.

28) 「민족의 광장으로」(1972.6·7, 107, 金仁在), 4~5쪽.

29) 「(특집 통일에의 길) 現實의인 方途가 摸索되어야 한다」(1970.8·9, 96, 李容

양이 이처럼 얼핏 공허하게 느껴질 만큼 통일의 당위성·절대성을 강조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당시 한국 정부 및 사회 일각에 번졌던 통일문제에 관한 신중한 태도 또는 단계적 접근에 대해 한양이 거부감과 경계심을 보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주지하듯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선건설’만을 강조하며 민간의 통일 논의와 통일운동을 철저히 억제했다.<sup>30)</sup> 1970년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를 완료하는 연대라고 밝힌 데 이어, 광복절 기념사에서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해 논의의 물꼬를 텃을 뿐이다. 그러나 8·15 구상은 구체적 제안을 담았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북에 대화의 전제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감마저 없지 않았다. 또 1971년 김종필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반공체제 유지 및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 당국의 태도도 공식적 입장과는 온도 차이가 있었다.<sup>31)</sup>

한양은 한국의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날이 갈수록 통일에 대한 신중론과 경계론이 더해가고 있”으며, 정부가 “통일은 요원하며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상을 국민의 심저(心底)에 더 많이 심어 주는데 급급하다는 감”을 준다고 우려했다.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이 지지부진하자 현 상황은 통일을 목표로 하기보다 “미중 간의 해빙 무드에 따라 남북의 분단 대립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분단이 빚어내는 민족적 고통을

寬), 35~36쪽; 『특집 민족통일의 역사적 전기』 민족적 대단결은 피의 요구(1972.8·9, 108, 咸元泰), 33쪽.

30)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국회에서는 1966년 서민호 의원의 남북교류 주장, 같은 해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와 다음 해 『통일백서』 발행에서 보듯 최소한의 통일 논의와 모색이 이어졌다. 1969년 국토통일원 발족은 국회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였다.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146~147쪽.

31) 김종필은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도 북이 회담에 성의 있게 임하지 않는 등의 난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흥분은 금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1971년 8월 21일.



약간 감소시킬 방법을 찾아보자는 막연한 의미의 대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sup>32)</sup> 적십자회담에 대한 한양의 바람은 분명했다. 즉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 우리의 숙원인 민족통일로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회담을) 꼭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3)</sup>

특히 한양은 통일론의 범위를 제한하고, 국민은 그저 그것을 수락하고 따라오게 함으로써 통일 논의를 통제하고자 하는 소위 ‘통일 논의의 단계설’ 구상을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1971년 9월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 시작을 앞두고 한국 고위 당국자들은 일련의 단계론을 내놓았다.<sup>34)</sup> 그러한 단계론적 접근은 “통일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국민 대중을 배제함으로써 통일 논의 그 자체를 공담(空談)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였다. 한양은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

32) 「(특집 민족의 절규) 자주나 예측이나」(1972.2·3, 105, 文哲鎬), 40~41쪽. 漢陽은 “남북의 문호 개방이 이산된 혈육들과 겨레들에게 극적인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고, 상호 실정을 파악하게 하며, 통일에의 전진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긍정 면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사회의 소란과 불안 조성을 노리게 할 것이라는 등의 가상적 부작용”을 더 강조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경향도 문제로 여겼다. 기실 남북대화 국면에서 남한 신문들은 대부분 북의 입장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만 주력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각 언론사에 지나치게 적대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231~232쪽.

33) 「남북 대화에의 열원」(1972.1, 104, 南尙哲), 37~41쪽.

34) 1971년 9월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남북한 문제는 ①인도적 문제, ②비정치적 문제, ③정치적 문제의 3단계를 거쳐 해결해야 하며, 인도적 문제를 제외하곤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기한다는 실증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71년 9월 1일. 이어 두어 달 뒤 김영선 국토통일원 장관은 통일 논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키 위해 ①통일정책과 비전 확립, ②정부 주도로 이 비전에 대한 논의, ③학계·언론계에 통일문제연구소 설치해 국민계몽활동 추진, ④각종 민간사회단체 주도 아래 통일 논의 활발히 전개, 이상 4단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 국민이 통일 논의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4단계였다. 『경향신문』 1971년 11월 1일. 요컨대 정부는 남북대화의 수준과 국민들의 통일 논의 참여 수준을 모두 단계별로 제한하고자 했다.

와 비정치적 문제의 선결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단계적’ 시간을 얻어 ‘실력배양’하고 ‘대결태세’를 갖춘다는” 논리로 그 밑바닥에는 북에 대한 불신과 대결 의식이 깊숙이 숨어 있다고 판단했다.<sup>35)</sup>

한양이 민족과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모두 주체적 태도로 서로 통일 문제에 대하여 노력하고, 의제나 범위의 제약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후술하는 코리아평론과 마찬가지로 한양 역시 은연중 데탕트 정세 하 남북대화가 통일이라는 목표가 배제된 관성적인 대화로 변하고, 그에 따라 오히려 분단이 고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볼 수 있다. 한양에게 “후일을 기약하는 통일론자는 벌써 그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sup>36)</sup>

물론 한양이 방법에 관한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편집인 김인재는 ‘평화조약(+군축) → 교류’ 2단계 통일론이라 할 만한 구상을 제시했다.<sup>37)</sup> 김인재는 7·4 공동성명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로 곧 한반도 긴장 국면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며, 항구적인 보장이 없는 한 얼마든지 열전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긴장 완화나 명실상부한 자주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방력 강화와 남북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에게 ‘역리(逆理)’였다. 비정상 상태에 종말을 고하고 7·4 성명의 원칙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순리(順理)’는 남북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쌍방 모두 무력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었다.<sup>38)</sup>

35) 「좌담회 8·15 25주년」(1970.8·9, 96,金正柱·張曉·劉振植·金兩基·趙活俊), 96~99쪽; 「통일에로의 역사적 전환점의 모색」(1972.6·7, 107, 鄭東旭), 11쪽.

36) 「민족의 광장으로」(1972.6·7, 107, 金仁在), 2~5쪽.

37) 「(특집 민족통일의 역사적 전기) 평화통일과 남북협상」(1972.8·9, 108, 金仁在), 20~28쪽.

38) 다른 논자들도 군비 축소, 휴전선 평화선화 또는 한반도의 평화 보장을 위한 특별한 대책, 남북 군부 간의 구체적 협약 체결 등을 주장했다. 「(특집 민족통

평화조약 체결과 군축은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다.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민족적 화목을 도모하며 … 동족을 적으로 대하는 관념을 깨끗이 버리는 것은 물론, 남북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아는 문제”, 즉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sup>39)</sup> 한양의 필진들은 여러 지면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경제 분야에서는 상품 교역과 공동시장(남북 각 도시) 설치, 공업간 협조와 분업관계 형성, 합영 등이 거론되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영화나 예술작품 교환, 예술단 교환공연, 남북 공동 체육경기, 국제경기 단일팀 출전 등이 가능할 것으로 꼽혔고, 학계에서도 자료와 연구논문 교환, 학술연구 발표모임, 공동연구사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sup>40)</sup> 언론 분야에서는 기자들이 남북을 오가며 자유롭게 취재·보도, 방송TV·신문·잡지·기타 출판물의 상호 교환·접근 방안이 거론되었다. 그 외에 과학 및 의학, 교육 분야의 협력안도 있었다.<sup>41)</sup> 이 같은 교류는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널리 하면 널리 할수록 좋다”고 여겨졌다.<sup>42)</sup>

한양 통일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외세 배격을 매우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여기서는 유엔과 미국·주한미군이 현실적인 배격 대상이 되었

일의 역사적 전기) 남북공동성명과 우리의 자세」(1972.8·9, 108, 金承萬), 49쪽.

39) 「남북은 서로 알아야 한다」(1973.2·3, 111, 金承萬), 5쪽.

40) 특히 한양은 우리말의 통일적 발전 대책을 토론하고 민족어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41) 과학/의학의 경우 과학자간 협조와 공동연구, 공동 전염병예방대책, 교육은 남북 명승고적과 자연지리를 연구하기 위한 수학여행과 관광여행 등이 언급되었다. 「(특집 민족통일의 역사적 전기) 남북교류의 당위성과 현실적 과제」(1972.8·9, 108, 成元圭), 41~42쪽; 「남북은 서로 알아야 한다」(1973.2·3, 111, 金承萬), 6~7쪽.

42) 「(특집 민족통일의 역사적 전기) 남북교류의 당위성과 현실적 과제」(1972.8·9, 108, 成元圭), 41쪽.

다. 유엔의 경우 기실 통일문제에서 유엔의 권위와 역할 인정 여부가 남북한 및 관계국 간의 오랜 대립점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는 1970년 8·15 평화통일 구상에서 박정희가 통일 논의의 전제로 제시한 조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양은 유엔이 “범국제적인 평화기구”요, “세계 주권적 전능을 가진 국제기구”이자 “한국 문제 해결에 의무를 지닌 기구”이기 때문에 외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외세의 개념 자체를 모호하게 하려는 궤변”으로 일축했다. “민족내부세력이 아닌 민족 밖의 세력이면 그것이 개별적 나라이건, 국제기구이건, 또는 그것에 속한 것이건, 다 외세”라는 게 한양의 판단이었다.<sup>43)</sup>

유엔이 외세라면 유엔에 의한 통일 역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한양은 유엔이 통일문제를 다뤘던 것은 “미국의 극동정책상 필요”했기 때문으로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의는 결국 미국 정부의 의지”에 불과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나아가 “유엔은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일해 온 것이 아”닌, 오히려 “27년 동안 분열을 지속시킨 역할”을 해왔을 뿐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에게 “유엔 감시 하의 선거면 벌써 타율 통일”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민족적 양심, 자존심을 저버”리는 것일 뿐이었다.<sup>44)</sup>

유엔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미국과 주한미군으로 연결된다. 미 닉슨 정부에서 불거졌던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은 한국의 강력한 반발과 일련의 회담 끝에 1970년 한국군 현대화계획(및 미군 감축 중단)으로 후퇴 또는 변용되었다. 또 닉슨 정부는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밝히면서 “북한

43) 「(특집 민족통일의 역사적 전기) 민족통일의 자주 대강」(1972.8·9, 108, 金泉錫), 12~19쪽; 「타력 통일론을駁함 - ‘국련문제’를 중심으로」(1973.1, 110, 鄭東旭), 18~24쪽.

44) 위의 글. 1956년 5·15 대선과 1960년 3·15 대선을 지켜본 유엔 한국통일부흥 위원단(UNCURK)이 이 선거들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평가하며 연례 보고를 통하여 유엔에 보고하는 데 그쳤던 역사적 사실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을 고려에 두면서 ‘남한에 창조적 자극을 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리 민족의 분열을 지속시키고 민족적 알력과 불신·대립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비쳤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이었다. 한양은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는 주장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외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나 한양은 이들이 명목만 유엔군일 뿐 실체는 미군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sup>45)</sup>

이처럼 유엔과 미국을 외세로 규정하고, 통일문제에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한양의 입장은 짐짓 북한의 입장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 당시 편집인 김인재 등 한양 관계자들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며, 어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한양이 조총련 계열 잡지라는 정부 당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단의 원조를 받았던 잡지임을 강조했다.<sup>46)</sup> 이를 고려하면 외세 배격 주장은 한양이 창간 후부터 일관되게 고수한 자주 또는 민족 주체성 강조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sup>47)</sup> 한양이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내세운 7·4 성명이 발표되자 적극적인 찬동의 뜻을 표했던 것도 이를 입증한다. 특히 한양은 자주 원칙을 “자주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천하에 떨치며 통일 위업의 실현에서 근본의 근본으로 되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통일운동을 불패의 궤도 위에 올려세워 준 것”으로까지 상찬했다.<sup>48)</sup>

한양의 ‘자주’ 강조는 대(對)미일 중심의 경제/군사 협력에 대한 경계

45) 위의 글.

46)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위도』, 339쪽.

47) 이와 관련해 손남훈, 『『민족의 존엄』에 나타난 민족 주체성 담론과 정치 비판의 논리』 『한민족문화연구』 80집 (2022) 참고.

48) 「(특집 민족통일의 역사적 전기) 민족통일의 자주 대강」(1972.8·9, 108, 金泉錫), 12쪽.

로 나아간다. 한양은 경제/군사 협력은 통일문제와 상관없고 오히려 통일을 위해 국력을 배양하는 일이라는 일부의 인식을 비판하며, 미일의 경제와 군사력에 의존하게 되면 정치외교면에서도 그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고, 자연 통일문제에 임할 때도 자주적 자세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sup>49)</sup> 이 같은 논지는 7·4 성명 이전부터 일관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외세의존’과 ‘사대굴종’의 역사를 우리 민족사의 특징으로 보는 시각의 연장이다.<sup>50)</sup>

그로 인해 한양은 특히 일본과 한일관계를 한층 더 경계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수교 후 소위 한일협정관계에 대한 인식은 인상적이다.<sup>51)</sup> 즉 한양은 1965년 이후 약 7년여의 기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자본주의로 인해서 생긴 수난의 역사가 되풀이”된 시기이자 “한일협정의 미명 밑에 일본의 대한진출이란 일방적 성격으로 일관”한 시기로 보았다. 더욱 한양의 시선에 따르면 한일관계는 1969~1970년을 고비로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던 데서 직접 투자의 시기로 옮겨가고 있었고, 이는 다시 그에 상응하는 정치·군사관계의 긴밀화를 가져왔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시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통일문제 해결 도상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양은 “자주적인 민족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려는 엄숙한 시점에서 기왕의 한일관계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한양은 사상과 주의를 초월한 민족의 지상과제이자 당위로서의 통일을 주장했다. 긴장 완화의 데탕트 정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으로 통일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통일을 국제정세와 무관하게 달성해야 할 목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족을 부르짖

49) 「타력 통일론을駁함 - ‘국련문제’를 중심으로」(1973.1, 110, 鄭東旭), 23~24쪽.

50) 「우리의 길을 찾자」(1970.8·9, 96, 咸元泰).

51) 「한일협력의 새로운 반성」(1972.10·11, 109, 吳允植), 50~56쪽.

는 한양의 모습은 얼핏 이상주의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남북대화와 통일을 구분하는 단계론적 인식을 경계한 것이란 점에서 오히려 다른 무엇보다 현실 인식이 투철한 통일론이었다. 또 해방 이후에도 국적이 모호한 이방인으로 지내야 했던 재일조선인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담긴 통일론이기도 했다.

#### IV. 1970~73년 잡지 『코리아評論』

##### 1. 서지사항과 선행 연구

코리아평론은 1957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창간되었다. 월간지로서 1989년 6월 통권 324호로 중단될 때까지 약 30년 넘게 간행되었다. 잡지 이름이 보여주듯 남북한과 한일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관한 보도와 평론을 전문적으로 게재했고, 시·소설 등 문학작품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한양이 한국의 문학·역사 등 민족 전통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상대적으로 코리아평론은 국제정치 평론지의 성격이 더 짙다.

잡지 발행 주체는 중립화통일론으로 잘 알려진 언론인 김삼규(金三奎)가 도쿄에서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이다. 김삼규는 거의 매호 권두언을 직접 썼을 만큼 코리아평론의 간행에 정력을 기울였다. 김삼규는 1908년 전남 영암 출신으로 1921년 일본에 건너가 1931년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독문과를 졸업했다. 무산자사<sup>52)</sup> 동인 및 위원장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가

<sup>52)</sup> 조선공산당 재건 임무를 가졌던 김두용(金斗鎔)·이북만(李北滿) 등에 의해 1929년 일본 도쿄에서 조직된 사회주의 계열의 출판사이자 사회운동단체.

담했고,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때 영암동경유학생회 위원장으로 격려문을 발송했다가 유치된 것을 시작으로 식민지기 두 번의 유치 생활을 더 겪었다. 1940년 귀국해 해방 후 동아일보 편집국장 겸 주필로 지내다 전쟁 중이던 1951년 8년 일본으로 망명했다.<sup>53)</sup>

김삼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무렵부터 여러 지면에 중립화통일론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미·소·중·일이 한국의 영토와 독립을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화를 전제조건으로, 남북 정권을 모두 배제하고 유엔 또는 중립국 감시 총선으로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sup>54)</sup>

그는 한국에서 4월혁명이 발생하자 1960년 6월 귀국해 한반도 분단문제 해결에 중립화가 갖는 유효성·타당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때에도 기본적인 입장은 1950년대와 같았다. 즉 그는 미소가 한반도에서 세력권 투쟁을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어느 한 편에 소속되어 자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분단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군사적 목적에서 빚어진 세력권 투쟁이었고,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 통일문제의 본질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영세중립화하여 군사적으로 어느 한 편에 소속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따라서 관련 국가 회의에서 한국의 중립화를 먼저 보장하고, 중립화를 전제로 유엔에서 지정한 중립국 감시 총선거를 통해 통일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sup>55)</sup>

53) 言論人金三奎刊行委員會 編, 『言論人 金三奎』(川崎: 『言論人金三奎』刊行委員會, 1989), 15~37쪽, 264~267쪽.

54) 강광식, 「중립화 통일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적용」 『사회과학』 30권 1호 (1990), 46~47쪽.

55) 홍석률, 「4월민주항쟁기 중립화통일론」 『역사비평』 10호 (1993), 69 및 85쪽; 홍석률, 「중립화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 12호 (2004), 56쪽;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 1953-196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단 이와 같은 김삼규 통일론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1950년대와 1960년 4월혁명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선행 연구들이 정리한 김삼규의 통일론이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초에도 그대로였을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진 않았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코리아평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코리아評論』의 한반도 정세 인식과 통일론

이 시기 코리아평론에는 베트남과 오키나와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 한국 정정(政情), 한일/북일 경제관계, 일본의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재일동포 거주환경 등을 주제로 한 기사가 주로 실렸다. 통일문제도 그중 하나였다. 김삼규를 비롯해 여러 논자가 그에 대한 논지를 전개했다.<sup>56)</sup>

김삼규와 코리아평론이 이전부터 줄곧 견지해 온 중립화통일론은 이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특히 분단의 근원을 미소 냉전적 이해 대립으로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그대로였다. 그러한 시각에서는 자연 미소의 이해관계 또는 세력권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 즉 중립화가 통일 방안이자 대전제가 된다. 한반도를 무력으로 어느 한 편에 서게끔 하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한국전쟁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었다. 정전체제의 장기 지속은 곧 미소가 분할의 현상 유지를 택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코리아평론은 민족의 자주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동서 어느 세력권에도 포섭되지 않는 통일 조선의 모습은 중립국이 되는 것뿐이라고 역설했다.<sup>57)</sup>

<sup>56)</sup> 본고는 코리아평론에 게재된 김삼규의 권두언을 중심으로 일부 다른 필진의 글도 활용하였다. 앞의 漢陽과 같이 코리아評論의 통일론으로 서술하였으나 사실상 김삼규의 통일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sup>57)</sup> 「アジアの平和共存と統一朝鮮の中立化」(1971.7, 123, 金三奎), 2-3쪽.

그러나 이 시기 코리아평론의 중립화통일론에는 나름의 변화 지점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데탕트 인식과 관련 있었다. 코리아평론은 당대를 “미소 냉전체제가 최종적으로 붕괴하고 아시아는 다극적 평화공존 하 정치경제적 경쟁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는 “거대한 전환기”<sup>58)</sup>,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제국 모두 중공과 관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아시아 신질서=평화공존의 시대”, “이데올로기 종언의 시대”<sup>59)</sup>로 인식했다.

따라서 미소 냉전의 부산물로 성립한 남북한 정권이 이제는 냉전적 대립을 계속할 이유를 상실했고, 남북관계도 이런 추세를 따라 한다는 게 코리아평론의 입장이었다. 더욱이 한국전쟁 때와 달리 북중관계가 매우 냉각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박정희 정권 홀로 중국 봉쇄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 아니라 김일성 정권에 대항하는 측면에서도 현명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sup>60)</sup> 요컨대 한양과 비교해 코리아평론은 미 닉슨 정부 이후의 국제 정세 변화를 통일 실현의 호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리아평론이 데탕트 정세를 그저 낙관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강대국들이 서로 국익을 추구하는 대국주의라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대국주의는 “대국 간 거래로 소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것”, 또는 국가 간 ‘합중연횡’을 뜻했다. 코리아평론은 1969년 11월 미일정상회담에서 닉슨-사토 성명의 소위 한국 조항<sup>61)</sup>을 예로 들며 이를 “미국은 닉슨 독트린으로 한국에서

58) 「朴正熙大統領と金日成首相への公開状」(1972.5, 132, 金三奎), 2쪽.

59) 「第二の民族解放」(1970.3, 108, 金三奎), 2~3쪽.

60) 「政權の平和的移行を」(1969.4, 97, 金三奎), 2~3쪽; 「第二の民族解放」(1970.3, 108, 金三奎), 3쪽.

61) 한반도 긴장 상태를 언급한 성명 4조 중 “사토 수상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긴요하다고 말했다.”는 문구. 사실 ‘한국 조항’은 미일 오키나와 반환 교섭에 위기의식

조만간 철수하고, 뒤는 일본에 맡기려” “미일이 마음대로 한국을 일본의 방위권에 포함”해 “그것으로 분할 유지를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국민 머리 위에서 일미가 마음대로 거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미국은 다시 “일본·한국·대만 머리 위에서 중국과 거래”하고 있었다. 코리아평론은 한반도 문제가 미중 대화의 중요한 의제의 하나일 거라고 확신했다.<sup>62)</sup>

코리아평론은 데탕트가 실은 강대국의 대국주의 발현이라는 관찰을 통해 아시아 긴장 완화가 한반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현상 고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그에 따르면 미·소·일·중 4국이 한반도 전쟁 재발을 바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통일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의 평화공존을 위해 분단 상태를 동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다극적 세력균형체제의 형성을 기도하는 강대국들이 남북한 경쟁을 이용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분할을 조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었다.<sup>63)</sup>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리아평론이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

---

을 느끼며 협의를 요청한 한국과 그것을 내정간섭으로 간주, 미일의 문제로 다루고자 한 일본의 상반된 입장을 미국이 조정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崔慶原, 『冷戰期日韓安全保障關係の形成』(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4), 84~88쪽 참고.

62) 코리아평론은 1971년 7월 유엔군 대표 로저스가 유엔군 수석대표를 한국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것, 거의 같은 시기에 군사정전위원회(MAC) 중국 대표가 약 5년 만에 MAC에 복귀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南北の對話と交流」(1971.10, 126, 金三奎), 2~3쪽. 기실 이 같은 분석은 정확한 것이었다. 1971년 7월 9-11일 베이징을 방문한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회담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키신저의 2차 방중, 1972년 2월 닉슨 방중까지 일련의 미중 최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문제를 긴밀히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는 점차 강대국 간 국제적 분쟁이 아닌 남북한의 문제로 변해갔다. 이에 대해서는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2장과 3장 참고.

63) 「高まる統一論議—南北話合いの条件」(1970.12, 117, 金三奎), 2~3쪽; 「在日同胞

시한 것은 바로 민족의 주체적 자주성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관련해 이 시기 코리아평론은 중립화가 사상의 중립이나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사상·신념·정치적 입장의 상이함은 원래 각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도 관여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그것은 자유여야 했다. 중립은 타국의 국가적 이해관계로부터 중립, 즉 그것에 연루되지 않도록 중립을 고수해 자신의 자주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다. 코리아평론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고, 정당한 선린우호의 길을 확립하는 자세가 바로 중립화통일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sup>64)</sup>

이처럼 코리아평론이 중립화의 의미를 재삼 부언한 것은 일견 중립화가 이데올로기의 중립이라는 세간의 오해와 비난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코리아평론이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중립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전까지의 통일론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홍석률은 김삼규와 재미학자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을 비교하면서 분단의 근본 원인을 미소 대립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결책으로 인접국과 유엔이 보장하는 영세중립화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본골격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단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는데, 김용중이 “한국 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남북협상도 함께 고려했다면 김삼규는 통일을 위한 민족의 주체적 노력을 열강들에게 한반도 중립화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한정했다. 그에 따라 남북 지도자 또는 민간의 민족적 결집이라는 측면은 사실상 사장했다고 평가했다.<sup>65)</sup>

의超黨派的團結の急務」(1973.1·2, 138, 金三奎), 1쪽.

64) 「朴提案を越えて—平和的民主統一へのみち」(1970.10, 115, 金三奎), 2~3쪽; 「アジアの平和共存と統一朝鮮の中立化」(1971.7, 123, 金三奎), 2~3쪽.

65) 홍석률, 「4월민주항쟁기 중립화통일론」, 86~88쪽; 홍석률, 「중립화통일 논의의

그러나 김삼규는 이 시기 코리아평론에 게재한 일련의 글에서 ‘민족’과 ‘자주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제 해결에서 민족 자신의 힘을 강조했다. 코리아평론은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 자신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고, 자주성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과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미소는 “분할의 당사자”이며 일본과 중국도 “그 분할의 이해에 참여”한 관계자였다. 따라서 통일 문제를 “발의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인 한민족 외에는 없”었다.<sup>66)</sup> 이 같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코리아평론은 강대국의 처사를 기다리는 게 아닌, “통일 조선의 중립화를 전제로, 주체적 적극성을 갖고, (남북한이) 관계 각국의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7)</sup>

달리 말하면 중립이란 형식은 통일의 ‘입구’에 불과했다.<sup>68)</sup> ‘입구’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통과한 이후에는 민족의 역할이 필요했다. 이 지점에서 코리아평론의 중립화통일론은 강대국의 세력 균형이라는 통일방안 차원에 그치지 않고, 통일의 구체적 조건과 형태를 남북한이 적극적·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자세와 의지의 차원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중립화통일론을 영세 중립화를 최종 목적으로 한 ‘중립화를 위한 통일’과 통일을 목적으로 한 ‘통일을 위한 중립화’로 구분할 수 있다면<sup>69)</sup> 이 시점 코리아평론의 그것은 분명 후자에 방점이 있었다.

7·4 공동성명 발표 전 이후락과 박성철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고 있던 1972년 5월, 코리아평론은 박정희와 김일성에게 보내는 공개장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개장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비참한

역사적 맥락], 75쪽.

66) 「アジアの平和共存と統一朝鮮の中立化」(1971.7, 123, 金三奎), 3쪽.

67) 「村提案を越えて—平和的民主統一へのみち」(1970.10, 115, 金三奎), 3쪽.

68) 「中立化は朝鮮統一の入口」(1972.2·3, 130, 森恭三), 7~8쪽.

69) 조배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반성적 고찰」 『통일인문학』 61집 (2015), 104~106쪽.

상태를 한민족에 부과했던 국제적 역관계가 크게 요동치며 재편성되고 있는 이때, 조선민족 스스로 그 역사적 유산에 계속 구애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자, 민족의 운명을 진흙탕에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의 분열과 대립 상태가 아시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고 나아가 국제 긴장의 완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조선민족 자신이 막중한 책임을 갖는 것”임을 상기한 후 다음과 같은 6개 항을 제시했다.<sup>70)</sup>

①남북 최고지도자가 즉시 상호 방문을 요청하고 회담을 열 것. ②평화조약 또는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대폭적인 군비 축소를 실현할 것. ③쌍방의 유무상통하는 무역을 개시할 것. ④쌍방의 공적 기관은 상대방과 그 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일체히 멈출 것. ⑤쌍방의 실정을 서로 알기 위해 대등한 조건으로 기자를 교환할 것. ⑥민족 통일을 한 걸음씩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협상기관을 설치할 것.

6개 항의 내용 일부는 7·4 성명에 반영되었고(④, ⑥), 북이 제안했지만 남이 반대한 것(①)도 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대체로 열강과 상관 없이 남북 정부 간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이었다는 점이다. 다른 지면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로 제시한 비무장지대의 완전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이어 친척 방문과 서신 교환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도 모두 충분히 검토할 만한 조치였다.<sup>71)</sup> 홍석률이 지적했듯, 비무장지대의 완전 비무장화 문제와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꺼내지 않은 인도적 문제는 비정치적 교류를 우선시한 남과 정치·군사 문제 해결을 우

70) 「朴正熙大統領と金日成首相への公開状」(1972.5, 132, 金三奎), 2-6쪽.

71) 「非武装地帯の平和利用」(1971.9, 125, 金三奎), 2-3쪽. 이 기사에서 코리아評論은 인도적 문제, 경제 및 문화교류, 정당·사회단체 교섭을 거친 남북 정권의 협상안을 구상하기도 했다. 종합하면 코리아評論은 평화협정 또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같은 실질적·상징적 조치 후 다양한 층위의 민간 교류를 거쳐 정부 간 구체적인 통일방안 논의로 옮겨 가는 로드맵을 구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선시한 북이 논의에 나설 만한 타협점이 될 수 있었다.<sup>72)</sup> 요컨대 이 시기 코리아평론은 남북의 적극적인 협상을 강조했고, 남북 모두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처럼 코리아평론의 논조가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적 노력을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갔다면 그 동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내외 정세가 달라졌다는 인식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전술했듯 코리아평론은 데탕트의 본질 또는 양면성을 지적했다. 더하여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한 남북 두 정권도 달라졌다. 즉 남북한은 분단 당시와 달리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강해졌고, 통일 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강해졌다. 여기에 평화공존의 국제 조류의 영향도 있어 자주적 결정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sup>73)</sup> 그런데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경쟁적 공존관계’라 한 남북관계의 현상과 두 정권의 속성에 대한 비판적 통찰이 그것이었다.

주지하듯 한반도에서는 1968년 벽두에 터진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뒤이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1969년 EC-121기 격추사건까지 일련의 사건이 거듭되며 소위 안보위기 국면이 조성되었다. 코리아평론은 이 같은 긴장 상태에 대해 “남북 정권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남북 민중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유린하고 있는” 처사라며 비판했다.<sup>74)</sup>

1·21 사태 등을 도발한 북한의 공비 남파에 대해서는 ‘완전한 극좌 모험주의’로 “그것만큼 사회주의 이름으로 사회주의를 모독하는 것은 없”다

72) 홍석률, 『분단의 히스토리』, 232~243쪽.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1971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사가 실제 북한 측에 제안한 구상이기도 했다. 북한의 반응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한모니까,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파주: 돌베개, 2023), 368~388쪽 참고.

73) 「高まる統一論議—南北話合いの条件」(1970.12, 117, 金三奎), 3쪽.

74) 「統一勢力とは何か」(1969.2, 95, 金三奎), 2쪽.

고 단언했다. 나아가 결과적으로도 “공연히 내외의 긴장을 격화시켜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를 강화하고 박 정권의 반동화를 촉진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남한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코리아평론은 삼선개헌, 그리고 미일 오키나와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오키나와 대신 제주도를 미군기지로 제공하겠다고 한 박정희 발언 등을 거론하며 박 정권이 긴장 국면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반공이란 것이 이렇게까지 중속적이고, 민족적 자립성을 이렇게까지 소홀히 하는지, 새삼 놀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정권의 이 같은 모습은 한민족에게 불안과 초조감을 줄 뿐이었다.<sup>75)</sup>

코리아평론은 1968년 이래 일련의 사건들 모두 의도된 도발이었지만, 그 도발은 “강함의 표현이 아닌 외려 약함의 표현”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정말 긴장 국면이 맞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전 인민 개병화 및 臨戰체제가 유지되었고, 남한에서는 국방력과 반공체제 강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삼선개헌이 이뤄졌다. 이 같은 정황은 남북 두 정권의 실체와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코리아평론이 보기에 남북한은 모두 여론을 위시해 모든 것이 조작되는 폐쇄적 사회였다. 그렇더라도 베트남 철병이나 오키나와 반환에서 보듯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전면적 철수, 대중(對中) 접근과 같은 동향을 이들이 모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중소 대립의 심각성과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국가 이해대립 때문이라는 것, 북한을 대하는 중소의 태도 역시 대국주의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미소는 남북한 정권의 모험주의적 항쟁에 말려드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었다. 따라서 코리아평론은 남북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무시할수록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며, 둘 다 현재의 군비를 유지하는 한, 경제 건설은 어렵고 민중을 도탄

75) 「民族的·民主協同への転期」(1969.8, 101, 金三奎), 2쪽.



의 곤경에 빠트리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두 정권이 계속 그 길을 고집한다면 미·소·일·중뿐만 아닌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상호 대립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sup>76)</sup>

1971~72년 남북대화의 양상은 이 같은 의구심을 더 깊게 했다. 1971년 9월에 시작된 적십자회담 예비회담은 본회담 의제를 정하는 데만도 8개월여를 끄는 등 순탄치 않았고, 7·4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역시 남북이 각기 자기 입장 정당화를 위해 교섭을 거듭 원점으로 돌리면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sup>77)</sup>

코리아평론은 “평화적 자주통일을 위한 제반 교류, 특히 민간 교류까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형세”를 지켜보며 “남북 독재정권이 민간 교류를 보류하는 것을 공통의 이익으로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거듭 우려했다. 또 두 정권의 그 같은 처사는 “북은 남과 미일에 대해, 남은 북과 중소에 대해 적대하지 않고 상대의 존재와 입장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내외정책에서는 경합(대립)하여 각자 자국 민중의 공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과 같으며 그들의 모순적 행태를 꼬집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민족적 염원의 대변자인 듯 과시하면서도 실은 미중-미소 공존체제 하 한반도 분할 고정화 정책의 대행자로서 남북 5천만 민중의 의사를 소외시키는 마술사(사기꾼) 같은 태도”와 다르지 않았다. 코리아평론은 두 정권이 사실상 “자주통일 또는 교류라는 이름의 자발적 분할책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sup>78)</sup>

분할 고정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코리아평론은

76) 「第二の民族解放」(1970.3, 108, 金三奎), 2~3쪽.

77) 남북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김지형, 『테탕트와 남북관계』, 제2부 1장과 제3부 2장;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211~225쪽 참고.

78) 「交流期における統一問題」(1973.7, 143, 金三奎), 1쪽.

일차적으로 남북 정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코리아평론이 보기에 남북 정권 모두 반통일세력이었다. 그렇지만 반통일세력도 한민족 구성원이므로 그들의 반동성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해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고 통일세력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평화적 통일운동자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79)</sup> 민족을 위한 두 정권의 존재 이유는 오직 분단-대립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기회주의적 또는 편의적·임기응변적 이데올로기를 넘어 민족적·민주적 입장으로 돌아가 중립·민주·통일 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대내외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sup>80)</sup>

그러나 두 정권이 자발적으로 변화하지 못할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정권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할 민족·민중뿐이었다. 후술하듯 코리아평론은 이 시기 한국의 정치경제 사회적 상황을 국민의 불안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극히 불안정한 위기 국면으로 보면서 박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야당인 신민당이 심기일전해 기본적 인권의 확립과 광범한 참정권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모든 민주 세력과 허심탄회하게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나아가 한국 국민이 정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저항의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up>81)</sup> 또한 정부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민간의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덧붙여 코리아평론은 이 연장에서 재일동포 사회의 단결을 호소하기도 했다.<sup>82)</sup>

79) 「統一勢力とは何か」(1969.2, 95, 金三奎), 3쪽.

80) 「第二の民族解放」(1970.3, 108, 金三奎), 3쪽.

81) 「監視と抵抗—戦争防止のために」(1970.7, 112, 金三奎), 3쪽.

82) 여기엔 모처럼 통일을 향하는 태동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난관도 많은 상황에서 “국경도, 휴전선도, 군비도, 체제의 상이함도 없”는 재일동포의 역할과 책임이 극히 크다는 인식이 있었다. 어떤 국가권력이나 당파 계열에도 속하지 않는 순수한 민족적 입장에서 당국의 대화나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개의 단체를

정리하자면 김삼규와 코리아평론은 1950년대 이래 이 시점에도 일관되게 중립화통일론을 견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탕트 국면에 강대국들의 현상 유지 바람이 담겼고, 그로 인해 역설적으로 한반도 분할이 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코리아평론은 그에 대한 해법으로 민족의 주체적 자주성을 강조했다. 통일문제를 강대국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 자신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민족 단결과 남북 교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점에서 코리아평론의 중립화통일론은 통일의 방식을 넘어 자세와 의지의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한양의 통일론과도 맥이 닿았다.

## V. 在日의 시선 : 두 잡지의 통일론을 관통하는 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이상 한양과 코리아평론의 통일 논의에는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공통점이 있다. 통일 논의의 자유와 확대를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이 점은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으로 이어졌다.

---

조직해 우선 동포사회를 규합하고, 나아가 남북의 대립 완화 및 통일 촉진을 위한 건설적 제안과 실천 활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在日同胞의超黨派的團結の急務」(1973.1·2, 138, 金三奎), 1쪽.

넓게 보면, 코리아評論의 이 같은 호소의 배경에는 전국적인 재일동포 민족단체로서 민단과 조총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정치성, 자주성 결여, 관준민비 풍조 등으로 인해 동포들의 마음을 다 얻지 못했고, 오히려 남북의 대립 행장을 일본에 이전해 동포들끼리 반목과 소외감을 조장했다는 비판적 시선이 있었다. 「民族的·民主協同への転期」(1969.8, 101, 金三奎), 2~3쪽. 이 시기 민단과 조총련 및 민단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李瑜煥, 『在日韓国人60万 : 民団·朝總連の分裂史と動向』(東京: 洋々社, 1971) 참고.

한양은 다수의 관련 기사에서 통일 논의가 터부시되는 현상에 유감을 표하며 논의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것을 빠지지 않고 강조했다. “통일 문제가 몇몇 특정인들의 사유물이 아닌 ‘민족의 사활적 문제’라고 할 때, 그것은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민의에 물어보는 공정성과 적극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 통일문제를 민족 구성원들의 참다운 의사를 묻는 데 개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sup>83)</sup>

이때 논의의 범위는 전술했듯, 단계론적 통일론 또는 남북 대화와 교류에서 통일 지향성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논의가 허용되어야 할 대상은 국민 전체였다. 한양은 “분단의 쓰라림을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 국민”이기에 “이들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을 뿐 아니라, 이들의 의견이야말로 민족의 절박한 숙원과 이해를 가장 공정하고 진실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문제의 논의는 그 어떤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되거나, 국민의 염원과 유리된 관계적인 테두리에 얽매일 성질의 것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84)</sup>

그러나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후에도 통일론은 여전히 규제되었다.<sup>85)</sup> 1972년 7·4 성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밀실 협상의 절정이었다. 한양은 7·4 성명의 정신과 취지에는 적극 찬동했지만, 남북 고위급 인사의 상호 비밀방문이라는 과정과 절차까지 동의하진 않았다. 즉 “당국자들의 대화독점의식이 지배적인 한, 협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협상의 폭을 원내의석을 가진 야당에게는 물론, 그렇지 못한 원외 야당

83) 「비원의 25년」(1970.8·9, 96, 金仁在), 6~7쪽.

84) 「(특집 통일에의 길) 統論議의 廣場을 마련하자」(1970.8·9, 96, 金宗晚), 33쪽.

85) 예컨대 박정희는 7·4 공동성명 발표 후 전국의 대학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들이 환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통일 논의를 하지 않도록 각 지도교수가 책임지고 지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1972년 8월 24일.

이나 광범한 사회단체, 그리고 재야의 개별적 인사에게까지 넓혀 그들이 문제토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론 통일은 궁극적으로 “광범한 협상의 마당에서 합의된 민족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민주주의 이념에도 전적으로 부응”한다는 게 한양의 지론이었다.<sup>86)</sup>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같은 통일론 확대-자유 주장이 비단 원론적인 차원으로만 거론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유로운 통일 논의를 강조한 것은 곧 한국의 정치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통일론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과 접합해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론으로 이어졌다.

코리아평론은 1969년 삼선개헌부터, 1970년 김지하의 「오적(五賊)」 필화사건,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 1972년 유신까지 박정희 정권의 독선과 독주, 민주주의 억압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예컨대 삼선개헌 때는 안보 위기 국면에서 고도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집권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박정희의 권한은 이미 절대적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 안정은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한 가혹한 탄압에 의한 질식 상태”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오적」 필화사건의 경우 「오적」이 김일성 정권을 고무·격려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오히려 반공을 명분으로 ‘오적’을 옹호하는 집권 여당이야말로 최대의 이적행위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sup>87)</sup> 한양도 마찬가지였다.<sup>88)</sup>

86) 「특집 민족통일의 역사적 전기」 평화통일과 남북협상(1972.8·9, 108, 金仁在), 27쪽.

87) 「政權の平和的移行を」(1969.4, 97, 金三奎), 2~3쪽; 「五賊を擁護する「反共法」」(1970.8, 113, 金三奎), 2~3쪽; 「朴政權の危機」(1972.2·3, 130, 金馨石), 2~3쪽.

88) 「특집 민족의 절규」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1972.2·3, 105, 金鍾鎬), 61~67쪽.

특히 코리아평론은 박 정권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총체적 위기 국면에 처했고, 일련의 정치적 억압·전횡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 일변도 경제정책으로 인해 빈부 격차와 생존경쟁이 격화되고, 국민 상호불신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차관에 의한 고도성장정책에 대해서도 외자의 상당액이 고리대자본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부문에 유입되면서 인플레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의 차관 지급보증 및 특혜용자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sup>89)</sup> 여기에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1971)과 과징금, 국제통화 조정에 의한 원화 평가절하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압력이 더해졌다. 사회적으로도 파업과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 광주대단지 소개민들의 폭동 등 일련의 사건들을 민심 이반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코리아평론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박 정권이 늘 ‘쿠데타적인 수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외교적 감각과 포부의 결핍, 경직성, 즉 정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sup>90)</sup>

요컨대 1970년대 초 한양과 코리아평론 지면에 전개된 일련의 통일 논의는 통일론이면서 동시에 통일론 자유/확대 요구의 연장에서 그것을 막고 있는 한국 정치 비판론의 성격도 가졌다. 그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계된다는 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반공체제 비판으로 연결되었다. 박 정권이 민간의 자유로운 통일 논의를 경계하고 제한-통제하고자 한 것이 당시 통일 논의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것 자체가 한양과 코리아평론 통일론의 중요한 특징이자 의의로 볼 수 있다. 이보다 조금 뒤에 장준하가 남북 주민 즉 민중의 주체적 참여와 실천력을 통일운동의 관건으로 들면

89) 「朝鮮の緊張—その虚像と実体」(1970.2, 107, 金三奎), 2~3쪽; 「監視と抵抗—戦争防止のために」(1970.7, 112, 金三奎), 2쪽.

90) 「朴政權の危機」(1972.2·3, 130, 金馨石), 2~3쪽.

서, “지금은 통일보다도 통일운동의 자유를 쟁취해야 할 때”<sup>91)</sup>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한양과 코리아평론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또 이 점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 내의 ‘선민주후통일’·‘선통일후민주’ 논쟁에 선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양과 코리아평론은 민주와 통일의 관계 또는 순서를 명확히 제시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의 논의는 전 민족적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민주와 통일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후의 문제라기보다 이후 문익환이 얘기했듯 통일과 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드러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92)</sup>

덧붙여 이처럼 박 정권의 억압적 성격을 꼬집고,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던 한양과 코리아평론의 통일론은 1970년대 일본에서 한국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한일 연대가 활성화되는 길목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 싶다. 주지하듯 1973년 8월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국 국내는 물론 해외 특히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납치 당일엔 김대중의 인터뷰가 실린 『世界』 9월호가 시중에 풀린 날이기도 했다. 이 같은 우연의 일치가 겹쳐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그간의 무관심을 반성하는 기류가 생겼다.<sup>93)</sup> 이는 곧 한국 민주화를 위한 한일 연대운동으로 이어졌다.<sup>94)</sup>

91) 조배준, 「장준하, 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 담론의 지성사』 (서울: 패러다임북, 2015), 107~109쪽. 인용문은 장준하의 미발표 원고 「민족통일전략의 현단계」(1973.6, (장준하기념사업회)).

92) 홍석률, 「1970년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분단문제 인식」 『역사와 현실』 93호 (2014), 479~482쪽.

93) 특히 고도경제성장 속에 사상적으로 곁들던 일본 지식인들에게 이 사건은 패전/해방 후 한일관계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의 지적 충격을 주었다. 또 그들 내면의 민족식민지 문제를 다시금 절감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건차,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파주: 창비, 2009), 283~285쪽.

94) 한일연대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李美淑, 『「日韓連帶運動」의時代』 (東京:

1972년 7·4 성명이 발표되자 재일조선인 사회 일각에서는 그에 호응해 민단과 총련이 함께 공동성명지지대회를 여는 등 관계 개선을 모색한 움직임이 있었다.<sup>95)</sup> 그에 앞서 1970년 김지하 오적 필화사건, 1971년 서승·서준식 형제를 포함해 재일조선인 50여 명이 연루된 소위 재일교포 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구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sup>96)</su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1970~72년 한양과 코리아평론이 전개한 일련의 통일 논의는 일본의 독자들에게 통일과 한국 민주주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고, 그것은 1973년 이후 한일연대운동으로 합류하는 하나의 물줄기가 되었다.

## VI. 결론

벌써 50여 년 전, 실현되지 않은 목소리에 그친 한양과 코리아평론의 통일론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한양과 코리아평론에게 통일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한양에게 통일은 “사람들의 정치이념이나 생활 처지를 초월한 민족의 미래까지를 결정할 사활적 문제”였다. 그렇다면 민족의 ‘어제와 오늘’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정치권력들의 독주”에 의해 “국민의 응당한 정치적 권리와 생활상 요구가 계속 배반당하고 사회적 진보가 억제되고 있는 각박한 현실”이 해방 후 한국의 모습이었다. 이처럼 “비민주적이며 반역사적 현실”을 ‘민주적이고 역사적’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한양

---

東京出版會, 2018) 참고.

95) 『경향신문』 1972년 7월 24일.

96) 李美淑, 『「日韓連帶運動」의時代』, 95~104쪽.



이 기대한 통일의 역할이자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97)</sup>

코리아평론에게는 개개인 나아가 민족을 해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일이었다. 즉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 정치, 국민 복지를 계획해야 하는 경제가 모두 군사적 균형의 희생이 되고, 사상·신념·언론의 기본적 자유조차 극도로 제한되고, 아직까지도 강권적인 압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민족이 처한 현실이었다. 코리아평론은 이 같은 “불행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역사적 불행으로부터 발본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통일에서 찾았다.<sup>98)</sup>

요컨대 한양과 코리아평론에게 통일은 정치 공학적 차원에 그치는 것도, 단지 선택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적·민족적·민주적 해방의 길과 직결된 역사적 과제였다.<sup>99)</sup> 이 점은 아마 지금도 본질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로서 한반도 통일문제의 의미와 무게,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은 작으나마 남북관계

97) 「특집 우리의 길로 가자」 민족주체세력 형성의 과제」(1972.2·3, 105, 成元圭), 78-84쪽.

98) 「高まる統一論議—南北話合いの条件」(1970.12, 117, 金三奎), 2-3쪽.

99) 조배준은 장준하의 민중 주도 통일론에 대해 통일을 이념·체제·제도의 통합으로 보는 관점이 아닌, 우리 삶을 풍부하고 자유롭게 만들 기본 토양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조배준, 「장준하, 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10쪽.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견 서로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장준하를 비롯해 같은 시기 전국학생연맹 등 대학생들의 통일문제 인식과 漢陽·코리아評論의 그것이 상호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는 이 글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덧붙여, 이 글의 주제인 재일조선인 사회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인식을 살필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창은 북한과 일본 인식이다. 두 잡지의 북한·일본 인식 역시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던 50여 년 전, 그 열은 가능성에 열렬히 반응했던 한양과 코리아평론의 통일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 접수: 2023년 11월 13일 / 심사: 2023년 11월 30일 / 게재 확정: 2023년 12월 6일

## 【참고문헌】

-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서울: 민음사, 2013.
- 김지형, 『데탕트와 남북관계』, 서울: 선인, 2008.
-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편, 『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제 및 기사명 색인』 1~3, 서울: 박문사, 2018.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서울: 사회평론, 2015.
- 윤건차,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파주: 창비, 2009.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 1997.
- 조은애, 『디아스포라의 위도』, 서울: 소명출판, 2021.
-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서울: 통일교육원, 2021.
- 한모니카, 『DMZ의 역사 :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파주: 돌베개, 2023.
- 한승헌변호사변론사건실록간행위원회,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실록』 2, 파주: 범우사, 2006.
-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 1953-196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파주: 창비, 2012.
- 言論人金三奎刊行委員會 編, 『言論人 金三奎』, 川崎: 『言論人金三奎』刊行委員會, 1989.
- 李美淑, 『「日韓連帶運動」の時代』, 東京: 東京出版會, 2018.
- 李瑜煥, 『在日韓国人60万 : 民団・朝總連の分裂史と動向』, 東京: 洋々社, 1971.
- 崔慶原, 『冷戰期日韓安全保障關係の形成』,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4.
- 강광식, 「중립화 통일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적용」 『사회과학』 30권 1호, 1990, 39~70쪽.
-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 1960년대의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9집, 2006, 247~278쪽.
- 손남훈, 「『한양』 게재 시평의 변화 과정 연구」 『한국문학논총』 70집, 2015, 137~188쪽.

손남훈, 「『민족의 존엄』에 나타난 민족 주체성 담론과 정치 비판의 논리」 『한민족 문화연구』 80집, 2022, 127~160쪽.

임현영, 「74년 문인간첩단 사건의 실상」 『역사비평』 13호, 1990, 283~301쪽.

조배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반성적 고찰」 『통일인문학』 61집, 2015, 89~118쪽.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47집, 2007, 201~227쪽.

하상일, 「1960~80년대 재일 종합문예지 『한양』과 한국문학의 교섭」 『한민족문화 연구』 77집, 2022, 7~42쪽.

홍석률, 「4월민주항쟁기 중립화통일론」 『역사비평』 10호, 1993, 65~106쪽.

홍석률, 「중립화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 12호, 2004, 53~88쪽.

홍석률, 「1970년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분단문제 인식」 『역사와 현실』 93호, 2014, 467~504쪽.

『漢陽』, 『코리아評論』

『경향신문』, 『조선일보』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Peninsula's Situation and  
Discussion of Unification in the Magazines *HanYang*(漢陽) and  
*Korea-Pyongron*(코리아評論) in the Early 1970s

Shin, Jaejo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Koreans in Japan perceived the Korean Peninsula's political situation and discussion of unification in the early 1970s by examining the magazines *HanYang*(漢陽) and *Korea-Pyongron*(코리아評論). First, *HanYang* advocated for unification as a national imperative and aspiration that transcends ideological and political divisions. This vision was not a mere idealism, but an argument based on a thorough awareness of reality. It also reflected the fervent desire for unification among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Second, *Korea-Pyongron* had consistently adhered to the argument of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However, it recognized the prevailing desire of major powers to maintain the status quo during the détente, which paradoxically could lead to a prolonge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solution, it emphasized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 expanding its neutralization-based unification argument beyond the methods of unification and into the realms of attitude and determination. Finally, both *HanYang* and *Korea-Pyongron* shared a common emphasis on freedom and broadening scope of unification discourse, which was intertwined with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political reality in Korea. Moreover, their discussion of unification was on the path to heightened interest in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in Japan in the 1970s and to the movement of Korea-Japan solidarity.

Keywords: HanYang, Korea-Pyongron, Korean in Japan, Détente, Discussion of Korean Peninsula's Unification

**신재준 (Shin, Jaejoon)** \_\_\_\_\_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대일(對日)관계, 남북관계, 환경 등을 중심으로 1960~70년대 한국 사회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1960년대 한국의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 교섭 연구」(2019), 「1970년 전후 공해의 일상화와 환경권 인식의 씨앗」(2021), 「갈등의 지속 - 1965~67년, 대일(對日) 어업협력자금 교섭과정 검토」(2023) 등이 있다.

일반논문

## 성격이 통일과 분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고착화된 갈등 국가 사례 연구

이유정 (경상국립대학교)\*\*

이민규 (경상국립대학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쟁과 같은 폭력적 갈등을 장기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 성격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경험에의 개방성 등 성격의 5가지 요인이 통일인식, 분단지향성,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그리고 이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격의 5요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본 조사의 결과는 전쟁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는 서구 국가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성격의 영향력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성격, 5요인 성격특성, 통일인식, 평화인식, 고착화된 갈등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2.202312.195>

\* 본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BK21사업에 의해 지원받았음.

\*\* 제1저자

\*\*\* 교신저자(mka2018@naver.com)

## I. 서론

남북갈등, 한반도 갈등은 전 세계에서 냉전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유일한 갈등이다.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평화협정과 같은 정치적 화해(reconciliation)를 넘어 갈등 양측의 주민 간 심리문화적 화해가 이루어질 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주장한다.<sup>1)</sup> 이런 점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관한 연구, 또한 갈등과 갈등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사람에 초점을 둔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으로 갈등 해결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사람에 초점을 둔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갈등의 맥락에서 이러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왜 통일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통일보다는 평화적 분단을 원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대북정책에 있어 관여 정책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은 압박 정책을 선호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한반도 갈등 해결과 화해를 위해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이다. 심리학의 연구들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크게 두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성격, 기질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속성에 초점을 둔 차원이며, 두 번째 차원은 사회정체성, 사회적 지위 등 개인과 외부 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둔 차원이다.<sup>2)</sup>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주로 지

---

1) 갈등 해결과 화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Yaacov Bar-Siman-Tov,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와 Oliver Ramsbotham, Hugh Miall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1)을 참고하면 된다.



역, 소득수준, 학력,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대표되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외부 환경의 관계, 즉 개인의 사회적인 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sup>3)</sup>

본 연구는 개인의 내적인 속성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성격이 이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vs.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그리고 갈등 해결의 목표(통일 vs. 평화적 공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격과 기질 차원의 내적인 속성이 한반도 문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태도 연구가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대표되는 사회적 속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다층적인 인식의 단면만을 드러내는 평면적인 분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갈등 해결에 미치는 개인의 내적인 속성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갈등 해결을 위한 이론적, 현실적, 종합적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과 외부 환경의 관계를 통제된 상태에서 갈등 해결에 관한 성격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함의는 폭력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성격이 갈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는 것이다. 갈등 해결에 미치는 성격의 영향력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서구 국가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서구 국가 내에서도 정치, 외교적 맥락에 따라 성격이 외교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

2) John R. Alford, Carolyn L. Funk and John R. Hibbing, "Are Political Orientations Genetically Transmitt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2 (2005), pp. 153-167; Bo Ekehammar, et al., "What Matters Most to Prejudice: Big Five Personalit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r Right-Wing Authoritarianis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8, no. 6 (2004), pp. 463-482; Peter K. Hatemi, et al., "Is There a "Party" in Your Gen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2, no. 3 (2009), pp. 584-600.

3) 권수현,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77~204쪽.

별적이라는 연구가 시사하듯,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은 성격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sup>4)</sup> 한국의 경우 선행연구의 참여자들보다 갈등에 대한 태도에 있어 상황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sup>5)</sup> 본 연구는 현저한 갈등 상황 속에서 성격과 기질 차원의 내적인 속성이 갈등 해결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함으로써 성격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5요인 성격 모형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일치된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성격심리학자들은 올포트가 내린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물리적 역동적 체계’라는<sup>6)</sup> 고전적 정의에서부터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양식’이라는 파레지의 정의까지<sup>7)</sup> 성격에 대해 유사하지만 다양한 정의들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성격이 기본적으로 유전적 기질을 바탕으

4) Timothy B Gravelle, Jason Reifler and Thomas J Scotto, “Personality Traits and Foreign Policy Attitudes: A Cross-National Exploratory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53 (2020), p. 109607.

5) 허지영, 「고질갈등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반도 갈등과 갈등의 평화적 전환 접근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제22권 1호 (2021), 75~99쪽.

6) Gordon W. Allport,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N. Y.: Holt, Rinehart & Winston, 1961), p. 28.

7) Jerry E. Phares,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O.H.: Merrill, 1988), p. 4.

로 한다는 점,<sup>8)</sup> 성격이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sup>9)</sup> 그리고 국가와 문화와 관계없이 성격은 크게 5가지 특질의 구조로 수렴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며,<sup>10)</sup> 한국인의 경우에도 성인과 아동의 성격이 5가지 요인으로 수렴된다는 타당성이 확인되었다.<sup>11)</sup>

성격이 다섯 가지 특질로 수렴된다는 5요인 모형(five factor model)은 현재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격의 5요인 모형은 성격을 외향성(extro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그리고 경험에의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의 차원에서 설명한다.<sup>12)</sup> 외향성은 개인이 얼마나 에너지가 있으며, 그 에너지가 외부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관심사항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관심받기를 원하는 등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선호한

- 
- 8) Kerry L. Jang, W John Livesley and Philip A. Vemon, "Heritability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Their Facets: A Twi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vol. 64, no. 3 (1996), pp. 577-592.
- 9) Michael R. Furr and David C. Funder, "Persons, Situations, and Person-Situation Interactions," in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eds. Oliver P. John and Richard W. Robins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2018), pp. 667-685.
- 10) Lewis R. Goldberg,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 no. 1 (1981), pp. 141-165.
- 11) 김지현 · 김복환 · 하문선,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제32권 1호 (2011), 47~65쪽; 최미숙 · 박지영, 「유아용 5요인(Big Five) 성격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3권 3호 (2013), 281~99쪽.
- 12) Lewis R. Goldberg,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6 (1990), pp. 1216-1229.

다. 친화성은 개인이 얼마나 따뜻한지의 정도, 타인과 협력하고 공감하는 정도, 그리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신뢰, 존중, 공감함으로써 타인과 원만한 관계 맺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전체적인 화합과 조화를 추구한다. 성실성은 양심,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정도와 부지런하고 꼼꼼한 정도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신중하고 책임감이 높고,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정서적 안정성은 대개념인 신경증(neuroticism)으로도 불리는데,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적 안정성은 자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는 위협한 곳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의 개방성은 새로운 자극, 변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경험의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과 도전에 거부감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sup>13)</sup>

## 2. 성격과 정치적 태도

### 1) 이념

성격은 정치적 태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특히 정치적 관심, 정치적 참여활동, 당파성, 이념, 그리고 대외정책 선호를 안정적으로 예측한다. 성격과 정치적 태도에 대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주제

---

<sup>13)</sup> Oliver P. John, Laura P. Naumann and Christopher J. Soto,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in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eds. Oliver P. John, et al. (New York, N.Y.: Guilford, 2008), pp. 118-121.

는 성격과 이념의 관계이다. 선행연구들은 성격의 5요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성실성이 이념을 예측하는 가장 안정적인 특질임을 보여주고 있다.<sup>14)</sup> 예를 들어 성격과 정치적 태도에 관한 메타연구는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상징적 이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질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성실성임을 규명하였다.<sup>15)</sup>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충동을 잘 통제하고 규범과 규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보수적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고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는 성격인 사람은 변화에 기반을 둔 진보적 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친화성이 정치적 이념을 예측하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지만,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만큼 이념과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성격은 이념의 동기적 측면을 설명하는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sup>16)</sup>와 사회지배경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sup>17)</sup>

<sup>14)</sup> Claudio Barbaranelli, et al., "Voters' Personality Traits in Presidential Ele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2, no. 7 (2007), pp. 1199-1208; Gian Vittorio Caprara, et al.,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olitical psychology*, vol. 27, no. 1 (2006), pp. 1-28; Dana R. Carney, et al., "The Secret Lives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Personality Profiles, Interaction Styles, and the Things They Leave Behind," *Political Psychology*, vol. 29, no. 6 (2008), pp. 807-840; Alan S. Gerber, et al., "Personality and Political Attitudes: Relationships across Issue Domains and Political Contex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4, no. 1 (2010), pp. 111-133; Harald Schoen and Siegfried Schumann, "Personality Traits, Partisan Attitudes, and Voting Behavior: Evidence from Germany," *Political Psychology*, vol. 28, no. 4 (2007), pp. 471-498.

<sup>15)</sup> Aleksandra Cichocka and Kristof Dhont, "The Personality Bases of Political Ideology and Behavior," in *The Sage Handbook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eds. Virgil Zeigler-Hill and Todd K. Shackelford (Thousand Oaks, C.A.: SAGE, 2018), pp. 325-352.

<sup>16)</sup> Bob Altemeyer,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1998), pp. 47-92.

에도 영향을 미친다.<sup>18)</sup> ‘변화에 대한 저항’과 관련이 있는 우익권위주의를 예측하는 성격 특질은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었다. 성실성이 높을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수록 우익권위주의의 수준이 높았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는 사회지배경향에 대해서는 5가지 성격 특질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사회지배경향 수준이 낮은 반면 나머지 4개 특질은 모두 사회지배경향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성격과 우익권위주의 및 사회지배경향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정치적 참여와 관심

성격의 5가지 특질 중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특질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었다. 정치적 정보와 활동은 일반적으로 새롭고 다양한 정보 획득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개인이 정치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경험적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정치적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정치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으며,<sup>19)</sup> 정치적 토론의 빈도가 높았고,<sup>20)</sup> 정치적 활동의 참여가

17) Felicia Pratto,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pp. 741-763.

18) Chris G. Sibley and John Duckitt, “Personality and Prejudice: A Meta-Analysis and Theoretical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2, no. 3 (2008), pp. 248-279; Chris G. Sibley, Danny Osborne and John Duckitt, “Personality and Political Orientation: Meta-Analysis and Test of a Threat-Constraint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46, no. 6 (2012), pp. 664-677.

19) Alan S Gerber, et al., “Personality Traits and the Consumption of Political

많았다.<sup>21)</sup>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친화성이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예측한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일반화 가능성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친화성은 정치적 참여를 예측하였지만 외향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sup>22)</sup> 성실성과 정치적 참여의 관계를 살펴본 몬다크와 동료들은 성실성과 정치적 참여의 관계가 개인의 사회적 규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안하였다. 만일 개인이 정치적 참여를 자신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면 높은 정치적 효능감을 통해 정치적 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치적 활동을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sup>23)</sup>

---

Information,”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 39, no. 1 (2011), pp. 32-84.

- <sup>20)</sup> Aina Gallego and Daniel Oberski, “Person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ediation Hypothesis,” *Political behavior*, vol. 34 (2012), pp. 425-451; Alan S. Gerber, et al., “Disagreement and the Avoidance of Political Discussion: Aggregate Relationships and Differences across Personality Trai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6, no. 4 (2012), pp. 849-874.
- <sup>21)</sup> Shang E Ha, Seokho Kim and Se Hee Jo, “Personality Trai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4 (2013), pp. 511-532; Jeffery J. Mondak, et al., “Personality and Civic Engagement: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Trait Effects on Political Behavi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1, no. 1 (2010), pp. 85-110.
- <sup>22)</sup> Shang E Ha, Seokho Kim and Se Hee Jo, “Personality Trai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4 (2013), pp. 511-532.
- <sup>23)</sup> Jeffery J. Mondak, *Personality and the Foundations of Political Behavior*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150-181; Jeffery J. Mondak, et al., “The Participatory Personality: Evidence from Lat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1 (2011), pp. 211-221; Jeffery J. Mondak, et al., “Personality and Civic Engagement: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Trait Effects on Political Behavi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1, no. 1 (2010), pp. 85-110.

## 3) 성격과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성격과 이념 및 정치적 활동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성격과 집단, 특히 국가 간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선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성격과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격이 외교정책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각 성격 특질이 협력에 기반한 평화실현 선호와 군사력에 기반한 평화실현 선호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초기 연구들은 정치적 엘리트의 성격이 외교정책의 결정, 실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sup>24)</sup> 성격이 개인의 안정적인 내적 속성임을 감안하면 엘리트의 성격이 외교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인의 성격이 외교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에 일반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복잡한 외교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알몬드-리프만 합의(almond-lippmann consensus)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sup>25)</sup> 하지만 일반인이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으며<sup>26)</sup> 설사 일반인과 정치엘리트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정보와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sup>24)</sup> Scott Crichlow, "Legislators' Personality Traits and Congressional Support for Free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5 (2002), pp. 693-711; Stephen Benedict Dyson, "Personality and Foreign Policy: Tony Blair's Iraq Decisions," *Foreign Policy Analysis*, vol. 2, no. 3 (2006), pp. 289-306; Maryann E. Gallagher and Susan H. Allen, "Presidential Personality: Not Just a Nuisance,"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0, no. 1 (2014), pp. 1-21.

<sup>25)</sup> 남궁근, 「외교정책과 여론: 'Almond - Lippmann Consensus'와 그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15권 1호 (1999), 31~64쪽.

<sup>26)</sup> Ole R. Holsti,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Challenges to the Almond-Lippmann Consensu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6, no. 4 (1992), pp. 439-466; Ole R. Holsti and James N. Rosenau, "The Structure of Foreign Policy Attitudes among American Leader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2, no. 1 (1990), pp. 94-125.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sup>27)</sup>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예측한 성격 특질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었다.<sup>28)</sup>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고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관용도가 높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특성이 외집단을 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 기회로 인식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군사력 사용에 부정적이며 협력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친화성도 평화·전쟁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이타적이며,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감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에 반대하고 국제적 협력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친화성은 평화에 대한 태도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전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일련의 연구들은 친화성이 군사력 사용과 부적인 관계를 보고 했지만,<sup>29)</sup> 친화성과 군사력 사용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다.<sup>30)</sup>

<sup>27)</sup> Joshua D Kertzer and Thomas Zeitzoff, "A Bottomrup Theory of Public Opinion About Foreign Poli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1, no. 3 (2017), pp. 543-558.

<sup>28)</sup> Bert N. Bakker and Claes H. de Vreese, "Personality and European Union Attitudes: Relationships across European Union Attitude Dimensions," *European Union Politics*, vol. 17, no. 1 (2016), pp. 25-45; Mauro Cavarra, et al., "Peace and Person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Traits and the Peace Attitude Scale,"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27, no. 3 (2020), pp. 508-511.

<sup>29)</sup> Herbert H. Blumberg, et al., "Personality Dimensions and Attitudes Towards Peace and War,"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vol. 9, no. 1 (2017), pp. 13-23.

<sup>30)</sup> Timothy B Gravelle, Jason Reifler and Thomas J Scotto, "Personality Traits and Foreign Policy Attitudes: A Cross-National Exploratory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53 (2020), p. 109607.

성실성이 집단 간 갈등 해결 방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협력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반대하고 군사력 사용을 찬성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와<sup>31)</sup> 그 반대 패턴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sup>32)</sup>가 동시에 존재한다. 성실성과 외교정책 선호에 대한 비일관적 결과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규범 때문으로 보인다. 성실성이 사회적 규범을 부지런하게 따르는 내적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을 고려하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성실한 개인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성실한 개인은 두 방식을 모두 강하게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에 비해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지 않다.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에 취약하고 세상에 대한 통제감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력 사용이 불안과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군사력 사용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 외향성과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의 관계에 대해서도 양가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외향성의 사고적 측면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의 예측 근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외향성이 에너지를 외부로 표출하는 정도라는 측면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이 갈등 해결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성격의 5요인이 갈등 해결 방식을 포함한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본 연구는

31) Harald Schoen, "Personality Traits and Foreign Policy Attitudes in German Public Opin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3 (2007), pp. 408-430.

32) Ali Eryilmaz, "Relationship of Peace Attitudes with Personality Traits, Gender and Age Groups," *Dusunen Adam The Journal of Psychiatry and Neurological Sciences*, vol. 27, no. 2 (2014), pp. 138-146.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의 영향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 3.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성격의 5가지 요인이 통일인식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성격이 정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국내 연구는 존재하지만, 연구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하상웅 등은 성격이 투표, 시위, 정치적 행사, 모금 등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sup>33)</sup> 김현정 등은 성격이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sup>34)</sup> 성격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성격과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통일필요성, 분단지향성, 힘을 통한 평화, 협력을 통한 평화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 성격의 예측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에 성격의 영향력을 규명하려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더 큰 함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외교정책, 구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과 성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있어 차별점을 가진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1953년 휴전협정 이후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고착화된 갈등(intractable conflict) 사회이다.<sup>35)</sup> 서론에서 언급하였지만 성

33) Shang E Ha, Seokho Kim and Se Hee Jo, "Personality Trai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4 (2013), pp. 511-532.

34) 김현정·박상희·박영옥,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4호 (2015), 103~132쪽.

35) Daniel Bar-Tal,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격과 정치적 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 호주 등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사회가 갈등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폭력의 유형에 따라 그 사회가 목표로 하는 평화는 달라진다.<sup>36)</sup> 예를 들어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그 사회가 경험하는 갈등의 종류와 수준에 달려있다.<sup>37)</sup>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같이 갈등의 당사자라도 국력과 군사력에 따라 평화에 대한 표상이 달라진다.<sup>38)</sup> 갈등의 유형과 갈등의 수준에 따라 평화의 표상이 달라진다면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또한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미치는 성격의 영향력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자들이 아는 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격과 갈등 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vol. 21, no. 2 (2000), pp. 351-365;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Leonie Huddy, et al.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923-956.

<sup>36)</sup> Gavriel Salomon, “The Nature of Peace Education: Not All Programs Are Created Equal,” in *Peace Education: The Concept, Principles, and Practices around the World*, eds. Gavriel Salomon and Baruch Nevo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2002), pp. 3-13.

<sup>37)</sup>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85~99쪽; Nicolas Van der Linden, et al., “Social Representational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A Cross-Cultural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7, no. 3 (2011), pp. 217-242.

<sup>38)</sup> Oded Adomi Leshem and Eran Halperin, “Lay Theories of Peace and Their Influence on Policy Preference During Violent Conflic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17, no. 31 (2020), pp. 18378-18384.

셋째, 본 연구는 성격이 이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탐색하였다. 이념을 한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한 믿음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면,<sup>39)</sup> 갈등을 장기간 경험하고 있는 국가의 이념은 갈등을 중심으로 한 믿음 체계일 가능성이 높다.<sup>40)</sup> 본 연구에서는 자기명명식 이념에 대한 성격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갈등 해결의 방식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의 목표, 즉 통일과 분단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성격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는 한반도의 갈등 해결의 목표가 통일이라는 규범을 형성해 왔다. 통일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될 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결책이다. 하지만 최근 단일국가 해결책이 아닌 두 국가 해결책, 즉 평화적 분단이 대두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한 뒤 통일은 후대의 과제로 남기자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해결책에 대해 성격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성격, 자기명명식 이념, 통일인식과 분단지향성, 협력을 통한 평화 및 군사력을 통한 평화 외에 본 연구는 성격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4개의 변수, 우익권위주의, 사회 지배경향,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선행 연구들이 전술한 4개 변수들을 중심으로 통일인식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접근하고 있다.<sup>41)</sup> 따라서

39) John T. Jos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2009), p. 309.

40) Tal Orian Harel, Ifat Maoz and Eran Halperin, "A Conflict within a Conflict: Intragroup Ideological Polarization and Intergroup Intractable Conflict,"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vol. 34 (2020), pp. 52-57.

41) 이하연 외, 「사회적 신념 및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 조절 및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5권 4호 (2021), 27~47쪽.

성격의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으로 지목한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은 이념, 평화·전쟁에 대한 태도 및 통일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42)</sup> 나머지 두 통제변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한국에서 이념,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sup>43)</sup>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상대에 대한 인식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양가적이다.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 인식은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통 내집단 정체성(common ingroup identity)에 비롯되며 부정적 인식은 북한이 한국의 실존적 위협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북한에 대한 양가적 인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과 부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일차원적이거나기보다는 적어도 긍정의 한 축과 부정의 다른 한 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북한에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각각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42) 윤광일,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국방연구』 제62권 4호 (2019), 25~66쪽;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5 (2013), pp. 673-693.

43) 한정훈,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4호 (2016), 105~126쪽.

### Ⅲ. 연구 방법

#### 1. 참여자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1:1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sup>44)</sup>

#### 2. 측정도구

##### 1) Big Five

성격의 5요인은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간편형 한국어 빅 파이브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sup>45)</sup> 이 척도는 존과 스리바스타바의 빅파브 성격검사(Big Five Inventory)를<sup>46)</sup> 한국인을 대상으로 15개 문항으로 축약,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측정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1: 나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5점: 나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

---

44)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8년 교신저자가 참여한 통일연구원의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의 데이터이다.

45) 김지현·김복환·하문선,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제32권 1호 (2011), 47~65쪽.

46) Oliver P. John and Sanjay Srivastava, "The Big-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eds. Oliver P. John, et al. (New York, N.Y.: Guilford Press, 1999), p. 135.

## 2)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갈등을 실현하는 방식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한반도 맥락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sup>47)</sup>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은 ‘남북 간 갈등은 모두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등 세 문항을 9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점: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으며 문항간 신뢰도는 .70이었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은 ‘전쟁이 남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은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등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신뢰도는 .64였다.

## 3) 한반도 갈등 해결의 목표

한반도 갈등 해결의 목표는 통일과 평화적 분단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통일지향성은 ‘남북한 통일은 필요하다’, ‘통일 관련(예: 통일 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탈북민 지원 등) 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통일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등 5개 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으며 문

<sup>47)</sup>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5 (2013), p. 681; Ole R. Holsti and James N. Rosenau, “The Structure of Foreign Policy Attitudes among American Leader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2, no. 1 (1990), pp. 94-125.



항간 신뢰도는 .70이었다. 분단 지향성은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 ‘남북한이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돼도 상관없다’ 등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문항간 신뢰도 = .68).

#### 4)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

우익권위주의는 우익권위주의 간편 척도 중 5개 문항을 선별,<sup>48)</sup> 7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점: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으며, 문항간 신뢰도는 .62였다. 사회지배경향은 SDO7 척도 중 지배경향을 측정하는 4문항, 반평등주의를 측정하는 4문항을 선별하여 7점 척도 측정하였다.<sup>49)</sup> 지배경향의 문항간 신뢰도는 .69, 반평등주의의 문항 간 신뢰도는 .72였다. 분석에는 지배경향과 반평등주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 5)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그리고 적대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각각 11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11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의 응답이 하나의 요인,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의 응답이 또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의 평균을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 경계

<sup>48)</sup> Ingrid Zakrisson,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no. 5 (2005), p. 870.

<sup>49)</sup> Arnold K. Ho, et al.,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 109, no. 6 (2015), p. 1028.

대상과 지원대상의 평균을 북한에 대한 부정인식으로 명명하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념은 7점 척도(1점: 매우 보수, 4점: 중도, 7점: 매우 진보)로 측정하였다.

### 3.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한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친화성을 제외한 4개 성격 특질과 이념 간 약하지만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진보적 이념( $r = .12$ ), 성실성과 보수적 이념이 각각 정적 상관( $r = .06$ )을 보인 결과는 이념과 성격 특질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진보적 이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평화를 달성하는 수단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성격 특질은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성실성이었다.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은 협력을 통한 평화에 정적 상관, 군사력을 통한 평화와는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친화성이 협력을 통한 평화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반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와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다.

성격의 5가지 특질 모두 갈등 해결 목표와 상관이 있었다.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통일과 정적 상관, 평화적 분단과는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친화성은 통일과 정적 상관,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은 평화적 분단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격이 이념, 평화를 달성하는 수단, 갈등 해결 목표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가지 정치적 태도를 예측하는 각각의 모형에 먼저 성별, 연령, 학력, 월소득을 투입하였

다. 다음으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의 수준에 따라 5개 정치적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모형에 투입되었으며,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기본적인 성격 특질에 따라 정치적 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과 기술통계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1. 친화성     | 1      |        |        |        |        |        |        |        |        |        |        |        |        |      |
| 2. 외향성     | .10**  | 1      |        |        |        |        |        |        |        |        |        |        |        |      |
| 3. 정서적 안정성 | .15**  | .15**  | 1      |        |        |        |        |        |        |        |        |        |        |      |
| 4. 성실성     | .35**  | .01**  | .29**  | 1      |        |        |        |        |        |        |        |        |        |      |
| 5. 개방성     | .25**  | .33**  | .05**  | .24**  | 1      |        |        |        |        |        |        |        |        |      |
| 6. 이념      | .04**  | .16**  | .07**  | -.06** | .12**  | 1      |        |        |        |        |        |        |        |      |
| 7. 우익권위주의  | -.05** | -.12** | -.08** | -.07** | -.03** | -.17** | 1      |        |        |        |        |        |        |      |
| 8. 사회지배경향  | -.15** | .03**  | .04**  | -.01** | -.13** | -.09** | .14**  | 1      |        |        |        |        |        |      |
| 9. 긍정이미지   | .09**  | .02**  | .04**  | .03**  | .02**  | .19**  | -.13** | .00**  | 1      |        |        |        |        |      |
| 10. 부정이미지  | -.04** | -.09** | -.15** | -.17** | .01**  | -.13** | .29**  | .03**  | -.28** | 1      |        |        |        |      |
| 11. 협력평화   | .23**  | -.05** | .09**  | .19**  | .06**  | .07**  | -.07** | -.28** | .16**  | -.16** | 1      |        |        |      |
| 12. 군사력평화  | -.11** | -.02** | -.20** | -.17** | .05**  | -.11** | .33**  | .25**  | -.11** | .42**  | -.35** | 1      |        |      |
| 13. 통일지향   | .12**  | .06**  | .02**  | .06**  | .07**  | .15**  | -.15** | -.07** | .41**  | -.33** | .29**  | -.24** | 1      |      |
| 14. 분단지향   | .04**  | -.08** | .07**  | .09**  | -.07** | -.12** | .12**  | .18**  | -.25** | .09**  | -.12** | .09**  | -.38** | 1    |
| 평균         | 3.55   | 3.01   | 2.44   | 3.59   | 3.19   | 4.3    | 4.30   | 3.46   | 6.94   | 6.38   | 6.76   | 4.89   | 3.31   | 3.22 |
| 표준편차       | 0.54   | 0.61   | 0.69   | 0.59   | 0.64   | 1.18   | 0.89   | 0.72   | 1.95   | 2.18   | 1.07   | 1.59   | 0.63   | 0.77 |

\* p < .05, \*\* p < .01,

〈표 2〉 종다 회귀 분석 결과

|               |                                   | 이념                | 협력을 통한<br>평화      | 군사력을<br>통한 평화 | 통일               | 평화적<br>분단        |
|---------------|-----------------------------------|-------------------|-------------------|---------------|------------------|------------------|
| 1단계           | 성별                                | .04***            | .01***            | -.04          | .00***           | .04***           |
|               | 연령                                | -.24***           | .12***            | -.02          | .14***           | -.04***          |
|               | 학력                                | .16***            | .08***            | -.05          | .11***           | -.11***          |
|               | 소득                                | .00***            | .02***            | -.05          | .08***           | -.02***          |
|               | R <sup>2</sup>                    | .12***            | .01***            | .01           | .02***           | .01***           |
| 2단계           | 성별                                | .04***            | .02***            | -.05          | .00***           | .03***           |
|               | 연령                                | -.23***           | .13***            | -.07*         | .17***           | -.05***          |
|               | 학력                                | .15***            | .05***            | -.02          | .10***           | -.09***          |
|               | 소득                                | -.01***           | .02***            | -.02          | .06 <sup>+</sup> | -.02***          |
|               | 우익권위주의                            | -.08***           | -.06 <sup>+</sup> | .32***        | -.16***          | .10***           |
|               | 사회지배경향                            | -.06 <sup>+</sup> | -.27***           | .21***        | -.04***          | .16***           |
|               | R <sup>2</sup> (ΔR <sup>2</sup> ) | .13(.01)***       | .08***            | .15           | .03***           | .04***           |
| 3단계           | 성별                                | .04***            | .01***            | -.03          | -.01***          | .04***           |
|               | 연령                                | -.25***           | .11***            | -.05          | .13***           | -.03***          |
|               | 학력                                | .15***            | .04***            | .02           | .07***           | -.09***          |
|               | 소득                                | -.02***           | .01***            | -.02          | .05***           | .00***           |
|               | 우익권위주의                            | -.05***           | -.01***           | .21***        | -.04***          | .06 <sup>+</sup> |
|               | 사회지배경향                            | -.06***           | -.28***           | .22***        | -.05***          | .16***           |
|               | 긍정이미지                             | .18***            | .12***            | .02           | .34***           | -.23***          |
|               | 부정이미지                             | -.03***           | -.11***           | .36***        | -.22***          | .00***           |
|               | R <sup>2</sup> (ΔR <sup>2</sup> ) | .16(.03)***       | .03***            | .11***        | .19***           | .05***           |
| 4단계           | 성별                                | .03***            | .02***            | -.03***       | -.02***          | .05***           |
|               | 연령                                | -.23***           | .10***            | -.03***       | .14***           | -.05***          |
|               | 학력                                | .15***            | .03***            | .03***        | .07***           | -.10***          |
|               | 소득                                | -.01***           | .01***            | -.03***       | .05***           | .00***           |
|               | 우익권위주의                            | -.04***           | .00***            | .20***        | -.04***          | .07***           |
|               | 사회지배경향                            | -.06***           | -.26***           | .23***        | -.03***          | .17***           |
|               | 긍정이미지                             | .17***            | .12***            | .02***        | .33***           | -.24***          |
|               | 부정이미지                             | -.04***           | -.09***           | .33***        | -.23***          | .02***           |
|               | 친화성                               | .03***            | .14***            | -.04***       | .08***           | .07***           |
|               | 외향성                               | .09***            | -.07**            | .02***        | .02***           | -.08***          |
|               | 안정성                               | .06 <sup>+</sup>  | -.05***           | .13***        | .04***           | -.07***          |
|               | 성실성                               | -.13***           | .10***            | -.07**        | -.03***          | .09***           |
|               | 개방성                               | .05***            | .00***            | .11***        | .05***           | -.05***          |
|               | R <sup>2</sup> (ΔR <sup>2</sup> ) | .19(.03)***       | .05***            | .04***        | .01***           | .03***           |
| Durbin-Watson |                                   | 1,67              | 1,78              | 1,70          | 1,77             | 1,72             |

## 1) 성격이 이념에 미치는 영향

이념을 예측하는 모형의 첫 번째 단계의 결과를 보면,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자신을 보수라고 인식하였으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을 진보라고 인식하였다. 전체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이념 중 13%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이념을 예측하는 두 번째 단계 결과를 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 한 후,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은 이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익권위주의( $\beta = -.08, p < .01$ )와 사회지배경향( $\beta = -.06, p < .10$ )이 강할수록 자신을 보수라고 인식하였다.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이념을 예측하고 남은 고유한 설명량 중 1%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그리고 두 동기적 믿음이 이념을 예측하고 남은 고유한 설명량 중 3%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 중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질수록 자신을 진보라고 인식하였다( $\beta = .18, p < .001$ ).

인구통계학적 변수, 이념의 동기적 믿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통제 한 후 성격의 5가지 기본 특질은 이념 예측력의 3%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가지 성격 특질 중 외향성, 성실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이 이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외향성이 높을수록( $\beta = .09, p < .01$ ), 정서적으로 안정적일수록( $\beta = .06, p < .01$ ) 자신을 진보라고 인식하였으며 성실성이 높을수록( $\beta = -.13, p < .001$ ) 자신을 보수로 인식하였다.

## 2) 성격이 평화를 달성하는 수단에 미치는 영향

평화를 달성하는 수단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의 변량을 각각 1% 설명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령( $\beta = .12, p < .01$ )과 학력( $\beta = .08, p < .05$ )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을 예측하는 두 번째 단계 결과를 보면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은 평화를 실현하는 두 수단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익권위주의( $\beta = .32, p < .001$ )와 사회지배경향( $\beta = .21, p < .001$ )이 강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이었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우익권위주의( $\beta = -.06, p < .10$ )와 사회지배경향( $\beta = -.27, p < .001$ )이 약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선호하였다.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학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예측하고 남은 고유한 설명량 중 각각 8%와 15%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협력을 통한 평화를 정적으로( $\beta = .12, p < .001$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협력을 통한 평화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beta = -.11, p < .001$ ).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앞선 두 단계의 변수를 통제한 후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의 변량을 3% 설명하였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유의미한 예측변수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이었다( $\beta = .36, p < .001$ ). 북한에 대한 두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그리고 두 동기적 믿음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예측하고 남은 고유한 설명량 중 11%를 설명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이념의 동기적 믿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통제한 후 성격의 5가지 기본 특질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추가적으로 각각 5%와 4%를 설명하였다. 5가지 성격 특질 중 두 유형의 평화실현 방식에 모두 영향을 미친 성격 특질은 성실성이었다. 성실성이 높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인 반면( $\beta = .10, p < .01$ ).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부정적이었다( $\beta = -.07, p < .05$ ). 친화성과 외향성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친화성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정적으로( $\beta = .14, p < .001$ ), 외향성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beta = -.07, p < .05$ ).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은 모두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beta = .13, p < .001, \beta = .11, p < .001$ ).

### 3) 성격이 갈등 해결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

통일에 대한 선호를 예측하는 모형 중 1단계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beta = .14, p < .001$ ), 학력을 높을수록( $\beta = .11, p < .01$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beta = .08, p < .05$ )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적 분단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학력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평화적 분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8, p < .05$ ).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통일선호의 1%의 변량, 평화적 분단 선호의 2%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통일에 대한 선호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우익권위주의는 통일에 대한 선호를 부적으로 예측하였지만( $\beta = -.16, p < .001$ ), 사회지배경향은 통일에 대한 선호를 예측하지 못했다. 우익권위주의( $\beta = .10, p < .01$ )와 사회지배경향( $\beta = .16, p < .001$ )은 모두

평화적 분단 선호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념에 대한 두 동기적 믿음은 통일에 대한 선호 변량의 3%, 평화적 분단에 대한 선호 변량의 4%를 설명하였다.

갈등 해결 목표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에서 3단계로 투입한 북한에 대한 두 유형의 인식은 통일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였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통일에 대한 선호를 정적으로( $\beta = .34, p < .001$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통일에 대한 선호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beta = -.22, p < .001$ ).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만이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인식이 강할수록 평화적 분단에 대한 선호가 약했다( $\beta = -.23, p < .001$ ). 북한에 대한 두 인식은 통일에 대한 선호와 평화적 분단에 대한 선호의 변량을 추가적으로 각각 19%와 5%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4단계 분석 결과 성격은 갈등 해결의 목표에 대한 선호를 예측하였다. 성격의 5가지 특질 중 통일에 대한 선호를 예측하는 성격 특질은 친화성이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일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beta = .08, p < .01$ ).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는 개방성을 제외한 4개 특질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었다. 친화성이 높을수록( $\beta = .07, p < .05$ ), 외향성이 낮을수록( $\beta = -.08, p < .05$ ), 정서적 안정성이 낮을수록( $\beta = -.07, p < .05$ ), 성실성이 높을수록( $\beta = .09, p < .05$ )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였다. 성격은 통일을 1%, 평화적 분단을 3%의 변량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 IV. 논의와 결론

본 연구는 적대적 집단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의 선호에 미치는 성격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격이 한반도 갈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인식을 예측하는 정도를 탐색하였다. 성격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은 주로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 서구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적대적 집단의 위협에 현저하게 노출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태도 형성 과정이 평화로운 국가의 정치적 태도의 형성 과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먼저 외부의 위협이 현저한 상황에서는 성격과 같은 내적인 속성보다는 당면한 위협, 즉 외적인 속성이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성격이 이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갈등 해결의 목표 등 다양한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조명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성격이 이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갈등 해결의 목표 등 본 연구에서 조사한 모든 정치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 유형의 성격 특질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우익권 위주의, 사회지배경향, 그리고 북한에 대한 두 인식을 통제하고도 이념의 3%를 설명하였다. 서구 연구에서 이념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알려진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이 한국인의 이념을 1%, 한국인의 이념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변수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두 인식이 이념을 3%를 설명하는 것과 비교하면 성격이 한국인의 이념을 3% 설명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성격이 이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일관적이지만 각 성격 요인의 개별적 영향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그리고 그 차별성은 갈등의 사회적 맥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실성이 보수적인 이념을 예측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되지만 이념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성격 특질인 개방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관적이지 않다. 또한 이념을 예측함에 있어 크게 영향이 없다고 알려진 외향성이 진보적 이념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 역시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결과이다.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민족적 정체성이 높다. 또한 한반도의 갈등은 민족 간 갈등이 아닌 같은 민족 간 갈등이라는 점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고착화된 갈등(intractable conflict)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협과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험적이고 도전을 즐기는 외향적 성격 특성이 이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정서적 안정성이 진보적 이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결과 역시 한반도 갈등상황이 야기하는 부정적 정서를 대처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의해 야기되는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보의 특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친화성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그라벨르 등(2020)의 결과와 일관적이다. 또한 갈등 중인 집단의 규범이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협력을 통한 평화라는 주장을 고려하면,<sup>50)</sup> 성실성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정적으로,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 역시 선행연구와 일관적이다.

<sup>50)</sup>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Leonie Huddy, et al.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923-956.

반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무관하지만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남북 두 당사자의 문제로 보는 시각과 남북의 갈등을 한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협력을 통한 관여를, 후자는 제재를 중심으로 한 압박정책을 선호한다. 이런 점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 사람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향성이 협력을 통한 평화를 부적으로 예측하고, 정서적 안정성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본 연구 결과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이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정서적 안정성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의 정적 관계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향적인 개인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 결과는 설명하기 힘들다.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이 진보의 지배적 정책,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이 보수의 지배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이념에 미치는 영향과도 일관적이지 않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갈등의 대상인 북한이 협력의 대상이자 적대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진보는 북한이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적대의 대상이라는 점 역시 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보수 역시 적대의 대상이라는 인식과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가적인 북한의 특성이 정치적 태도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념은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의 질문을 상기시키는 반면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고려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에 질문을 상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질문은 서로 다른 위험과 도전, 정서적 반응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격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친화성은 통일에 대한 선호와 평화적 분단에 대한 선호를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결과는 한국인들이 남북이 통일의 방식이건 평화적 분단의 방식이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화성 외에 다른 성격 특질들은 통일에 대한 선호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는 통일을 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에게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로 쉽게 반대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반면 평화적 분단에 대해서는 친화성과 더불어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통일이 가져오는 무질서를 고려하면 성실성과 평화적 공존의 정적 관계는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 외향성 및 정서적 안정성과 평화적 공존의 부적 관계는 구체적 설명이 힘들어 보인다.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서 관찰된 결과와 종합해 본다면,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갈등 중인 집단의 정치이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격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였다. 본 연구는 특히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에서 성격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전쟁이라는 현저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도 성격이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로서 성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동시에 본 연구는 성격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구 국가에서 성격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차이를 갈등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만족스러운 설명도 존재하지만 선행연구와 일관되지 않는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성격과 갈등의 성격, 갈등과 관련된 중요한 심리적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한반도 갈등의 핵심 요소인 북한에 대한 인식이 성격 유형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5요인의 개별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섯 가지 성격 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현실적이다. 즉 한 개인은 개방성은 높은 수준, 성실성은 중간 수준, 외향성은 낮은 수준 등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다섯 가지 요인이 함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성격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전쟁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맥락과 성격의 상호작용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는 성격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갈등 맥락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반도 갈등의 특성과 성격의 상호작용이 다른 맥락, 예를 들어 인종 간 갈등, 다른 유형의 국가 간 갈등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 접수: 2023년 11월 13일 / 심사: 2023년 11월 30일 / 게재 확정: 2023년 12월 6일

## 【참고문헌】

- 박주화, 김갑식, 이민규, 최훈석, 박형인, 현인해, 권영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Allport, Gordon W.,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N. Y.: Holt, Rinehart & Winston, 1961.
- Bar-Siman-Tov, Yaacov,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Mondak, Jeffery J., *Personality and the Foundations of Political Behavior*,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Phares, E Jerry,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O.H.: Merrill, 1988.
- Ramsbotham, Oliver, Hugh Miall,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1.
- 권수현,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통일정책연구』 제 26권 1호, 2017, 177~204쪽.
- 김지현 · 김복환 · 하문선,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제32권 1호, 2011, 47~65쪽.
- 김현정 · 박상희 · 박영옥,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4호, 2015, 103~32쪽.
- 남궁곤, 「외교정책과 여론: 'Almond - Lippmann Consensus'와 그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15권 1호, 1999, 31~64쪽.
- 윤광일,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국방연구』 제62권 4호, 2019, 25~66쪽.
- 이하연 외, 「사회적 신념 및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 조절 및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5권 4호, 2021, 27~47쪽.
- 최미숙 · 박지영, 「유아용 5요인(Big Five) 성격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3권 3호, 2013, 281~299쪽.

- 한정훈,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4호, 2016, 105~126쪽.
- 허지영, 「고질갈등 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반도 갈등과 갈등의 평화적 전환 접근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제22권 1호, 2021, 75~99쪽.
- Alford, John R., Carolyn L. Funk and John R. Hibbing, “Are Political Orientations Genetically Transmitt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2 (2005), pp. 153-167.
- Altemeyer, Bob,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1998), pp. 47-92.
- Bakker, Bert N. and Claes H. de Vreese, “Personality and European Union Attitudes: Relationships across European Union Attitude Dimensions,” *European Union Politics*, vol. 17, no. 1 (2016), pp. 25-45.
- Bar-Tal, Danie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eds.,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923-956.
- Bar-Tal, Daniel,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vol. 21, no. 2 (2000), pp. 351-365.
- Barbaranelli, Claudio, Gian Vittorio Caprara, Michele Vecchione and Chris R. Fraley, “Voters’ Personality Traits in Presidential Ele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2, no. 7 (2007), pp. 1199-1208.
- Bizumic, Boris, Rune Stubager, Scott Mellon, Nicolas Van der Linden, Ravi Iyer and Benjamin M. Jones,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5 (2013), pp. 673-693.
- Blumberg, Herbert H, Ruth Zeligman, Liat Appel and Shira Tibon-Czopp, “Personality Dimensions and Attitudes Towards Peace and War,”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vol. 9, no. 1 (2017), pp. 13-23.
- Caprara, Gian Vittorio, Shalom Schwartz, Cristina Capanna, Michele Vecchione and Claudio Barbaranelli, “Personality and Politics: Values,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olitical psychology*, vol. 27, no. 1 (2006), pp. 1-28.
- Carney, Dana R., John T. Jost, Samuel D. Gosling and Jeff Potter, “The Secret Lives

-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Personality Profiles, Interaction Styles, and the Things They Leave Behind,” *Political Psychology*, vol. 29, no. 6 (2008), pp. 807-840.
- Cavarra, Mauro, Virginia Canegallo, Erika Santoddi, Erika Broccoli and Rosa Angela Fabio, “Peace and Person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Traits and the Peace Attitude Scale,”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27, no. 3 (2020), pp. 508-511.
- Cichocka, Aleksandra, and Kristof Dhont, “The Personality Bases of Political Ideology and Behavior,” in Virgil Zeigler-Hill and Todd K. Shackelford, eds., *The Sage Handbook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e. Thousand Oaks, C.A.: SAGE, 2018, pp. 325-352.
- Crichlow, Scott, “Legislators’ Personality Traits and Congressional Support for Free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5 (2002), pp. 693-711.
- Dyson, Stephen Benedict, “Personality and Foreign Policy: Tony Blair’s Iraq Decisions,” *Foreign Policy Analysis*, vol. 2, no. 3 (2006), pp. 289-306.
- Ekehammar, Bo, Nazari Akrami, Magnus Gylje and Ingrid Zakrisson, “What Matters Most to Prejudice: Big Five Personalit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r Right-Wing Authoritarianis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18, no. 6 (2004), pp. 463-482.
- Eryilmaz, Ali, “Relationship of Peace Attitudes with Personality Traits, Gender and Age Groups,” Dusunen Adam *The Journal of Psychiatry and Neurological Sciences*, vol. 27, no. 2 (2014), pp. 138-146.
- Furr, R Michael, and David C. Funder. “Persons, Situations, and Person-Situation Interactions,” in Oliver P. John and Richard W. Robin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2018, pp. 667-685.
- Gallagher, Maryann E. and Susan H. Allen, “Presidential Personality: Not Just a Nuisance,”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0, no. 1 (2014), pp. 1-21.
- Gallego, Aina and Daniel Oberski, “Person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ediation Hypothesis,” *Political behavior*, vol. 34 (2012), pp. 425-451.
- Gerber, Alan S, Gregory A Huber, David Doherty and Conor M Dowling, “Personality Traits and the Consumption of Political Information,” *American Politics*



- Research*, vol. 39, no. 1 (2011), pp. 32-84.
- Gerber, Alan S., Gregory A. Huber, David Doherty and Conor M. Dowling, "Disagreement and the Avoidance of Political Discussion: Aggregate Relationships and Differences across Personality Trai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6, no. 4 (2012), pp. 849-874.
- Gerber, Alan S., Gregory A. Huber, David, Doherty, Conor M. Dowling and Shang E. Ha, "Personality and Political Attitudes: Relationships across Issue Domains and Political Contex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4, no. 1 (2010), pp. 111-133.
- Goldberg, Lewis R.,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 no. 1 (1981), pp. 141-165.
- Goldberg, Lewis R.,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6 (1990), pp. 1216-1229.
- Gravelle, Timothy B, Jason Reifler and Thomas J Scotto, "Personality Traits and Foreign Policy Attitudes: A Cross-National Exploratory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53 (2020), p. 109607.
- Ha, Shang E, Seokho Kim and Se Hee Jo, "Personality Trai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4 (2013), pp. 511-532.
- Hatemi, Peter K., John R. Alford, John R. Hibbing, Nicholas G. Martin and Lindon J. Eaves, "Is There a "Party" in Your Gen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2, no. 3 (2009), pp. 584-600.
- Ho, Arnold K., Jim Sidanius, Nour Kteily, Jennifer Sheehy-Skeffington, Felicia Pratto, Kristin E. Henkel, Rob Foels and Andrew L. Stewart,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 109, no. 6 (2015), pp. 1003-1028.
- Holsti, Ole R,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Challenges to the Almond-Lippmann Consensu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6, no. 4 (1992), pp. 439-466.
- Holsti, Ole R. and James N. Rosenau, "The Structure of Foreign Policy Attitudes

- among American Leader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2, no. 1 (1990), pp. 94-125.
- Jang, Kerry L., W John Livesley and Philip A. Vernon, “Heritability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Their Facets: A Twi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vol. 64, no. 3 (1996), pp. 577-592.
- John, Oliver P., and Sanjay Srivastava. “The Big-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Oliver P. John, Richard W. Robins and Lawrence A. Pervin,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1999, pp. 114-158.
-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2009), pp. 307-337.
- Kertzer, Joshua D and Thomas Zeitzoff, “A Bottomup Theory of Public Opinion About Foreign Poli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1, no. 3 (2017), pp. 543-558.
- Leshem, Oded Adomi and Eran Halperin, “Lay Theories of Peace and Their Influence on Policy Preference During Violent Conflic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17, no. 31 (2020), pp. 18378-18384.
- Mondak, Jeffery J., Damarys Canache, Mitchell A. Seligson and Matthew V. Hibbing, “The Participatory Personality: Evidence from Lat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1 (2011), pp. 211-221.
- Mondak, Jeffery J., Matthew V. Hibbing, Damarys Canache, Mitchell A. Seligson and Mary R. Anderson, “Personality and Civic Engagement: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Trait Effects on Political Behavi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1, no. 1 (2010), pp. 85-110.
- Orian Harel, Tal, Ifat Maoz and Eran Halperin, “A Conflict within a Conflict: Intragroup Ideological Polarization and Intergroup Intractable Conflict,”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vol. 34 (2020), pp. 52-57.
- Pratto, Felicia, Jim Sidanius, Lisa M. Stallworth and Bertram F. Mall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pp. 741-763.

- Salomon, Gavriel, "The Nature of Peace Education: Not All Programs Are Created Equal," in Gavriel Salomon and Baruch Nevo, eds., *Peace Education: The Concept, Principles, and Practices around the World*,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2002, pp. 3-13.
- Schoen, Harald, "Personality Traits and Foreign Policy Attitudes in German Public Opin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3 (2007), pp. 408-430.
- Schoen, Harald and Siegfried Schumann, "Personality Traits, Partisan Attitudes, and Voting Behavior. Evidence from Germany," *Political Psychology*, vol. 28, no. 4 (2007), pp. 471-498.
- Sibley, Chris G. and John Duckitt, "Personality and Prejudice: A Meta-Analysis and Theoretical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2, no. 3 (2008), pp. 248-279.
- Sibley, Chris G, Danny Osborne and John Duckitt, "Personality and Political Orientation: Meta-Analysis and Test of a Threat-Constraint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46, no. 6 (2012), pp. 664-677.
- Van der Linden, Nicolas, Boris Bizumic, Rune Stubager and Scott Mellon, "Social Representational Correlates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A Cross-Cultural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7, no. 3 (2011), pp. 217-242.
- Zakrisson, Ingrid,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no. 5 (2005), pp. 863-872.

## The Effect of Personality on Political Attitudes : The Case of The Inter-Korea Conflict

Lee, Youjung (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Rhee, Minkyu (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ersonality on political attitudes within a social context characterized by prolonged exposure to violent conflicts, such as wars.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five personality factors - 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emotional stability, and openness to experience - influence perceptions of unification, tendencies toward division, the pursuit of peace through cooperation, the pursuit of peace through military means,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five personality facto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olitical attitud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issue. However, our findings do not align with previous studies carried out in peaceful Western nations where individuals do not directly experience the threat of war.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impact of an individual's personality on political attitudes occurs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social context surrounding the individual.

Keywords: Personality,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erceptions on Unification, Tendencies toward Division, Intractable Conflict

**이유정(Lee, Youjung)**

---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관심분야는 정서와 성격이다. 그중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구성개념행위이론과 정서입자도가 현재의 주요 관심분야이다.

**이민규(Rhee, Minkyu)**

---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정신병원) 임상심리과에서 임상심리전문가로 역할을 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도박장애에 대한 DSM-5 진단기준의 신뢰도, 타당도 및 분류 정확성: DSM-IV와 비교”(2020), “Exploring variables to predict perceptions toward the need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20 years young people : Application of Decision Tree Model”(공동연구, 2019) 등이 있다.



일반논문

## 베트남 공산 통일 이후 경제적 갈등 해소 전략

정호근 (동국대)\*

김수연 (경기대)\*\*

### 국문요약

1975년 공산 통일 이후 베트남 당국은 인민의 절대적 빈곤 악화로 형성된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鬪鬻, 쇄신)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당국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인민들의 저항으로 인한 갈등형성을 인식했고 관리와 해소를 위해 분투했다. 아래로부터 변화 요구에 반응한 것이다.

베트남이 공산 통일 이후 왜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갈등 구조 관리와 해소 전략적 관점에서 세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① 기존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베트남이 공산 통일 10여 년 만에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도이머이 정책의 첫 번째 함의는 인민과의 갈등 구조 심화로 실기할 경우 인민에 의한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당국이 최악으로 떨어진 인민의 경제적 삶을 사회주의혁명과 헌법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향유케 하려는 진정성의 발로라 할 수 있다. ② 어떤 체제이든 인민의 위상이 ‘정치적 대상’이 아닌 단지 집단적인 조직체로의 ‘통치의 대상’일 경우, 갈등 구조는 형성 그 자체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인식되어도 체제 유지와 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차원에서 무시되기 마련이다. ③ 부단한 경제적 조치와 개혁·개방의 당위는 인민을 정치의 대상으로, ‘갈등 구조의 상대’로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통일 이후 대내외적인 원인으로 파생된 경제 악화로 형성된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2.202312.235>

\* 제1저자

\*\* 교신저자: moth1224@naver.com

인민과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가 담긴 수많은 ‘당 결정’, ‘정부 결의’ 등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는 인민을 갈등 구조의 상대로 인식하고 해소의 해법인 ‘도이머이 전략’을 위한 밑알이었다.

도이머이 전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로 비탄에 빠진 인민을 구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으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다.

주제어: 도이머이, 갈등 구조, 저항, 신헌법, 시장경제

## I. 서론

### 1. 문제의식 및 연구 목적

베트남은 1975년 사회주의체제로 공산 통일 이후 계속된 계획경제 실패로 인민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었다. 공산 통일 이후 모든 인민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사회주의 체제화는 연속적인 경제정책 실패로 물거품이 되어 당국과 인민의 ‘경제적 갈등’은 첨예화되었고 체제 붕괴를 우려해야 할 정도였다. 루이스 코저(Lewis Coser)는 갈등의 대표적인 원인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정의가 증가할 때 피지배층은 지배층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sup>1)</sup>고 했다. 동서고금에서 ‘갈등’은 항상 존재했고 갈등의 순기능은 국가 발전을 넘어 역사 발전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반면, 갈등의 역기능은 제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파멸적인 재앙을 낳기도 한다. 특히 베트남은 공산 통일 이후 경제적 상황 악화로 파생된 당국과 인민의 경제적 갈등은 국가 경제

---

1) 조나단 H. 터너 저, 김진균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2), 218~219쪽.



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러한 경제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여 1995년에는 아세안과 AFTA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 1월 11일에 WTO에 가입하여 180여 개국과 무역을 확대하며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 국가로서 경제의 세계화를 이룩하였다. 아울러 시장경제 도입은 통일 이후 절망적이던 인민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았으며, 지속적인 체제개혁은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 당국의 ‘경제적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민족해방전쟁의 승리로 공산 통일을 완수한 베트남 공산당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갈등 구조는 해소하였다. 그래서 베트남 공산당은 통일 이후 남부지역의 사회주의체제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산당은 프랑스, 미국과의 전쟁으로 더 이상 무너지 질 것이 없는 인민의 경제 상황에서 연간 공업성장률 16~18%, 농업 성장률 8~10%, 국민소득 증가율 13~14%를 목표로 하는 야심찬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거창한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개발 원년인 1976년 설날 교조적 공산주의자인 당 서기장 레 주언(Le Duan)은 베트남 국민에게 향후 5~10년 후에 보아나오는 생활을 약속하였고, 10년 후 가정마다 라디오, 냉장고, 텔레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진정한 공산국가가 완성될 것이라고 천명했다.<sup>2)</sup> 통일된 베트남 당국은 사회주의체제 공고화만이 당면과제였다. 사회 전 분야의 사회주의 개조작업을 위한 당국의 ‘지시·방침, 행정명령, 정부 결정’ 등의 조치로 레 주언의 언설을 뒷받침하려 하였다.

그러나 소련, 중국과 같이 ‘발전된 사회주의체제’ 건설이라는 당국의

2) 「베트남 도이모이, 인플레이 극복하고 번영 이끌다」 『아틀라스뉴스(Atlasnews)』 (온라인), 2021년 1월 18일,  
<http://www.atlas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168>

장밋빛 환상과는 달리 현실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통일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경제개발 정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10여 년간의 미국과의 전쟁은 산업시설이 초토화되어 기초적 사회자본이 부족한 상태였고, 뒤이은 캄보디아 침공, 중월전쟁,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인한 과도한 국방비 부담과 국제적 고립은 점입가경이었다. 베트남의 대내외 여건은 소련의 전례에 따른 ‘사회주의적 원시축적’(primitive socialist accumulation)<sup>3)</sup>을 통한 중공업 발전과 인민의 경제·문화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발전된 사회주의체제 목표 달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화의 기본적 단계인 농업집체화를 위한 ‘합작사’ 참여를 거부하는 남부지역의 메콩델타에서 농민들의 조직적 저항은 1970년대 말 정부 수매에 대한 거부로 식량 위기를 초래하였다. 급기야 도시에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 세계 1, 2위의 쌀 생산국인 베트남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공산 통일 이후 베트남은 사회주의 혁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침몰 직전의 총체적 난파선 상태였다.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는 다름 아닌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정글 속의 유격 전술이었다. 그렇지만 통일 이후 베트남 공산당은 남베트남 인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화도 정글 속에서 미국을 이긴 혁명정신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으로 일관하였으나 선부른 판단이었다. 공산 통일 이후 경제적 난관에 부딪힌 당국은 인민과의 경제적 갈등 구조로 인한 침몰 직전의 난파선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이긴 유격 전술이 아닌 인민을 위한,

3) ‘사회주의적 원시축적’은 스탈린 시기 중공업 우선 정책을 입안한 경제학자 예브게니 프레오브라젠스키(Evgeny Preobrazhensky)가 주장한 것으로, 산업경제를 위해서는 소련의 농업경제가 타 산업에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높으니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저축은 농촌에서 나와야 한다는 전략.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스탈하노프운동 및 대약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 0권0호 (1993), 46~47쪽.

경제적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고차원의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여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미국과 긴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 공산당이 남베트남 지역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유화 조치에 대한 예상외 인민의 조직적 반발은 당국과 인민 간 갈등 구조의 서막이었다. 당국과 인민 간의 경제적 갈등은 통일 이후 사회주의 체제화를 위한 정치적 결단과 각종 행정명령을 통한 경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화되어 갔다. 그러나 중국에는 갈등 구조를 양산한 ‘계획경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인민에 대한 탄압 없이, 정치적 혼란 없이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1980년 제2차 개헌인 ‘사회주의 신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갈등 해소 전략을 살펴본다.

## 2.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 1) 기존 연구 검토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후 고전적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체제를 개혁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의 일원이 되었다. 탈냉전을 전후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system change)라는 개념에는 이른바 ‘체제전환’(transformation)과 ‘체제개혁’(reform)을 포괄하고 있다.<sup>4)</sup> 코르나이는 현실사회주의의 체제변화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 변화의 내용에서의 ‘깊이’(depth)와 속도에서의 ‘급진성’(radicalism)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내용에서의 부분성과 속도에서의 온건성일 경우 그것은 ‘개혁’(reform)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용이 전면적이고

4) 김근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에서」 『통일과 평화』 2집 2호 (2010).

속도에서도 급진적일 경우 그것을 ‘혁명’(revolu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sup>5)</sup> 김근식과 코르나이의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 채 인민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으로 체제변화 중에서 ‘체제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아래로부터인가 위로부터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아래로부터 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은 개혁이 국민의 저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뜻이고, 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당국이 개혁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는 뜻이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국민의 요구와 공산당 및 정부의 지도가 조화롭게 합쳐져서 개혁 정책을 채택했다고 천명했다.<sup>6)</sup> 개혁은 갈등 해소의 수단이다. 안승욱은 도이머이 정책 도입에 대해 시장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당국의 ‘위에서부터 아래로’(top-down)의 개혁이 실패하고,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인민에 의한 ‘아래에서부터 위로’(bottom-up)의 추세가 성공하는 전례 없는 사건<sup>7)</sup>으로 평가했다. 즉 베트남은 공산 통일 이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도이머이 정책 도입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한 것으로 당국과 인민의 드라마틱한 ‘win-win’인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를 보면,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은 인민에 의해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체제전환을 하였고, 동독은 아예 서독에 흡수되어 버렸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한 덩소평의 정치적 결단이었다.<sup>8)</sup> 소련의 체제전환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으

5)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86-392.

6) 『아주경제』 2002년 2월 16일.

7) 안승욱,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의 내용과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Vol.2 No.2 (1997), 30쪽.

8) 덩소평은 1992년 1월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발전이 이치에 맞으며 가난은

로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체제전환과 관련한 기존 연구와 함께 베트남의 체제변화를 ‘경제적 갈등’으로 판단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한우는 통일 이전 공산주의자들의 지지기반이었던 농민들이 통일 이후 저항세력으로 등장하여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수정하는 개혁의 주요한 원인이 된 역사적 역설을 논구하며 당국과 인민의 갈등을 ‘일상적 저항’으로 표현하였다.<sup>9)</sup> 안승옥은 베트남 당국을 ‘약한 정부’<sup>10)</sup>로 규정하고 당국의 도이머이 정책 전환이 ‘아래에서부터 위로’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기 드문 현상으로 인식, 당국의 계속된 경제정책 실패로 빚어진 인민과 갈등이 사회변동으로 이어졌음을 관찰하였다.<sup>11)</sup> 이강우는 통일 이후 베트남의 경제구조를 당국에 의한 1차 경제와 인민에 의한 2차 경제로 나누어진 이중구조로 분석하였다. 경제 악화로 인한 합법, 불법을 불문한 인민들의 생존 투쟁으로 파생된 2차 경제는 당국의 경제적 개혁 조치와 중국에는 도이머이 정책으로 수렴된 것으로 연구되었다.<sup>12)</sup> 김현숙은 공산 통일을 이룩한 베트

---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언명했다. 이희옥, 「중국공산당 100년의 궤적과 ‘중국의 길’ 독해법」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아시아 브리프』 1권 27호 (2021), 2~3쪽.

- 9) 이한우,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아세아연구』 제50권 3호 (2007).
- 10) ‘약한 정부’ 표현은 Adam Fforde and De Vylder가 공산 통일된 베트남을 10여년간 관찰하고 집필한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6), p. 290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저자들은 통일 정부가 남부 베트남을 사회주의 체제로 강력하게 장악하지 못한 능력을 은유한 것으로 약한 정부로 인식된 당국은 인민과의 갈등 구조를 형성하지만, 중국에는 해소를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 표현은 베트남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다.
- 11) 안승옥,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의 내용과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Vol.2 No.2 (1980).
- 12) 이강우,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2010).

남이 도이며이 정책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는 대내적인 요인으로 제2차 경제개발계획(1976~1980년)의 실패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 남부지역에 대한 급속한 사회주의 체제화에 대한 인민의 반발, 그리고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보수파와 개혁파의 정치적 갈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적인 요인은 1978년 캄보디아 침공, 1979년 중월전쟁으로 국방비 과중, 미국 중심의 경제제재 조치와 해외원조 중단 등으로 경제적 상황은 악화일로였음을 분석하였다.<sup>13)</sup> 즉 내우외환은 갈등 구조 형성의 핵심이었음을 피력하였다. 멜라니 베레스포드(Melanie Beresford)는 베트남 당국은 북베트남의 통일전략이 미국에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이 남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화를 낙관하였음을 언급하면서 당국의 판단 착오를 적시하였다. 애초 통일 정부는 남베트남의 경제적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과대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후 경제 복구의 난항, 거둬들인 흉작, 캄보디아·중국과 분쟁, 미국의 경제봉쇄, 상업자본가들의 부정행위, 당원과 국가 관료들의 무능력과 부패, 중국과의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피력하고 있다.<sup>14)</sup> 이로 인한 인민의 경제적 빈곤은 최악이었음은 불문가지였다. 도이며이 이전 베트남 거리의 서사에 대해 일본 기자 나토 코우지(名東者二)는 길가의 보도(步道)는 여러 가지 상거래의 장소로 목도(어깨에 메는 물건 담은 베트남식 지게)를 맨 여성이 노상에다 야채를 펼쳐놓으면, 그것이 곧 채소가게가 되고, 담배 몇 개비를 늘어놓으면 그것 또한 담배 가게가 되었다. 여기에 자전거 수리, 거리 이발소, 우동집 등이 모여 불규칙하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도시의 보도는 중요한 대화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즉 도시

13) 김현숙, 「베트남 체제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국제기구의 굿 거버넌스 정책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4) Melanie Beresford, "Vietnam: northernizing the south or southernizing the north?" *Contemporary Southeast Asia*, 8(4) (1987), pp. 261-263.

의 보도는 ‘공공의 리빙룸’이라고 하였다.<sup>15)</sup> 기자의 눈에 비친 베트남 인민의 경제적 삶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한 갈등 구조를 배태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나는 베트남 농촌사회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분에서 농촌 변화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시각’들은 사회 저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면서 농민의 일상적 대응이 국가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6)</sup> 켈크브릿(Kerkvliet)도 오히나와 유사하게 도이머이 이전 농촌 지역의 일상적 생계 전략을 ‘일상의 정치’로 규정, 농민이 정책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의 일상적 대응이 국가 정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주장한다.<sup>17)</sup>

위와 같이 도이머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와 저서는 ‘갈등 구조’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일상적 저항, 정치’, ‘bottom-up’, ‘이중구조’, ‘공공의 리빙룸’, ‘아래로부터’ 등의 관점은 경제적 상황 악화로 형성된 당국과 인민 간 갈등 관계를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이론적 논의

‘갈등’(conflict)의 사전적 의미는 ‘상반(相反)하는 것이 양보하지 않고 대립’으로 정의되어 있다. 일찍이 막스 베버(Max Weber)는 갈등을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관철을 시도하는 행위자의 의도적 행위<sup>18)</sup>라고 포

15) 나토 코우지(名東者二) 저, 조찬환 역, 『공산권의 지하경제』 (서울: 디딤돌, 1988), 173~174쪽.

16) 오히나, 『베트남의 농촌개혁과 공업화 전개 과정: 농민의 가구경제 다변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1~13쪽.

17) Benedict J.T. Kerkvliet, *The Power of Everyday Politics: How Vietnamese Peasants Transformed National Policy* (N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괄적으로 의미하였다. 그리고 제임스 도허티(James E. Dougherty)는 통상 특정한 한 집단(종족적·인종적·언어적·문화적·사회경제적·정치적 등)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정 집단과 양립될 수 없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의식적인 대립 관계에 빠져 있는 상태<sup>19)</sup>라고 하였다.

루이스 코저(Lewis Coser)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불평등한 체계에 속한 피지배층이 현존하는 희소 자원 분배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때 특히 불만을 시정하기 위한 통로가 거의 없을 경우나, 보다 특권적 지위로의 사회이동률이 낮을 경우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둘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정의가 증가할 때 피지배층은 지배층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또한, 피지배층의 사회화 경험이 내적으로 자아 구속력을 넘어서는 범위와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외적 강제를 적용하는데 실패할 경우 갈등의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분석했다.<sup>20)</sup> 이와 관련 집단적 갈등의 원인과 성격에 대하여 에드워드 아잘(Edward Azar)은 “집합적 행위주체 사이의 대립이 상호 간 이익과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상충을 가져오는 현상”<sup>21)</sup>으로 분석한 바 있다. 사실상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표출되는 ‘갈등’은 그 주체와 행위 양상, 그리고 기능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2)</sup> 요약한다면 갈등의 원인은 권력, 권위,

18) Max Weber,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conomy and Society* (NY: Bedminster Press, 1968), p. 38.

19)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rehensive Survey* (New York: Harper & Row, 1981), p. 182.

20) 조나단 H. 터너 저, 김진균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218~219쪽.

21) Edward Azar,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Theory and Cases* (Hampshire: Dartmouth, 1990), pp. 5-17.

22) 이동윤, 「분단과 갈등, 그리고 통일: 독일, 예멘, 베트남의 갈등관리 사례 비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불평등한 배분(unequal division)과 관리 등이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즉 핵심은 ‘불평등’이다.

역사적으로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궁극적으로 사회변동의 기제로 작동한다. 다렌돌프(Ralf Dahrendorf)는 ‘갈등’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동인이며 일단 등장한 갈등집단은 사회구조 내에서 변화를 야기하는 행위에 참여한다고 갈파하였다.<sup>23)</sup> 불평등으로 발생한 갈등의 해결 방법에 관해 왈톤과 맥컬시(Walton and McKersie)는 갈등의 해결 양식을 ‘분배적’(distributive) 해결양식과 ‘통합적’(incorporative) 해결 방식으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상호 갈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합 게임’(zero-sum)일 경우 그 갈등 관계는 힘의 대결을 통한 분배적 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갈등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문제해결을 통해 협조 관계가 조성되어 ‘승승 게임’(win-win game)이 형성될 경우, 그 갈등 관계는 상호 협력을 통한 통합적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24)</sup>

주지하다시피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의 경제 악화는 대내적 요인뿐 아니라 대외적 요인에도 기인한다. 즉 오랜 전쟁에 따른 국토의 황폐화, 장기간의 남북분단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질화 등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고,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전쟁, 구소련과 동구권의 경제원조 중단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이머이를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경제적 상황 악화로 형성된 ‘당국-인민’ 간의 경제적 갈등 구조의 해소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도이머이 정책 도입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적 터닝포인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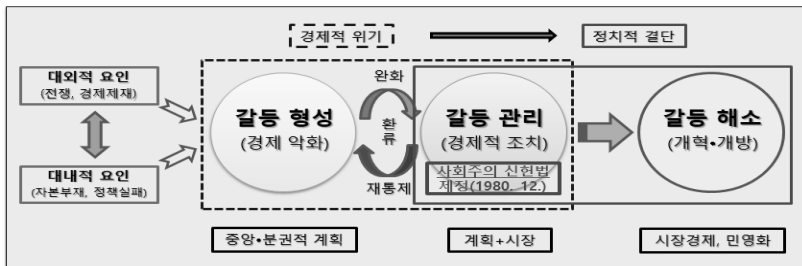
『통일정책연구』 vol.11, no.2 (2002), 182쪽.

23) 조지 리처 저, 최재현 역, 『현대사회학이론』, 190~191쪽.

24) Richard E. Walton and Robert B. McKersie, *A Behavioral Theory of Labor Relations: An Analysis of a Social Interaction System* (NY: McGraw-Hill, 1965).

통일 이후 사회주의체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1980년 12월 제2차 개헌인 사회주의 신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의 ‘베트남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갈등 구조 해소 전략’을 위한 분석 틀을 다음과 같이 도식하였다.

〈그림 1-1〉 베트남 공산통일 이후 경제적 갈등 해소 전략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 출처: 필자 작성

## II. 신헌법 제정 이전 갈등 해소 전략

베트남 공산당은 1976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였으며, 1946년 제헌 헌법 제정 이후 1959년 1차 개헌에 이어 1980년 12월 2차 개헌으로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화를 위한 ‘사회주의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신헌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할 것을 법적으로 담보하였다. 물론 어느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4조에는 베트남 공산당은 ‘인민의 영도’ 세력임을 밝히고 있다.<sup>25)</sup>

스웨덴의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 구나 미르달(Gunnar Myrdal)은 사회주

의 계획경제에 대해 “계획적 조정을 통해 이룩한 창조적 조화”<sup>26)</sup>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공산 통일 후 베트남 상황은 미르달의 주장처럼 그렇지 못했다. 통일 후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화를 위한 무조건적인 토지 국유화 및 집단화 정책실시는 농민들이 대부분인 남부지역에서 집단적인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통일 전까지 남부 농민들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 침공(1978년), 이어진 중국과 전쟁(1979년)의 막대한 전비 지출은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 더욱이 베트남은 코메콘(COMECON) 체제에 경제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당시 페레스트로이카 바람은 구소련과 동구권과의 원조와 교역 축소로 이어졌고, 이는 베트남경제에 심각한 충격파로 작용하였다.<sup>27)</sup> 그리고 지속적인 미

25) 박재명, 「베트남 헌법 개정사 일고찰」 『입법학연구』 Vol.19 No.1 (2022), 143~144쪽.

26)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서울: 법문사, 2011), 51~32쪽.

27) 권을 외,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Vol. 18 No. 24 (2018), 4쪽; 한국은행,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국제경제리뷰』, (2018년 9월 28일), 10쪽; 1985년 기준 베트남의 수출입 의존도는 구소련이 압도적으로 수입 65%, 수출 40%임; 「베트남 경제발전 원동력 ODA현황」 『코트라(KOTRA) 해외시장뉴스』 (온라인), 2009년 1월 8일, <<https://dream.kotra.or.kr/user/extra/kotranews/bbs/linkView/jsp/Page.do?dataIdx=47630>>; 구소련의 원조는 GDP의 10%, 정부 예산의 40%, 공공투자의 75%를 차지하며 중앙계획 경제하의 불경기 및 경제 불안을 극복하는데 일조했으나 경제발전 기반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이조차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중단되었다; 채수홍, 「탈사회주의 베트남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아시아리뷰』 제12권 제3호 (2022), 15~16쪽; 베트남 정부는 산업화를 위해 1978년 가입한 ‘코메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이 해체되고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1990년대 초까지 베트남 산업은 코메콘의 도움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대외 의존성과 종속성이 심각했다. 페트라소비츠(Petrascovits)에 따르면,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이 감행된 1979년까지 코메콘은 베트남 대외무역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 수치가 1981년에 이르면 85%까지 증가

국 중심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베트남의 국민경제는 악화일로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은 198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NEP) 추진으로 일시적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만성적인 산업기반 및 하부구조의 미비와 외환 부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sup>28)</sup> 사회주의 체제화를 위한 무리한 계획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낳았고, 그로 인해 당국과 인민과의 갈등은 심화되었으며 인민들의 저항은 나날이 고조되었다. 발전된 사회주의 체제화로 인민의 삶 향상이라는 전략적 목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었다.

## 1. 사회주의 계획경제 추진

### 1) 전 산업의 사회주의 개조화

1976년 7월 1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성립으로 공산당은 정치경제적으로 상이한 남부체제와 북부체제와의 통합을 추진했다. 그 목표는 남부의 사회경제체제를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1980년까지 실질적으로 완료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은 상공업부문에서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고 여타 기업을 국유-사유 합작을 거쳐 점차 국유화함으로써 개인소유 기업을 없애는 것이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 및 토지 무소유 농민에게 배분하여 '지주-소작' 관계를 일소하고 농업집체화를 통하여 집체소유가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

---

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점은 베트남 수입품의 90%가 코메콘 회원국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었다 등으로 도이며이 이전 베트남은 구소련 등 외세 의존도가 심각하였으며 교역과 지원중단은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음.

<sup>28)</sup> 계경문, 「베트남의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정부형태 개관」 『동남아연구』 20권 1호 (2009), 3~4쪽.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업부문에서는 1975년 8월부터 매판자본가의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국유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상업부문에서는 1978년 3월부터 상업자본가 제거, 농업부문에서는 1977년 7월부터 농업집체화를 통해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체제로 개조하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sup>29)</sup>

공산당 지도부는 통일 직후 수 개월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를 향후 ‘국영-사영’ 합영체제로 전환한 후,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체제로 통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족자본가로 인정되는 자본가들에게는 통일 직후 재산몰수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통일 직후 당의 방침은 민족자본가들을 국영기업 또는 국영-사영 합영기업의 관리자로 전환시켜 국가건설에 참여케 하는 것이었다. 통일 당시 남부에는 2만 명 정도의 자본가가 있었고, 이는 1950년대 북부에서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에 착수할 당시 자본가 2,200명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였다.<sup>30)</sup> 그러나 당 지도부의 점진적 전환정책은 1975년 7-8월간 개최된 제24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폐기되고, 이후 급진적 정책으로 사회주의적 전환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sup>31)</sup>

남부에서 농업의 사회주의화는 1977년 8월 ‘남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시행에 관한 회의’에서 남부 각지에서 집체조직을 실험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결정되었고, 1978년부터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29) 이한우, 「베트남 통일 이후 남부의 사회통합과정에서 계급구조의 변화, 1975~1985」 『국제·지역연구』 18권 4호 (2009), 78쪽.

30) Cao Van Luong, 1987, “Tim hieu Chu nghia tu ban o Mien Nam Viet Nam duoi Thoi My-Nguy (1954~1975).” *Nghien cuu Lich su*, so 5+6-1987 (1987), pp. 16-17.

31) Carlyle A. Thayer, “Building Socialism: South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Vietnam since 1975: Two Views from Australia,” *Research Paper* No. 20 (1982), p. 17; William J.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Updated ed.* Athens, (Ohio: Ohio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1989), p. 20.

‘토지조정’과 동시에 농업집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는 1954년부터 시작된 토지개혁 이후 1958년부터 농업집체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1975년 통일 이후 남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는 ‘토지조정’을 통한 토지 소유의 부분적 전환과 동시에 농업집체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남부에서 전면적 토지개혁 없이 농업집체화에 착수하고자 했던 것은 대부분의 토지가 이미 농민들에게 배분되어있었기 때문에 예비단계 없이 바로 집체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sup>32)</sup> 이처럼 통일 이후 사회주의 정권은 남부 농촌을 전반적으로 장악하지 못한 관계로 사회주의 개조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메콩델타 지대를 중심으로 농민들의 조직적 저항은 당국과의 경제적 갈등 구조 형성의 대표적 사례였다.

## 2)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

통일 전 북베트남은 1961~1965년 ‘제1차5개년경제발전계획’ 기간 동안 국가의 제도와 조직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맞게 정비하고 자원의 대부분을 건설부문에 집중투자 하였다. 또한, 국영기업 급진화 전략으로 국영기업은 급속한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1차 5개년계획은 국내 자본이 전무한 상태에서 급속한 산업화 진행으로 조세 원천 고갈에 의한 거시경제 불균형 심화를 가져왔다. 산업화로 노동자들이 도시로 집중하면서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주요 생필품 부족, 자유시장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sup>33)</sup> 통일 이전 북베트남 당국의 의욕만 앞세운 무리한

<sup>32)</sup> William J. Duiker,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Updated ed. Athens, p. 23.

<sup>33)</sup> 김현숙,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체제변화의 요인연구」 『동남아연구』 27권 1호 (2017), 116쪽.

산업화는 사회적 자본의 부족으로 인민 경제의 실질적 진전은 커녕 당국의 무능력만 표면화되어 국가 운영에 있어 ‘약한 정부’로 인식되었다. 또한,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시작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10여 년에 걸친 전쟁은 1차 경제개발계획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산업화를 꿈꾸던 북베트남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통일 후 197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은 제4차 전당대회를 통해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6~80)’을 제출<sup>34)</sup>하였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바탕으로 공업과 농업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건설하는 한편 노동인민의 물질·문화적 생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2차 계획경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인근 국가와의 전쟁, 자연재해 등 대내외적 상황 악화로 사회적 자본이 붕괴된 상황에서 출발한 계획경제는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구소련과 달리 공업 부문에 필요한 잉여 생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 과도한 목표설정, 남부의 경공업 구조를 사회주의 체제로 개조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효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경제개발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하였다.<sup>35)</sup> 특히 통일 이전부터 ‘약한 정부’로 인식된 상황에서 당국의 경제조치에 대한 남부지역 인민의 반발과 비협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개년경제계획의 실적을 보면 평균 GDP 성장이 0.4%로 농업은 2%, 공업은 0.6%이며 특히 1979년과 1980년은 GDP 성장이 각각 -2%, -1.4%, 공업부문은 -47%,

34) 1976년 12월 제4차 당대회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통일베트남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소규모 생산경제가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적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회주의로 이행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 베트남이 통일과정에 평화, 독립 쟁취라는 장점 외에 전쟁의 후유증, 신식민주의 잔재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과 베트남의 사회주의 혁명이 세계사적 조류에서 혁명과 반작용 사이에서 여전히 힘겹고 격렬하다는 점을 지적. 김종욱, 「베트남 경제발전의 정치동학 (1976-1997)」 『동남아시아연구』 13(2) (1989), 183쪽.

35) 안승욱,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전략」, 53~63쪽.

-10.3%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의 농업부문은 더욱 침체되었는데, 1976년 벼 수확량은 11,827천 톤이었으나 5개년계획이 끝난 1980년에는 오히려 11,647천 톤으로 감소했다.<sup>36)</sup>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내우외환으로 실패하자 당국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악화되는 인민 경제를 위해 땀질 처방에 급급했다.

기나긴 프랑스의 식민 지배와 외세에 의해 북위 17도로 분단된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민족적이고 정치적 갈등 구조는 해소된 반면, 독립투쟁과 전쟁으로 수면 밑의 경제적 갈등 구조가 수면 위로 떠올라 당국과 인민 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체제화로 경제적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자 했던 환상은 사회주의 개조화의 부진, 경제개발계획의 실패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통일 후 원천적인 사회적 자본 부족 상태에서 당국의 의욕만 앞세운 무리한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는 인민 경제의 실질적 진전은커녕 당국의 무능력만 표출될 뿐이었다. 당국과 인민 간의 갈등은 깊어 갔으며, 인민의 저항은 전 사회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존폐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다.

## 2. 인민과의 경제적 갈등형성 · 심화

### 1) 당국의 방침 거부

사회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집단화를 형성한다. 통일 이후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조국전선’(Vietnam Fatherland Front)<sup>37)</sup>으로 인민 대중조직

<sup>36)</sup> 이강우,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방식에 관한 연구」, 221~222쪽.

<sup>37)</sup> 베트남 공산당이 영도하는 ‘조국전선’은 공산당을 포함하여 44개의 단체로 구성된 거대 조직이다. 조국전선 외에도 전국에는 34개 조직으로 구성된 정치·사



장악을 시도하였으나 인민의 형식적 참여와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인민은 호구지책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국 전선 가입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반면 시장활동과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공식·비공식적 일상적 저항이 나타났다.

통일 이후 당국은 농업집체화를 위한 ‘합작사’에 가입하는 것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하였지만, 간접적 압력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이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농민들은 합작사 가입을 거부한다든지, ‘합작사’에 들어가기 전에 농기계와 농업용구를 팔아치우거나, 합작사에 가입한 이후에도 적기에 수확을 거부하거나,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가축을 도살하고, 과일나무를 절단하는 등의 저항을 하였다.<sup>38)</sup> 더 나아가 남부 메콩델타 지역의 수천 명의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당국의 집단농장 방침에 반발하여 시위를 일으켰다.<sup>39)</sup> 농민들은 설사 합작사에 가입하더라도 실제로는 기존의 개별 영농을 유지하고자 했다. 베트남이 1978년부터 농업집체화를 추진하다가 1986년에 중단하게 되는데, 1986년 기준으로 집단농장 가입률은 남부 전체에서 30%, 곡창지대인 메콩델타에서 6%에 불과했다. 또한, 농민들은 자기 소비량 이상으로 쌀을 많이 생산하지 않았으며 정부 수매에 저항하였다.<sup>40)</sup>

## 2) 도시 빈곤 악화

농업의 집단화에 대한 남부 농민의 반발은 예상외로 거셌다. 자영농을

---

회단체가 있다. 송정남, 「베트남 마을의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동남아연구』 30권 3호 (2020), 67쪽.

38) 「통일 이후 남부 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화」 『KBS 통일방송연구』 (온라인), 2006년 3월 19일, <<https://office.kbs.co.kr/tongil/archives/22369>>.

39) 김현숙,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체제변화의 요인 연구」, 118쪽.

40) 『아주경제』 2020년 2월 2일.

하던 농민들이 집단농장에서 조직적으로 태업을 일삼았고 수확한 쌀을 감추었다. 생산성이 곤두박질쳤으며 세계 1, 2위의 쌀 생산국인 베트남 도시에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 아사자가 속출했다. 1986년도 물가는 500%까지 상승했다.<sup>41)</sup>

통일 후 1975년~79년간 당국은 남부의 군인, 경찰, 지식인, 자본가 등을 체제 불만 세력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지역개발 명분으로 변경지대, 밀림지대, 산악지대 등 이른바 ‘신경제지구’로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했다. 소수민족 거주지인 산간 지역에 이들을 투입함으로써 이 지역을 일종의 국내 식민지로 만들어 베트남화를 촉진하려는 의도<sup>42)</sup>도 있었지만, 이 지역에 투입된 인민들의 상태는 비인간적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흡사 강제수용소 노역과 다름없었다. 이들 중 50% 인구는 도시로 복귀하였으나 사회적 자본이 당국에 강탈된 그들은 생존을 위해 비사회주의적인 암시장이나 시장 활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자연히 인민과 당국과의 갈등 전선에 합류되었다.<sup>43)</sup>

### 3) 반(反)사회주의적 현상 만연

통일 후 베트남에서는 쌀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으로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훔칠 수 있는 것”<sup>44)</sup>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당국의 통제 불가 상태

41) 이강우,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방식에 관한 연구」, 221~222쪽.

42) 이한우,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47쪽.

43) ‘신경제지구’는 해안, 강변, 중북부 지역의 변경·산악 지대로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다. 공산 통일 이후의 ‘신경제지구’ 이주 정책에 관해서는 ‘이한우, 「베트남 통일 이후 남부의 사회통합과정에서 계급구조의 변화, 1975~1985」, 65~96쪽 참조.

44) David Lan Pham, *Two Hamlets in Nam Bo: Memoirs of Life in Vietnam* (North Carolina: McFarland, 2008). p. 168.

였다. 당국과 생존을 위한 인민의 갈등은 반사회주의적 현상을 낳았다.

① 배급 물자 암시장 거래: 인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불법적인 시장 활동은 배급 물자를 빼돌려 시장에 비싸게 내다 파는 것이다. 특히 남성 노동자에게 배급된 담배를 암시장에 팔아 차익금을 챙겼으며, 당국에서 배급하는 소형모터 자전거용 배급 휘발유의 경우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고 휘발유를 맥주병에 담아 도로 옆에서 판매하는 암시장이 즐비했으며, 아예 자전거를 처분하기도 하였다.<sup>45)</sup>

② 현물 월급 지급 및 국가기관 물품 시장 매매: 계획경제의 침체 속에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국영기업은 드물었다. 대부분의 기업은 월급 대신 생산물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업에서 지급한 ‘현물 월급’은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지들 간의 물물교환에서 점차 시장이 성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매매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영기업은 생산품의 일부를 빼돌려 자유시장에 팔아 물자를 구입할 자금과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고 있었다. 이는 자유시장의 규모 확대에 기여하는 기현상으로 이어졌다.<sup>46)</sup>

③ 수확한 쌀 암시장 판매: 남부지역의 농민들은 규정에 따라 약 60%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납부해야 함에도 수매가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암시장에서는 몇 배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농민이 쌀을 숨기는 것이 일상이었다.<sup>47)</sup> 당시 농민들은 집단생산 단위인 합작사의 생산활동은 저조하여 목표량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농민들은 굶주림에 처해 있었다. 이에 한 합작사는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금지된 자본주의적 관리 형태인 ‘코안’(khoan)<sup>48)</sup> 제도를 암암리 실시하여 당국

45) 나토 코우지(名東者二), 조찬환 역, 『공산권의 지하경제』, 189쪽.

46) 이강우,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방식에 관한 연구」, 224쪽.

47) 「dem truoc doi moi(도이머이 전날 밤)」 『Bao tuoi tre』 (온라인), 2005년 12월 2일, <<https://tuoitre.vn/dem-truoc-doi-moi-khi-cho-troi-bi-danh-sap-111415.htm>>.

48) 베트남어 ‘코안’은 일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한다는 뜻임, 2023년

의 의무 납부량을 달성하고도 농민들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양곡을 생산하여 시장 판매를 하였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 당국도 이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여 1981년 ‘지시100호’를 발표하여 전역에서 시행하게 되었다.<sup>49)</sup>

④ 외국 구매품과 밀수품 암시장 판매: 매주 베트남의 하노이 등 주요 도시의 공항에는 COMECON의 노동력 수출계획에 따라 구소련이나 동구권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나갔던 젊은 층이 라디오, 카세트와 블루진 청바지류, 전기제품을 양팔에 끼안고 입국하였다. 이들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암시장과 자유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갔다. 이와 함께 태국의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라디오, 조미료 등 일본 제품이 라오스의 안남산맥을 넘어 베트남으로 들어와 주요 도시의 암시장 등에서 판매되었으며 당국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국경 밀무역은 인민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요한 큰 산업으로 지하 수맥을 이루고 있었다.<sup>50)</sup>

⑤ 부업을 통한 시장 활동: 1980년 이후 하노이 등 베트남 도시에서는 음성적인 부업 활동을 당국이 인정함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능력에 따른 ‘시장기제’가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공무원은 휴일 어린이 상태로 장난감을 팔았으며, 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과외수업으로 돈을 벌었고, 의사는 퇴근 후 사적 의료행위로 수입을 올렸다.<sup>51)</sup> 도시 노동자 가정에서는 쌀뜨물이나 흔히 구할 수 있는 음식 찌꺼기를 활용하여 닭과 돼지를 사육하여 자유시장에 내다 팔았다.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시장 판매로 본업의 3~4배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불가피한 노릇이었다.<sup>52)</sup>

7월 7일, <<https://www.pressreader.com/>>.

49) 이강우,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방식에 관한 연구」, 229쪽.

50) 나토 코우지(名東者二), 조찬환 역, 『공산권의 지하경제』, 199쪽.

51) 이강우,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방식에 관한 연구」, 226~227쪽.

위와 같은 생존을 위한 인민의 '일상적 저항'의 기저에는 오랜 전쟁 결과로 남성 인구보다 많아진 여성, 전쟁에서 귀환한 부상병, 그리고 제대 군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들은 당국에 통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암시장에서 불법행위를 지속하여 당국과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켰다.

#### 4) 살인적 물가 상승

베트남은 경제개발계획 실패 등 국가 경제 파탄으로 인민의 경제적 상황이 곤두박질치자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한 당국은 급조된 '신경제정책'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신경제정책은 최초 1979년 가을 베트남 공산당 제4기 6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기되어 1980년 12월 9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재차 강조되어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협동농장에 생산물 계약제 실시, 둘째, 국영기업의 자율권 확대, 셋째, 실적 임금제 실시 및 임금 및 물가인상 등이었다.<sup>53)</sup> 신경제정책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81~85년)'과 병행되었다. 1982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된 신경제정책의 성과는 시장경제만이 정당임을 보여주었다. '생산물 계약제' 등의 신경제정책으로 불리는 이러한 부분 개혁 정책은 1976~1980년간 1.9%이던 연평균 농업생산량이 1981~1983년에는 4.9%로, 1976년 274kg이던 1인당 식량 생산량이 306kg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량 자급을 달성했다. 1981년~82년에 연평균 12.7% 성장으로 1976년~80년의 성장률 5.7%의 2배 이상이었다. 공업부문에서도 생산재 수입의존도가 낮은 경공업과 소규모 수공업 위주의 지방 공업은 증가 현상을 보였다.<sup>54)</sup>

52) 나토 코우지(名東者二), 조찬환 역, 『공산권의 지하경제』, 189쪽.

53) 임강택 외, 『북한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0), 11쪽.

54) 김현숙,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체제변화의 요인연구」, 119쪽; 안승욱, 「베트남

반면 신경제정책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사회자본의 만성 부족과 시스템의 부실로 베트남의 경제적 취약성을 심각하게 노정시켰다. 당국의 유통 간섭이 완화되자 투기, 대규모 암거래가 공공연해졌다. 규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남부에서는 사적 분야가 번창하면서 유통 물품의 70%가 자유시장에서 판매되었다. 또한, 사영유통 부문의 확대로 물가가 상승하여 대부분 농업생산품 가격이 300~400%로 급등하고 일부 품목은 1000% 가까이 올랐다.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정부조달 물품까지 자유시장에서 판매되었다. 당국은 1980년과 1981년 협의 가격을 자유시장에 가깝게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 봉급 및 산업 생산품 가격도 인상되면서 1982년 평균임금은 급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 가격 인상, 임금인상, 투자재원 조달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통화 증발로 이어졌고, 이로써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다. 배급가격 보안을 위해 지급된 국가의 보조금은 경상수지의 1/4, 국가재정적자의 67%를 차지해 국가재정 위기를 가속화시켰다.<sup>55)</sup>

공산 통일 이후 남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화는 순탄하지 않았다. 당국은 1980년 12월 2차 개헌으로 통일 베트남의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의 일방성으로 인민의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은 앞서 언급된 경제적 통계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코르나이는 저개발된 산업을 기반한 계획경제는 고질적인 재화 부족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암시장’의 만연이라 하였다.<sup>56)</sup> 역설적이지만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에

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전략」, 85~86쪽.

55)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55쪽.

56) 코르나이는 사회주의경제의 한 특징으로 여분과 부족이 양립 가능함을 보이면서 재화부족경제의 다양한 특성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Janos Kornai, *Economic of Shortage vol. A, B*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0), pp. 30-35, pp. 176-179.

서 공식적인 계획경제인 1차 경제의 실패 및 한계의 산물인 인민에 의한 2차 경제인 암거래와 자유시장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시장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통일 이후 베트남의 시장은 ‘사영 상업영역’에서 통일 후 사회주의 개조로 ‘계획영역’으로, 1979년 계획경제 실패로 인한 ‘계획영역 내 불법행위’로 전환되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계획영역은 인민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음이 드러났다.<sup>57)</sup> 공산 통일 이후 발전된 사회주의 체제화가 의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인식한 당국은 깊은 수렁에 빠진 인민 경제 회생을 위해 전례에 없던 창조적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

### Ⅲ. 신헌법 제정 이후 갈등 해소 전략

1980년 12월 사회주의 신헌법 제정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정치적 목적은 달성한 반면 국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정치인 응우옌 반 팡(Nguyen Van Cuon)은 ‘1992년 헌법에 국가의 역할’ 제하 논문에서 베트남은 1980년 12월 사회주의 신헌법 제정으로 정치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를 강화하여 국가회의라는 기관이 탄생하였고 정부 조직은 각료회의를 통해 집단지도체제를 조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화와 이에 따른 관료제 그리고 배급정책은 경제기능을 퇴보시켜 1980년대의 베트남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sup>58)</sup> 이와 함께

57) 이현수,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개혁 모델의 정치체제적 한계 요인」 『접경지역 통일연구』 제3권 제1호 (2019), 198쪽: 베트남의 도이머이 이전의 경제구조는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여 국민이 불법적으로 국가경제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동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존을 추구하였다. 이때부터 국민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가족 단위의 생산물품 혹은 가족경제의 재화를 사회의 경제시스템에 연결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임을출은 사회주의 초기 중앙계획의 일방적 추진을 위해 법제화되지 않은 ‘행정명령’ 등에 기초한 국정 관리는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관계로 인민과의 갈등을 초래하였다고 분석했다.<sup>59)</sup>

나토 코우지(名東者二)는 도이머이 정책 이전 인민의 피폐해진 경제적 상황과 당국을 비판하는 베트남의 우화를 소개했다. 어느 베트남 청년이 호수에서 잉어를 잡아 요리하여 맛있게 먹을 저녁을 생각하던 중 잉어가 “나를 요리할 밀가루, 기름, 간장, 성냥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니 청년은 고민 끝에 체념한 채 잉어를 다시 호수에 놓아주고 돌아갔다. 그때 호수로 되돌아간 잉어와 모든 물고기가 “베트남 공산당 만세”, “레 주언 서기장 만세”를 외친다는 내용이었다.<sup>60)</sup> 통일 이후 당국의 무능력으로 나라로 떨어진 인민의 삶을 극명하게 희화한 우화가 아닐 수 없다. 개혁과 정치인 팜 반 동(Phạm Van Dong)은 1981년 베트남 전쟁 사진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기자 스탠리 카노우(Stanley Karnow)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식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전쟁을 실행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sup>61)</sup>라고 베트남의 어려운 현실을 대외적으로 가감 없이 언급했다.

공산 통일 이후 당국은 의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주의 체제화로 인해 당국과 인민과의 경제적 갈등은 심화되었고, 당국의 정치적 지도력은 의심받고 있었다. 1980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후 궁극

58) Nguyen Van Cuon, “Ve vai tro cua nha nuoc trong Hien phap 1992,” *Nghien cuu lap phap*, Van phong Quoc hoi So 8 (2001), pp. 39-41.

59) 임을출,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개혁 지원 사례: 북한 적용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90쪽.

60) 나토 코우지(名東者二), 조찬환 역, 『공산권의 지하경제』, 169쪽.

61) Stanley Karnow, *Vietnam: a history* (N.Y: Penguin Books, 1997), pp. 27-28.



적으로 당국과 인민의 경제적 갈등 구조 해소를 인민의 삶 향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도이머이 전략이었다.

## 1. 갈등관리를 위한 경제적 조치

### 1) 신경제(NEP)정책: 자율화와 재통제

당국은 1979년 8월 당중앙위 6차 전원회의에서 일시적이거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여지책으로 '신경제정책'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식량의 매점매석, 불법 식량 운송, 식량 절도범 등에 대해 강력 처벌을 이어갔다. 또한, 1980년 12월 제9회 당중앙위 전원회의 '의결 100호 지시'로부터 '생산물계약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협동농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작업반의 수를 증대시키며, 분조 규모를 축소하고, 작업반이 분조 또는 농민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를 대여하고 최종생산물을 계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이윤추구가 가능하도록 생산, 분배, 유통에서 일정 부문 시장기능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당국은 인민과의 갈등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고심 끝에 1979년 시장경제와 유사한 '신경제(NEP)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신경제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 1월 '정부결의 40호'로 지방기업의 무역을 허가하였다. 1980년 12월 제9회 당중앙위 전원회의 '의결 100호' 지시로 농업분야의 생산물 계약제인 '코안'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공식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81년 1월에는 '정부결의 25호'로 국영기업에 생산경영 및 재정상의 자주권을 보장토록 하였다. 이로써 국영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했으며, 자유시장이 확대되었고 인민들의 시장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더 나아가 1981년 6월 '정부결의 26호'를 통해 임금 지급은 실적 원칙, 보너스, 현물급여 등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1982년 2월까지 대대

적으로 가격 및 임금체계가 제정되었다.<sup>62)</sup> 일련의 경제적 조치는 인민들의 'two-job'이 정식 인정되면서 이른바 시장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였다.<sup>63)</sup> 이런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대략 연 120%였는데, 1981년에는 170%, 1982년에는 195%에 달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sup>64)</sup>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하의 보조금 제도가 온존하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하에서의 신경제정책과 같은 부분적인 개혁조치로 오히려 재정적자가 누증되면서 물가 급등과 거시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었다.<sup>65)</sup>

베트남은 통일 후 사회주의 정책을 위한 집단농장 실패와 정부의 상품 유통 통제에 의한 후유증으로 경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신경제정책과 함께 제3차5개년계획(1981~1985년)을 실시, 국가·집단·개인을 결합하는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하여 상품유통과 배분제도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회자본 및 시스템의 부족은 50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하는 부작용만 남고 말았다.<sup>66)</sup> 당국은 신경제정책의 부작용에 다시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신경제정책은 부분적으로 성공적이었으나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인 자유시장 활성화, 투기, 대규모 암거래, 밀무역, 임금인상, 물가상승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에 당황한 당국은 인플레이션 안정, 재정적자 해소 등 경제 안정화 정책 명분으로 분배, 자유시장 등 유통 분야

62) 권숙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7집 1호 (2009), 103쪽.

63) 이강우,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방식에 관한 연구」, 226쪽.

64) 박형중,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북한을 위한 모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PA 05-06 (2005), 3~4쪽.

65) 권을 외,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4쪽.

66) 한국은행,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국제경제리뷰』 (2018년 9월 28일).

통제, 농업집체화 강화 등 경제의 재통제 방침으로 돌아섰다.<sup>67)</sup> 신경제 정책과 병행한 제3차5개년경제개발계획(1981~1985년)도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했다. 이로써 당국과 인민 간의 갈등 구조는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당국의 현실과 괴리된 경제 조치에 인민들은 생존을 위한 비사회주의적이고 불법적인 ‘일상적 저항’<sup>68)</sup>이 만연했다. 신경제정책도 베트남의 인민경제를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2년 제5차 당대회에서 신경제정책 폐기로 농업집체화 등 사회주의체제 강화를 위한 재통제에 들어갔다. 당국은 1983년 6월 당중앙위 4차 회의에서는 신경제정책이 이념적이고 조직적 실책으로 생산물 유통이 정부 통제를 벗어나면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 직면한 사회경제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념 및 조직에 관한 비상조치를 결정하였다. 특히 분배와 유통, 인민 생활의 안정화와 인민 중에서도 노동자와 공무원, 군인 및 북부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인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혁신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들에 관심을 가졌다. 재통제 정책은 농민이나 노동자의 초과 수입의 한도액 설정, 시장활동의 억제와 서비스부문에 대한 세율의 증가, 남부지역의 농업집체화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sup>69)</sup> 이러한 재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 인상 억제, 재정적자 감소,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재통제 정책은 베트남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빚었다.<sup>70)</sup> 베트남의 사회주의체제는 경제적 실패로 풍전등화였다.

67) 안승욱,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전략」, 68쪽.

68) 이한우,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54-55쪽.

69) 베트남 공산당사연구회, 김종욱 옮김, 『베트남 공산당사』 (서울: 도서출판 소나무, 1989), 216~217쪽.

70) 권숙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103~104쪽.

## 2) ‘결정 8호’, ‘28호’, ‘Draft Resolution’: 개혁조치

이런 과정에서 1982년 4월 내각 개편에서 개혁파로 알려진 보 반 끼엣(Vo Van Kiet)과 쩐 프엉(Tran Phuong)이 부수상으로 임명되는 등 공산당 최고위층 인사들 가운데 개혁세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를 중심으로 개혁 지향적 인물들이 성장하면서 정치 리더십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sup>71)</sup> 이후 공산당 정치국은 1985년 6월 5차 당대회 8차 본회의에서 경제개혁원칙에 대한 ‘결정 8’에서 베트남의 악화된 경제 상황의 원인으로 ① 비효율성과 관료적 중앙집권주의, ② 국가 보조금제로 인한 과잉 고용과 생산성 저하, ③ 고질적인 사회주의적 경영 및 회계 방식, ④ 지나친 경제적 평등주의의 폐해 등이 지적되었다.<sup>72)</sup> 이에 1986년 1월 ‘결정 28호’에 의한 가격과 임금 개혁, 9월에는 통화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전국적 배급제도가 폐지되고 가격체계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임금, 통화의 포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1986년 연간 물가상승률이 600%에 이르고, 1986년 3월 평균 실질임금은 1985년 10월에 비해 50% 감소하면서 실패하였는데, 이는 당국의 미숙한 행정과 관리 기술의 취약함에도 원인이 있었다. 1985년 3년간 1인당 식료품 생산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은 1986년과 87년 무려 1,000% 상승하였다. 이런 높은 물가상승은 봉급생활자들의 생활고 심화, 정부의 농산물 매입 가격 인하에 대한 농민의 저항을 동시에 불러왔다.<sup>73)</sup>

71) 김현숙, 「베트남 체제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국제기구의 굿 거버넌스 정책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07쪽.

72) 박종철,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5권 1호 (1989), 28~29쪽.

73)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59~60쪽; Adam Fforde and Stefande Vylder, *From plan to Marke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6), p. 113; 안승욱,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13(2) (1980), 70쪽.

조나단 스트롬세스(Jonathan Stromseth)는 베트남의 도이머이 개혁개방 정책 도입 배경에 대해 “당시 베트남의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고, 성장은 멈추었으며, 인플레이션은 연 500% 정도나 됐다. 정권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개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sup>74)</sup>고 할 정도였다. 1986년 5월 5차 당대회 10차 본회의는 ‘결정 8’에 대한 지속 추진을 확인하면서 정치국은 기업체의 자율성 확대와 임원 감축, 경제조정 업무 강화 방안이 들어 있는 ‘Draft Resolution’를 채택하여 9월까지 전국적으로 경제개혁의 당위성을 구축하는 등 ‘도이머이’를 향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 2. 갈등 해소를 위한 최종 전략

### 1) 도이머이 정책 시행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경제정책’은 1980년대 전반 긍정적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탈사회주의 경향을 우려하여 1983년 무렵부터 조정정책을 폈고, 그 결과 베트남은 다시 경제적 침체에 처하였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국은 1985년 가격·임금·화폐개혁 조치를 채택했다. 물품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간 현금과 물품 구매표(배급 쿠폰)를 통해 지급하던 임금을 현금으로 일원화하여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1986년 물가가 연간 600%에 이를 정도로 상승하는 초인플레이션 현상만 낳고 말았다. 주요 원인은 물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폐개혁을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

당국은 신경제정책, 재통제 등 통제와 완화 등의 롤로코스터와 같은 경제적 조치는 살인적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의 연속으로 개혁·개방 외에

74) 『아주경제』 2019년 3월 5일.

는 백약이 무효임을 인식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86년 12월 제6차 당대회에서 보수적인 지도층이 2선으로 후퇴하고 구엔 반 린(Nguyen Van Linh) 등 개혁파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레 주언의 뒤를 이은 개혁파인 당 서기장 쓰엉 진(Truong Chinh)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베트남의 경제사정 악화과 인민의 불만, 당의 신뢰도 추락 등의 현상을 솔직하게 인정했다.<sup>75)</sup> 베트남 공산당의 당시 정치 보고는 “경제적, 사회적 과오와 부족함은 공산당의 이념적, 조직적 활동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당국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폐해에 대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맹렬히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산당은 3일 동안 격론 끝에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을 선포한다.<sup>76)</sup> 당대회에서 채택된 도이머이의 성격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의 경제 발전 모델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였다. 당국은 도이머이를 위한 ‘5대 정책’으로 ① 생산의 효율성 제고, ② 장기적·전략적·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③ 중앙정부 통제(계획) 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원활히 하는 경제 관리 시스템 구축, ④ 공업, 서비스 분야, 지식산업 구축에 있어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개방정책 추진, ⑤ 국제 경제에 주도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자주독립 경제 구축 및 이에 대한 의식 강화 등을 내놓았다.<sup>77)</sup>

75) 박종철,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33~35쪽.

76)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 팜티홍하는 도이머이의 정책 도입 배경에 대해 도이머이 이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인민의 일상적 저항은 날로 고조되어 대도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 움직임과 폭력적 행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인민들의 불만이 체제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게 되자 당국은 강압적인 조치보다는 개혁파를 중심으로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킬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북한개발연구소, 『북한의 시장개혁, 베트남 사례에서 찾다』 (서울: 북한개발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23), 2-9쪽.

77) 『아주경제』 2002년 2월 16일.

## 2)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도이머이 정책 이후 당국의 개혁 정책은 일부 보수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1986년 초기에 화폐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화폐의 가치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맞추었다. 상품가격 또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시장가격에 맞추어졌고, 1980년대 후반부터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실질 이자율 적용과 화폐개혁으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암시장은 무의미해졌고, 단일 외환율 적용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유통성을 가져왔다. 중앙은행이 국가 경제의 재정 상태를 총괄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통제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이중 가격제도 폐지는 전통적인 중앙계획경제의 마지막 잔재를 제거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sup>78)</sup> 베트남은 1989년 10여 년 동안 점령한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후 1992년 신헌법을 제정(3차 개헌)하여 개혁개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1995년 미국과의 정상화로 시장개방을 확대할 수 있었다.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베트남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스탠리 카노우는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1995년 다시 베트남을 방문해 전쟁 영웅인 보 응우옌 잡(Vo Nguyen Giap) 장군을 인터뷰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된 거요?”라는 질문에 그는 “마르크스가 위대한 분석가이긴 하지. 그러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구체적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거든…. 인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사회주의 아니겠어?”라고 하였다.<sup>79)</sup> 보 응우옌 잡의 답변은 등소평이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며, 특히 ‘우리의 사회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최종적으로 당

78) 이윤범, 『베트남의 정치·경제체제 변화-도이머이 정책과 공산당 역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69~70쪽.

79) 『시사IN』 2018년 5월 24일.

국은 인민과의 경제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도이머이 정책이 시행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갈등이 해소된 베트남의 상황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1인당 GDP의 경우 도이머이 정책 도입 원년인 1986년에 178만 동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000만 동으로 절대금액 기준으로 약 6배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약 22.5%에 달하였다.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여 년간의 1인당 GDP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3-1〉 1인당 GDP(VND)

| 구분 \ 연도       | 1986      | 1990      | 1995      | 2000      | 2003      | 2005       |
|---------------|-----------|-----------|-----------|-----------|-----------|------------|
| 1인당 GDP       | 1,786,782 | 1,999,099 | 2,716,378 | 3,516,437 | 7,497,000 | 10,079,900 |
| 증가율<br>(전년대비) | -         | 3%        | 8%        | 5%        | 91%       | 32.5%      |

\*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전의 베트남 경제 실상」 『주베트남대사관』, 2006년 5월 9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위의 표와 같이 베트남은 소련, 중국 등의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공산 통일 10여 년 만에 개혁·개방을 위한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경제적 한계에 봉착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이유일 것이다.

#### IV. 결론을 대신하여

베트남 당국은 인민의 절대적 빈곤 악화로 형성된 갈등 구조를 해소하



기 위한 전략으로 ‘도이머이’(Doi Moi, 鄯贖, 쇄신)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당국은 ‘약한 정부’도 아니고 더욱이 ‘약한 국가’도 아니었다. 20여 년간의 강대국 프랑스, 미국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친 중국의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10여 년 동안 점령했으며, 비슷한 시기 중국과 전쟁으로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배경으로 베트남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인민과의 경제적 갈등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한 반대파 숙청과 인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일방적인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할 수도 있었다. 냉전 시기 동구권에서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한 혁명전쟁의 승리는 국제적 고립과 독재, 그리고 대표적 저개발국가로 상징되는 오늘날 북한 체제와 유사하게 귀결되었어도 전혀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개혁파의 등장과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100여 년에 걸친 프랑스의 식민 지배, 일본의 침략, 강대국과 20여 년간에 걸친 전쟁 속에서 절망의 나락에 빠진 인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트남의 근현대사에서 억압과 착취, 전쟁으로 피폐해진 인민이 호구지책을 위한 상호 대립과 갈등은 인간 존엄과 더욱이 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음을 앞의 언급된 당시 팜 반 동, 보 응우옌 잡 등의 정치지도자들의 혁명관에서 알 수 있다. 결국, 당국은 인민과의 갈등형성을 인식했고 관리와 해소를 위해 분투했다. 아래로부터 변화 요구에 반응한 것이다.<sup>80)</sup> 이와 관련 베트남 민주주의 운동가 르 반 신(Le Van Sinh)은 도이머이 정책에 대해 “당시 당의 정책결정자들이 변화하도록 강제하였던 국영농장, 국영기업의 노동자, 농부들의 중요한 역할이 무시되었다”<sup>81)</sup>고 주장했다. 르 반 신의 주장은 국영농장, 국

<sup>80)</sup> 김현숙,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체제변화의 요인연구」, 126쪽; 윤진호, 「베트남 체제전환의 요인과 특성」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9-50쪽.

<sup>81)</sup> Le Van Sinh, “Renovation and Civil Society in Vietnam,” *Human Development and*

영기업의 노동자, 농부 등 하부구조의 민들이 아래로부터 개혁 요구의 주요 세력이었고, 이들이 시대적 변화를 견인했다는 역설적인 뜻이다. 당국도 이를 인정했다.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최초 입안했던 응우옌 득 끼엔(Nguyen Duc Kien) 전 국회부의장은 “처음 도이머이 정책이 논의 될 때 현 상태의 유지를 원했던 지도층과 변화를 원했던 국민의 관점은 달랐다. 하지만 지도층이 결단을 내려 국민의 요구에 맞춰 개혁·개방을 선택했고, 둘 사이의 오차를 수정해 나가며 정책을 진화시켜 나갔다”<sup>82)</sup> 고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체제가 백척간두에 있음을 인식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인민의 바다로 과감히 들어간 진정한 ‘균중노선’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 정치지도자들은 도이머이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민과 당국이 조화롭게 호응 되어 개혁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sup>83)</sup> 공산 통일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혁명적으로 체제 전환한 동구권과 달리하며, 중국의 정치적 개혁·개방과도 확연히 구분된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베트남이 공산 통일 이후 왜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갈등 구조 관리와 해소 전략적 관점에서 세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① 기존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베트남이 공산 통일 10여 년 만에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도이머이 정책의 첫 번째 함의는 인민과의 갈등 구조 심화로 실기할 경우 인민에 의한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당국이 최악으로 떨어진 인민의 경제적 삶을 사회주의 혁명과 헌법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향유케 하려는 진정성의 발로라 할 수 있다. ② 어떤 체제이든 인민의 위상이 ‘정치적 대상’(The object of politics)이 아닌 단지 집단적인 조직체(collective organization)로써의 ‘통치

---

*Cultural Diversity,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culture and Education Session IV, October 17 (2015), pp. 8-9.*

82) 『조선일보』 2015년 2월 13일.

83) 『아주경제』 2020년 2월 2일.

의 대상(The object of administration)<sup>84</sup>일 경우, 갈등 구조는 형성 그 자체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인식되어도 체제 유지와 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차원에서 무시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갈등 구조는 상대성(relativity)을 전제할 뿐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인식할 의도적 통찰력의 유무에 있기 때문이다. ③ 부단한 경제적 조치와 개혁·개방의 당위는 인민을 정치의 대상으로, ‘갈등 구조의 상대’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통일 이후 대내외적 원인으로 파생된 경제 악화로 형성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담긴 ‘당 결정’, ‘정부 결의’ 등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는 인민을 갈등 구조의 상대로 인식하고 궁극적인 해법인 ‘도이머이 전략’을 위한 밑알이었다.

도이머이 전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로 비탄에 빠진 인민을 구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해답이었다. 북한과는 전혀 다른 베트남 당국의 정치적 결단은 전 인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과거에 연연치 않고 미국과 1995년 외교를 정상화하여 국제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12월 14일 하노이에서 열린 ‘전국외교회의’에서 당 총서기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은 “단단하지만 가지가 유연하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 대나무가 되자”라며 ‘대나무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결의는 여러 가지로 작금의 북한 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이머이 정책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추적하고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베트남의 사례를 좇아 인민과 함께 이룩하

<sup>84</sup> 정호근,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권력의 담론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23권 3호 (2020), 150~151쪽.

는 창조적 조화를 기대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갈등 구조 관점의 연구도 후속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접수: 2023년 10월 31일 / 심사: 2023년 11월 30일 / 게재 확정: 2023년 12월 6일

## 【참고문헌】

- 나토 코우지(名東者二) 저, 조찬환 역, 『공산권의 지하경제』, 서울: 디딤돌, 1988.
-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서울: 법문사, 2011.
- 북한개발연구소, 『갈수록 멀어지는 북한 시장개혁, 베트남 사례에서 찾다』, 서울: NKDI-2023-1 세미나 자료집, 2023.
- 베트남 공산당사 연구회 지음, 김종욱 옮김, 『베트남 공산당사』, 서울: 도서출판 소나무, 1989.
-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 임강택 외, 『북한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조나단 H. 터너, 김진균 외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2.
- 조지 리처, 최재현 역, 『현대사회학이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7.
- Azar, Edward.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Theory and Cases*, Hampshire: Dartmouth, 1990.
- Dougherty, James E. and Pfaltzgraff, Jr., Robert L.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rehensive Survey*, New York: Harper & Row, 1981.
- Duiker, William J.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Updated ed.* Athens, Ohio: Ohio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1989.
- Fforde, Adam and Vylder, De. *From Plan to Market: The Economic Transition in Vietnam*,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6.
- Karnow, Stanley. *Vietnam: a history*, N.Y: Penguin Books, 1997.
- Kerkvliet, Benedict J.T. *The Power of Everyday Politics: How Vietnamese Peasants Transformed National Policy*, N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Kornai, Jano. *Economic of Shortage* vol.A,B,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0.
- Pham, David Lan. *Two Hamlets in Nam Bo: Memoirs of Life in Vietnam*, North Carolina: McFarland, 2008.

Walton, Richard E. and McKersie, Robert B., *A Behavioral Theory of Labor Relations: An Analysis of a Social Interaction System*, New York: McGraw-Hill, 1965.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권을 외,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Vol. 18 No. 24, 2018, 4쪽.

권속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7집 1호, 2009, 103쪽  
 계경문, 「베트남의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정부형태 개관」 『동남아연구』 20권 1호, 2009, 3~4쪽.

김근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에서」 『통일과 평화』 2집 2호, 2010, 113~114쪽,

김종욱, 「베트남 경제발전의 정치동학 (1976-1997)」 『동남아시아연구』 13(2), 1989, 183쪽.

김현숙, 『베트남 체제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국제기구의 굿 거버넌스 정책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07쪽.

김현숙,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체제변화의 요인연구」 『동남아연구』 27권 1호, 2017, 116~118쪽.

류길재,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스탈리노프운동 및 대약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 0권0호, 1993, 46~47쪽.

박재명, 「베트남 헌법 개정사 일고찰」 『입법학연구』 Vol.19 No.1, 2022, 143~144쪽.

박종철,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5권 1호, 1989, 28~29쪽.

박형중,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북한을 위한 모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05-06, 2005, 3~4쪽.

송정남, 「베트남 마을의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동남아연구』 30권 3호, 2020, 67쪽.

안승욱,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의 내용과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Vol.2 No.2, 1980, 70쪽.

안승욱,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특집호, 1997, 30쪽, 53~63쪽.

오하나, 『베트남의 농촌개혁과 공업화 전개과정: 농민의 가구 경제 다변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1~13쪽.

윤진호, 「베트남 체제전환의 요인과 특성」,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49~50쪽.
- 이강우,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2010, 221~222쪽.
- 이동윤, 「분단과 갈등, 그리고 통일: 독일, 예멘, 베트남의 갈등관리 사례 비교」 『통일정책연구』 vol.11, no.2, 2002, 182쪽.
- 이윤범, 『베트남의 정치·경제체제 변화-도이 머이 정책과 공산당 역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69~70쪽.
- 이한우,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아세아연구』 제50권 3호, 2007, 47쪽.
- 이한우, 「베트남 통일 이후 남부의 사회통합과정에서 계급구조의 변화, 1975~1985」 『국제·지역연구』 18권 4호, 2009, 78쪽.
- 이현수,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개혁 모델의 정치체제적 한계 요인」 『접경지역통일연구』 제3권 제1호, 2019, 198쪽.
- 이희옥, 「중국공산당 100년의 궤적과 ‘중국의 길’ 독해법」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아시아 브리프』 1권 27호, 2021, 2~3쪽.
- 임을출, 「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개혁 지원 사례: 북한 적용과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90쪽.
- 정호근,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권력의 담론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23권 3호, 2020, 150~151쪽.
- 채수홍, 「탈사회주의 베트남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아시아리뷰』 제12권 제3호, 2022, 15~16쪽.
- 한국은행,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국제경제리뷰』, (2018년 9월 28일), 10쪽.
- Beresford, Melanie, “Vietnam: northernizing the south or southernizing the north?,” *Contemporary Southeast Asia*, 8(4) (1987), pp. 261-263.
- Cao Van Luong, “Tim hieu Chu nghĩa tu ban o Mien Nam Viet Nam duoi Thoi My-Nguy (1954~1975),” *Nghien cuu Lich su*, so 5+6-1987 (1987), pp. 16-17.
- Le Van Sinh, “Renovation and Civil Society in Vietnam,” *Human Development and Cultural D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culture and Education Session IV*, October 17 (2015), pp. 8-9.
- Nguyen Van Cuon, “Ve vai tro cua nha nước trong Hien phap 1992,” *Nghien cuu lap*

*phap*, Van phong Quoc hoi So 8 (2001), pp. 39-41.

Thayer, Carlyle A., "Building Socialism: South Vietnam Since the Fall of Saigon Vietnam since 1975: Two Views from Australia," *Research Paper* No. 20 (1982), p. 17.

『시사IN』 2018년 5월 24일.

『아주경제』 2002년 2월 16일.

『아주경제』 2019년 3월 5일.

『아주경제』 2020년 2월 2일.

『조선일보』 2015년 2월 13일.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전의 베트남 경제 실상」 『주베트남대사관』, 2006년 5월 9일, <<https://overseas.mofa.go.kr/vn-ko/index.do>>

「베트남 도이모이, 인플레이 극복하고 번영 이끈다」 『아틀라스뉴스(Atlasnews)』, 2021년 1월 18일, <<http://www.atlas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168>>

「베트남 경제발전 원동력 ODA현황」 『코트라(KOTRA) 해외시장뉴스』, 2009년 1월 8일, <<https://dream.kotra.or.kr/user/extra/kotranews/bbs/linkView/jsp/Page.do?dataIdx=47630>>

「dem truooc doi moi(도이머이 전날 밤)」 『Bao tuoi tre』, 2005년 12월 2일, <<https://tuoitre.vn/dem-truooc-doi-moi-khi-cho-troi-bi-danh-sap-111415.htm>>

「통일 이후 남부 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화」 『KBS 통일방송연구』, 2006년 3월 19일, <<https://office.kbs.co.kr/tongil/archives/22369>>



## Strategies for Resolving Economic Conflicts After the Unification of Vietnam's Communist Party

Jung, Hokyun (Dongguk University)

Kim, Suyeon (Kyonggi University)

### Abstract

After the communist unification in 1975, the Vietnamese authorities had no choice but to adopt Doi Moi(reform) in 1986 as a strategic response to alleviate the conflict structure that had arisen due to the absolute poverty of the people. The Vietnamese authorities recognized the formation of conflicts resulting from the people's resistance due to economic poverty and struggled to manage and resolve them. They responded to the demands for change from below.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of conflict structure management and resolution, it was possible to derive three implications for why Vietnam had no choice but to adopt a market economy after the communist unification. ① Unlike existing socialist countries, Vietnam had no choice but to adopt the Doi Moi policy after more than a decade following the communist unification, and the first implication of the Doi Moi policy was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system by the people due to deepening conflict. The second implication can be seen as a genuine effort by the authorities to uplift the economic lives of the people, who had reached their lowest point, in alignm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Constitution. ② In any system, if the status of the people is not that of 'political subjects' but merely as 'subjects of governance'

as a collective organization, the conflict structure becomes not only meaningless in itself but also tends to be disregarded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aimed at regime maintenance and consolidation. ③ The continuous economic measures and the justification for reform and opening up were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people as subjects of politics, as well as the “opponents” within the conflict structure. The numerous twists and turns and errors embedded in various ‘party decisions’ and ‘government resolutions’ aimed at managing the conflicts with the people that had derived from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ter unification. These experiences were integral in recognizing the people as counterparts within the conflict structure and in formulating the ‘Doi Moi Strategy’ as a solution.

The Doi Moi strategy served as the only answer to save the people who had fallen into despair due to the failure of the planned socialist economy and to maintain the system, offering insights for North Korea who is grappling with an economic crisis.

Keywords: Doi Moi, Conflict Structure, Resistance, New Constitution, Market Economy

#### 정호근 (Jung, Hookyun)

---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북한의 대외관계 전공)를 취득 후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은 “ANT로 본 북한 핵 동맹 네트워크”(2020),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권력의 담론 분석”(2020) 등이 있다.

#### 김수연 (Kim, Suyeon)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은 “북한 간부양성체계의 변천 및 특징”(2020), “김정은시대 북한 수핵연구 동향 분석과 남북 수핵협력 방안”(2022) 등이 있다.

## 일반논문

## 디지털 혁명과 ‘폭력의 삼각형’\*

김필구 (성공회대)

## 국문요약

요한 갈통은 ‘Cultural Violence (1990)’에서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을 각각의 꼭짓점으로 하는 폭력의 삼각형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당 개념에 입각해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이 맺고 있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가행위자 중심의 접근법이 맞닥뜨리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는 한편으로, 네트워크화된 자율적 기술시스템으로 상징되는 사이버네틱스 시대에 갈통의 평화이론이 노정하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의 전반부는 각각의 사회적 행위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시스템을 도입·활용하여 추구하는 목표와 갈등상황을 분석한 후, 사이버 공간의 직접적 폭력의 역지를 위한 국가행위자들의 시도가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소통의 장치가 ‘복지’와 ‘정체성’, 그리고 ‘자유’의 욕구에 대한 직접적·구조적 폭력의 도구로 귀결되고 있는 원인을 작금의 기술적 조류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주제어: 요한 갈통, 폭력의 삼각형, 디지털 혁명, 사이버전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2.202312.279>

\* 이 논문은 2022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완성되었음을 밝힙니다(2022S1A5B5A17045927).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물인터넷(이하 IoT)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외부환경인지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패턴 인식을 통합하는 인공지능이 실현되고 있다. 이로써 자율성을 획득한 기술시스템은 물리적 현실 세계와의 피드백 작용을 통해 스스로 목표를 수행하는 제어 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시스템은 행위성의 시공간적 영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의 문제 또한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기하급수적 기술발전에 의해 행위의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떤 집단을 윤리적 책임의 주체로 보는 것도 막연하기 때문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sup>1)</sup> 결국 이러한 사정들은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규범과 가치체계에 대한 합의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규범과 가치의 진공상태는 주로 기술결정론이나 국가주의에 입각한 경제성장과 효용성의 논리로 채워지고 있는데, 이로써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긴장은 통제와 예측이 어려운 창발적(emergent) 안보위기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디지털 네트워크는 신냉전 체제의 도래라는 시대적 인식과 맞물림으로써 새로운 전쟁영역이 되어 가고 있다.<sup>2)</sup> 그러므로 여기서의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1) 백육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서울: 휴머니스트, 2023), 28~42쪽; 손화철, 「과학기술이 윤리를 만날 때」, 한국과학기술학회 엮음, 『과학기술학의 세계』 (서울: 휴먼사이언스, 2014), 309~312쪽.

다양한 행위자들은 구속력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의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이는 이념 갈등이나 정부-기술자본 신디케이트에 의한 감시체계의 성립과 같은 또 다른 양태의 폭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복합적 문제들은 사이버 공간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상황을 넘어, 보다 더 깊이 있는 층위의 폭력적 요소들에 대한 고찰을 요청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폭력의 삼각형' 개념에 입각해 사이버 공간상의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이 맺고 있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가행위자 중심의 접근법이 맞닥뜨리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는 한편으로, 네트워크화 된 자율적 기술시스템으로 상징되는 사이버네틱스 시대에 갈통의 평화이론이 노정하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과 논문의 구성

주지하다시피, 갈통은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1969)”에서 명시적인 행위주체의식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구조적 폭력’ 개념을 고안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이 특정 시점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취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에 미치지 못할 때 폭력이 존재한다(Violence is present when human being are being influenced so that their actual somatic and mental realization are below their potential realization)”는 명제를 남기고 있다.<sup>3)</sup> 이로써 갈통은 폭력 유형학의 스펙

2)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 공간을 육, 해, 공과 우주에 이은 제5의 전장(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천명하였다.” 한희원, 「사이버 전쟁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2022), 834쪽.

3)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트럼을 확장시키는 한편으로, 주로 전쟁의 억지를 지양하는 ‘소극적 평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즉 갈통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극복을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의 실천을 당위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후 갈통은 “Cultural Violence (1990)”에서 ‘문화적 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는 문화적 요소를 가리킨다. 이로써,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을 꼭짓점으로 하는 폭력의 삼각형 도식이 완성되기에 이른다. 요컨대 하나의 폭력 양태는 다른 양태의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특정 폭력의 억지는 다른 유형의 폭력 증가 혹은 유지를 대가로 하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sup>4)</sup> 그러므로 우리는 폭력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적 평화와 구조적 평화, 그리고 문화적 평화의 동시적 지향을 통한 전체론적(holistic) 평화의 이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갈통의 취지다.

이러한 갈통의 관점을 사이버 안보 관련 이슈에 적용할 경우, 우리는 현재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 사회적 조건(가능태)과 이의 잠재적 실현 가능성(현실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간 모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갈등상황을 넘어, 보다 더 깊이 있는 층위의 폭력적 요소들에 대한 고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다음의 II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갈통 평화이론의 내용을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와 “Cultural Violence”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III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직접적 폭력의 억지를 위한 국가행위자들의 시도가 구조적

Vol. 6, no. 3 (1969), p. 168.

<sup>4)</sup> Johan Galtung,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no. 3 (1990), p. 295.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IV장에서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소통의 장치가 복지와 정체성, 그리고 자유의 욕구에 대한 직접적·구조적 폭력의 도구로 귀결되고 있는 원인을 작금의 기술적 조류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V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종합한 후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다.

## II. 갈통의 평화이론과 개념

갈통의 이론적 맥락에서 '소극적 평화'란 평화를 전쟁의 반대로 보는 개념이다. 갈통은 이러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평화를 전쟁의 반대로 보는 것, 즉 평화 연구를 전쟁회피 연구로 제한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전쟁 또는 초강대국 전쟁(강대국 또는 초강대국들 간의 전쟁으로 정의된다)의 회피로 보거나, 그리고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초강대국의 대규모 살상무기의 제한, 폐기 또는 통제 등으로 보는 것은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 여기에는 폭력 유형간의 중요한 상호연결성이 누락되어 있으며, 특히 한 유형의 폭력이 다른 유형의 폭력을 증가 또는 유지시키는 대가로 감소되고 통제되는 경로가 누락되어 있다.<sup>5)</sup>

그러므로 평화의 반대는 폭력이다. 전쟁은 다양한 폭력 양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갈통은 폭력을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범주화한 후, 이에 대응하는 직접적 평화, 구조적

5) 요한 갈통 저, 김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415~417쪽; Galtung, "Cultural Violence", p. 293. 강조표시는 논자에 의한 것임.

평화, 문화적 평화의 동시적 지향을 통해 가능한 ‘적극적 평화’를 당위로 써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 폭력이란 특정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테러나 고문, 위협(언어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구조적 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뚜렷한 행위주체의식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해당 개념은 시스템 내 행위자들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되는 가치의 분배가 불평등한 구조로 고착화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조적 폭력을 사회적 부정의로 바꿔 말할 수 있을진대, 이는 주로 경제적 착취나 정치적 억압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갈통은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에서 “인간이 특정 시점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취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에 미치지 못할 때 폭력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sup>6)</sup> 이후 “Cultural Violence”에서는 폭력을 “현시점의 사회적 조건에서 충족 가능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박탈하는 상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sup>7)</sup> 또한 같은 글에서 그는 이러한 ‘기본적 욕구’의 구체적인 예로 생존(survival)의 욕구, 복지(well-being)의 욕구, 정체성(identity)의 욕구, 자유(freedom)의 욕구를 들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대립항으로 죽음(death, mortality), 곤궁(misery, morbidity), 소외(alienation), 그리고 억압(repression)을 제시하고 있다.

6)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p. 168.

7) “나는 폭력을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일반적으로는 생명에 대해서 가해지는 피할 수 있는 상해 행위로 간주하는데, 즉 잠재적으로는 가능한 어떤 수준 이하로 그 필요에 대한 만족의 실제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이다.”(“I see violence as avoidable insults to basic human needs, and more generally to life, lowering the level of needs satisfaction below what is potentially possible”).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414쪽; Galtung, “Cultural Violence”, p. 292.



〈표 II-1〉 폭력의 유형

|        | 생존의 욕구        | 복지의 욕구              | 정체성의 욕구              | 자유의 욕구         |
|--------|---------------|---------------------|----------------------|----------------|
| 직접적 폭력 | 살인            | 불구화<br>포위, 제재<br>곤궁 | 탈사회화<br>재사회화<br>이류시민 | 억압<br>구금<br>추방 |
| 구조적 폭력 | 착취 A<br>(강력함) | 착취 B<br>(약함)        | 침투<br>분할 (세분화)       | 주변(인)화<br>분열   |

출처: Galtung, "Cultural Violence", p. 292.

“Cultural Violence”에서는 ‘문화적 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는 문화적 요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적으로 평화적인 문화가 그러하듯, 전적으로 폭력적인 문화 또한 드문 현상이라는 점이다. 갈통은 종종 전자의 예로 불교를, 후자의 예로 나치즘을 들고 있는데, 아무튼 대개의 경우 특정 문화, 혹은 세계관은 평화적 요소와 폭력적 요소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갈통은 “Cultural Violence” 이후에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발표한 다른 글에서, 문화적 폭력과 문화적 평화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갈등 관계에 대한 성찰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sup>8)</sup>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행위자들은 살아있는 한 필연적으로 어떠한 욕구 내지는 목표를 갖게 되는데, 행위자들 간 목표가 상충하거나 ‘모순’ 관계에 놓이게 될 때, 관련 행위자들은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 그리고 행위자들 간 목표의 모순이 첨예해질 수

8) 요한·갈통 著, 木戸衛一·藤田明史·小林公司 共訳, 『갈통의 평화이론—글로벌화와 평화 창조』(京都: 法律文化社, 2006), pp. 189-190.

록 갈등관계는 강화되는데, 이는 종종 행위자들 간 보복적 폭력의 연쇄로 귀결된다.

$$\text{갈등} = \text{상징/태도(A)} + \text{행동(B)} + \text{모순(C)}$$

그러나 갈등은 위험을 동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갈등의 근저에 있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발견하게 될 때, 사회는 새로운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며 진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갈등은, 위 공식에서 제시한 각각의 요소를 평화적으로 다루기 위해 공감과 비폭력, 그리고 (모순을 초월하는) 창조성을 강조한다.

$$\begin{array}{ccccc} \text{갈등전환} = & \text{공감} & + & \text{비폭력} & + & \text{창조성} \\ & (\text{상징} \cdot \text{태도}) & & (\text{행동}) & & (\text{모순}) \end{array}$$

공감이란 주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성찰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현재의 갈등상황에 매몰되기보다, 갈등대상의 역사적 트라우마나 문화 및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갈등대상에 대한 폭력적 행동은 보복적 폭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갈등전환을 위한 비폭력적 행동, 즉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갈등은 관련 행위자들의 목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상황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의 창조적 재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논점은 다음과 같다. 평화적 문화란 ‘공감과 ‘비폭력’ 그리고 ‘창조성’을 고무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선민의식이나 종족주의에 따른 폐쇄적 태도, 강한 개인주의나 수직적 위계질서에 입각한 고립주의적 문화, 이원대립론의 흑백논리 등은 평화적 문화에 대치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갈통은 초월적 일신교와 국가주의가 공통적으로 노정하고 있는 폭력적 문화의 요소들을 문제 삼고 있다. 초월적 일신교는 그것의 본질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갈등을 유발한다. 보편적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유일 신앙은 타종교 및 가치체계와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자기 대 타자'의 이원론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초월성의 관념은 신과의 거리에 비례한 수직적 위계질서를 정당화한다.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선민(選民)과 이교도 간 위계가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이원론은 중심부 대 주변부의 형태로 귀결된다.

물론 근대에 접어들면서 종교의 영향력은 쇠퇴하였다. 하지만 갈통에 따르면 이원대립론의 멘탈리티는 세속화된 이념의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달리 말해, 주권 권력(즉 생사여탈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과거 초월적 유일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군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권 권력과 거리에 비례한 위계질서와 중심부 대 주변부의 논리가 재등장하고 있는데, 수직적 관료주의와 민족주의가 이에 해당한다.<sup>9)</sup> 이러한 논리를 배경으로 갈통은 국가행위자들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평화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국제사회에서의 세력균형이나 경제제재 등은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평화의 수단이 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외교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폐쇄적 관료 집단이 과연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sup>9)</sup> Galtung, "Cultural Violence", pp. 296-299.

### Ⅲ. 사이버 공간의 직접적 폭력과 국가의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은 폭력을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행위자들 간 목표가 상충하거나 모순 관계에 놓이게 될 때, 관련 행위자들은 갈등상황으로 진입하게 된다. 문제는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행위자 수와 이들 간에 상충하는 목표가 다양할수록 갈등이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의 복잡성은 적나라한 초보적 갈등으로 이끌며, 이것이나 저것이나 또는 우리냐, 상대냐 하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며 차츰 양극화 현상(polarization)을 통하여 감소한다.”<sup>10)</sup> 이러한 이분법이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의 소극적 평화를 지향하게 될 때 맞닥뜨리게 되는 한계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 1. 디지털 혁명과 관련 행위자들의 목표

작금의 디지털 혁명은 급격한 변화의 폭과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술적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경향이, 네트워크 효과, 중앙집중화, 최적화, 만물의 디지털화이다.

우선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란 특정 서비스나 플랫폼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이것이 지닌 효용 가치가 각 사용자에게 증가하는 경향을

<sup>10)</sup>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80쪽.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야기하는 플랫폼의 중독적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록인(lock-in) 효과라는 개념 또한 등장하였는데, 이는 주로 SNS 등에서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확증편향 및 종족주의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sup>11)</sup>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의 성공은 결국 특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확보로 이어진다. 이제 여기서는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 가공, 활용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시스템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ICT 업계의 대기업들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해당 인프라에서는 각기 다른 맥락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예측력의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일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의 토대이기도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시스템에 부합한 형태로 물리적 현실세계를 최적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발견된다. 이는 만물의 디지털화라는 일종의 팽창지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2)</sup> IoT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활용하여 인간

11) SNS에서는 중독을 유발하기 위해 주로 이용자의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다. 자동화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범주화되는데, 이로써 같은 대상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반향실 효과를 통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동일한 혐오 대상을 가진 사람들 간의 접근성 증대는 결국 극단적 종족주의로 이어짐으로써 오프라인의 세계에도 정치적 영향을 갖게 된다. 송태은, 「사이버 심리전의 미증경쟁과 한국」, 김상배 외,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 (파주: 한울, 2021), 126쪽; 재런 러니어 저, 신동숙 역,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파주: 글항아리, 2022), 35~40쪽.

12) 이미 2009년에는 온라인에 접속한 기기들의 수가 인간 접속자 수를 넘어섰다. 결국 트래픽 경로를 조율하던 (43억 개의 네트워크 주소를 제공할 수

사의 모든 영역을 비트로 환원(0과 1로 부호화)시킬수록 당해 기술시스템에서의 조작성이 증대된다는 논리다. 이로써 증강현실이나 메타버스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IoT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외부환경 인지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패턴인식을 접목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현되고 있으며, 이로써 자율성을 획득한 기술시스템이 변화하는 물리적 현실세계와의 피드백 작용을 통해 스스로 목표를 수행하는 제어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사이버네틱 기술환경의 구현은 데이터에 대한 물신송배와 더불어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강조하는 소위 ‘초연결 사회’ 담론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도입·활용하여 관련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도식화해보기로 하자. 여기서 ‘목적1’이 자기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목적2’는 주로 자기 확장과 관련된 것이다.

〈표 III-1〉 관련 행위자들의 목표

|     | 국가            | 기업   | 시민사회                   |
|-----|---------------|------|------------------------|
| 목적1 | 주권·국가 통합성의 유지 | 이윤추구 | (SNS 등을 통한) 대칭적 권력의 확보 |
| 목적2 | 경제성장          | 시장독점 | 접근성 증대                 |

있었던) IPv4 체계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2011년에 프로토콜이 새롭게 확장되었다. 이제 인터넷은 IPv6 체계를 통해 340 언데실리온(340,282,366,920,938,463,463,374,607,431,768,211,456)개의 연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디지털 네트워크에서는 인간 행위자들보다 IoT 간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늘날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시스템을 수용·활용함으로써 추구하는 우선적 목표는 경제성장이다. 이는 효율성에 입각해 설정된 목표 이니만큼, 이념적 (좌·우)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인다. 즉 여기에는 기술이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치중립적 수단이라는 도구적 합리성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국가행위자의 또 다른 목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 및 국가 통합성의 유지이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국가의 유지는 국가에 의한 폭력적 수단의 독점을 전제로 한다.<sup>13)</sup> 문제는 오늘날 ICT 분야의 대부분의 인공물들이 무기체계로의 전환 및 활용(dual-use)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여기서의 딜레마는 국가가 기존의 지정학적 경계를 공동화할 수 있는 기술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생존 또한 공고히 하려는 점에서 비롯된다. 발전된 ICT 인프라를 갖춘 국가일수록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지는 모순은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 물론, 이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을 억지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권력을 증대시키는 일 일 것이다.<sup>14)</sup>

4차 산업혁명의 기술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기업행위자들의 목적은 이윤추구와 생존이다. ICT 분야의 기업들에게 있어 디지털 혁명이란 보다 더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보다 더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유

13) 막스 베버 저,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파주: 나남, 2014), 19~20쪽.

1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그 복잡성과 애매모호성으로 인해서 민용과 군용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기술개발이 민간에 기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군의 용도 구분도 잘 안된다는 점은 경쟁국들, 심지어 비국가 행위자들도 그 기술에 쉽게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배,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김상배 외, 『4차 산업혁명과 신형 군사안보』 (파주: 한울, 2020), 43쪽; 헤더 해리스 디니스 저, 이민효·이원동·김동환 역, 『사이버전과 전쟁법』 (서울: 연경문화사, 2017), 48~50쪽.

치함으로써 누가 더 빨리 네트워크상의 방대한 노드를 아우르는 포괄(메타)적 지위를 선점하게 되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더욱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 원리는 각기 다른 맥락에 따라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들 간 통합을 부추기는데,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날 ICT 업계에서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생존과 기술개발 모두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되었다.<sup>16)</sup>

한편 대기업 소유의 토대 인프라가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및 활용을 위해 중앙집중화될수록, 사이버 공간의 광범위한 영역이 사유화된다. 이로써 공론 영역 또한 점점 더 기업 권력에 포섭되어 가는데, 여기서 특정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의 소프트파워 또한 증가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접근성을 추구한다. 접근성의 기본적인 형태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개인 대 개인의 상호접근성이다. 이제 여기에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더불어 소비재나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또한 추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웹2.0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유하지 않고 향유한다’는 발상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이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의 양도를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sup>17)</sup>

시민사회의 또 다른 목적은 대칭적 권력의 확보이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당의 관료제적 위계를 우회하여, SNS를 통해 특정 정치가에 대한 지지를 직접 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

15) 김필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체주의 개념의 구성』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2022), 103쪽.

16) 차두원·진영현, 『초연결시대,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서울: 한스미디어, 2017), 215~216쪽.

17) 공유경제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하라. 백옥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28쪽;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고양: 사월의책, 2017), 299~319쪽.



럼을 가진 행위자들이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연대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성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이 록인 효과를 통한 이윤추구를 위해 주로 르상티망(ressentiment) 같은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코딩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반향실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종족주의나 포퓰리즘이 창궐하는 등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sup>18)</sup>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는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징벌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해커티비스트나 애국 해커들이 특정 단체나 기업 및 적성국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가하는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 국가행위자로부터의 압력

이제 각각의 행위자들의 목표가 상충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관계를 도식화한 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폭력의 억지를 위해 국가가 타행위자들에게 가하는 압력(음영 처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기로 한다.

〈표 III-2〉 행위자들 간 갈등 관계의 양상

|       | 국가                      | 기업                              | 시민사회                 |
|-------|-------------------------|---------------------------------|----------------------|
| 국가    | 사이버 공격, 정보전쟁            | 재산권·지적소유권의 침해<br>(백도어의 설치)      | 전방위적 감시체계            |
| 기업    | 공적 자원의 사유화              | 시장 점유율 경쟁의 심화<br>(제로데이 취약점의 증가) | 개인정보의 수집, 프라이버시의 상품화 |
| 시민 사회 |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압력<br>(포퓰리즘) | 인프라의 과부화                        | 종족주의적 대립             |

<sup>18)</sup> 김필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체주의 개념의 구성」, 165-169쪽.

국가 대 국가 간 벌어지는 갈등상황의 대표적인 예는 사이버 공격이다.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은 지정학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스파이 행위나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함으로써 적성국에 암묵적 위협을 가하는 시그널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sup>19)</sup>

문제는 경제전쟁이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의 일환으로 특정 기업 및 국가의 기간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그널링이, 의도한 바와 달리, 인명 살상을 동반하는 안보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자랑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시대에 데이터센터나 공공 인프라를 표적으로 한 해킹이 동시다발적 테러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종래의 패러다임에 따라, 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19) 이러한 시그널링의 대표적인 예로 2015년 12월 23일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자행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들 수 있다. 당시 225,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력 및 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겨울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 추후 조사에 의해 이것이 러시아 정부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공격의 주체는 상대국에 파괴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한편으로, 스스로의 신원이 드러나게끔 처신함으로써 해당 공격이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차원에서 자행된 것임을 알리고 있다. Alexander Klimburg, *The Darkening Web* (New York: Penguin Press, 2017), pp. 205-206; 김필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체주의 개념의 구성」, 194쪽.

20) 2014년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6,000여 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25년까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수백억 달러에 미치는 피해규모와 인명 살상을 동반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1%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상당한 부침이 있긴 했지만) 월드와이드웹의 역사 이상으로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95년 4월,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발생한 테러의 여파로 인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 대테러 정책(U.S. Policy on Counterterrorism)”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훈령 PDD-39를 발령한 바 있다. 이로써 정부시설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의 취약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내각위원회와 핵심기반시설 실무단(Critical Infrastructure Working Group)이 소집되었다. 여기서 ‘해당 실무단은 우선 어떤 기반시설이 핵심적인

이의 억지를 지향할 경우 도달하게 되는 해결책은 세력균형에 의한 억지력의 확보와 국제법의 정비이다.

현실주의적 고려에 입각한 억지력 확보의 경우, 이를 위한 국가행위자의 노력이 오히려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역설적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로데이 취약점(zero-day vulnerability)을 둘러싼 마찰은 이러한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다. 제로데이 취약점의 원인은 주로 과열된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IT 기업들이 보안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출시된 소프트웨어가 국가 기간시설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NSA나 공군정보전센터(Air Force Information Warfare Center) 같은 안보기관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기업에 통보하여 이의 시정을 요청하는

---

지를 파악하는 일에 착수하였는데, (정보통신, 발전시설, 가스 및 원유, 은행 및 금융, 수송, 급수, 응급의료체계, 정부시설 등을 포함한) 8개의 항목을 리스트 한 후 이들 모두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음을 명시하게 된다. 달리 말해, 이제 테러리스트들은 네트워크를 교란함으로써 은행이나 철로, 전력망 등을 파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실무단은, 핵심기반시설에는 사이버 공간이라 불리는 영역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추후 발령된 '핵심기반시설 보호(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라는 제목의 대통령 훈령 PDD-63에 입각해 민관 협력에 기반한 다양한 사이버 보안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추동력을 잃게 되는데, 2002년에 9/11 테러가 발생하자 각계 각층("방위고등연구계획국, CIA, 국방 과학 위원회Defense Science Board, 제록스 팰러 엘토 연구소, 다양한 국립 연구소, 아이비 리그 대학 등)의 인사들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사이버 방위 프로젝트를 출범시킬 것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네트워크 취약성에 대한 우려는 재조명 받기에 이른다. Alexander Klimburg, *The Darkening Web*, p. 363; 마크 굿맨 저, 박세연 역, 『누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가』(서울: 북라이프, 2016), 602쪽; 프레드 캐플런 저, 김상문 역, 『사이버전의 은밀한 역사』(서울: 플래닛미디어, 2021), 57~59쪽, 131쪽; 김필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체주의 개념의 구성」, 196쪽.

관행이 존재해왔다. 문제는 안보기관이 사이버전의 ‘컴퓨터 네트워크 활용(Computer Network Exploit, CNE)’에 입각해 일부 취약점에 대해 침묵을 지킨다는 점이다.

CNE에 따르면 자국의 방어를 위한 최선은, 선제적으로 적성국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이들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개념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방어(Computer Network Defense, CND)’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Computer Network Attack, CNA)’은 하나로 수렴된다. 요컨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시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출시한 소프트웨어가 적성국에서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될 경우, 제로데이 취약점을 기업 측에 공지하기보다는 백도어의 설치를 통해 이를 활용하는 편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논리다. 문제는 동일한 취약점을 사이버 범죄 집단이나 테러리스트들이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일상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sup>21)</sup> 결국 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사이버 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안보기관들이 민간과 상업용 네트워크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법적 접근의 경우 법적 책임의 귀속(attribution)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애국 해커들이 에스토니아를 대상으로 가한 디도스 공격이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07년에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구소련 시기에 세워졌던 붉은 군대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러시아는 3주간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이로써 에스토니아의 공공 인프라가 약 85,000개의 컴퓨터로 이루어진 봇넷 공격으로 다운되었는데, 여기서 에스토니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근거해 NATO 동맹국에 지원병을 요청한다.

21) 세인 해리스 저, 진선미 역, 『보이지 않는 전쟁 @ War』 (서울: 양문, 2015), 166~175쪽; 프레드 캐플런, 『사이버전의 은밀한 역사』, 127~128쪽, 185~188쪽; 김필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체주의 개념의 구성」, 216쪽.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 개입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행위로 규정할 수 없었기에 요청은 기각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국제사회의 보안전문가들은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봇넷의 호스트 서버가 범죄 조직 RBN(Russian Business Network)의 소유이며, 해당 공격이 러시아 첩보기관(FSB)의 사주, 혹은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RBN과 FSB의 공조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RBN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자, 러시아 정부는 해당 공격이 러시아 극우청년단 Nashi의 과도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사태였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사태를 무마하게 된다. 즉 러시아 정부는 Nashi 소속의 애국 해커 한 명을 체포하여 1,0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렸다. 그러나 RBN 소유의 인프라는 이듬해인 2008년 그루지야(Georgia)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서 다시 한번 러시아의 호스트 서버로 사용된다.<sup>22)</sup>

해당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신속성과 익명성을 비롯한 여러 특수한 조건들로 인해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법적 개념 구성은 공식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말해, 자위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jus ad bellum* 및 전투 수행과 관련한 *jus in bello*의 국제법적 개념 구성은 아직 구속력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가짜뉴스나 신상 털기(doxing)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특정 공직자를 실각시키는 정보전쟁(information war) 또한 사이버 공격의 양태로 범주화시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사이버전의 개념은 인터넷 자체를 정치전쟁(political war)의 장으로 만듦으로써 광범위한 확장성을 띠게 된다. 정보전쟁, 혹은 사이

22) 프레드 캐플린, 『사이버전의 은밀한 역사』, 217~222쪽; Klimburg, *The Darkening Web*, pp. 232-235; 김필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체주의 개념의 구성」, 192~194쪽.

버 심리전은 체제 안정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특히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해당 이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예컨대 2001년에 중·러를 중심으로 시작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비서방국들과의 전략적 공조에 힘입어 정보위협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조하는 안보화 담론을 지속적으로 구성해 왔다. 반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을 사이버스페이스총회(Conference on Cyberspace)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이에 대립각을 세워 왔는데, 이러한 갈등이 오늘날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법의 마련이 지체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법적·제도적 준비에 앞서 이의 토대가 되는 규범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규범 정립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안보와 평화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는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 대 다중이해당사자주의(multistakeholderism)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국가는 앞서 언급한 러시아와 중국 및 이들에게 지지를 표하는 비서방국들이며, 후자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서방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의 갈등은 결국 안보화 담론 구성에 있어 ‘개인의 권리’ 대 ‘국가주권’, ‘정보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대 ‘체제 안정성’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결렬된 제5차 UN 산하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 Experts, GGE)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들 모두는 기술산업적 패권의 추구나 국가이성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23)</sup>

정부간주의 진영이 구성하고 있는 안보화 담론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23)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와 갈등 및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노형·정명현,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제5차 UNGGE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제1호 (2018), 43-68쪽.

점은, 정보전쟁의 시대라는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국가가 데이터 흐름에 주권적으로 개입·통제를 가할 경우, 이것이 현실 해석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위 수립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양태의 '총력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에리히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는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다”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를 전도시켜, 평화가 전쟁을 위한 준비기간이라면 정치란 다른 수단을 통한 전쟁의 지속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아 '전체전쟁(총력전, Der Totale Krieg)'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sup>24)</sup> 정보전쟁의 맥락에서 '총력전'의 무기는 인터넷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이므로, 이에 기반한 정보 및 사실(facts)에 대한 과도한 안보화는 새로운 양태의 전체주의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sup>25)</sup>

반면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강조하는 규범의 보편화가 저절로 '공감'과 '소통', '창조성'을 고무할 것이라 기대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평화적 문화의 요소들은 건전한 공론 영역과 (특정 패러다임에 매몰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이버 공간에서 데이터의 흐름과 표현의 자유는 주로 상업적 이해관계에 종속됨으로써, 집단지성의 증진보다는, 종종 편집증적 분열이나 집단광기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과학분과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의 활용을 강조하는 소위 '디지털 실증주의'로 수렴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 패러다임에 종속된 학제 간 교류를 통해 오히려 해당 패러다임을 강화시키는 폐쇄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

<sup>24)</sup> Juan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p. 51.

<sup>25)</sup> Dennis F. Poindexter, *The Chinese Information War*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2018), pp. 17-18; 김필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체주의 개념의 구성」, 201쪽.

라, 인본주의적 가치체계와도 상충하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sup>26)</sup>

#### IV.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역사가인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초연결 사회의 도래를 배경으로 제반 학문분과가 데이터 과학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규범의 내재화 또한 보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27)</sup>

1. **프로세서의 수를 늘린다.** 10만 명이 사는 도시가 1,000명이 사는 시골마을보다 연산 능력이 크다.
2. **프로세서의 다양성을 늘린다.** 각기 다른 프로세서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계산하고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한 시스템 안에서 여러 종류의 프로세서들을 사용한다면 시스템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농부, 성직자, 의사 사이의 대화는 세 명의 수렵채집인들 사이의 대화에서 결코 나오지 못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할 것이다.
3. **프로세서들 간의 연결을 늘린다.** 서로 연결이 잘 안된다면 프로세서의 수와 종류를 늘려봤자 소용이 없다. 열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무역망이 열 개의 고립된 도시들보다 몇 배 더 많은 경제적·기술적·사회적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다.
4. **현존하는 연결을 따라 이동할 자유를 늘린다.** 프로세서들을 연결해도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한다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열 개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해도, 도로에 강도가 들끓거나 독재자가 상인들과 여행자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sup>26)</sup> 빈센트 모스코 저, 백영민 역, 『클라우드 컴퓨터와 빅데이터의 정치경제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332~362쪽.

<sup>27)</sup> 유발 하라리 저, 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 (파주: 김영사, 2018), 518쪽.



앞서 살펴본 정부간주의 대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갈등은 네 번째 규범, 즉 “현존하는 연결을 따라 이동할 자유를 늘린다”의 층위에서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업적 이익을 위해 데이터의 흐름을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이에 제약을 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국가주의나 주권 권력을 수단으로 한 평화 실현에 회의적인 갈등의 접근법을 대입할 경우, 우리는 정부간주의보다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가까운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나 정부간주의 진영에 속한 비서방국가 중 상당수가 ICT 분야의 후발주자일 뿐 아니라, 서구열강에 의한 제국주의적 수탈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는 배경은 주목을 요한다. 이들 국가의 우려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제국주의적 침투 및 미국의 기술패권에 입각한 정치경제적 종속의 고착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sup>28)</sup> 예컨대 인터넷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의한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그 기원이 다르파(미방위고등연구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의 군사용 첨단 기술사업인 아르파넷(ARPANET)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운영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ICANN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관리하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세계에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결국 스노든 스캔들로 인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

<sup>28)</sup> 갈등은 중심부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통신수단에 대한 주변부 국가의 의존 (communication imperialism)은,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를 넘어 경제적 제국주의(economy imperialism)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8, No. 2 (1971), p. 99.

한 후에야 ICANN은 정부의 공식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적 인공물들의 상당수가 미국방부에서 민간기업들에게 이양(spun-off)한 것들이며, 오늘날에는 신냉전체제라는 시대적 인식을 배경으로 기업에서 정부로의 기술이전(spun-on)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sup>29)</sup> 그러므로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국가 대 국가, ‘군사·디지털 복합체’ 대 시민사회 간 힘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sup>30)</sup>

정부간주의 진영의 안보화 담론을 이끌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공산권으로 범주화된다는 점은 또 다른 주목을 요한다. 영미식 자유주의와 달리, 이들 사회주의 진영에서 시민사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계보는 부르주아 시민사회에 대한 맑스(Karl Marx)의 비판을 넘어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로까지 소급되는데, 헤겔은 그의 법철학에서 시민사회를 사리사욕이 추구되는 곳으로 간주하여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종심급으로서 국가를 요청하고 있다. 요컨대 헤겔에 따르면 “시민사회에서 개인들은 공동(혹은 일반적) 이익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특수하고도 제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도구적으로, 즉 그들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헤겔이 보기에 시민사회는 주관적 자유가 지배하는 영역”이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악들에 대처하는 방책들이다.”<sup>31)</sup>

그러므로 이러한 사상사적 맥락을 보았을 때 ‘시민사회의 악에 대처하기 위한 방책’ 중 가장 악명높은 기획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라

<sup>29)</sup> 로버트 W. 맥체스니 저, 전규찬 역, 『디지털 디스커넥트』 (서울: 삼천리, 2014), 178~183쪽; 김상배,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43쪽.

<sup>30)</sup> 로버트 W. 맥체스니, 『디지털 디스커넥트』, 278~298쪽.

<sup>31)</sup> 앨런 E. 뷰캐넌 저, 이종은·조현수 역, 『맑스와 정의』 (서울: 갈무리, 2019), 30~36쪽.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회신용시스템(social credit scoring)은 공무, 상업, 사회 그리고 사법 분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는데, 이로써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신용점수 측정을 위해 개별 시민들이 어떠한 웹페이지를 열람했으며, 어떠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SNS 등에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의 시대이니만큼 감시와 스코어링은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일례로 상하이에서 활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Honest Shanghai'는 안면 인식 시스템(Facial Recognition System)에 기반해 개별 시민들의 일상 행동에 대한 감시를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유저의 신용도를 '아주 좋음'과 '좋음' 그리고 '나쁨'의 세 단계로 평가함으로써, 사회규범과 관련한 상하이 시민들의 성실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특정인의 신용점수가 대출 시의 이자율, 취업, 항공권 구매, 사용 인터넷 회선의 속도, 의료복지 및 자녀의 진학 혜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높은 스코어를 받은 시민은 비교적 싼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이점을 누리게 되는 반면, 낮은 스코어를 받은 시민은 항공사로부터 노골적인 탑승 거부를 받는 식이다.

사회신용시스템은 분명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IoT, 인공지능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ICT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32)</sup>

<sup>32)</sup> Dirk Helbing, "Why We Need Democracy 2.0 and Capitalism 2.0 to Survive", Dirk Helbing, ed., *Towards Digital Enlightenment* (Zürich: Springer, 2019), p. 123; Rogier Creemers, ed., "Planning Outline of the Construction of a Social Credit System (2014-2020)", *China Copyright and Media*, 2015, 4, 25, <<https://chinacopyrightandmedia>.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위로부터 부과된 가치 기준에 따라 시민들의 일을 스코어링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지 여기서는 감시와 훈육의 주체와 목적 그리고 정도에 차이가 발견될 뿐이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에서 개별 유저의 이용내역에 기반한 맞춤형 표적 광고를 통해 소비자 심리를 조작하는 넛지(nudge)의 경우, 사회신용시스템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된다. 물론 거래 내역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프로파일링에 입각해 소비자 집단을 성별,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등급화한 후 표적화(targeting)된 각각의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욕구를 조작하는 전략은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행이다. 다만 이러한 표적화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통해 일상사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각기 다른 상업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었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 (M&A를 거듭한 독과점 기업들에 의해)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산업적 조류라 할 수 있겠다.<sup>33)</sup>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넛지에는 사회신용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반평등주의적 함의가 발견되는데, 경제력이나 지위에 기초한 차별화(“어떤 고객에게는 특별한 서비스나 할인 혜택의 특권이 주어지는 데 반해, 구매력이 낮은 고객들은 무시된다”)가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사회적 분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

---

wordpress.com/2014/06/14/planning-outline-for-the-construction-of-a-social-credit-system-2014-2020/); Rob Schmitz, “What’s Your ‘Public Credit Score’? The Shanghai Government Can Tell You”, NPR, 2017, 01, 03 <<https://www.npr.org/sections/parallels/2017/01/03/507983933/whats-your-public-credit-score-the-shanghai-government-can-tell-you>>.

33) 데이비드 라이언 저, 이혁규 역, 『9월 11일 이후의 감시』 (서울: 울력, 2003), 144쪽; 김필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체주의 개념의 구성」, 151쪽, 203쪽.

다. 즉 이로써 넘치는, 욕망의 조작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적 구조를 강화하는 기제로 변모한다.

물론 여기에는 빅브라더에 의해 위축된 시민사회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개념을 대입할 경우, 빅데이터에 기반한 넘치는 적어도 후자에 대한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sup>34)</sup> 넘치에 의한 심리 조작이 정체성 구성을 위해 필요한 자유의지 행사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표 II-1>에서 '복지의 욕구'에 대한 구조적 폭력, 즉 '착취 B'는 '착취 A'와 달리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또한 동일한 자원착취의 문제인데, 작금의 맥락에서 주목을 요하는 자원은 시민들이 플랫폼에서의 활동을 통해 생성하는 데이터이다. 개별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을 대가로, 데이터 포인트로 환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교환이 불평등한 자원 분배로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글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대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 및 내용, 이용 방식에 대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를 통해 거대 서비스 회사들의 플랫폼은 이용자의 활동장치이자 이용자 생산물의 수집장치인 동시에 이용자 감시장치로 연결될 수 있는 다중적 장치로 기능한다.<sup>35)</sup>

34) “인공지능에 의한 넘치는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결정을 하도록 강요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에 대한 위협보다는 적극적 자유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 즉, 넘치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심리에 영향을 미쳐,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선택하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존중하기 보다는 인간의 마음을 조종한다.” 마크 코켈버그 저, 배현석 역,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 (서울: 생각이음, 2023), 41쪽; 갈통 또한 다음의 글에서 소비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심리조작에 대한 고찰이 폭력에 대한 좀더 확장된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p. 170.

35) 백육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203쪽.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잉여가치 창출의 비밀은 이용자 노동 혹은 노동 결과물을 전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의 활동 결과물을 활용하여 가치 증식의 원료로 이용하거나 (마케팅을 위한 광고 같은) 새로운 상업화의 재료로 제공하는 데 숨어있다. 이러한 산업적 조류는 결국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짐으로써 ‘정체성의 욕구’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귀결된다.<sup>36)</sup>

요컨대 논점은 다음과 같다. ‘복지의 욕구’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 ‘정체성 욕구’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성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자아개발(self-development)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으로 간주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결국 자아개발을 위한 자유의 공간을 침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의 지위 상실로 이어짐으로써 적극적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sup>37)</sup> 결국 이러한 상황은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의 이념적 대립의 차원을 넘어, 기술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찰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당해 조류의 가속화를 정당화하는 세계관으로는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기술적 특이점주의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sup>38)</sup> 각각의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리

36) 위의 책, 128쪽; 백육인, 「플랫폼」, 김상배 외,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315~316쪽.

37) 즉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공격은 프라이버시 법안이 상거래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논점인 심리적·사회적복지(well-being)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빈센트 모스코, 『클라우드 컴퓨터와 빅데이터의 정치경제학』, 240~244쪽.

38) 트랜스휴머니즘이란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적, 육체적, 심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조건을 향상시킬 가능성과 그 바람직함을 긍정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다. 반면 포스트휴머니즘이란 현생인류가 휴먼-트랜스휴먼-포스트휴먼의 단계를 거쳐 (인간 종을 더 이상 대변할 수 없을 정

티브가 다소간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에너지를 대체하여, 정보를 보편적 단위로 간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처리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 된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sup>39)</sup> 이러한 발상의 계보는 20세기 중반에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가 제시한 사이버네틱스 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위너는 1940년대에 해당 이론을 제시하면서 외부환경에 대한 인지와 피드백을 통해 자기조절하는 기계적 사회의 가능성을 예견한 바 있다.

이러한 위너의 비전은 당시 자유주의 진영보다는 중앙계획경제를 지향하던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1961년에 열린 ‘제22회 소비에트연방 공산당대회(the Twenty-second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에서 사이버네틱스는 ‘진정한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 요소 중 하나’로 천명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이 시기를 즈음하여 위너는, 적어도 러시아에서만큼은, 그람시(Antonio Gramsci)나 헤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받기에 이른다.<sup>40)</sup>

---

도로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의 예측은 컴퓨팅 파워의 발달로 인해 근미래에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출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의 출현 시점을 가리켜 특이점(singularity)이라 칭한다. 김건우, 「포스트휴먼의 개념적 규범학적 의의」,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엮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파주: 아카넷, 2019), 30~31쪽.

<sup>39)</sup> 랭던 위너 저, 손화철 역,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 (서울: 씨·아이·알, 2010), 168쪽;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특이점 주의와 트랜스휴머니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마크 오커널 저, 노승영 역, 『트랜스휴머니즘』 (파주: 문학동네, 2018).

<sup>40)</sup> Klimburg, *The Darkening Web*, pp. 208-210;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환경과 주변 세계를 인지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자율적 시스템’을 꿈꾸었던 위너의 비전은 당시 중앙계획경제를 지향하던 소련과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칠레의 아옌데 정권에 의해 실제로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좌절

다른 한편으로, 해당 이론이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와 상충하는 전제 위에 성립되었음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지적되어왔다. 여기서 인간은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는 주체라기보다 이러한 흐름에 의해 제어되거나 혹은 경계가 결정되는 데이터 프로세서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인간과 기계’, ‘개체와 시스템’ 간 경계가 재설정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이것이 항상성과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과 딜레마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이버네틱스의 세계관에서는 개인이 자기 신체와 능력의 소유자이며, 타인의 의지로부터 자유롭다(“사회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혹은 ‘타인의 의지와 뚜렷이 구분되는 의지, 욕망, 혹은 작인이 존재한다’)는 관념 및 이에 기반한 소유권과 프라이버시 개념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위너 스스로도 자신의 이론이 노정하고 있는 이러한 위협적 요소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이버네틱스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41)</sup>

물론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우려가 이론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지만, 현재 우리는 ‘초연결 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것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강력한 연산력에 기반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IoT로 구성된 기술시스템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강조점이 인본주의적 고려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가공, 및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은 시스템 외부에서 이를 통제하는 주체라기보다는 “더 큰 기계의 결정론적 논리 안에서 작동하는 기계, 즉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생물학적 요

---

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빈센트 모스코, 『클라우드 컴퓨터와 빅데이터의 정치경제학』, 39~53쪽.

41) 캐서린 헤일스 저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파주: 열린책들, 2021), 25~26쪽, 161~206쪽, 210쪽.



소”에 가깝다.<sup>42)</sup>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 과학과 생명공학의 통섭으로 인해 유기체를 알고리즘으로, 생명현상을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학제를 가로지르는 패러다임으로 등극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능’과 ‘의식’이 결렬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지능과 의식을 별개로 보는 이러한 관념은 결국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높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 행위자들보다 인간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sup>43)</sup>

그러므로 만약 ‘판단하는 주체가 판단 받는 사물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훌륭하다’는 명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존재론적 위계의 전도를 발견하게 된다.<sup>44)</sup> 즉 목적으로 간주해야 할 대상인 인간이 사용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반면, 수단으로 간주해야 할 대상인 (사이버네틱스) 기술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목적으로 격상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상업적 이해관계나 국가이성에 종속되어 있다. 하지만 사이버네틱스의 세계관이 반영된 해당 시스템의 팽창이, 인간의 복지와 정체성 그리고 자유의 욕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자유주의 진영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42) 마크 오케널, 『트랜스휴머니즘』, 203~204쪽.

43)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544쪽.

44) 아우구스티누스 저, 성염 역, 『참된 종교』 (서울: 분도출판사, 2022), 127쪽.

## V.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종합해 보기로 한다. 갈통에 따르면 직접적 폭력이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구조적 폭력의 개념은, 가해자의 행위 주체 의식보다는, 시스템 내 행위자들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되는 가치의 분배가 불평등한 구조로 고착화하는 상황을 통해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폭력이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는 문화적 요소들을 의미하는데, 갈통은 이러한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으로 구성되는 폭력의 삼각형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하나의 폭력 양태는 다른 양태의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반대로 특정 폭력의 역지가 다른 유형의 폭력을 증가시키기는 상충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갈통의 폭력 유형학에 따를 경우, 사이버 공격은 직접적 폭력으로 범주화된다. 현재 사이버 공격은, 해당 전투양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ICT 선진국일수록, 사이버 공격에 대한 역지력 확보와 예방을 위해 관련 기업과 정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자본 신디케이트의 성립으로 인한 감시체계의 확장과정과 같은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신냉전체제가 도래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도 과거 동서 진영 간의 이념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대 정부간주의의 갈등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러한 견해차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이에 제약을 가할 것인가의 딜레마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안보화 담론 구성에 있어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주요 위협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반면, 후자는 사이버 심리전에 의한 체제 안정성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정보통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주의나 주권 권력을 수단으로 한 평화 실현에 회의적인 갈통의 접근법을 대입할 경우, 우리는 정부간주의보다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가까운 위치에 서게 된다. 그에 따르면 국가주의는 주권 권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관료제적 위계질서와 중심부 대 주변부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사례에서 정부간주의식의 해결책은 소위 '단한사회'의 성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정보전쟁의 만연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배경으로 데이터 흐름에 주권적으로 개입하거나 통제를 가할 경우, 이것이 현실 해석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지위 수립을 정당화함으로써 새로운 양태의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사회신용시스템과 (빅데이터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넛지의 사례 비교를 통해,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표방하는 자유주의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폭력이 권위주의의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물론 후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시스템이 체제 안정을 위한 정치적 억압의 기제로써 좀더 노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전자에서는 이것이 주로 기업행위자들에 의한 경제적 착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양자 모두 중앙집중적 기술시스템에 입각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IoT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표준적 기술시스템의 구성 양식과 이의 배경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문화적 폭력의 요소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발상은 소위 ‘초연결 사회’의 담론이다. 가치와 자원을 비대칭적으로 배분하는 작금의 기술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가공, 및 활용을 위한) 연결성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야기시키는데, 해당 담론은 소통과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수탈과 정체성의 상품화를 공리주의적 (즉 효용성이나 경제성장의) 관점에 입각해 정당화한다. 이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수단으로 한 권력의 투사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적 논리로도 비추어질 수 있는데, 정부간주의를 지지하는 (ICT분야의 후발주자인) 비서방 국가들이 현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시스템의 비약적 팽창과 데이터에 대한 물신숭배가 상업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가공, 및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인본주의적 고려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산업적 조류의 가속화를 정당화하는 사이버네틱스의 세계관은 인간을 자율적 행위자라기보다는 “더 큰 기계의 결정론적 논리 안에서 작동하는 기계, 즉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생물학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로써 인간의 존재론적 위상은 일종의 (‘실리콘 기반의 전자 성분으로 이루어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탄소 기반의 유기 성분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로세서로 강등되고 있다.<sup>45)</sup> 이는 이성적 존재이자 자율적 판단 주체로서의 자유주의적 인간관과는 모순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사이버네틱스의 세계관은 휴머니즘에 대한 문화적 폭력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sup>45)</sup> 마크 오케널, 『트랜스휴머니즘』, 203~204쪽;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23쪽.

지금까지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이 어떠한 식으로 상호연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갈통의 평화이론이 오늘날의 기술시스템의 구성양식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분산형 기술시스템의 모색과 평화주의적인 기술 철학 및 규범의 정비가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갈통은 평화 연구에 있어서 진단, 예측, 처방으로 구성된 삼각 구조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는 진단의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sup>46)</sup> 그러므로 예측과 처방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직접적 평화,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전체론적 평화를 구상하는 작업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 접수: 2023년 10월 31일 / 심사: 2023년 12월 15일 /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5일

<sup>46)</sup>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7~18쪽.

## 【참고문헌】

- 데이비드 라이언 저, 이혁규 역, 『9월 11일 이후의 감시』, 서울: 울력, 2003.
- 랭던 위너 저, 손화철 역,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 서울: 씨·아이·알, 2010.
- 로버트 W. 맥체스니 저, 전규찬 역, 『디지털 디스커넥트』, 서울: 삼천리, 2014.
- 마크 굿맨 저, 박세연 역, 『누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가』, 서울: 북라이프, 2016.
- 마크 오커널 저, 노승영 역, 『트랜스휴머니즘』, 파주: 문학동네, 2018.
- 마크 코켈버그 저, 배현석 역,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 서울: 생각아름, 2023.
- 맥스 베버 저,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파주: 나남, 2014.
- 모이제스 나임 저, 김병순 역, 『권력의 종말』, 서울: 책읽는수요일, 2015.
- 백옥인,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서울: 휴머니스트, 2023.
- 빈센트 모스코 저, 백영민 역, 『클라우드 컴퓨터와 빅데이터의 정치경제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세인 해리스 저, 진선미 역, 『보이지 않는 전쟁 @ War』, 서울: 양문, 2015.
- 아우구스티누스 저, 성엽 역, 『참된 종교』, 서울: 분도출판사, 2022.
- 앨런 E. 뷰캐넌 저, 이종은·조현수 역, 『맑스와 정의』, 서울: 갈무리, 2019.
- 요한 갈통 저, 김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 유발 하라리 저, 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 파주: 김영사, 2018.
-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고양: 사월의책, 2017.
- 재런 러니어 저, 신동숙 역,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파주: 글항아리, 2022.
- 차두원·진영현, 『초연결시대,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서울: 한스미디어, 2017.
- 캐서린 헤일스 저,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파주: 열린책들, 2021.
- 프레드 캐플런 저, 김상문 역, 『사이버전의 은밀한 역사』,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1.
- 헤더 해리스 디니스 저, 이민효·이원동·김동환 역, 『사이버전과 전쟁법』, 서울: 연경문화사, 2017.

- Helbing, Dirk, “Why We Need Democracy 2.0 and Capitalism 2.0 to Survive”, Helbing, Dirk, ed., *Towards Digital Enlightenment*, Zürich: Springer, 2019, pp. 121-156.
- Klimburg, Alexander, *The Darkening Web*, New York: Penguin Press, 2017.
- Linz, Juan J.,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 Poindexter, Dennis F., *The Chinese Information War*,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2018.
- ヨハン・ガルトゥング 著, 木戸衛一・藤田明史・小林公司 共訳, 『ガルトゥング의 平和理論—글로벌화와 平和創造』, 京都: 法律文化社, 2006.
- 김진우, 「포스트휴먼의 개념적 규범학적 의의」,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엮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파주: 아카넷, 2019, 29-66쪽.
- 김상배,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김상배 외, 『4차 산업혁명과 신홍군 사안보』, 파주: 한울, 2020, 24-52쪽.
- 김필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체주의 개념의 구성」,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2022.
- 박노형·정명현,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제5차 UNGGE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법 학회논총』 제63권 제1호, 2018, 43-68쪽.
- 백옥인, 「플랫폼」, 김상배 외,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313-340쪽.
- 손화철, 「과학기술이 윤리를 만날 때」, 한국과학기술학회 엮음, 『과학기술학의 세계』, 서울: 휴먼사이언스, 2014, 303-333쪽.
- \_\_\_\_\_, 「정보의 바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이상욱 외, 『육망하는 테크놀로지』, 서울: 동아시아, 2016, 291-292쪽.
- 송태은, 「사이버 심리전의 미중경쟁과 한국」, 김상배 외,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 파주: 한울, 2021, 115-144쪽.
- 하대청, 「자율적 인공지능에서 휠체어 탄 인공지능으로」,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엮음, 『포스트휴먼 사회와 새로운 규범』, 파주: 아카넷, 2019, 116-146쪽.
- 한희원, 「사이버 전쟁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2022, 808-833쪽.
-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pp. 167-191.

\_\_\_\_\_,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8, No. 2 (1971), pp. 81-117.

\_\_\_\_\_,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no. 3 (1990), pp. 291-305.

Creemers, Rogier, ed., "Planning Outline of the Construction of a Social Credit System (2014-2020)", *China Copyright and Media*, 2015. 4. 25,  
<<https://chinacopyrightandmedia.wordpress.com/2014/06/14/planning-outline-for-the-construction-of-a-social-credit-system-2014-2020/>>.

Schmitz, Rob, "What's Your 'Public Credit Score'? The Shanghai Government Can Tell You", *NPR*, 2017. 01. 03,  
<<https://www.npr.org/sections/parallels/2017/01/03/507983933/whats-your-public-credit-score-the-shanghai-government-can-tell-you>>.



## Digital Revolution and the 'Violence Triangle'

Kim, Philgu (Sungkonghoe University)

### Abstract

In "Cultural Violence (1990)", Johan Galtung proposed the concept of a 'Violence Triangle' which consists of direct,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as its three vert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iprocal dysfunctional interactions of direct,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surrounding the cyberspace, based on this concept. Through this process, I aim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state-centric approach taken by the state actors for achieving passive peace and, at the same time, explore the new potential of Galtung's theoretical tools in the era of cybernetics, symbolized by autonomous machine in ever expanding networked systems.

This article analyzes the goals pursued by various social actors and the conflict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system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then examin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attempts of state actors to impose direct violence in cyberspace lead to structural violence. In the latter part of the paper, I investigate the cultural elements that underlie the use of ICT's artifacts as instruments of direct and structural violence against the human desires of 'well-being', 'identity', and 'freedom'.

Keywords: Johan Galtung, digital revolution, violence triangle, cyberwarfare

**김필구 (Kim, Philgu)**

---

현재 성공회대 열린교양대학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정치이론과 기술철학 및 사회학이며, 주로 전체주의와 생명정치,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메이지 대학(明治大學) 상학부(商學部)를 졸업하였으며, 성공회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성균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장 보고

## 한국에서의 간토(關東) 학살 100주기 시민활동 현장보고\*

김종수 (기억과평화를위한1923역사관)

간토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간토지역에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완전붕괴·소실·유출·매몰의 피해를 받은 주거는 총 37만 동에 이르러, 사망자·행방불명자는 약 10만 5,000명에 이르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자연재해가 9월 2일부터는 조선인에 대한 학살로 변하여 도쿄도를 중심으로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등 간토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학살 행위로 인해 수천 명의 조선인이 총과 칼, 죽창, 도비구치(飛口) 등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도구로 무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도쿄도(東京都)를 중심으로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서 계엄군과 경찰에 의한 조선인 학살이 시작되었고, 자경단을 조직하여 마을을 지키라는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2.202312.319>

1)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의 「관동 대지진 100년」 특설 페이지,  
(<https://www.bousai.go.jp/kantou100>).

공문이 간토 각 현(縣)으로 이첩(移牒)되어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간토학살 100주기가 되는 동안 일본 의회에서 학살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학살책임을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졌고,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03년 고이즈미 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문을 보냈다.

1. 국가는 간토대지진 직후의 조선인, 중국인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군대에 의한 학살 피해자와 유족, 허위사실 전달 등의 국가 행위로 유발된 자경단에 의한 학살 피해자와 유족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2. 국가는 조선인, 중국인 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권고와 일본 의원들의 국회에서의 국가책임추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가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정부 내에 자료가 없다’거나, ‘추도사를 보낼 의사도 없으며, 유감을 표명할 생각도 없다’거나,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는 등 100년 동안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아, 간토학살을 국가에 의한 학살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재일외국인(재일코리안, 재일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남(한국)과 북(조선), 일본, 중국시민단체들이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대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I. 간토학살 사건의 국가책임을 묻는 한일 연대활동의 시작

2007년 9월 3일 간토학살 84주기를 맞아 한국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추도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를 주도한 [아힘나운동본부는 2006년 여름, “미래의 역사를 써가는 아이들이 되자”는 슬로건으로 역사적 공감대를 통한 차세대 한일평화구축을 위해 일본 도쿄에서 청소년평화캠프를 주최하였다. 강사로 초청된 야끼가야 타에코(1913년생) 씨는 간토학살 사건의 개인적 목격담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히 유언비어를 믿은 일본인들의 소행을 넘어 정부(계엄령에 의한 군대의 학살, 정부와 자경단의 연계를 통한 학살)의 개입이 있었음을 증언하였다. 이후 [아힘나운동본부는 2007년 5월 도쿄 고려박물관에서 열린 간토학살 패널전시회의 전시물을 가져와 그 해, 9월 가을 국회가 시작하는 날 84주기 추도식과 추도행사(전시회 및 강연회, 재일동포 3세의 증언)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계기로 2007년 11월에 [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9년에 조직된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가, 일본에서는 2010년에 조직된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이 양국의 사무국으로서 협력창구의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간토학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간토학살의 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학살현장에서의 조사활동을 하고, 매년 간토학살피해자들을 위령하고 한일 양국 정부의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추도행사를 열어왔다. 한편, 이 사건을 단순히 ‘지진 발생 후 근거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로 인해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살해했다’는 왜곡 축소된 교과서의 역사기술을 바



로 잡기 위해, 일본 정부의 계엄령 발포로 유언비어를 사실로 믿게 된 역사적 배경과 자경단체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밝히는 교육활동 및 출판, 연구, 다양한 문화활동도 병행해 왔다.

## II. 간토학살 진상규명 단체의 주요사업과 100주기 추도활동 사례

### 1.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결성

간토학살 100주기를 준비하는 일에 협력하기 위한 한일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2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역사단체, 재일인권단체, 평화단체, 통일단체, 민족단체, 종교단체 등 50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이하 간토100추도위)]를 조직하였다.

한국에서의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행사는 8월 28일 서울 스페이스 살림에서 추진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8월 30일부터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단체별로 출국하였다. 일본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추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의 추도 행사 참가단들은 공동 참여 행사와 선택 참여 행사로 구분하여 각 단체와 오랫동안 연대해 온 단체 추도 행사 및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 발족식 기자회견

일시 : 7월 12일 장소 :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 1) 간토학살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1923시민연대’는 19대 국회에 “관동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심혈을 기울여 여야 103의 의원이 공동발의(유기홍의원 대표발의)가 되도록 일정한 노력을 하였다. 이 법안

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도시설 건립을 특별법의 골자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안이 되고 말았다.

이후 21대 국회에는 ‘간토100추도위’ 특별법제정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의 노력으로 모든 정당 소속 최소 1인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한 “간토대학살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여야 10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2023년 12월 8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를 마쳤고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2) 일본의 국가책임 추구를 위한 조사활동

간토학살사건의 피해자는 6천여 명<sup>2)</sup>의 재일조선인과 750명<sup>3)</sup>의 재일 중국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중국은 식민지가 아니었으므로 국민당 정부가 학살의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와 학살 피해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이는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보관되어 오고 있다. 식민지 하에서의 조선인학살피해자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기초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 경찰의 감시상태에서 그것도 수천 명에 이르는 학살피해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독립신문’의 조사발표에는 어떻

2)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1923년 12월 5일자에서 간토대지진에서 학살된 조선인 사망자 수를 6661명으로 집계하였고, 일본인 요시노 사쿠조는 저서 『압박과 학살』에서 피해자를 2534명으로, 김승학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피해자가 6066명이라고 기록했다. 대지진 당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문서에 기록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자 813명’은 조선총독부 도쿄출장소에서 조사한 학살자 수로 보고하고 있다.

3) 1924년, 주중국 일본공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보낸 문서에 수록됨.



게 학살되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사망피해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록이 없이 간토지역의 각 도(道), 현(縣), 정(町)에 몇 명이라는 학살피해자 수만 기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피학살자 명부의 작성은 학살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일협정을 앞둔 이승만 정부시절에 협상용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친척과 후손 등의 증언을 통해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290여명의 명단만 수록하였을 뿐이었다.<sup>4)</sup> 그마저도 한일협정의 의제로 삼지 못하자 피학살자명부는 주일대사관 캐비닛에 묵혀있다가 19대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왜곡특위가 한국 외교부에 간토학살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공개되었다.

그런데 명부에 나타난 학살피해자의 학살 장소, 사망연대, 한자 이름 등이 잘못 기재 되어 있는 것이 있었고, 여러 문헌과 추도비 등에 새겨진 이름 등을 발견하여, [1923제노사이드연구소]와 [한신대상생전환센터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용역으로 추가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명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는 문헌자료에서 296명,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발견한 <일본진재시 피살자 명부>에서 290명 중 205명으로 총 501명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중복된 희생자를 제외한 조선인 희생자는 학살 349명, 행방불명 8명, 인신 피해 50명, 자살 1명으로 408명의 명부<sup>5)</sup>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명부는 자료 확보의 한계로 [도쿄도 위령당]에 있는 조선인 명부 83명, [일본 사법성] 명부 380명 등이 제외되었다는 점과 지

4) 日本震災時被殺者名簿,

<https://www.1923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3>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211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명부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2022,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0&ntId=317024](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0&ntId=317024)>.

바현에 설치되었던 [나라시노 수용소의 조선인 수용기록 등의 존재, 각 지역 경찰서의 수용된 조선인과 수용소로 이송된 조선인 명부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학살피해자들의 명부를 조사하는 일과,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부상자 또는 학살 트라우마로 피해를 입고 죽음에 이른 이들의 기록 등을 조사하는 일은 많은 연구인력과 방대한 사료들의 조사가 필수적이고 또한 정부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와 일본 정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므로, 이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간토대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 3) 현장학습과 대중교육활동

‘1923시민연대’는 간토학살 현장에서 오랫동안 각종 사료와 학살의 증언을 모으고, 추도비를 세우고, 해마다 추도비 앞에서 추도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반응 등의 이야기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에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해 왔는지를 배우는 현장학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그동안 현장학습에 참여한 이들은 대안학교 청소년 학생들, 대학의 학보사 기자들, 한일교류를 원하는 대학생들, 종교인들 그리고 한일문제를 주제로 동화를 쓰거나 현장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책을 출판하려는 이들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간토학살 현장을 찾아가려는 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1923시민연대’는 올바른 역사적 이해를 위해 다음의 사실을 주지하였다. 첫째, 정부가 유언비어를 사실화하고 유포하여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점, 둘째, 계엄령을 통해 조선인을 ‘일본의 적(敵)’으로 조작하여 일본인들로 하여금 조선인 학살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반인도적 학살

행위 조차 ‘애국심의 발로’라는 집단의를 조장한 점, 셋째, 조선인들을 뒤에서 조종한 이들이 ‘OO주의자’들이라 하여 일본의 민주주의 사상이 실천 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도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을 알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알기 쉬운 간토학살의 진실을 알리는 패널전시회와 강연회를 열어왔다. 2008년에는 서일본 지역을 순회하는 패널전시회를 열었으며 2011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에 ‘찾아가는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의 한신대학교와 일본의 센슈대학 그리고 재일동포학교로서 도쿄 조선대학교와 함께 학생, 교수가 같이 참여하는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4) 학술 및 연구활동

한국에서의 간토학살사건을 주제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술활동은 2006년 야끼가야 타에코의 증언에 깊이 문제의식을 느낀 [아힘나운동본부]가 유기홍 국회의원의 협조로 2007년에 강덕상·야마다 쇼지 등 간토 연구자를 초청해 국회에서 열었던 학술토론회로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아힘나운동본부]와 [한신대인문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여 강덕상, 야마다 쇼지 박사, 정중석 재일 2세를 초청하고 한국의 서평일, 김인덕, 하종문 교수가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관동 조선인 학살과 3.1운동과의 연관성”을 통해 독립운동 탄압의 연장선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학살한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9년 봄에는 [아힘나운동본부]가 야마다 쇼지 박사,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아즈사와 카즈유키 변호사, 간토학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세계화해야 한다는 마에다 아키라 박사 등을 초청하였고, 한국에서는 서평일 박사, 윤미향 한국 정신대문제 대체 협의회 상임대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위대영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 “간토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2009년 여름에는 덕성여대에서 “간토학살사건과 5.18광주학살사건과의 유사성”을 주제로 이 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중학살’임을 드러내려 하였다. 2013년 6월에는 국회에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90주기를 맞아 이 사건에 역사적 해결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한일 양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회에서 “관동학살희생자명부와 한일협정, 그리고 한일의 국가책임”을 주제로 피학살학살 명부의 제작과 보관 과정 그리고 명부발표 후 후속 활동을 통한 향후의 과제 등을 조명하였다.

한편, 사료의 원전이 대부분 1920년대 옛 일본어이기 때문에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의 대중들에게 알려야 했다. 이를 위한 상설기구로서 연구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연구소 건립을 위해 연구자들과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1923시민연대’의 공동대표 김광열 박사는 소장으로 초빙하고, 성주현 박사는 부소장으로 협력하고, 간토학살 연구자인 김강산 연구원이 참여하는 [1923제노사이드연구소가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부설연구소로 발족하였다(2020년 10월 12일 개소). 이로써 간토학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 활동이 시작되었고, 2022년 간토 피학살 명부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진화위’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매주 줌을 통해 한국, 일본, 재일동포가 참여하는 학살 증언 번역 모임이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사이타마에서 학살당한 조선인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쓴 『옛장수 구학영』(저자 김중수, 기억의 서가 출판)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텐보샤(展望社)에서 출판하였고, 일본 [봉선화회]의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 이사가 쓴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記録 - 東京地区別1100の証言』도 번역하고 있다. 영어권 동포들도 『옛장수 구학영』이 일본어로 번역·출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어로 번역하기 위한 줌모임을 개설하고 3개월간의 노력 끝에 간토학살 100주기에 맞춰

2023년 8월 25일에 한국 출판사 [기억의 서가]에서 『KOO HAKYOUNG the Yoet Seller』로 출판하였다.

또한 간토학살 100주기 미디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민병래는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가 주최한 간토학살 현장 기행에 참여하여 각 지역 조사 및 추도위원회 대표들과 간토학살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을 인터뷰하여 ‘간토100추도위’와 공동기획하여 『1923간토학살 침묵을 깨라』(원더박스, 2023.9.1.)를 출판하였다.

##### 5)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건립과 전시



천안시 병천면에 소재한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전경

제19대 국회에서 간토학살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뒤, 정부에 의한 추도 공간 조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1923시민연대’는 아우내재단과 주민신용협동조합 이사들을 만나 간토학살 역사관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천안시 병천면에 [아우내재단의 옛 한국신학연구소와 아힘나평화학교의 교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무상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를 넘기는 긴 협의 끝에 이 건물을 2년 동안 리모델링하여 2020년 12월

에 완공했고,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이하 '1923역사관')]이라 명명했다. 이 역사관에는 간토학살사건의 발생배경과 각 지역의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의 정부의 개입에 관한 사료들, 당시의 보도자료들, 조선인 학살 사진, 진상규명단체들의 노력, 도서, 교육영상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일본 학살현장에 세워진 추도비의 탁본과 사진 그리고 예술인들의 그림과 노래, 각종 간토학살 도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물 중 학살현장에 세워진 추도비의 탁본은 일본의 우익들이 요코야미초 공원에 있는 추도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무렵 만에 하나 추도비가 철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탁본으로나마 보존하자는 생각에 시작한 프로젝트였고, 현재, 도쿄 아라가와의 추도비, 사이타마 강대흥의 추도비, 지바 마고메령원(馬込靈園)의 추도비와 간온지(觀音寺)의 추도비가 탁본되어 역사관에 전시되고 있다.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에 전시되고 있는 추도비 탁본

역사적 사건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들이 있는데, 간토학살사건의 상징은 추도비라고 할 수 있다. 추도비의 비문(碑文)에는 학살 주체와 피학살자 명시의 유무, 학살 이유를 새길 것인가 말 것인가 등에 대해 추도비 건립위원들과 지역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이 반영되었기에 높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상징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23역사관에서는 지역의 학살 사건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건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이들의 노력까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추도비를 탁본하여 역사관의 중요한 공간에 전시하고 있다. 또한 역사관 정원에는 간토학살 100주기를 기리며 사이타마에서 학살된 구학영의 마지막 유언을 상징화한 추도비가 세워져 있다.

한편, 역사관 정원에는 간토학살 100주기를 기리며 사이타마에서 학살된 구학영의 마지막 유언을 상징화한 추도비가 세워져 있다.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앞마당에 전시된  
사이타마 학살 피해자 구학영의 추도조형물

### Ⅲ. 간토학살 100주기 이후의 과제

한일시민들은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아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 인정과 재일외국인(재일코리안, 재일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활동에 매진하였다. 일본 현지에서의 100주기 연합추도행사에는 8월 31일 집회에 1800석의 좌석이 매진되었고, 9월 1일 집회에도 1,000여 석이 넘는 참가자들이 추도의 깊이를 더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한일시민들의 조선인·중국인 피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 공동기자 회견을 하였고, 입헌민주당의 스키오 히데야(杉尾秀哉) 의원과 사회민주당대표 후쿠시마 미즈호(福島みずほ) 의원이 정부관료들을 불러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질의가 있어 언론의 관심도 높았지만, 일본 정부 관료들은 ‘일본의 국가개입 불인정’, ‘유언비어를 오인한 일본 자경단의 살인’으로 ‘학살은 연구자들의 해석’ 등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태도이다. 앞서 이승만 정부가 간토학살 피해자를 조사한 이유가 한일협정을 앞두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뒤로 역대 그 어느 정부도 간토학살 피해를 조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한 바가 없으며, 정부가 나서서 간토학살피해자 추도식을 개최한 일도 없으며, 해마다 열리는 종교시민단체의 추도식에도 추도사 한 번 보낸 일이 없다. 더구나 이번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에 다녀온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에게 공동주최한 재일동포단체와 재일동포를 반국가단체와 친북인사로 규정하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통일부의 남북관계관리단장의 직인으로 ‘접촉 경위 등 의견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내용에 따르면 “일본 추도식 방문자들이 북한주민접촉 신고 없이 일본 도쿄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모임·집회·심포지엄 등에 참석한



것을 인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28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해마다 추도제전에 참여하여 학살피해자를 기려 온 이들에게 그것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국회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반국가 행위’로 매도하는 일은 한반도 통일과 역사적 공감대에 바탕하여 한일 간 역사정의와 평화를 위한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일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과 한국 정부의 침묵에 이은 이념 물이에 개의치 않고, 향후 일본 간토지역에 각 학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자료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고 추후 간토지역에 1923뮤지엄을 건립할 수 있도록 힘으로 모으는 방안을 두 번의 학술심포지엄<sup>6)</sup>을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100년 이후 각 학살현장에서의 조사 및 추도단체 대표자들이 70~80대의 고령이기에 올해 100주기를 맞아 젊은 활동가들과 연구자들과의 세대 간 협력과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위한 실천 방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2024년에 한국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에서 워크숍을

6) 2023년 9월 17일 「1923간토대학살을기억하는행동」이 도쿄대학원에서 주최한 “レイシズムを記憶する意義 — 関東大震災虐殺ミュージアムを設立するために—”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필자는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의 설립 과정과 전시내용 및 역사관 교육사업을 소개하였고, 한 달 후 2023년 10월 22일 「10·22학습교류회를 성공시키는모임」이 메이지대학에서 주최한 “関東朝鮮人虐殺100年学習交流会調査と追悼の現場から”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필자는 간토학살 100주기 이후의 전망을 말하면서 다시 한 번 일본에 ‘1923뮤지엄’을 건립하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하였다.

열어 향후의 활동과 상호연대를 모색하기로 하였다.<sup>7)</sup>

김종수 (Kim, Jongsoo)

---

현재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저자는 간토학살피해자인 구학영(具學永)의 이야기를 『옛장수 구학영』으로 펴냈고, 이 책은 일본어판(飴売り具學永)과 영어판(KOO HAKYOUNG the Yoet Seller)으로 번역출판되었다.

---

7) 원고에 실지 못한 단체와 개인들의 간토 100 주기 활동 및 학살을 내용은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가 운영하는 <전문웹신문 미디어기평(<https://www.1923news.com>)>에 실어 두었으며, '간토100년추도위' 아래에, 각 현장에서 2022~23에 실시된 추도행사, 전시회, 출판물, 국회좌담회 및 기자회견, 뉴스보도 등을 실고, '교육 및 자료' 아래에는 피학살자명부, 진상규명특별법, 다크영상들을 모아두었다.

현장 보고

## 조선족사회와 조선족 '마음의 고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변화 실상

곽승지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 I. 연변은 지금 변화 중 :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에 의해 추동돼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시혜를 받아 오랜 동안 말과 글은 물론 민족 고유 문화를 향유해 온, 조선족사회와 조선족의 '마음의 고향'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중국의 새로운 소수민족 정책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물론 시대 상황의 변화가 일련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은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가 전반적으로 누려온 소수민족 정책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향후 조선족사회는 물론 연변지역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형적 변화는 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상점 간판과 홍보문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소수민족 언어인 ‘조선어’ 우선 정책에 따라 상점의 간판은 조선어를 위에 혹은 좌측에 썼으나 최근엔 중국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예 조선어를 쓰지 않고 중국어만 사용한 간판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홍보문은 조선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중국어로만 쓰인 것이 더 많아 보였다. 물론 아직은 과도적 상태여서 완전히 교체되지 않아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중국 속의 한국’으로 불릴 만큼 한국인들에게 친근감을 주었던 거리풍경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특색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조선어 간판’의 변화가 길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조선족의 의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제한함으로써 조선족의 ‘조선족 다움’의 핵심 가치인 조선어 사용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거리에서 접하는 조선족 학생들은 우리말 보다 중국어를 더 자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기본 언어로 중국어를 사용하고 조선어가 제2외국어로 전락함에 따라 학생들은 사실상 조선어 공부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조선어 공부를 등한히 하여 제2외국어로서의 효용성이 약화되자 아예 조선어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조선족 학교에서조차 조선어 교육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년 들어서는 조선족 학교와 한족 학교의 구분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연변에는 조선족 학교와 한족 학교가 나누어져 있어 조선족 학생들은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족 선생님께서로부터 조선어는 물론 모든 학과 공부를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조선족 학교에 한족 선생님들이 부임해 행정은 물론 학업을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족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조선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업을 통해 조선족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받던 민족 문화를 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조선족으로서의 특질을 살리기 어렵게 됐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민족구역자치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해당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민족이 중심이 되어 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연히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민족이 지역 내 행정 기관에서 지도자로 역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때는 연변지역 주요 기관의 간부 중 다수가 조선족으로 채워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는 그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최근에는 민족대학인 연변대학의 최고 지도자인 당서기에 조선족이 아닌 사람이 임명됐으며 이후 조선족 교수들이 맡아왔던 주요 보직이 한족 등 여타 민족으로 교체됐다. 1980년대 말 이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당서기를 타민족이 맡아왔으나 그동안 연변대학은 교장(총장)은 물론 당서기도 조선족이 맡아 민족 교육을 주도해 왔었다.

또 다른 변화는 연변지역의 한민족과 관련된 주요 역사 현장이 민족적 가치가 아닌 사회주의 이념을 위한 '홍색문화(紅色文化)'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이다. 연변을 찾는 한국인은 물론 조선족 동포들도 연변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 근현대 역사와 관련된 현장을 자주 찾으며 민족 의식을 고양하는 기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일부 항일 활동의 무대는 한국인의 접근이 제한되는가 하면 용정 대성중학 터의 연합학교 역사관과 운동주 생가 등 주요 역사 유적은 사실상 문을 닫거나 사회주의 혁명역사 교육을 위한 장소로 변질되었다. 조선족과 관련된 역사 현장이 조선족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중국의 필요를 반영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 학생은 학교에서 한민족 역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역사 유적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민족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 II. 조선족사회와 연변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양상들

지난 10월, 3년여 만에 연변을 다시 찾아 최근의 변화상들을 찬찬히 살폈다. 뉴스를 통해 혹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통해 연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접하는 소식들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것들은 침소봉대되거나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실 한국에 알려진 조선족과 연변에 관한 사실들은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것들이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연변과 조선족사회에 대해 나름 많은 공부를 해왔다고 자부하는 학자로서,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현장을 찾아 변화의 실상을 직접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9월 어느 날 통일평화연구원으로부터 연변에 대한 ‘현장보고’ 청탁을 받고 흔쾌히 응한 것도 이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오랜만에 접하는 풍경은 여전히 정겨웠다.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끔 친근한 연변말이 새어 나왔다. 연길의 대표적인 종합시장인 서시장에서는 매대의 아주머니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투박한 연변 사투리로 흥정하는 모습을 쉽게 엿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조선족 80만 명 시대’<sup>1)</sup>를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조선족 동포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중

1) 국내 거주 조선족(중국 국적자)은 2020년 1월 기준 70만 8천여 명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국내 언론들은 2018년경부터 ‘조선족 80만 명 시대’를 언급해 왔다. 한국 국적을 회복 및 취득한 조선족이 15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조선족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한 후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조선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연변에는 여전히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은 최근 중국의 주요 관광지로 부상해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를 이겨낸 후 연변 밖의 중국인들이 이곳을 한국 관광을 대체할 곳으로 인식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이란 다. 거리 곳곳에서는 연변의 풍경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왕홍(网红/인플루언서)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새벽시장이 열리는 수상시장에서는 이른 아침인데도 곳곳에서 거치대를 설치한 상태로 혹은 움직이면서 연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20여 분 사이에 직접 목격한 사람만 6~7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국경절(10.1) 연휴 기간에는 무려 250~3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연변을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연길의 주요 관광코스의 하나인 연변대학 앞의 차도에는 외지에서 온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어야 했다. 인도 역시 인산인해를 이뤄 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한다.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의 불거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설들도 등장했다. 인민공원에서 연변대학 앞까지의 1km 남짓한 거리에는 노선 버스 전용도로를 의미하는 'BRT 전용도로'가 구축되어 있고, 인민공원 정류장에는 육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3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다. 한국의 버스 전용도로와 유사하지만, 출입 시스템은 지하철의 경우와 더 가까워 보였다. 연변대학 정문 앞 대학성의 간판은 연길시의 대표적인 명물인데 이전과 달리 새로운 언어 표기 방식을 적용하여 중국어를 앞에 혹은 위에 적은 것이 많이 눈에 띄었다. 간판의 모양과 색채는 보다 화려해 졌다. 큰 건물의 외벽에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인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기도 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복 대여점들이 연길 주요 거리 곳곳에서 성업

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연변을 찾은 외지인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연변대학 정문 앞이나 철남지역의 민속원 주변에는 과장하면 몇 집 건너 한 집이 한복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았다. 그런데 한복집을 경영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조선족 동포가 아닌 한족들이라고 한 지인이 귀띔했다. 남방지역의 돈 있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연변의 특수를 겨냥해 한복 대여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옛말이 떠올랐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은 조선족의 주요 먹거리인 김치, 찰떡, 순대, 장국밥 그리고 보신탕 등을 취급하는 식당들인데 이와 같은 것을 주요 메뉴로 하는 업소들은 비교적 큰 소득을 올리며 성업 중이었다. 숙박업도 크게 번창하고 있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숙박업소는 물론 민박집도 많이 생겼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업종이 아니면 그다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관광객들 때문에 물가만 올랐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몇몇 조선족 지인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대신해 연변을 찾는 것이기에 한국 관광이 다시 보편화 되면 이러한 현상도 수그러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Ⅲ. 조선족과 연변의 변화 과정 : 조선족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변화를 말하는 것은 진부한 얘기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화의 내용과 의미가 기존의 제도 및 가치와 차이



가 있는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적어도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변화가 지향하는 바는 물론 그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족과 연변이 적극적인 변화를 시작한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화하고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변은 중국 동북쪽 변방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북한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고립되고 정체된 전형적 농촌 지역이었다. 연변 밖의 동북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선족 집거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선족은 그때까지 농사짓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안분지족하며 묵묵히 살았다. 그러나 1992년에 발생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조선족은 이후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즉, 대내적으로 천안문사태(1989.6.4.) 이후 지지부진하던 개혁개방 정책을 추동하기 위해 중국의 변화를 이끈 개혁 전도사 덩샤오핑(鄧小平)이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1992.1~2)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사회에 다시금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이어 개혁개방 정책의 대외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던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서둘러 수립(1992.8.24.)하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농사지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조선족 동포들에게 두 가지 기회를 제공했다. 하나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있는 청도(靑島) 등지의 연해지역 개방도시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그리던 모국인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된 이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국의 여타 농민공들과 비교할 때 조선족은 모국인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덩으로 주어진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사상해방과 함께 추진된 것과 같이 조선족사회의 변화도 결

국 자본주의적 물질주의가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함으로써 시작됐다. 그리하여 중국 동북지역에 갇혀 살던 조선족은 탈영역화를 통해 연해지역의 개방도시 곳곳으로, 혹은 한국으로 재이주를 하기 시작했다.

위의 두 가지 사건은 연변지역 조선족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데 더해 한국 사회의 조선족 및 중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오르고 인접해 있는 북한을 지근 거리에서 살필 수 있다는 특별함이 한국인들의 정서를 자극해 연변을 찾는 한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연변지역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넘쳐나 관광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됐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맺기가 한국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조선족사회와 한국 사회 간의 관계는 심각한 갈등이 초래됐다. 개혁개방 정책 이후 자본주의적 물질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조선족 동포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거금을 써가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로서 숨죽이며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마을이 집단적 사기 피해를 입기도 했고 불법체류로 인해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살아가게 됨에 따라 수많은 가정이 파탄(?) 나기도 했다.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이주는 한중수교 15주년이 되는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정상화되었다. 그러니까 조선족사회와 한국 사회 간의 공식적 관계 맺기가 시작된 지 15년이 되어서야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합법적 방법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행스럽

제도 이후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 방문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가 전체 조선족의 40%가 넘어 '조선족 80만 명 시대'를 구가하게 됐다.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재이주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조선족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선족 동포들 스스로 변화를 지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최근 조선족사회와 연변 지역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중국 당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조선족사회와 연변 지역에서의 초기의 변화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족 동포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 하였다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소수민족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조선족 문화의 중심으로서 연변의 의미와 가치

연변이란 말은 중의적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행정구역을 일컫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약어이고 다른 하나는 영남 또는 호남과 같이 예전의 북간도 혹은 동만(東滿)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지역은 1900년대 초부터 연변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직후인 1952년에 중국이 소수민족 정책의 핵심 제도인 민족구역자치제를 적용해 조선족이 집거하고 있는 이곳을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설정했다. 이곳에는 8개의 시와 현이 있으며 연길시가 주도(州都)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 연변의 조선족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가 넘었다. 중국 내 전체 조선족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연변지역에 모

여 살았다. 따라서 연변은 조선족사회의 유일한 자치주로서 조선족의 사회 문화 경제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자치주 정부를 중심으로 조선족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이것이 동북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선족 진(鎭)과 향(鄕)으로 파급됐다. 예컨대 연변지역에 있는 교육 관련 조직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 자재를 제작하면 연변 밖의 산재 지역 조선족 학교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식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밖의 조선족 집거지에서도 연변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문화대혁명을 견디어 낸 후 조선족사회가 번성하던 1980년대 말 무렵 중국 동북지역에는 1천여 개가 넘는 학교가 존립했었다. 규모가 큰 마을에는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있었다니 그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각급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본적 역할에 더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유지·발전시키는 구심점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연길에 위치하고 있는 연변대학은 조선족 인재 양성을 위한 중국의 100대 중점 대학의 하나로서 한중수교 이후에는 남북한 간 학술교류를 중재하기도 했다.

연변 지역은 조선족뿐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특별히 정겹다. 조선족 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일 뿐 아니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덕분에 조선족 중심의 민족문화가 유지·발전되고 있어 쉽게 그 자취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우리글의 간판이 즐비하고 곳곳에서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백두산을 오를 수 있고 두만강 너머의 북한을 바라볼 수 있다. 고중세 역사가 아니어도 근현대 한민족 역사가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기도 하다. 특히 연변 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북 지역은 일제 치하에서 항일을 위한 전장으로 기능하였기에 골골마다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널려있다.

필자는 수년 동안 연변에 살면서 연변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할 수 있

는 적지 않은 기회를 가졌었다. 기회가 주어질 때면 글이나 말로서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오래전 기차를 타고 연길로 가던 중 연변의 가치와 관련해 특별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기차는 길림시를 지나 연길을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 안내방송이 나왔다. 이전까지는 중국어 방송이었기에 무심히 지나쳤는데 갑자기 우리말 방송이 나왔다. 놀라움과 반가움에 주변을 둘러보니 기차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경내를 달리고 있었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이렇듯 민족구역자치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해당 민족의 언어 사용을 인정할 뿐 아니라 공적으로도 그렇게 시행했었다. 앞으로는 이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할 수 없게 된 것 같아 많이 아쉽다.

## V. 연변에서의 변화 배경과 의미 : 중화민족 공동체를 향한 움직임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민족 정책은 미국의 그것과 구분된다. 즉 이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각 나라에서 온 다양한 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미국적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melting pot society)를 지향한 반면 중국은 한족 외에 55개 소수민족이 각각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민족문화가 공존하는 사회(salad bowl theory)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살아온 많은 한민족 중 조선족은 그러한 정책 덕분에 한민족 정체성을 보다 잘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변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20년 9월 학기부터 연변은 물론 몽골 지역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해당 민족 언어로 실시하던 교육을 중국어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연변에서는 2020년 9월 학기에 고중(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어문 과목을 조선어가 아닌 중국어로 교육하였고 이후 정치와 역사 등의 과목으로 확대됐다. 중국 교육부는 2021년 9월 전국 유치원에 표준 중국어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2022년 8월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어문자공작조례 실시세칙’을 발표, 모든 문자 표기 때 중국어를 앞에 표기하도록 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현재는 소수민족으로서 대학시험을 중국어가 아닌 조선어로 치를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중국어로 치러야 한다. 2032년부터는 모든 시험을 중국어로만 치를 예정이다. 중국어 공부를 하여야만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중국 당국은 지금 왜 이와 같이 소수민족 정책을 바꾸고 있나. 중국이 정책 변화를 추진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최근의 중국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G2를 구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아 성장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기세는 등등하다.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여기저기에 공장이 건설되고 일자리가 늘었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다. 당연히 인구구조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중국은 산아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인구정책을 바꾸어 다자녀 생산이 가능하게 했고 농촌과 도시를 나누어 거주를 제한했던 호구 정책도 바꾸었다. 이전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안에서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살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농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이 살아온 곳을 떠나 도시로 나아갔다. 민족구역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역시 마찬가지다. 2백20만 명을 넘었던 자치주 인

구는 최근 10% 이상 줄어 2백만 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수가 줄어든 게 주된 원인이다. 80만 명을 훌쩍 넘던 인구가 2022년 말 현재 71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호구조사 결과이다. 실제 살고 있는 조선족은 20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다시 연변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생산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연변지역에서 조선족의 탈영역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재 지역의 조선족사회에서는 탈영역화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함께 중국은 최근 소수민족 자치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으면서 소수민족 정책을 바꾸어 보다 큰 틀에서 민족 통합을 구상해 온 것 같다. 중국은 그동안 개별 소수민족을 우대하며 이들이 일정 지역 내에서 연대하여 살아가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즉, 전체 인구의 3% 정도에 지나지 않는 소수민족을 큰 틀에서 한데 묶음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구상은 '중화민족론'으로 구체화되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중국 공민(국민)을 지칭해 중화민족으로 부르는 가운데 '중화민족 대가정'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이를 '중화민족 공동체'로 바꾸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연변의 곳곳에서도 이와 관련한 홍보문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예컨대 학교 울타리나 홍색문화를 교육하는 현장, 심지어 거리를 달리는 버스에도 관련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연변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합시다" 등등이다.

중화민족 공동체론은 중국의 전체 민족을 하나로 묶어 이를 중화민족

으로 지칭하는 가운데 민족과 민족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려는 논리로 해석된다. 중화민족 대가정론이 개개 민족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로서 각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하며 민족 간 화합을 강조한 것과 비교된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화민족 일체를 강조해 왔는데 이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중화민족 공동체를 보다 강조함으로써 56개의 개별 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통합하기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민족구역자치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수민족 정책은 크게 바뀌거나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

**곽승지 (Kwak, Seung-Ji)**

2014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위치한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조선족사회와 한국 사회 간의 좋은 관계 맺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중국으로 가기 전에는 연합뉴스에서 북한뉴스를 다루는 기자로서 활동했다.



## 원고 제출 및 집필 요령

제정 2009년 5월 6일

개정 2020년 1월 7일

개정 2020년 4월 14일

### ◇ 제1장 논문투고 및 게재

1. 『통일과 평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한다.
2. 『통일과 평화』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투고 지침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를 『통일과 평화』 편집위원회(tongil-journal@snu.ac.kr)를 통해 제출한다.
5. 투고논문의 첫 페이지에 투고자 이름은 물론 본문 가운데 ‘필자’, ‘졸고’ 등으로 하여, 투고자의 신상을 짐작하게 하는 그 어떤 단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6. 제출된 원고는 익명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통보된다. 원고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7. 교정쇄는 필자에게 2회 또는 3회에 걸쳐 전달되며,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8. 투고논문에는 연구윤리서약, KCI문헌유사도검사결과서를 첨부한다. 유사율이 높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로 한다. 논문의 형식을 갖춘 서평과 현장보고는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

로 하되, 단순 서평과 현장보고는 50매 내외로 한다.

10. 논문 제출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통일과 평화』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게재와 함께 논문의 저작권을 통일평화연구원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저자(들)가 자신의 다른 연구물에 『통일과 평화』 게재 논문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를 본 논문으로 인용한다.

## ◇ 제2장 원고 작성 요령

[제목, 목차, 저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통일과 평화』 최근 간행호에 따른다.
2.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저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요약문, keywords,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3.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5.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본문]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논문 요약문]

1. 논문 요약문은 단순 요약이 아닌 해당 논문의 독창적인 견해 및 연구사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작성한다.
2. 국문요약문은 원고지 3매, 영문요약문은 2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3. 영문요약문은 외국인 학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평화연구원 원어의 교정 단계를 거친다.

[인용문]

1.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 ’ >로 한다.
  2.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연도를 명기한다.
-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 8. 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98~299쪽.

[표, 그림]

1.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3-3, 그림 2-5)를 부여한다.
2.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각주]

1.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2.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 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은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20~28쪽.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20쪽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세균 외 공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최종태 · 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36쪽.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 25 - 34.

- F. Parkinson 저, 정규섭·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 (서울: 일신사, 1994), 15쪽.

## (2) 논문

###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명』 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6~51쪽.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 - 583.

### <단행본 수록>

- 김세균,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 247.

- 북한자료의 경우

예)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한 담화(1970년 5월 22일)」, 사회과학출판사 편,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12~136쪽.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체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권영진, 「한국전쟁당시 북한의 남한점령지역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1990), 20~35쪽.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0~15쪽.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 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脫北청소년들」 『조선일보』 (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3.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1) 바로 앞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항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은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22쪽.

- Suh, Kim Il Sung, p. 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270쪽.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 577.

4. 구술 자료의 전거는 면답자, 구술자, 면답일자, 면답장소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다. 특별한 경우 구술자명을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일반적으로 국문단행본, 영문단행본, 국문논문, 영문논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4.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 작성 양식과 동일하되, 출판지와 출판사명의 괄호가 제거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107~128쪽.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 『통일과 평화』 연구윤리 규약

제정 2009년 5월 6일  
개정 2019년 11월 20일

### 제1장 저자(투고자)의 연구윤리와 책임

#### 제1조(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 평화』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 제2조(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 제3조(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변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제4조(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 ①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거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6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행위
- ②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하는 행위
- ③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④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르지 않고 재사용하는 행위



- ⑤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 제7조(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 제8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9조(심사 의뢰)

-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제11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12조(심사서 작성)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제13조(비밀의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 제16조(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연구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7조(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를 불허한다.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한다.
-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2.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